

# 統一斗 北韓 社會文化(上)

1996. 12.

民族統一研究院

## 序 文

1996년은 탈북자들의 속출과 북한 잠수함 침투사건, 계속되는 북한의 경제난 심화 등 통일문제의 심각성을 우리에게 일깨워주는 적지 않은 사건들로 다사다난한 해였다. 북한의 식량난이 악화되고 대량난민발생에 대비한 탈북자 수용시설 건립문제가 현안문제로 등장하면서 통일에 대비한 각종 사업을 더이상 미룰 수 없다는 목소리도 높아졌다. 지난 반세기 동안 분단으로 인한 남북한간의 문화적 격차를 해소하고, 이를 발전적으로 융합시킨 통일문화의 창달을 통해 통일한국의 밑거름을 지금부터 마련하기 시작해야 한다는 지적이 그 어느 때보다도 설득력있게 다가왔던 한 해이기도 했다.

본 연구원에서는 종래 정치학 위주로 진행되어 왔던 통일 및 북한 연구의 방향을 보다 실생활과 연관된 분야로 확대시키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지난 '94년부터 통일문화의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연구프로젝트를 추진하여 왔다. 1차년도에는 통일문화의 개념 정립과 형성방향에 관한 이론적 기본틀을 제시하였고, 남북한의 문화이질화 및 문화교류과정에서 제시된 문제점들을 고찰하였다. 2차 년도인 '95년에도 북한의 실상을 사회·문화적 관점에서 분석함으로써 남북한간의 동질성 회복을 위한 기초작업을 수행하였다. 이제 '96년에는 경제, 종교, 교육, 문화 등 보다 세분화된 영역으로 연구시각을 확대시킴은 물론 통일과정에서 발생가능한 사회문화적 문제점들을 외국의 사례를 통해 고찰해 봄으로써 실생활과 관

련된 통일문화연구의 방향을 제시하고자 한다. 함께 어울려 살아가야 할 동포들이 살고 있는 사회와 문화를 보다 깊이 이해하고 통합과정에서 발생될 여러 문제점들을 원활히 풀어나가기 위한 초석을 마련하기 위함이다.

금년도에 추진된 연구들은 전년도와 마찬가지로 상하권으로 나눠 발간된다. 상권에는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경제, 종교, 교육, 문화 등에 대한 연구과제가 수록되었다. “북한의 경제체제와 경제문화”를 비롯하여 “북한주민의 정신문화체계연구: 종교관을 중심으로”, “통일전후 사회환경변화에 따른 통일교육 방향설정 연구”, “북한문학에 나타난 사회갈등 연구: 북한의 분단문학을 중심으로” 등 모두 네 편의 연구결과가 북한과 통일을 보다 세분화된 시각으로 조명하고 있다. 하권에서는 공산사회에서 자본주의로의 이행에 여념이 없는 러시아의 사례를 통해 통일문제에 대한 시사점을 던져주는 “포스트 사회주의 이행기의 러시아 사회변화연구”와 조총련이라는 좌익조직이 일본 자본주의에 적용하는 과정을 분석한 “조총련의 일본내 문화적응과정에 대한 연구: 조총련의 생성, 발전, 쇠퇴에 관한 분석을 중심으로”를 수록하여 북한사회가 통일에 적용해 나갈 과정을 예시하고 있다. 한편 “독일통일에서 나타난 동독주민의 문화적 갈등과 그 해소방안연구”와 “남북통일의 도정: 공산정권의 협상전략 연구: 베트남 평화협상의 사례” 등 두 연구는 독일과 베트남의 통일과정에서 파생된 문제점들에 대한 분석을 통해 통일이 물고을 문제점을 원활히 해결할 수 있는 실마리를 던져주고 있다.

끝으로 여기에 수록된 연구결과들은 그 자체가 완결된 해결책을

제시하고 있다기 보다 이를 기초로 더욱 심화된 연구동기를 부여하기 위한 밑거름을 제시하고 있음을 덧붙이고자 한다. 북한 및 통일분야의 연구에 있어서 이미 훌륭한 연구성과를 배출하기 시작한 경제학계를 비롯하여 그동안 상대적으로 이 분야 연구에 생소함을 겪어 왔던 사회, 문화, 교육 등 통일문화창달에 반드시 동참해야 할 여러 분야의 전문가들에게 연구동기를 부여하고 이들에 의한 심도깊은 연구에 기초자료와 문제를 제시함으로써 통일문화연구를 한 차원 높이 끌어올리는 기능을 할 수 있다면 것으로 더 없는 성과를 올릴 수 있다는 바람이다. 활짝 열린 통일문화 연구의 장에 모쪼록 많은 분야의 실력있는 전문가들이 참여해 주기를 부탁드린다.

1996년 12월

민족통일연구원 북한인권정보센터

<총 목 차>

< 상 권 >

- 북한의 경제체제와 경제문화 박형중
- 북한주민의 정신문화체계 연구: 임순희  
종교관을 중심으로
- 통일전후 사회환경변화에 따른 김용호·홍용표  
통일교육 방향설정 연구
- 북한 문학에 나타난 사회갈등 연구: 김재용  
북한의 분단문학을 중심으로

< 하 권 >

- 포스트 사회주의 이행기의 조한범  
러시아 사회변화연구
- 조총련의 일본내 문화 적응과정에 대한 연구: 배정호  
조총련의 생성, 발전, 쇠퇴에 관한 분석을 중심으로
- 독일 통일에서 나타난 동독주민의 신 울  
문화적 갈등과 그 해소방안 연구
- 남북통일의 도정: 공산정권의 협상전략 연구 조재현  
- 베트남 평화협상의 사례

## 차 례(상권)

### ■ 북한의 경제체제와 경제문화

박형중

제 I 장	서 론 .....	3
제 II 장	계획중앙-지배인-노동자 관계의 기본구조 경제관리체제의 기본이념과 실제구조 .....	14
제 III 장	계획중앙의 경제관념과 행태(1): 거시경제운영의 이념과 현실 .....	22
제 IV 장	계획중앙의 경제관념과 행태(2): 계획중앙의 하부관리체계 .....	46
제 V 장	기업소 지배인의 경제관념과 행태 .....	69
제 VI 장	노동자의 경제관념과 행태 .....	99
제 VII 장	결 론 .....	108

### ■ 북한주민의 정신문화체계 연구:

임순희

#### 종교관을 중심으로

제 I 장	서 론 .....	125
제 II 장	북한의 종교현황 .....	131
제 III 장	북한주민의 종교관 .....	190
제 IV 장	결 론 .....	245

■ 통일전후 사회환경변화에 따른  
통일교육방향 설정 연구

김용호 · 홍용표

제 I 장	머리말 .....	253
제 II 장	통일의 도래와 사회환경의 변화 .....	258
제 III 장	통일전후 사회환경변화에 대비한 통일교육 방향설정 .....	269
제 IV 장	맺음말 .....	289

■ 북한 문학에 나타난 사회갈등 연구:  
북한의 분단문학을 중심으로

김재용

제 I 장	북한의 분단문학과 사회갈등 .....	293
제 II 장	치안대문제와 냉전적 적대감정 .....	295
제 III 장	이산가족의 문제와 잊혀진 고통 .....	311
제 IV 장	냉전적 적대의식과 북한 분단문학의 역사적 의미 .....	328

# 북한의 경제체제와 경제문화

---

박형중\*

제 I 장 서론

제 II 장 계획중앙-지배인-노동자 관계의 기본구조  
경제관리체계의 기본이념과 실제구조

제 III 장 계획중앙의 경제관념과 행태(1):  
거시경제운영의 이념과 현실

제 IV 장 계획중앙의 경제관념과 행태(2):  
계획중앙의 하부관리체계

제 V 장 기업소 지배인의 경제관념과 행태

제 VI 장 노동자의 경제관념과 행태

제 VII 장 결론

---

\* 민족통일연구원 정책연구실, 정치학 박사



빈 면

## 제 I 장 서 론

북한에서 사회주의 경제체제가 장기간 존속했다. 북한의 각계각층 주민은 이에 순응하면서 생활해 왔다. 장기간 순응의 결과로 북한 주민은 사회주의 경제체제에 독특한 행태와 사고방식, 그리고 문화적 규칙을 체득했다. 이 논문은 이러한 행태, 사고방식, 문화적 규칙 등을 연구한다.

현재 동유럽과 구 소련 지역에서 사회주의 체제가 붕괴하고 새로운 체제를 건설해 가고 있다. 사회주의 사회체제가 붕괴하는 혁명적 변화 과정에서는 낙관주의가 우세했다. 공산당의 정치독점 그리고 사회주의적 경제체제를 허물고 그 자리에 곧바로 다원주의 정치체제와 서유럽형의 시장경제를 건설할 수 있을 것으로 상정되었다. 일단 구제도를 새로운 제도로 바꾸기만 하면 사람들은 곧바로 그 제도에 적응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했다. 대표적으로 신자유주의 전략은 구 사회주의 체제붕괴의 결과로 완전한 제도적 백지상태가 초래되었다고 해석했으며, 이 백지에 서방에서 이미 그 유효성과 우수성이 입증된 서유럽식 시장경제체제의 제도와 관행을 그려 넣기만 하면 된다고 생각했다.

그러나 실제 체제변환과정에서의 경험은 이러한 낙관적 전망을 부정했다. 체제변환의 구체적 과정은 동유럽, 구 소련 지역에서 신자유주의 전략에 입각하여 거의 동일한 전략적 도면에 의해서 집행되었으나, 그 전략 집행의 경과와 결과는 나라마다 달랐다. 민주주의 정치제도와 시장경제에 적응하는 데 있어서 어떤 국가

와 국민은 쉽게 어떤 국가와 국민은 더 어렵게 적응했다.

이러한 다른 결과는 각 국가의 구 사회주의 체제의 유산의 성격에 의하여 크게 영향받았다. 구 체제가 남겨 놓은 유산은 여러 가지 차원과 성격을 가지고 있다.<sup>1)</sup> 붕괴가 남겨 놓은 유산에는 경제, 정치, 환경 등의 유형적인 유산이 존재한다. 구 체제의 유산들 중에서 정치 경제적 차원의 제도적 유산은 가장 쉽게 청산될 수 있었다. 즉 공산당의 정치독점 대신에 정당다원주의와 여러 종류의 자유가 실천되었다. 또한 명령경제의 제도적 틀이 해체되고 시장경제에 필요한 기구와 제도들이 건설되고 있다.

그런데 사회주의 유산에는 무형적이고 측정 불가능한 류의 유산도 남겼다. 구 체제가 장시간에 걸쳐 주민들에게 습성화시켜 놓은 일정한 행태와 사고방식, 문화적 규칙이 그것이다. 이는 첫째로 사고 방식과 행태, 그리고 둘째로 문화적 규칙(code)에 관한 것이다.<sup>2)</sup> 첫째는 사회주의 체제시기에 형성된 인간 내면의 개인적 신조의 차원으로서 가치, 동기, 의지, 태도, 사고 습관, 그리고 분노 등으로 이는 대체로 무의식적인 것이나 인간의 행위에 직접적으로 반영되어 있다. 둘째로 사회주의 체제시기에 형성된 한층 내면적이고 한층 은폐된 차원의 문화 규칙(code)이다. 각 사회마다 문화적 규칙의 전형이 존재하며, 이 전형에 따라 행위와 사고의 공

---

1) Zoltan Barany and Ivan Volgyes ed., *The Legacies of Communism in Eastern Europe* (Baltimore and London: The Johns Hopkins University Press, 1995)

2) Piotr Sztompka, "The Intangibles and Imponderables of the Transition to Democracy", *Studies in Comparative Communism*, Vol. XXIV, No.3, September 1991, p. 296.

유되고 객관화된 패턴, 맥락, 도면이 존재하여 사회생활과 사회의식을 강력히 제약하며 또한 촉진한다. 구 체제는 외형적으로 붕괴했지만 그 붕괴 이후에도 구 제도의 행태, 사고방식, 문화적 규칙들이 강력한 영향을 끼치고 있다.

이러한 경험이 보여주는 것은 새로운 사회체제를 건설하고 그것이 기능하게 만들기 위해서는 유형적인 차원에서 새로운 체제를 건설하는 것 뿐 아니라 구 체제가 남겨 놓은 행태와 사고방식, 문화적 규칙을 극복하고 또한 새로운 것으로 대체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이며, 그러한 변화는 더욱 어렵다는 것이다.<sup>3)</sup> 구 체제는 일정한 제도적 특징과 운영의 규칙을 가지고 있었고 그 틀과 규칙이 기능하는 데 필요한 일정한 행태와 사고방식, 그리고 문화적 규칙을 필요로 했다. 그 행태와 사고방식, 문화적 규칙 중에는 구 체제가 사상교육기구를 통해서 공식적으로 일반주민들에게 주입시켜 내면화시켜 내고자 했던 것도 있다. 그러나 행태와 사고방식 중에는 공식적인 차원에서는 비난되었지만, 주민이 체제에 순응하여 살아가기 위하여 부지불식간에 체득했던 것들도 존재한다.

본 연구는 북한 경제와 관련하여 이러한 문제에 주목한다. 앞으로 북한의 변화에서는 과거 발전의 결과로 현재 북한에 성립해 있는 유형적인 차원의 정치·경제적 제도를 개혁하는 것이 물론

3) 대표적으로 Offe Claus, "Designing Institutions for East European Transitions" Jerzy Hausner, Bob Jessop, and Klaus Nielson eds., *Strategic Choice and Path-Dependence in Post-Socialism: Institutional Dynamics in the Transformation Process*, (Vermont: Edward Elgar, 1995), pp. 47-66; Piotr Sztompka, "Civilizational Incompetence: The Trap of Post-Communist Societies", *Zeitschrift für Soziologie*, Jg.22, Heft 2, April 1993, pp. 85-95.

중요하다. 그러나 북한의 변화는 그러한 외형적 변화의 차원에서만 상정될 수 없다. 많은 북한 관찰자들이 이미 알고 있듯이, 북한에서의 과거 발전의 결과로 북한에는 자본주의적 민주주의 체제의 정치·경제적 문화와는 다른 문화가 존재한다. 이러한 문화는 앞으로 북한이 변해감에 있어서 중요한 배경과 출발조건으로 작용하면서 그 변화를 제약하게 될 것이다. 또한 그것이 오랜동안의 북한체제의 발전의 결과로 습성화되어 무의식적인 것이 되어 버린 한에서 어떤 정치적 선언에 의해서 단숨에 또는 어떤 교육에 의해서 단기간에 바뀔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이러한 연구는 앞으로의 북한의 변화의 잠재적 방향과 가능성, 그리고 그 양상을 예측함에 있어서 중요하다. 북한의 경제 및 사회 정치적 변화는 최고지도부의 여러 정책방향에 의해서만 결정되지 않을 것이다. 또는 외부 세력이 제시하는 정치경제적 차원의 어떤 '정답'에 의해서만도 결정되지 않을 것이다. 보다 중요하게는 여러 계층의 주민들이 그 정책들에 어떻게 반응하게 될 것인가에 의해서도 결정된다. 즉 상부 또는 외부적 정책결정은 주민들이 행태와 사고방식과 부딪칠 것이며 이 두 가지가 상호작용하여 탄생하는 결과는 원래의 정책의도와는 상당히 다를 가능성이 있다.

따라서 북한의 공식적 정치 및 경제 제도, 그리고 그것을 개혁하기 위한 제도적 차원의 구상뿐만 아니라 북한 주민의 정치문화, 경제문화에 대한 지식이 필요하다. 새로운 정책이나 새로운 제도는 그 제도의 실제 집행자가 되어야 할 주체들의 행태와 사고방식을 고려하지 않고서는 방향을 잘못 잡을 위험성이 높다. 또한 남북 경제교류 협력에 있어서도 남측의 기업가, 투자자는 상대편

인 북한 경제 실무자의 경제에 대한 관념과 행태, 그리고 사회주의 경제의 여러 목시적 관행들에 대하여 알고 있어야 한다. 많은 경우에 그것은 남측의 경제인들의 상식과 상상력의 테두리를 벗어나기 때문에 매우 중요하다. 대북 정책의 경우에도 우리가 북한 주민의 경제관념과 행태에 대하여 알고 있을 수록 훨씬 효과적인 정책을 취할 수 있다. 특히 북한의 경우 주민들은 현재까지는 북한 지도부를 통해서만 자신의 요구를 굴절된 채로 표명할 수 있다. 따라서 실제 북한의 여러 주민 계층의 경제관념과 행태의 파악을 통해서 훨씬 효과적인 정책을 세울 수 있다.

이러한 인식에 기초하여 본 연구는 북한주민의 경제차원의 행태와 사고방식에 대하여 연구한다. 이 경우 정치학에서의 '정치문화' 연구의 업적을 참고하고 응용하는 뜻에서 '북한 주민의 경제관념과 행태, (경제) 문화적 규칙'을 앞으로 '경제문화'로 총괄하여 지칭하며 다음과 같이 정의한다.<sup>4)</sup> 즉 경제문화란 일련의 -경제차원의 이데올로기상, 정책상, 제도상의- 공식 규정에 대한 대응으로서 그리고 상호작용하는 가운데서 나타나는 일련의 비공식인 -경제차원에서의 행태상 태도상의- 적용자세를 일컫는다.<sup>5)</sup>

즉 본 연구는 북한의 공식 경제구조와 연관하여 북한 주민의 그에 대한 비공식적 적용이라는 뜻에서의 경제문화를 연구한다. 구조와 문화는 동등하지는 않지만 상호적 한계를 설정하는 것으로

4) 여기서는 Ken Jowitt의 레닌주의 정권의 정치문화 연구에 관한 방법론을 '경제문화' 연구에 응용하여 적용했다. Ken Jowitt, *New World Disorder: The Leninist Extinction* (Berkeley: University of California Press, 1992), pp. 50-88; 특히 pp. 52-55.

5) Ibid., p. 55.

간주된다. 이러한 방식으로 경제문화 개념을 설정함으로써,<sup>6)</sup> 1) 경제문화를 일정한 조직구조를 가진 경제체제에 대한 반응으로서 대체로 간주한다. 2) 경제문화를 단순하게 개인심리 차원으로 한정하지 않는다. 3) 북한을 특수한 예외적 체제로 인식하는 것에 반대하여, 사회주의 경제체제의 공통성, 그리고 체제의 사회주의적 성격에 때문에 발생하는 문제의 일반적 성격에 대하여 강조한다. 마찬가지로의 맥락에서 4) 경제체제 내에서의 갈등, 변화의 문제 등에 대한 가정을 작성한다. 따라서 북한경제의 공식적-제도적 요소와 비공식적-문화적 요소의 상호작용에 주목하면서 주로 후자에 대하여 서술한다.

북한 주민의 경제차원의 행태와 사고방식에 대한 연구는 물론 광범한 기초자료 수집을 기초로 하여 귀납적인 방식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이상적이다. 가장 이상적인 방법은 연구주체에 집중하는 북한출신자와의 광범한 면접, 면접내용을 상호 비교하여 일반화된 결론을 내리는 것이다. 그러나 여러 제약 때문에 본 연구를 위하여 특별히 광범한 기초자료의 수집은 이루어 질 수 없었다. 그 대신에 본 연구는 다른 방법을 사용했다. 그 방법은 나름대로의 장점과 단점을 가진다. 본 논문이 주로 사용한 자료는 다음과 같다.

첫째로 북한의 경제관련 공식 문건이다. 그 중에서도 주로 경제 교과서에 주목했다. 그 문건은 물론 북한 경제의 현실에 대한 서술이 아니라 이데올로기적 서술이다. 그렇지만 이러한 문건에 대

---

6) Ibid., p. 54.

한 비판적 해석은 북한 경제체제와 운영에 대한 공식 관념 또는 최고 지도부의 관념을 우리에게 시사한다.

둘째로 김일성 저작집에 나타난 내용이다. 김일성은 여러 연설 속에서 북한경제의 여러 난맥상에 대하여 지적하고 있으며 하급자들의 잘못을 질책하고 또한 여러 시정 방식에 대하여 지시한다. 이러한 내용을 통하여 우리는 북한경제의 실제 운영과정의 여러 내용, 그리고 하급자들의 여러 행위에 대하여 알 수 있다.

셋째로 북한 출신자들의 북한 경제에 대한 증언이다. 이러한 증언은 상당한 양에 달하며 북한의 실제 현실에 대하여 많은 것을 시사한다. 그러나 본 논문의 필요성에 비추어 볼 때 그러한 정보의 가치는 제한적이다. 북한출신자들의 증언은 대부분이 일반적 정치적 차원에 집중하며, 또한 사회경제현상에 관해서도 일반적 현상 파악에 머물러 있다. 또한 각 개인의 매우 좁은 경험, 주관적 판단에 기반하며, 주로 에피소드 수집에 머물러 있다. 이러한 차원에만 머물러 있게 되면 '동태파악'류의 일반적 수준을 넘어서기 어려워 저널리즘적 서술과 학문적 서술은 서로 구별하기 쉽지 않게 된다. 또한 협소한 자료, 비전문성 때문에, 그리고 -더 위험한 것으로서- 관찰자의 관찰목적에의 집착 때문에 유도성 문제설정, 편향적 자료 수집, 선정적 결론만을 결과할 수도 있다. 이러한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전문성에 기초하여 수집된 자료의 양의 축적, 충분한 수준의 양적 자료를 기초로한 일정한 패턴의 발견, 그로부터 귀납적 일반화 등의 작업이 필요하다.<sup>7)</sup>

7) 동유럽, 소련 그리고 중국 경제체제와 경제주체의 행태에 대한 연구는 단일 주제를 중심으로한 집중적 면접, 또는 현장 참여 조사활동 등을



넷째로 (서방에서 활동하는 동유럽 출신 학자들의 분석을 포함한) 서방학계의 사회주의 경제에 대한 문헌이다. 본 연구와 관련하여 특히 주목할 만한 것은 북한의 공식문건 그리고 김일성의 언급에 나타난 여러 사실들은 서방 사회주의 경제연구가 밝혀 놓은 분석 내용과 거의 동일한 구조와 내용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서방 학계의 연구성과를 적절히 활용하면, 우리는 북한의 일차자료에 대한 접근의 제한성이라는 한계를 극복할 수 있다. 또한 북한 경제체제의 사회주의적 특성을 도외시한 북한 특수성론, 또는 북한(경제)에 대한 서술과 분석을 단순히 북한문헌을 요약하고 비판적 토를 다는 수준의 상황을 극복할 수 있다.<sup>8)</sup> 다시

---

통해서 이루어 졌다. 전문성에 기초한 다량의 면담, 내용의 상호 비교를 통해서야 만이 체제의 일반특징이 파악된다. 그 경우어야 면접자의 자의적 또는 유도성 질문, 피면접자의 좁은 경험, 에피소드 수집류의 저널 리즘적 한계 등을 극복할 수 있고 분석적 언어를 사용한 이론적 결론, 즉 학문화가 가능하다. 또한 또한 체제의 일반특징과 관련하여 한층 연구해야 할 것이 무엇인가를 보다 특화하고 구체화할 수 있고 또한 그 내용에 대하여 판단할 수 있다. 기업소 운영, 그와 관련한 행위자의 관념과 행태 등에 관한 이러한 연구와 연구방법에 대한 시사로서 다음을 참조. Andrew Walder, *Communist Neo-Traditionalism: Work and Authority in Chinese Industry* (Berkeley: University of California Press, 1986); Jerry F. Hough, *The Soviet Prefects* (Cambridge, MA: Harvard University, 1969); Joseph S. Berliner, *Factory and Manager in the USSR* (Cambridge: Harvard University Press, 1957); Michael Burawoy, *The Politics of Production: Factory Regimes under Capitalism and Socialism* (London: Thetford Press, 1987).

- 8) 이러한 연구가 사용하는 방법과 내용은 대체로 다음과 같다. 즉, 1) 북한에서 발견되는 모든 사항은 북한에 독특한 것이고 그리하여 북한은 매우 특수한 유별난 체제이다. 2) 북한은 다른 사회주의 국가와 비교될 수 없으며 또한 일반적 사회과학의 도구로서 북한을 분석할 수 없다. 따라서 3) 북한의 어떤 분야를 소개 또는 분석한다는 것은 해당 분야의 북한 문헌을 요약 소개하는 것이다. 동시에 북한의 공식문건의 개념과

말해, 북한 공식문헌의 경제에 대한 이데올로기적 언어, 북한 경제 관리 최고책임자인 김일성의 이데올로기적 실무형 상황서술, 하급자에 대한 이데올로기적 그리고 실무형 질책 및 지시, 북한 출신자의 좁은 경험, 에피소드류의 상황소개 등을 제약을 극복하고 보다 분석적이고 이론적 차원의 접근이 가능해진다. 서방의 분석 성과를 참조로 하여 언급된 자료들이 보여 주지 않는 상황, 또는 (이데올로기적 원칙에 충실하기 위하여 또는 말하는 주체에게 유리하도록) 비틀어 전달하는 상황, 또는 곧바로 발견할 수 없는 구조적인 일반적 맥락들을 교정하고 찾아 낼 수 있다.

본 논문은 서방의 사회주의 경제연구에 대한 성과를 활용하여 위에서 언급한 바있는 북한관련 해당 자료를 분석하고 연관지우는 방식으로, 본 논문의 주제인 북한에서 경제문화 다시 말해 북한 각 경제주체의 경제관념과 행태에 대하여 서술한다.<sup>9)</sup> 그런데 앞서서 서술했듯이 경제문화는 경제체제와 분리되어 서술될 수는

---

논리를 사실상 그대로 수용한다. 특히 3)은 북한 경제의 내부체제에 관한 서술, 다시 말해 북한경제의 제도와 관리운영방식을 설명하는 거의 모든 문헌에서 나타난다. 대표적으로 정부간행물의 예를 들어보자면 통일원, 「95 북한개요」(서울: 통일원, 1995), pp. 131-168; 통일연수원, 「북한이해」(서울: 통일연수원, 1996), pp. 105-117. 북한연구에서 이러한 문제에 대한 비판으로서 다음 참조. 박형중, “북한 스탈린주의 체제에서 정치와 권력의 성격 - 북한정치연구에서 지배패러다임에 대한 비판”, 「정치학회 연례학술대회 발표논문」(서울: 한국정치학회, 1996. 12)

- 9) 단 이 경우 사회주의 경제 연구에서 상식처럼 일반화되어 있는 주요 이론적 명제가 북한에도 해당된다는 것을 증명하기 위하여 일일이 북한측의 공식자료를 증거로 제시하는 것은 포기했다. 그 이유는 그러한 식으로 논문을 서술하는 경우 현재 논문의 분량이 현재 분량의 수배에 달하게 되어 버리기 때문이며 또한 주요한 주장의 내용을 간결하게 제시하는 것이 힘들어 지기 때문이다. 물론 꼭 필요한 경우에는 증거를 제시했으며 또는 해당 북한 자료의 제목과 소재를 표시했다.

없으므로, 본 논문은 경제주체의 관념과 행태를 서술하는 데 중점을 두고 그에 필요한 한도내에서 경제체제의 문제에 대하여 언급할 것이다.

제Ⅱ장은 먼저 북한 공식문헌의 북한의 사회주의 경제체제에서 '경제적 리해관계'와 그 '실현기구'에 대해서 요약 서술된다. 그러나 북한 사회주의 경제체제의 현실은 이와 다르기 때문에 북한의 서술은 실제 관계를 분석하는 데 적절하지 못하다. 따라서 북한의 위계적 구조와 포괄적 통제에 기초한 경제관리 체제의 기본 특질이 따로 서술된다. 이와 함께 북한 사회주의 경제체제에서 주요한 경제주체로서 계획중앙-기업소 지배인-노동자의 3자를 구별하여 확정하고 또한 3자간의 관계의 구조와 내용에 관하여 서술한다. 3주체의 관념과 행태를 규정짓는 기본배경은 북한의 거시경제 운영 정책과 현실, 또한 경제관리체제의 구조와 운영방식이다. 그런데 거시경제 운영, 경제관리체제에 관련하여 주요한 결정주체는 계획중앙이다. 따라서 계획중앙의 경제에 대한 관념과 행태가 제Ⅲ장과 Ⅳ장에서 거시경제운영, 경제관리체제 문제를 중심으로 서술된다. 이러한 서술은 제Ⅴ장과 Ⅵ장에서 서술하는 지배인과 노동자의 관념과 행태를 조건지우는 배경이 된다.

제Ⅲ장은 계획중앙의 거시경제 운영관념에 대한 서술, 그러한 관념에 기초한 정책의 현실 상황에 대하여 서술한다. 계획중앙은 경제정책 결정 책임자이기 때문에 그의 경제에 대한 관념은 북한의 공식적인 거시경제 운영이론에 잘 나타나 있다. 계획중앙의 행태는 그가 실제 경제운영에서 직면하는 여러 문제들에 대하여 인식하는 방식과 대처하는 방식에 나타나 있다. 주로 북한의 경제의

발전 및 경영 방식에 대한 김일성의 언급, 공식 경제문헌에 나타난 경제이론이 요약되고 소개된다. 여기서의 북한 경제발전에 대한 기본관념으로서 자립적 민족경제, 균형에 대한 속도 우선 원칙, 적극적 균형론, 세부화 원칙 등에 대하여 요약 서술하고 그러한 원칙에 의해 운영되는 경제의 실제상황에 대한 비판적 분석이 뒤 따른다.

앞서의 거시경제정책과 현실과 함께 계획중앙이 주도하는 경제관리체계에 의하여 기업소 지배인, 노동자의 관념과 행태가 조건 지워진다. 제IV장은 계획중앙의 하부관리체계에 대한 설명을 중심으로 하여 계획중앙의 관념과 행태에 대하여 서술한다. 북한 경제에서 계획중앙과 하부의 관계체계에서 상호간의 이익이 일치하지 않다는 것, 상부의 하부에 대한 통제가 불완전하다는 것과 그 원인에 대하여 서술한다. 주요한 주제는 주인-대리인 문제, 기관 및 지방 본위주의, 목표설정과 자원배당을 둘러싼 문제등이다. 다음으로 상부가 하부와 이익불일치, 상부의 하부에 대한 불완전 통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상부가 하부에 대하여 가하는 통제의 여러 방식을 서술한다. 인적 충성에 기초한 당료제적 조직 성립과 통제, 당료의 위계화된 공식 특권과 비공식 특권, 권력의 분권화와 분산을 통한 중하부 통제, 목표만을 정해주고 그 결과에 대한 통제, 경제행정에 대한 당기구의 간섭 등이 서술된다.

제V장에서는 북한 경제의 중-하급 단위에서 가장 중요한 행위자인 기업소 지배인의 경영환경, 경제·경영 관념과 행태가 분석된다. 주요한 주제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목표 달성, 후견망 확보와 서로 감싸주기 보호동맹, 총생산액 최우선주의, 자재문

제와 관련된 중-하급 실무자의 행태, 효율에 대한 충성 우선주의, 허위보고 등이 서술된다. 마지막으로 제VI장에서는 노동자층의 경제관념과 행태가 서술된다.

## 제II장 계획중앙-지배인-노동자 관계의 기본구조 경제관리체계의 기본이념과 실제구조

북한의 사회주의 경제의 가장 원칙적 관련은 국가소유와 단일 정당의 통치이다. 이 두가지 사항의 융합이라는 기초하에 중앙집권적 계획경제가 가능해진다. 이러한 제도는 역사적으로 소련의 스탈린 통치하에서의 사회경제적 발전의 결과로 탄생했다. 이 체제는 이차대전 이후 50년대를 거쳐서 북한에서도 재생되었다. 이러한 체계는 야심적인 경제발전과 구조변화를 일으키는 도구로서 기능해야 했다. 이것이 가능했던 것은 일원적 소유체계와 정치 및 경제 권력의 고도집중 때문이었다. 사회주의적 계획경제 및 관리체계의 핵심은 공업부문이었다.

### 1. '사회주의 사회'에서 '경제적 리해관계'와 그 '실현기구'

북한의 공식문헌은 자신의 경제체제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특징지어 이론화하고 있다. 북한의 문헌은 '착취사회'에서 '경제적 리해관계'들이 '적대적 성격'을 갖는데 비하여 '생산수단에 대한 사회주

의적 소유에 기초한 사회주의 사회'에서의 모든 경제적 리해관계는 유기체적 통일을 이루며, 따라서 이익갈등은 생각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그 구체적 내용을 보면 다음과 같다.

1. 사회주의사회에서 각이한 경제적리해관계들이 유기적으로 통일되어 하나의 전일적 체계를 형성한다.
2. 집단주의적원칙에 기초하고있는 동지적 협조관계가 사회주의사회의 경제적리해관계들의 유기적인 통일을 규제한다.
3. 전사회적, 전인민적 경제적리해관계는 말할것도 없고 특수한 집단적리해관계, 나아가서 개인적리해관계도 사회공동의 리익과 직결되어있다.
4. 따라서 '사회공동의 경제적 리해관계를 우위에 놓고 집단의 리익과 개인의 리익이 일치하며 집단의 이익 속에서 개인의 리익이 실현된다'.
5. 물론 각이한 경제적리해관계들사이의 차이를 배제하지 않지만, 여기서 기본은 경제적리해관계형태들의 통일성이다.<sup>10)</sup>

이러한 성격의 '사회주의 사회에서의 경제적 리해관계'는 '일련의 사회경제적 기구'에 의하여 실현된다고 한다. 그 기구는 두가지로 갈라진다. 그 하나는 '경제적리해관계를 전 사회적범위에서 직접적으로 실현하는데 작용하는 기구'로서 '사회주의 국가의 통일적인 계획적지도와 개별적생산집단 및 근로자들의 창발성의 발양'<sup>11)</sup>이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국가적 통일적인 계획적 지도를 확고히 보장하고 끊임없이 강화하는 기초우에서 개별적집단 및 생산자들

10) 1에 관해서는 「주체의 사회주의 정치경제학의 법칙과 범주」 제1권, p. 36, p. 48, p. 49; 2에 관해서는 p. 37, p. 49; 3에 관해서는 p. 49; 4에 관해서는 p. 39; 5에 관해서는 p. 50.

11) 위의 책, p. 52.

의 창발성을 최대한으로 발양시키는것<sup>12)</sup>이라고 한다. 이러한 실현기구의 구체적 형태로서 “대안의 사업체계와 계획의 일원화, 세부화, 축적을 끊임없이 늘이면서 소비를 동시에 늘이는 축적과 소비의 균형설정의 기본원칙<sup>13)</sup>이 지적된다. ‘사회주의 사회에서 경제적 리해관계를 실현하고 그의 추동적 역할을 높이는’ 그 두번째 기구는 ‘정치도덕적 및 물질적 자극’이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정치도덕적 자극을 위주로 하면서 여기에 물질적자극을 배합하는것<sup>14)</sup>이라고 한다.

북한문헌의 ‘사회주의사회에서 경제적리해관계’에 관한 이론은 ‘국가적 이익’에 대한 ‘개별적 이익’의 종속의 원칙을 이론화하고 있다. 사회주의에서는 전사회의 노력이 공동의 목표에 집중되어야 하는 체제로 간주되며 당-국가는 그 실현을 위한 적절한 수단과 방법을 제시할 수 있는 것으로 주장된다. 따라서 이러한 발상에서면, 정치세력들의 자유로운 상호관계도 또한 개별이익의 자발적이고 또한 통제받지 않는 표출도 허락되지 않는다. 이러한 체제는 거대기업 또는 거대조직과 비유될 수 있다. 모든 정치조직, 결사체, 공업기업, 또는 지방자치단체 등은 이 거대 조직의 기능적 하부단위로 간주된다. 이러한 체제에서 하부 단위는 개별적 이익의 입장이 아니라 전체기업의 입장에서 기능하도록 요구받는다. 어떤 하부단위의 자율적 이익표출도 체제 자체에 대한 위협으로 간주된다.<sup>15)</sup> 하부단위의 자율적 이익표출을 금지하는 이유는 다음과

12) 위의 책, p. 53.

13) 위의 책, p. 54.

14) 위의 책, p. 56.

15) 다시 말해 “만약 개별적집단이나 생산자들의 창발성을 일방적으로 강

같은 논리로 주장된다. 체제의 기본원칙에 따르면, 경제적 결정은 합리적이고 기술관료적 기준에 의거하여, 국가적 이익과 체제의 하부단위의 이익을 조화시키는 최적의 방식으로 내려져야 한다. 이익의 표출이 통제를 벗어나는 경우 의사형성과정에 협상, 압력 그리고 갈등이라는 정치적 요소들을 개입시키게 된다. 이러한 상황은 중앙의 통제능력을 위협에 빠뜨리며 따라서 체제내의 지배적 위치를 위협한다는 것이다. 동시에 전체체제는 중앙이 체제를 완전한 방식으로 운영할 수 있다는 관념에 입각하고 있다. 다시 말해 중앙은 현재와 미래에 대하여 완벽한 결정을 내릴 수 있으며 또한 거대조직의 개별 하부 단위의 자율성의 범위와 실제기능을 효율적으로 통제할 수 있다는 발상에 입각한다.<sup>16)</sup> 따라서 통일성과 합의의 원칙이 이 체제에 특징적인 하나의 가치가 된다. 이익의 갈등, 투쟁, 부조화는 혼란과 파괴를 배태하는 사회적 최악의 표상으로 간주된다.

이러한 체제의 원칙에 따르면 거대조직의 모든 기능단위는 자기

---

조하면서 생산과 경제지도관리에서 국가의 통일적인 계획지도를 약화시키면 기관본위주의, 개인리기주의가 조장되고 사회공동의 리익이 침해되며 사회주의, 공산주의에로의 전진운동에 엄청난 후과를 가져오게 된다.” 위의 책, p. 53.

- 16) 이른바 ‘인민경제의 계획성 실현과 경제발전의 유일성’에 관한 다음의 명제를 참조. 즉, “경제발전에서 계획성을 실현한다는 것은 인민대중의 공동의 요구와 리익, 경제발전의 현실적조건을 전면적으로 타산하여 세워진 유일적인 인민경제계획에 기초하여 생산자들의 경제활동의 전 사회적인 호상일치를 보장한다는것을 의미한다. 사회주의사회에서는 국가적리익, 사회발전의 요구에 맞게 세워진 유일적인 계획, 다시말하여 계획의 유일성에 의하여 모든 부문, 모든 생산단위, 모든 지역에서 인민대중의 경제활동의 일치성, 통일성이 확고히 보장된다.” 위의 책, p. 323.



단위의 이익을 중앙이 설정한 국가의 이익과 조화를 시켜야 한다. 그러나 실제에서 기능단위는 자기 단위의 필요를 충족하고 자기 단위의 이익을 실현하는데 가장 관심을 갖는다.<sup>17)</sup> 그 이유는 다음과 같다. 국가적 과업과 목표가 설사 전체사회의 차원에서는 명확하게 구체화되어 있다하더라도 개별 기업소나 지방단위에서는 명확하게 구체화되기는 힘들다. 지방지도자 또는 기업의 지배인이 지역 또는 기관의 이익과 국가적 과업을 어떻게 상호결부시켜야 하는가는 명확히 밝혀져 있지 않다. 실제에서 그것은 단순히 위에서 내려오는 명령에 완전히 종속하고 순순히 협력한다는 것을 뜻한다. 그러나 어떤 기능단위의 직속 상급자는 직속 하급단위의 작업성과를 일반적이고 국가적 과제와 목표에 얼마나 기여했는가에 따라서 평가하지는 않는다. 하급 단위의 책임자는 그들이 자신의 조직과 지방자치체를 어떻게 운영했는가, 그들이 어떻게 주어진 목표를 달성했는가에 따라 평가된다. 따라서 중-하급 단위는 막연하고 명확히 정의되어 있지 않은 일반적 목표에 우선하여 개별적 목표를 추구한다. 중앙과 중-하부 단위간의 이러한 이익의 불일치는 거대조직을 연구하는 사람들에게 잘 알려져 있다. 이러한 불일치 때문에 이른바 지방과 기관의 '본위주의', 체제의 각 단위는 체제의 일반 목표를 실현하기 위해서 기능해야 하나 실제로 각 단위는 일반목표와는 다른 목표를 추구한다는 뜻에서 목표의 변질, 하부단위의 자율화 현상 등이 나타난다. 사회주의 경제는

---

17) Jacek Tarkowski, "Patronage in a Centralized, Socialist System: The Case of Poland", *International Social Science Review*, Vol.4, No.4, 1983, pp. 499-502.

국가 전체의 경제가 하나의 단위로 운영한다. 그에 따라 조직의 규모, 복잡성, 다기능성이 커지며, 그 커지는 것에 비례하여 거대 조직에서 나타나는 역기능 역시 증대한다.

## 2. 위계적 조직구조와 포괄적 통제

사회주의 체제에서 국가의 일반이익의 절대성, 그에 따른 하급 단위의 개별이익의 표출의 금지 원칙이 공식원칙이다. 또한 사회주의 계획경제에서는 경제를 관리하는 데 있어서 시장기구를 이용하지 않는다. 경제 단위간의 관계는 더이상 시장기구의 법칙에 의하여 조율되지 않는다. 모든 단위는 관료체 내의 각급 경제행정 기관으로 변화하며 각급 단위간의 경제관계는 관료적 행정관계로 변화한다. 또한 각 단위의 활동목표는 자체의 경제적 효율성을 높인다던가, 또는 최대 이윤을 올리는 것 등이 아니다. 각 단위의 활동목표는 계획중앙이 설정한 총적 목표를 관할 영역내에서 해석하고 집행하는 것이다. 다시 말해 각급 경제단위에 있어서 계획중앙이 설정한 전체 경제적 목표의 달성이 최우선적이며 자체의 효율성과 채산성의 문제는 부차적이다.

이러한 경제관리체계의 기본적 조직원칙은 위계적 조직구조와 포괄적 통제이다. 각 국영기업은 생산부문별로 부문계선을 따라서 조직된다. 이러한 부문별 계선은 단일위계조직으로 통합되어 국민 경제는 거대한 단일위계조직을 이루게 된다. 그 위계는 4단계로 이루어져 있다. 이 위계조직의 최정상부에서 정부와 당의 지도부가 계획중앙을 형성한다. 북한의 경우 정권기관의 차원에서는 주

석, 중앙인민위원회, 정무원 등, 당기관 차원에서는 조선로동당 총비서와 당중앙위원회 등을 포괄한다. 국가계획위원회는 이러한 계획중앙의 일부이다. 그 아래 단계의 위계를 이루는 것이 부문별, (그리고 기능별) 여러 부(와 위원회)이다. 이 부가 담당하는 생산분야는 명확히 구분되어 있으며 각 부는 해당 생산분야의 경제관리기구와 기업소들을 관리한다. 각 부 산하에는 기능별 국과 함께 해당 산업분야를 보다 세분화하여 생산관리를 담당하는 총국 또는 연합기업소가 있다. 총국 또는 연합기업소는 산하 기업소가 실제 경영상에 직면하는 여러 문제들을 관리한다. 국영부문의 최하단에 존재하는 것이 기업소이다.

기업소는 생산과 분배의 기초단위이다. 기업소의 생산과 분배 과정은 국가의 직접적 관리와 감독을 받는다. 국가는 경제관리체계를 통하여 산하 기업소의 생산과 분배과정을 직접 관리 감독한다. 그런데 국가소유와 일당지배라는 기본틀을 유지하면서도 국가가 기업소의 생산과 분배 과정에 간섭하는 형태는 다를 수 있다. 18) 예를 들어 고전적 사회주의 경제와 시장사회주의의 차이가 그것이다. 국가의 경제관리체계는 계획중앙이 기업소의 생산과 분배 과정에 참여하는 형태에 따라 다르게 조직된다. 고전적 사회주의 경제를 유지하면서도 국가의 참여형태는 변경될 수 있다. 그 변경에 따라 특히 중앙경제관리기구, 즉, 국가계획위원회-부(위원회)-연합기업소와 그 공식업무는 끊임없이 재조직되고 변경된다. 여기서 연합기업소도 중앙관리기구로 분류한 이유는 다음과 같다.19)

---

18) Waldemar Kuczynski, "The State Enterprise under Socialism", *Soviet Studies*, Vol.XXX, No.3, July 1978, pp. 314-317.

연합기업소는 1) 행정조치에 의하여 창설되며, 2) 계획중앙의 요구에 따라 정보를 수집하고 집계하는 데 편리하도록 기업소를 배합하여 단일조직으로 만들고 있으며, 그 주요한 목적이 3) 업무와 자원의 배분과 4) 기업소 일상활동에 대한 중앙집권적 감독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기초단위인 기업소는 그대로 남는다. 따라서 사회주의 경제관리체계에서 기업소는 중앙관리기구에 비하여 훨씬 영속적인 조직이며, 또한 -반드시 상부의 요구와 일치하지는 않는 - 고유한 정체성과 이익을 갖는 조직이다.

이러한 위계적 체계에서 의사결정권과 통제는 계획중앙에 집중되어 있다. 그 집행은 중앙경제관리기구를 통해서 기업소에 전달된다. 중앙의 계획가는 전체경제의 양적인 거시경제 목표를 정하면 이를 구체화하고 쪼개어 각 경제부문별 관리기구인 부에 나누어 준다. 각부는 이를 연합기업소를 통하여 최종적으로 산하 기업소에 쪼개어 준다. 중앙의 계획가가 정한 양적 계획치를 중간단계의 생산부문별 목표, 그리고 각 기업의 미시경제적 차원에 구속력 있는 목표로 쪼개는 과정이 사회주의적 계획 및 관리의 핵심내용이다. 국가부문이 위계적으로 조직되어 있기 때문에 상부가 개별 기업소에 세세한 요구사항을 제기하는 것이 가능하다. 각 기업소의 연간계획은 부 계획의 한 구성요소, 부 계획은 인민경제계획의 일부에 지나지 않는다. 위계의 여러 단계에서 각 상급관료는 각 하급 경제관료의 업적을 평가한다. 그 기준은 배정된 계획을 얼마나 달성했는가이다.

---

19) Kuczynski, Op. cit., p. 316.

계획중앙은 자재공급위원회와 자재공급망을 통하여 핵심 자재와 자본재를 현물로 배급하며, 임금과 가격의 결정, 은행업무, 고정자산건설, 과학기술 정책 및 통계업무를 관장한다. 국영 기업소는 여러 상급국가기관, 주로 직속 상급위계인 해당 부와 연합기업소에 의하여 여러 방식을 통해 포괄적으로 통제받는다. 구체적으로 보면, 기업소는 이윤과 감가상각기금의 대부분을 국가예산에 납부하며, 국가예산으로부터 자본을 할당받는다. 상급기관은 기업소의 핵심투입을 배급하며 산출목표, 그 종류와 규격에 관한 목표, 총임금фон드, 직업등급과 임금지수 등을 결정한다. 상급기관은 상금의 구성과 분배의 관리에 대한 규칙을 정하고, 투입 및 산출의 가격을 제정하며, 은행신용에 대한 독점권을 행사한다. 중앙은행은 기업간의 모든 거래를 감독한다. 상급기관은 주요 투자의 양과 구성을 결정한다. 국영기업소는 독립채산제에 의하여 운영되어야 한다. 이는 또 중앙의 또다른 통제수단으로서 두 개의 요소로 이루어져 있다. 즉 각 기업소는 재정을 따로 계산하며 기업소의 판매수익으로 기업소의 지출을 메꾸는 것이다.

### 제Ⅲ장 계획중앙의 경제관념과 행태(1): 거시경제운영의 이념과 현실

여기서는 북한의 경제의 발전 및 경영 방식에 대한 김일성의 언급, 공식 경제문헌에 나타난 경제이론을 요약하고 소개한다. 이러한 공식이론은 김일성이 북한경제 실상에 대하여 언급하고 있는

내용과 비교 대비된다. 또한 서방 사회주의 경제연구의 성과에서 나타난 이론적 업적들과 비교·검토된다. 이러한 비교를 통해서 보면, 한편에서는 최고지도부의 경제발전 및 경영에 대한 관념, 또는 북한 경제의 발전과 경영에 대한 공식적 원칙을 알 수 있다. 그런데 이 때 공식 원칙은 곧바로 북한 경제의 발전과 경영의 현실은 아니다. 이는 김일성의 여러 언급에서도 드러난다. 김일성은 공식 원칙에 대해서 주장할뿐아니라 그와는 다른 실제현실에 대하여 인식하고 그에 대하여 대책을 세워 반응하고 있다. 공식이론, 반응과 대책이라는 성격을 갖는 최고지도부의 실제 경제정책 행위 등을 서방의 사회주의 경제문헌들의 내용과 비교하면서 재구성한다. 이러한 재구성은 분석적·이론적 언어로 표현된다. 북한측의 공식이론, 그 이론에 의해 운영되는 경제체제의 현실에 대한 거시적 분석에 나타난 북한경제체제의 구조와 운영방식은 다음 장에서 이루어지게 될 중-하급 경제행위자의 경제행위와 사고방식을 조건지우고 제약하는 틀이 된다. 또한 그것을 분석하는 기초가 된다.

## 1. 경제발전에 관한 기본관념

가. '자립적 민족경제', '균형에 대한 속도 우선'원칙

북한의 공식이론에서 나라의 경제발전의 기초적 노선은 이른바 자립적 민족경제건설론이다. 자립적 민족경제의 건설이 왜 필요한가에 대하여 북한이 내세우는 정치적 이유에 대해서는 여기서 언급하지 않기로 한다.<sup>20)</sup> 단지 그 경제적 내용만을 주제로 삼는다.

북한은 자립적 민족경제는 “국내수요를 기본적으로 국내생산으로 보장하는 경제이며 원료생산으로부터 완제가공품의 생산에 이르기까지 생산순환이 완결되고 부문들 사이의 유기적연계가 이루어진 조화로운 경제이며 현대기술로 장비되고 과학기술의 새로운 성과가 끊임없이 도입되어 재장비되어가는 경제이며 생산과 소비가 유기적으로 연관되고 통일된 경제”<sup>21)</sup>를 말한다. 이러한 경제의 건설을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것이 필요한 것으로 간주된다.<sup>22)</sup>

첫째로, 자주적이고 다면적인 경제구조를 확립한다. 이를 위한 가장 기초적 과제는 기계제작공업을 골간으로하는 중공업을 빨리 발전시키는 것이다.

둘째로, 인민경제의 기술적 토대를 튼튼히 한다. 이를 위해 인민경제의 현대화와 과학화를 실현한다.

셋째로, 튼튼한 원료, 연료, 동력 기지를 꾸리어 인민경제의 원료, 연료, 동력 수요를 기본적으로 자체로 보장한다.

넷째로, 민족기술간부대열을 꾸리어 “자립적 민족경제건설에서 나서는 어렵고 복잡한 과학기술적문제들을 다른 나라에 의존함이 없이 자체로 풀어나가며 민족경제를 자체의 힘과 지혜로 관리하고 운영할 수 있게 한다.”<sup>23)</sup>

20) 가장 간략한 요약은 다음과 같다. 즉, “독립된 민족국가를 단위로 하여 건설되는 자립적민족경제는 민족적독립의 공고화와 정치적자주권의 실현을 물질적으로 보장함으로써 인민대중의 주인으로서의 사회적지위와 자주적이며 창조적인 생활을 보장할 수 있게 한다.” 「주체의 사회주의정치경제학연구」 (평양: 과학, 백과사전출판사 1978), p. 85.

21) 위의 책, p. 89.

22) 위의 책, pp. 81-102, 특히 p. 98, pp. 100-101.

23) 위의 책, p. 89.

이러한 '자립적 민족경제'의 중요한 특징은 '생산장성의 끊임없는 높은 속도'를 실현하는 것이다. 북한의 공식경제이론은 경제발전의 높은 속도와 경제의 균형은 다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경제발전의 높은 속도를 보장하는 것이라고 주장한다.<sup>24)</sup> 속도와 균형은 목적과 수단의 관계에 있으므로 경제발전에서는 언제나 속도를 중요시하고 먼저 내세우며 균형을 그에 복종시켜야 한다는 것이다. 다시 말해, 생산장성의 속도를 현실발전의 요구에 맞게 높이 설정하고 그에 맞게 균형을 적극적으로 맞추어야 한다. 그러나 이러한 긴장의 경우에도 균형보다는 속도가 더 중요하기 때문에 균형이 속도에 적응해야 한다. 이처럼 경제발전의 끊임없는 높은 속도를 보장하기 위한 수단으로서의 균형문제가 설정되어 있으며, 그 해결을 위하여 두 가지 균형의 기본원칙이 제시되고 있다. 즉, 적극적 균형의 설정과 세부계획화의 원칙이다.

#### 나. '적극적 균형'론

우선 적극적 균형을 통해서 균형이 속도에 적응해야 한다. 이를

---

24) 이 경우에 속도와 균형 사이의 긴장관계가 인정되고 있다. 즉, "균형을 절대화하는 경우에는 생산장성속도를 현실발전의 요구에 맞게 정하는 문제와 예비를 전사회적으로 남김없이 동원하는 문제를 바로 풀 수 없으며 생산장성 속도만 절대화하면서 주관적으로 높은 속도를 주장하는 경우에는 균형이 파괴되어 생산장성의 높은 속도를 현실적으로 보장할 수 없고 전망적인 경제발전이 혼란을 가져올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경제발전에서는 속도와 균형을 다같이 중요시하고 어느 하나도 놓치지 말아야 한다." 리기성, 「주체의 사회주의정치경제학의 법칙과 범주: 사회주의경제의 전반적 영역에서 작용하는 경제 법칙과 범주」 제1권 (평양: 사회과학출판사, 1992), p. 316.



위해 “생산장성의 예비와 가능성을 최대한으로 동원리용하는 기초우에서 인민경제부문들사이에 균형을 적극적으로 설정”<sup>25)</sup>해야 한다. 적극적 균형은 “사회주의사회에서 근로자들의 사상의식을 끊임없이 높여 그들의 혁명적열의와 창조적적극성을 더욱 높이 발양시키며 생산력을 끊임없이 발전시켜 생산장성의 물질적요인을 최대한으로 동원할것을 예견”<sup>26)</sup>하여 세워진다. 적극적 균형은 다음과 같은 내용을 갖는다.<sup>27)</sup>

- 1) 주도적이며 앞선 부문에 뒤떨어지는 부문을 따라 세우는 방법으로 인민경제부문들사이에 균형을 보장한다.
- 2) 경제발전의 소여단계에서 중심고리에 힘을 집중하여 전반적인 경제발전을 다그친다.<sup>28)</sup>

---

25)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경제리론 해설」 (평양: 사회과학출판사, 1975), p. 52.

26) 위의 책.

27) 위의 책.

28) 중심고리에 역량을 집중하는 원칙에 대한 보다 자세한 설명은 다음과 같이 서술되어 있다. 즉, “한편으로는 주어진 설비, 자재, 자금, 로력을 가지고 소여시기에 개별적기업소들에서의 생산과정뿐만아니라 인민경제적 범위에서 사회적 생산의 전반적인 과정에 영향을 주는 그러한 부문의 발전을 결정적으로 추켜세우며 다른 한편으로는 중심고리와 련쇄된 다른 부문들을 높은 속도로 발전시키는데 필요한 인적 및 물질적 요소들을 빨리 마련한다. 인민경제발전에서 중심고리는 소여시기에 노동계급의 당이 무엇을 해결하려 하는가에 따라 규정된다. 사회주의경제발전에서 중심고리는 고정되어있지 않다. 경제발전과정에서 조성되는 현실적 조건과 소여시기 혁명과 건설 앞에 제기되는 정치경제적과업에 따라 중심고리는 그때그때 나타날 수 있다. 그러므로 중심고리에 역량을 집중하는것은 경제발전에서 새로운 균형에로의 적시적인 이행을 동반한다.” 위의 책.

경제발전의 끊임없는 높은 속도와 적극적 균형의 보장이라는 관점에서 인민경제의 여러 중요 균형에 대한 기본원칙이 정해지고 있다.<sup>29)</sup>

- 1) 생산수단 생산과 소비재생산사이의 균형: 무엇보다도 중공업(금속공업, 기계제작공업, 전력공업, 석탄공업, 화학공업, 건재공업등)을 우선적으로 장성시키면서 이에 경공업과 농업을 따라세운다.
- 2) 축적과 소비 사이의 균형: 축적을 우선적으로 빨리 늘이면서 소비를 동시에 늘인다.
- 3) 공업과 농업의 균형: 인민경제의 주도적부문인 공업을 발전시키고 그 지도적역할을 높이는 동시에 공업발전에 적응하게 농촌경리의 발전을 따라세운다.
- 4) 공업내부의 균형: 가공공업에 대하여 그 선행부문인 전력, 채취, 금속 공업과 철도운수를 앞세운다.
- 5) 농업내부부문사이의 균형: 알곡생산을 위주로 하면서 축산업, 과수업, 잠업을 비롯한 농업생산의 모든 부문을 동시에 발전시킨다.
- 6) 물질생산부문과 비생산부문, 봉사부문 사이의 균형: 이와 관련하여 특히 중요한 것은 로력자원 분배에서의 균형. 생산부문 종업원수의 우선적증대를 보장하면서 비생산부문의 로력은 될수록 줄인다.

이러한 경제성장의 높은 속도와 적극적 균형을 위하여 특히 중요한 일련의 산업들, 다시 말해 '인민경제의 다른 부문보다 확고히 앞서서 발전하면서 다른 부문들의 발전을 위한 근본조건을 마련하는 부문들'<sup>30)</sup>은 '인민경제의 선행부문'으로 간주된다. 즉, 다른

29) 리기성, 「주체의 사회주의정치경제학의 법칙과 범주: 사회주의경제의 전반적 영역에서 작용하는 경제 법칙과 범주」 제1권, pp. 352-357.

30) 위의 책, p. 358.

부문에서의 자재보장, 협동생산, 소송조직이 원만히 이루어지기 위해서 원료, 연료, 동력 생산과 수송이 다른 부문보다 언제나 앞서서 발전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러한 원칙을 실현하는 데서 중요한 정책으로서, 무엇보다 먼저 이 부문에 대한 국가투자를 전망성 있게 계획적으로 늘려가는 것이 제시된다. 특히 전력, 채취, 금속공업과 철도운수를 부문에 투자를 집중해야 한다는 것이다.<sup>31)</sup>

#### 다. '계획의 세부화'의 원칙

세부계획화의 본질적 내용은 인민경제의 모든 부문, 모든 단위에서 경제활동과 생산의 모든 요소들을 구체적으로 세부에 이르기까지 맞물리게 한다는 것이다. 계획의 세부화를 통하여 경제발전의 불균형성과 자연생장성의 요소를 완전히 없애고 계획적 균형적 발전법칙의 요구를 가장 정확하게 반영하여 경제를 아무 혼란도 없이 높은 속도로 발전시킬 수 있다는 것이다. 구체적으로 보면 그 이유는 다음과 같다.<sup>32)</sup> 즉 세부계획화를 통하여,

- 1) 생산의 물질적 요인들, 생산장성의 예비와 가능성을 남김없이 찾아내어 생산에 끌어들이 수 있다.
- 2) 생산장성의 요인들을 효과적으로 이용할 수 있다. 세부균형을 정확히 보장할수록 생산장성의 인적 및 물질적 요인들을 장비하거나 사장하는 일을 없애고 같은 원료, 자재, 설비, 로력을 가지고도 사회적생산을 훨씬 높일 수 있다.

31) 위의 책, p. 368.

32)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경제리론해설」, pp. 61-71.

- 3) 협동생산을 강화하여 사회적재생산과정을 순조롭게 진행할수 있다.
- 4) 세부균형은 생산자대중에게 정확한 투쟁목표를 명백히 줄수 있으며 계획과제의 정치경제적의의를 정확히 인식시켜, 대중의 혁명적열의와 창조적적극성을 남김없이 발양시킬수 있다.

북한 문헌은 계획의 세부화를 “국가계획기관들이 당의 정책과 객관적 현실에 맞게 직접 전반적 경제발전과 매개 공장, 기업소들의 경영활동을 밀접히 연결시키며 모든 단위들의 계획을 구체화하여 모든 지표들을 세부에 이르기까지 똑바로 맞물릴수 있게 하는 계획화방법”<sup>33)</sup>이라고 정의한다. 이 세부계획화의 특징은 다음과 같이 서술된다.<sup>34)</sup>

- 1) 계획의 세부화는 지표를 세부분에 이르기까지 확대할뿐아니라 그 모든 지표들을 똑바로 맞물려줌으로써 사소한 물자라도 그 생산과 소비, 수요와 공급이 빈틈없이 맞물려돌아가게 한다.
- 2) 세부화는 이와 함께 세분확대된 지표들을 모두 국가계획지표로 하고 모든 지표들의 수행에 법적의무성을 부여함으로써 생산활동이 국가계획밑에서 진행되게 한다.
- 3) 경제의 규모가 방대해지고 부문들, 지역들사이의 생산적연계가 복잡해지며 기술장비수준이 높아질수록 계획을 보다 구체적이고 세밀하게 세우는 것이 경제발전의 계획성, 균형성 실현의 더욱더 중요한 요구이다.
- 4) 세부균형이 보장되어야 경제활동이 밑에서부터 면밀히 맞물려돌아갈수 있으며 고도로 조직화된 사회주의경제를 빈틈없이 정확하게 운영하여나갈수 있다.

33) 「주체의 사회주의 경제학의 법칙과 범주」 제1권, p. 396.

34) 「경제사전1」 (평양: 사회과학출판사, 1985), p. 335; 「주체의 사회주의정치경제학의 법칙과 범주」 제1권, pp. 396-398.

## 2. 경제발전의 현실과 대응 행태

북한은 이러한 자립적 민족경제발전 노선이 주체사상의 요구에 기초한 독창적인 발전노선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실제에 있어서 이는 거의 모든 사회주의 국가에 공통된 전략이었다. 이 전략은 내부지향적 경제발전에 기초한 극도의 수입대체 주도 공업화를 추진하면서 국제적 특화로부터 얻어질 수 있는 거의 모든 이득을 포기하고 있다.

이러한 공업화전략은 (경제성장 과정에서 증대되는 자원뿐만 아니라 기존에 존재하는 것까지 포함하여) 자원을 대규모로 공업투자로 이전하는 것을 기본으로 한다. 특히 중간재와 투자재를 생산하는 중공업이 특별한 배려를 받는다. 중공업은 성공적인 공업화를 위해서 모든 사회주의 국가가 각기 갖추어야 하는 기초 공업 복합체의 필수요소로 간주된다. 이러한 전략은 공업구조의 매우 급속한 변화를 초래한다. 그 결과 공업구조로만 보면 일인당국민총생산이 한층 더 높은 시장경제와 유사해 진다. 그러나 이러한 '현대적' 걸모습은 매우 높은 비용을 치르고서 얻어진 것이다. 공업 능력의 부족에서 오는 여러 전통적 발전 비용에 더하여 사회주의 경제체제에 특징적 요소들 때문에 초래되는 비용이 부가된다.<sup>35)</sup>

35) 사회주의 경제에서 '자립적 민족경제' 식의 발전전략의 효과에 대해서는 무엇보다도 Jan Winiecki, *The Distorted World of Soviet-Type Economies* (London and New York: Routledge, 1988), pp. 73-77. 참조. 이러한 경제의 낭비적 측면에 관한 유사한 논리전개에 관해서 Donald Filtzer, *Soviet Workers and Stalinist Industrialization: The*

‘자립적 민족경제’론에 입각한 거의 자급자족적 발전은 철강, 화학, 시멘트 등과 같은 중간재로 투입되는 생산물 생산 공업의 과도한 팽창을 가져온다. 그 이유는 이러한 중간재 투입물 수요를 전적으로 자가생산하여 충족시키고자 하며 수입을 배제하기 때문이다. 또한 북한처럼 중소기업 경제가 자립적 민족경제노선을 따르게 되면, 너무 많은 종류의 재화, 각 생산의 경우 너무 적은 수량을, 너무 많은 자재투입과 생산요소를 사용하여 생산하게 된다. 이처럼 전문화의 부재와 높은 생산비용이 문제될 뿐아니라 대개의 경우 재화는 기술적으로 매우 뒤떨어져 있다. 그 이유는 너무 많은 재화에 대한 생산기술을 동시에 현대화하기에는 자원이 부족하기 때문이다.

뿐만 아니라 자립적 민족경제 노선의 자급자족적 발전경향과 거시경제적 왜곡은 미시경제 차원에서도 나타난다. 북한과 같은 사회주의 경제에서 각 기업은 최종생산물 생산을 위해 필요한 것의 모든 것을 가능한한 해당 기업 자체로 생산하고자 하는 경향을 갖는다. 사회주의 경제에서는 물자부족, 자재공급의 불규칙성, 그리고 여타 불확실성 등이 만연한다. 이 때문에 기업이 계획목표를 달성하지 못할 위험이 높다. 그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기업은 가능한한 거의 모든 중간재투입물을 자체 충족하고자 한다. 또한 그 위험에 대한 대비책으로 최고지도자는 각 기업소가 중간재

---

*Formation of Modern Soviet Production Relations, 1928-1941* (London, 1986); Hillel Ticktin, "Towards a Political Economy of the USSR", *Critique*, No.1, 1973, pp. 21-41. 그리고 박형중, 「북한적 현상의 연구 - 북한 사회주의 건설의 정치경제학」, (서울: 연구사, 1994), pp. 30-49; pp. 168-189. 여기서는 주로 Winiecki의 서술에 의존.

를 자체 생산하도록 권장한다.<sup>36)</sup> 부품뿐만아니라 공구, 생산설비 등까지도 많은 경우에 해당 기업에서 생산된다. 즉 기업은 나름대로 ‘수입대체’ 전략을 추구하여 ‘수입’을 가능한한 줄이고자 한다.

따라서 국민경제적 차원의 수입대체 전략이 최적 생산규모 이하의 생산을 조장할뿐만아니라 기업 차원의 ‘수입대체 전략’은 그 문제를 한층 악화시킨다. 사용자 기업이 더 많은 중간 투입물 (때로는 부품, 설비의 일부까지도)을 생산하게 되면 더 많은 제품이 낮은 기술수준과 통상 적절치 못한 장비를 사용하는 노동력에 의해서 생산된다. 또한 중간투입물, 공구, 설비부품 등을 -전문화된 하청

36) 김일성의 다음의 언급을 참조. “앞으로 기계공업부문에서는 대량적으로 요구되는 기계제품들만 생산하도록 하고 채취공업이나 야금공업, 화학공업, 건재공업 부문 같은데서 요구되는 대상설비들은 해당 부문에서 생산하도록 하는 것이 좋을것 같습니다. ...만일 모든 부문에서 지금 가지고있는 공작기계들을 바로 리용한다면 자기 부문에서 요구되는 기계설비들을 거의다 자체로 만들수 있을것입니다.” 김일성, “사회주의경제건설에서 새로운 양상을 일으킬데 대하여” 전국공업대회에서 한 연설 1974년 3월 7일, 「김일성 저작집」 제29권, p. 137. 또한 “기계설비를 만드는데는 여러가지 규격의 강재와 고무제품, 수지제품, 전기부속품을 비롯한 많은 소재와 부분품들이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이런것들을 다 다른 부문에서 생산한것을 받아다 쓰려고 하여서는 안됩니다. ...기계공업에 요구되는 각이한 규격의 강재와 수많은 협동생산품들을 다 해당 부문에서 생산하여 보장하기는 어렵습니다. 또 그렇게 하여서는 질도 제대로 보장할수 없습니다.” 김일성, “기계공업을 발전시키기 위하여 나서는 몇가지 문제에 대하여” 기계공업부문일군협의회에서 한 결론 1977년 7월 19일, 「사회주의경제관리문제에 대하여」 제5권 (평양: 조선로동당출판사, 1983), p. 122; (그러나 같은 글에서 김일성은 다른 편에서 공업생산을 ‘전문화 집중화’할 것을 명하고 있다. 위의 책, pp. 117-118). 또한 “건설부에서 큰 기계공장을 하나쯤 가지고 소소한 건설기자재들을 자체로 생산하여 쓰는것이 필요합니다.” 김일성, “기본건설사업을 개선하기 위한 몇가지 대책에 대하여”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정치위원회 확대회의에서 한 연설 1977. 8. 4, 위의 책, p. 157.

업자, 공구공급자, 설비생산자의 사후관리 등에 맡기지 않고- 기업 자체로 소규모로, 또한 때때로 엉터리 같은 생산을 하게되면 훨씬 많은 자재와 노동이 투입되어야 한다. 따라서 기업은 최종 및 중간 제품을 비롯하여 생산해야할 가짓수가 너무 많아지게 된다. 자원의 상당한 규모가 이러한 비전문화된 생산에 투입되어야 한다. 이러한 경향 때문에 -과도한 수입대체 전략 때문에 이미 국민경제적으로 최적규모 이하에서 생산되고 있는 것에 더하여- 생산규모가 더욱 작아지게 되어 최적 상태로부터 훨씬 멀어지게 된다.<sup>37)</sup>

산출에 비하여 과도한 투입수요를 초래하는 또하나의 구조적 상황이 존재한다. 그것은 기업경영에 대한 인센티브 구조의 왜곡이다. 기업에 대한 물질적 그리고 여타 인센티브는 산출제품의 량 또는 가치와 긍정적으로 연계되어 있으나, 투입비용과 부정적으로 연계되어 있지 않다. 가장 중요한 총지표(톤, 메타 등과 같은 양적

---

37) 물자부족이 만연하는 경제에서는 기업이 계획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이러한 자가 생산 편향은 합리적이다. 이러한 미시적 합리성은 국민경제적 효율성의 관점에서 보면 비합리적이다. 그러나 기업내 자가생산은 때때로 원칙으로까지 격상되기도 한다. 그 대표적 사례중의 하나가 연합기업소의 설치이다. 연합기업소 설치의 중요한 이유 중의 하나는 자재 생산 기업들을 연합기업소 지붕아래 묶어 자재를 연합기업소 단위로 자급자족하도록 함으로써 생산에서 자재공급 불안정을 장악하고자 하는 시도이다. 그러나 연합기업소 차원에서의 전문화가 시도되고 또한 자재공급의 불안정은 장악되고 있으나 그 이면으로서 국민경제적 전문화는 포기되고 또한 연합기업소가 해당 자원과 자재를 독점하게 됨으로써 다른 기업소들은 물자부족에 훨씬 강하게 노출되어야 한다. 연합기업소에 대한 북한측 서술로서 박영근, 「주체의 경제관리론」(평양: 사회과학출판사, 1992), pp. 101-148. 소련의 경우에 관해서는 Alice Gorlin, "The Soviet Economic Association" *Soviet Studies*, Vol. XXVI, No.1, January 1974, pp. 3-27.



지표뿐 아니라 총생산액 또는 총판매액과 같은 가치지표)는 물질 투입의 낭비를 조장한다. 그런데 이러한 물질 투입은 다른 곳에서 생산되어야 하고 그 때문에 전체 공업부문이 팽창되어야 한다. 그러나 그 팽창에 상응하는 만큼의 부가가치 증대는 일어나지 않는다. 북한의 '민족적 자립경제'에서 제작공업은 이처럼 과대성장하게 되고 또한 단위 산출당 훨씬 더 많은 투입을 사용한다.

또한 제조업의 과잉성장은 채취공업의 과잉성장을 강요한다. 과잉 투입, 그에 더하여 과잉 재고 때문에 물자부족 상황이 만연하게 된다. 이는 채취공업을 확장시켜야 한다는 압력으로 작용한다. 과잉성장한 제조공업에 대하여 연료, 원료의 공급이 따라가지 못하기 때문이다. 그리하여 북한의 '자립적 민족경제'는 채취공업을 점점 더 확장하게 된다. 선진 시장경제 또는 중진 발전국 수준의 시장경제와 비교할 때, 공업 총생산액과 총고용에서 채취공업이 차지하는 비율은 북한 등 사회주의 국가에서 훨씬 높다. 그러나 연료와 원료 등의 물자부족의 만연 때문에 중앙계획당국은 채취공업이 상대적으로 뒤떨어져 있다고 간주하며 그리하여 채취공업(그리고 철강, 기초화학, 시멘트 등의 기초공업)에 상당한 비율의 투자를 배정한다.

이러한 제조업, 채취공업의 과잉성장, 그리고 원자재, 기초중간재에 대한 과도한 수요 등 때문에 수송 서비스의 부족이 발생한다. 선진 시장경제 또는 중진 시장경제에 비교할 때 수송 서비스의 공급이 절대적으로 부족한 것은 아니다. 수송 서비스에 대한 수요를 팽창시키는 또 다른 원인이 존재하는 바 그것은 다단계 위계의 수직적 통제 때문에 발생하는 본위주의이다. 가까운 곳에

공급선이 존재하더라도 그것이 다른 부서에 속해있는 경우, 기업은 더 멀리 떨어져 있지만 ‘자기 부서’에 속해 있는 공급선으로부터 원자재를 공급받도록 명령받는다. 이러한 공급 패턴 때문에 수송수요가 증가하고 그와 함께 생산비용이 증가한다.

과잉수요의 이러한 연계패턴의 특징 그 자체 때문에 경제성장은 국민경제의 구조를 더욱 왜곡시키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거시적이고 미시적인 이중적 비전문화와 그 밖의 여러 (체제에 특징적인) 기여 요소들의 효과 때문에 ‘자립적 민족경제’의 성장의 역동성은 대략 다음과 같이 나타난다. 제조업부문이 과잉성장하고 자원을 낭비적으로 사용하기 때문에 자재투입에 대한 과잉수요가 발생한다. 이는 다시 채취부문과, 제조업부문내 중간재 생산공업 등에 대한 투자 수요를 발생시킨다. 내부지향적 발전에서는 (예를 들어 바깥으로부터의 수입이 아니라) 오직 투자를 통한 자체생산능력 증대 만이 물자부족을 완화시켜줄 수 있는 것으로 기대된다. 채취업, 중간재 산업에 대한 투자증대 압력은 기계류 및 장비류, 건축 자재에 대한 과잉수요를 발생시킨다. 이는 다시 기계류에 대한 수요 증대, 결국 기계제작공업에 대한 투자수요를 증대시킨다. 그러나 기계제작공업 역시 물적 투입(철강, 에너지)을 필요로 하고 이는 다시 원자재와 중간재에 대한 수요를 증대시킨다. 게다가 각 단계에서 수송서비스에 대한 수요도 발생한다. 이러한 성장은 영속적으로 자기 스스로를 먹이로 하여 전개된다.

이러한 성장패턴이 영속화하는 경향을 갖기 때문에 중앙계획당국자가 구조적 변화를 시도하더라도 그것이 실제로 집행되기는 매우 어렵다. 따라서 이러한 경제는 세계경제의 구조적 변화추세

에 맞추어 구조변화를 할 수가 없었다. 1970년대와 1980년대 시기에 세계경제의 성장추동력은 수직적 다단계 공정 패턴의 생산(철강제조, 시멘트, 기초화학 등)으로부터 수평적 연계, 자재 사용의 저하, 높은 부가가치 등을 특징으로 하는 생산(기계제작공업, 도구, 미세화학 등)으로 변화했다. 새로운 성장의 추동력은 혁신, 유연성, 품질, 에프터서비스의 신뢰성 등을 특징으로 하나 이러한 사항들은 중앙집권체제에서는 실현될 수 없는 것들이었다. 따라서 '민족적 자립경제'의 생산구조는 구시대의 공업들에 의하여 여전히 특징지워졌다.

나아가 서비스부문이 저인원, 저투자 때문에 낙후되어 있어서 발전하는 공업을 적절한 수준에서 지원할 수 없었다. 전통적 하부구조(수송, 통신, 분배)뿐만 아니라 그 보다 더 중요하게, 정교한 사업적 서비스의 미발전은 사회주의적 '민족적 자립경제'의 성장과 변화를 저해했다. 공업의 과잉성장의 동반물인 서비스의 미발전은 점점 더 실적에 영향을 주었다.

이러한 유형의 경제성장은 생산구조를 왜곡시키고 또한 자원을 소비재 생산부문으로부터 생산재 생산부문에 빼내가기 때문에 경제성장과 주민복지성장의 연계성은 매우 약했다. 소비재는 왜곡된 구조로부터 직접적으로 피해를 당했다. 과잉성장한 공업이 과도한 비율의 자원을 '빨아내가며' 자원의 대부분이 투자재, 중간재 생산에 배분되기 때문이었다. 상대적으로 축소된 소비재 산업은 소비재 시장의 균형을 맞출 수 없게 된다. 소비자는 또한 간접적으로도 피해를 당했다. 서비스의 저발전이 산업서비스뿐만 아니라 개인서비스의 양과 질을 낮추었기 때문이다.

이러한 유형의 성장을 지속하는 것은 점점 더 어려워 졌다. 제 살 파먹기식 성장, 다시 말해 주민의 복지를 높이지 못하는 성장은, 다른 부문을 희생으로하여 공업이 성장할 수 있는 한에서 가능했다. 그러나 농업으로부터 공업으로 노동력을 이전시키는 것, 또한 자연자원의 동원 역시 점점 더 어려워져 갔다. 사회주의적 '자립적 민족경제'의 낭비적이고 영속하는 성장패턴을 유지시키기 위한 엄청난 투자를 동원하는 것도 점점 더 어려워져 갔다. 투자의 대부분이 여전히 공업 특히 중공업에 배정되었으나 경제성장이 낮아지면서 낭비적 성장패턴이 필요로 하는 투입 절대량에 상응하는 투자량을 산출할 수 없었다. 그러나 동일패턴의 성장노선을 유지하는 데 필요한 노동도 자재투입도 더이상 존재하지 않았다. 결국 투자를 공업에 집중하는 또 다른 시도도 역시 오래 지속할 수 없었다. 왜냐하면 매우 소홀히 되고 종종 퇴락한 하부구조가 전통적 성장방식조차도 지속할 수 없는 장애로 등장했기 때문이다.

또한 세부계획화는 불가능하다. 그 이유는 사회주의적 계획경제의 특징은 무엇보다도 과잉수요와 물자부족, 결국에 그에 동반하는 불확실성이기 때문이다. 이러한 조건에서 세부계획화는 환상에 지나지 않는다.

물자부족을 발생시키는 가장 중요한 요인은 거시경제적인 만성적 과잉수요이다. 이는 관료주의적 경제관리조직, 그리고 그 조직 및 운영 구조와 방법에 규정되어 활동하는 각급 관료들의 이익설정 및 관철 방식 때문에 발생한다.<sup>38)</sup> 그것의 가장 주요한 현상 및 형태는 다음의 두 가지이다.

첫째로 생산기업은 현행생산을 위한 투입에 대한 필요를 과장한다. 긴장한 생산계획에 비교하여 투입은 소소하게만 배정되고, 공급이 불확실하며, 수직적·수평적 물자부족이 예상되기 때문에 기업은 자재를 사재기한다. 즉 미래에 필요할 것까지 살 수 있는 것은 다 사두는 것이다.

둘째 요인은 투자긴장과 관련한다. 당지도부와 국가계획위원회는 하부기관이 꼭 필요하다고 주장하면서 제출하는 수많은 투자 요구에 직면한다. 하부기관들이 요구하는 투자의 총합, 계획상으로 할당되는 각 투자의 총합이 인민경제적으로 분배할 수 있는 투자기금을 초과하는 경향이 있다.<sup>38)</sup> 공식적으로 인가된 투자계획은 실제로 존재하는 물적 자원을 초과한다.

이러한 과잉수요 이외에도 만성적으로 물자부족을 일으키는 미시적 원인들로 다음과 같은 것이 있다.<sup>40)</sup> 첫째로, 기업의 생산수량에 대한 거짓보고 때문이다. 기업은 계획목표 미달성의 경우에도 달성했다고 보고하며 그러한 거짓보고가 다음 년도 계획작성의 기초 자료로 활용된다. 보고상으로는 계획이 집행되고 목표가 달성되었으나, 산출의 일부-이는 다른 기업의 투입으로 사용된다-는 서류상으로만 존재한다. 둘째로, 기업은 계획달성을 보고하기 위하여 낮은 품질의 제품을 생산한다. 예를 들어 이물질을 끼어 넣어 석탄의 품질을 낮추면 석탄생산량을 채울 수 있다. 셋째로,

38) Janos Kornai, *The Socialist System: The Political Economy of Communism* (Princeton: Princeton University Press, 1992), pp. 262-301 참조, 특히 pp. 12-13.

39) Ibid., pp. 163-165.

40) Winiński, Op. cit., pp. 3-10.

생산기업은 계획달성을 위해 생산의 종류를 줄이고 생산하기 쉬운 것만을 생산하여 실제로 필요한 자재가 생산되지 않는다. 넷째로, 필요한 자재가 필요한 때에 존재하지 않는다. 중앙계획당국자는 자재공급에 관한 모든 것을 세세하게 규정할 수 없다. 그러한 세세한 결정 중의 하나가 공급기업의 시기별 생산 및 납품계획과 수요기업의 시기별 수요이다. 공급자와 수요자간의 시간계획은 종종 어긋난다. 다섯째로, 필요한 자재가 필요한 곳에는 부재하다는 것이다. 설령 품질과 규격이 맞고 충분한 수량의 투입물이 존재한다고 해도 중앙계획당국자가 그것을 모든 필요처에 정확하게 배정하는 것은 쉽지 않다.

이러한 과잉수요와 물자부족의 경제는 계획당국자뿐 아니라 기업소 지배인에게도 불확실성의 세계이다. 먼저 국가적 계획을 세우기 위해서 그것도 세부계획화를 위하여 중앙의 계획가는 엄청난 양의 정보와 그 적절한 처리 능력을 가져야 한다. 그러나, 중앙의 계획가가 기초 생산 단위의 실제 모든 세세한 상황에 대하여 알게 된다는 것은 불가능하다. 다음으로 정보의 품질이 문제된다. 기업소가 중앙계획당국에 보고하는 기업소에 대한 경영 정보가 기업소의 계획과제와 자재할당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게 됨으로, 기업소는 자신에게 유리한 정보를 중앙계획가에게 제공한다. 이러한 상황에서 중앙계획가가 직면하는 것은 현실성이 보장되지 않는 대량의 정보이다. 중앙계획가가 개별 정보의 정확성을 일일이 확인하고 판단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따라서 때때로 중앙계획가는 기업소로부터의 경영정보를 사실상 얼마간 무시하면서 계획작성 사업을 한다. 세세한 분야에 들어가면 정보문제는 한층 심각해지

지만, 계획은 그에 의거하여 작성된다. 이처럼 매우 한정되어 있는 지식을 바탕으로 중앙계획당국이 계획을 작성한다. 그 결과로, 중앙계획당국으로부터 기업소에 하달되는 세부화된 계획은 그 기업소의 현실의 생산능력과 생산품목, 그리고 소비-기업소의 특정한 투입 필요 등을 종종 반영하지 못한다.

기업소 지배인이 직면하는 계획작성 및 집행 그리고 일상적 기업운영에서 직면하게 되는 불확실성은 다음과 같다.

긴장한 계획과 예비자원의 고갈: 계획작성 단계 및 집행 단계에서의 구조적 문제점들 때문에 계획은 지속적으로 수정된다. 계획 집행 단계에서 가장 중요한 문제점은 계획이 너무 긴장하기 때문에 경제에 여유가 없고, 예비자원을 발견하는 것이 어렵게 된다는 것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경제는 우연한 사고에 취약해져서 사소한 잘못도 중대한 위기로 발전한다. 예비자원이 불충분하기 때문에 사소한 물자부족도 중대한 애로를 발생시킨다. 따라서 계획작성의 주요 내용중의 하나는 끊임없이 나타나는 경제적 애로 해결이다.<sup>41)</sup>

빈번한 계획수정: 계획집행 과정에서도 끊임없이 애로들이 나타나며, 그 애로를 해결하기 위하여 집행계획이 빈번히 수정된다. 이 경우 계획의 일부에 대한 변화는 그와 맞물려 있는 다른 부분에 대해서 연쇄적 변화를 주어야만 한다. 이것은 사실상 계획을

---

41) Hebert S. Levine, "Pressure and Planning in the Soviet Economy," Henry Rosovsky, *Industrialization in two Systems: Essays in Honor of Alexander Gerschenkron* (New York: John Wiley & Sons, Inc., 1966), pp. 266-286.

완전히 새로 작성하는 작업이 되어 버린다. 그렇지만 실제에서 이것은 불가능하다. 사회주의 경제는 작성된 계획에 의해서 경영되 기보다는 끊임없이 나타나는 애로에 대한 즉응적 반응으로서의 경영에 의존한다.<sup>42)</sup>

공급계약의 불이행: 끊임없는 경제적 애로의 발생, 예비자원의 부족, 만성적 공급부족 등으로 기관, 기업소 간의 생산물 교환에서 계약 위반이 일상적이다. 물론 계약을 어기는 경우에는 그에 대한 위약금을 물게 되어 있다. 그러나 이러한 계약규율 제도는 효과적 이지 않다. 만성적 공급부족의 상황에서 설령 계약의 일부가 위반 되었다고 하더라도 물건을 공급받을 수만 있는 것으로도 수요자는 만족해야 한다.<sup>43)</sup>

자재공급의 일상적 불안정: 비현실적으로 동원적인 계획, 그와 연관된 예비의 고갈, 만성적 공급부족은 자재공급체계의 기능을 혼란에 빠뜨린다. 그 결과로 기업소에서 생산중단이 일어나고, 기준 자재 대신에 저질의 대용품을 사용하게 되며, 자재공급원은 전국으로 자재 사냥에 나선다. 이 상황에서 기업소는 자재를 사재기 하여 비축한다. 또한 기업소는 필요한 자재를 가능한한 자가 생산 하기 위하여 생산단위를 수직적으로 통합한다. 그리하여 분업과 전문성의 이점이 상실된다.

비공식적 계획외적 자재공급: 계획의 모든 단계에서 나타나는

42) Eugene Zaleski, *Stalinist Planning for Economic Growth, 1933-1952* (Capel Hill: The University of North Carolina Press, 1980), pp. 481-512.

43) 사회주의 기업 경영에서 자재문제의 불확실성이 미치는 영향에 관하여 Berliner, Op. cit., pp. 75-113; pp. 182-230.



결함들이 나타나지만 중앙집권적인 완고한 계획체계로서는 그것이 해결하는 것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계획은 비공식적인 접촉망을 통해서만 달성하는 것이 가능해진다. 기업소들은 계획외적인 공작을 통하여 계획을 달성하도록 사실상 강제된다. 계획외적 자재확보의 첫걸음은 정보망의 조직으로서, 이 정보망을 통해서 필요한 자재가 어떤 기업소에 비축되어 있는가를 찾아내야 한다. 그 이후 정식 공급체계를 건너뛰고 연줄망과 부패 행위를 통하여 필요한 자재가 확보된다. 그리하여 계획외적인 불법 시장이 탄생한다.

판매자의 시장: 동원적 계획이 예견하는 자원에 대한 과대 수요와 국민경제의 실질적 자원 공급능력간의 격차 때문에 수요가 공급을 항상적으로 초과하는 가운데 판매자의 시장이 형성된다. 판매자의 시장, 현물지표계획의 상황하에서 기업소에게 판로는 항상 보장되어 있다. 따라서 기업소는 필요한 자재를 확보하고 생산목표를 달성하는 데에만 노력한다. 자신의 생산품이 소비자에게 얼마나 필요한 것인가 하는 고려는 무시된다. 기업소가 생산자 즉 자기자신의 욕구에만 관심을 기울이고 소비자의 욕구에는 무관심하기 때문에 생산품이 질이 떨어지며, 생산품 종류와 소비자가 필요로 하는 제품종류가 불일치하게 되고, 기업소는 가장 생산하기 쉬운 생산품 종류, 가장 많은 상여금을 탈 수 있게 하는 생산품에 집중한다. 판매자의 시장은 생산품의 생산시기와 공급시기에도 영향을 준다. 생산시기와 공급시기는 소비자보다는 생산자 편의위주로 결정된다. 이러한 공급자로부터의 전횡으로부터 해방하기 위하여 수요자는 다시 한번 가능한한 모든 것을 자가 생산하고자 시

도한다.<sup>44)</sup>

이처럼 중앙집권적 계획경제 체제에 만성적으로 존재하는 과잉 수요, 물자부족, 그리고 불확실성 때문에 세부계획화는 불가능하다. 따라서 “계획의 현실성”, 즉 “사회주의사회에서 로력, 설비, 자재, 자금 등 생산의 인적 및 물적 요소들의 현실적 맞물림 정도”는 매우 낮다. 더군다나 계획의 세부화를 계획작성 단계에서 또한 집행단계에서 보장하는 것도 불가능하다.

그러나 역으로도 판단 할 수도 있다. 끊임없는 계획의 비현실성에 직면하여 북한의 국가 권력은 세부화라는 방침의 강조를 통하여 최소한의 계획규율과 현실성을 확보하려고 시도한 것으로도 생각할 수 있다. 그것은 또한 기관, 기업소간의 생산물의 교환을 오직 관료제적 결정, 통제, 관계만을 통해 통제하려고 하는 시도가 탄생시킨 당연한 결과일 뿐이다.

### 3. 중간결론: 경제의 무계획적 불균형적 발전

앞에서 서술했던 것처럼, 북한의 경제성장전략을 특징지우는 개념들은 ‘인민경제 모든 부문과 기업소간의 이해의 일치’, ‘모든 자원의 효과적 이용’, ‘기술의 급속한 발전’, ‘근로인민대중의 높은 창의성과 자발성’, ‘속도의 균형에 대한 선차성’, ‘적극적 균형’, ‘세부화계획’, ‘경제의 계획적 균형적 발전’, 그에 기초하여 ‘경제가 끊임 없이 높은 속도로 발전’한다 등이다. 그러한 발전의 특징은 아래와

44) ‘판매자의 시장’ 개념에 관하여 Kornai, Op. cit., pp. 245-251.

같이 지적된다.

- 1) 사회주의적 생산의 목적<sup>45)</sup>에 맞게 전 사회적인 경제발전 목표의 설정과 실현을 규제한다.
- 2) 국가적인 유일한 인민경제계획을 수단으로 하여 전체 인민경제의 직접적인 조절을 객관적으로 보장한다. 다시 말하여 사회적 수요구조와 사회적 자원(로력적, 물질적 및 재정적 자원) 지출구조 사이에 합리적인 적응을 전 사회적으로 보장하는 데서 나타난다.
- 3) 주어진 단계에서 인민경제적 균형성의 항시적인, 의식적인 유지를 통하여 생산장성의 높은 속도의 달성과 과학적이며 합리적인 경제관리운영의 성격을 객관적으로 규제한다.

그러나 역사적 경험적으로 살펴볼 때, 그리고 북한 자신의 공식 경제이론이 제시하는 실제 정책이 실질적으로 함축하고 있는 것으로 볼 때도 이러한 서술은 북한의 경제현실에 대한 이데올로기적인 포장에 지나지 않는다. 실제에 대한 보다 적합한 묘사는 다음과 같이 서술될 수 있다.

- 1) 북한 사회주의 경제에서 생산의 목적이 “인민들의 복리를 끊임없이 증진시킨다”는 것은 현실에서는 부차적이었다. 이 경제는 구조적으로 생산수단의 생산의 끊임없는 증대를 자기 목적으로 하는 식으로 운영된다.<sup>46)</sup> 그리하여 투자우선, 농업 및 경공업에 대

---

45) 사회주의계획경제의 목적은 “근로대중의 높은 창조적열의와 과학기술의 빠른 발전에 기초하여 생산을 계획적으로 계속 장성시킴으로써 인민들의 복리를 끊임없이 증진시키는데 있다”한다. 『주체의 사회주의 정치경제의 법칙과 범주』, p. 331.

46) Pavel Campeanu, *The Genesis of the Stalinist Social Order* (Armonk, N.Y.: M.E. Sharpe, 1988), pp. 117-118; Winiecki, Op. cit., pp. 73-134.

한 중공업 우선 정책을 취하였다. 이러한 정책의 의도와 결과는 민간소비에 대한 억제였다.

- 2) 국가는 유일한 인민경제계획을 수단으로 하여 전체인민경제의 직접적인 조절을 시도했다. 그런데 북한의 공식이론이 보여주고 있듯이 국가의 인민경제 계획은 경제의 조화로운 조절을 위한 도구가 아니었다. 그 계획은 '동원적 현실적' 계획으로서 급속한 고도성장을 달성하기 위한 도구였다. 중앙집권화된 계획경제의 정보처리 한계, 또한 고도성장정책이 초래한 여러 형태의 불균형 때문에 "사회적수요구조와 사회적자원(로력적, 물질적 및 재정적 자원) 지출구조사이의 합리적인 적응"이 전 사회적으로 보장되지 못하였다.
- 3) 실제로는 중앙계획경제의 정보처리 한계, 과도한 고도성장 정책 때문에 인민경제의 여러 균형은 항시적으로 불균형하게 유지되었다. '적극적 균형' 대신에 경제는 만성적 불균형과 끊임없는 병목 구간을 만들어 내었다. 경제 운영에서 중심고리에 대한 집중 원칙은 고도의 속도를 달성하기 위한 적극적 균형을 유지하기 위해 서가 아니라 만성적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한 끊임없는 중심고리 잡기로 변화했다. 이러한 상황에서 "과학적이며 합리적인 경제관리운영의 성격을 객관적으로 규제"하는 것은 불가능했다.

이러한 경제의 비계획적·불균형적 발전에서 '인민경제 모든 부문과 기업소 간의 이해의 일치'는 불가능하다. 국가는 고도성장을 달성하기 위하여 기업소와 근로대중에게 끊임없는 여러 형태의 강제성을 띤 증산압력을 가하게 된다. 기업소 외부의 경제환경의 무질서, 다른 편에서 과중한 증산압력에 직면하여 기업소는 여러 가지 방어 조치를 취하게 된다. 이러한 상황은 기업소 생산 책임자인 지배인, 직접 생산자인 노동자들의 경제관념과 행태를 이해하는 데 기초적인 자료를 제공한다.

## 제IV장 계획중앙의 경제관념과 행태(2): 계획중앙의 하부관리체계

권력 최상부가 전국적 규모의 경제를 직접 관리하게 되면 중앙과 변방 사이의 이익의 불일치의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다. 그러나 권력 중앙이 전국적 규모의 경제를 직접관리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따라서 전체 국민경제 기관의 위계적 관료조직화와 상부의 하부에 대한 포괄적 통제의 필요가 발생하고 그 결과로 탄생하는 것이 국민경제를 관리하기 위한 거대한 관료조직이다. 이러한 사회주의 경제의 위계적 조직 및 통제의 구조는 모든 결정이 중앙에서 내려져서 아래에 하달된다는 것, 그리고 모든 정보는 아래로부터 발생하여 위로 향한다는 것을 함축하고 있다. 이러한 이미지는 공식사상과 공식제도에 제시되어 있는 조직 및 운영 원칙과 부합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사회주의 국가 또는 경제의 위계적이고 통일적인 관료조직은 실제에 있어서 반드시 그렇게 운영되는 것은 아니다. 위계적으로 조직된 관료체제는 엄격한 명령과 복종의 원칙에 의해서만 운영될 수 없다.

### 1. 계획중앙-하부의 이익불일치, 불완전 통제

#### 가. 주인-대리인의 문제

북한의 기업소의 경영은 상부의 계획명령에 의거하여 이루어진

다. 지배인의 주요한 과제는 계획을 달성하는 것이다. 보다 정확히 말하면 계획들을 달성하는 것이다. 그 이유는 기업소 계획은 여러 가지 분야에 걸친 일련의 계획지표들을 포함하고 있기 때문이다. 지배인은 그 계획지표들의 수행정도에 따라 평가받고 보상을 받는다.

그러나 이 경우에 명령을 내리는 자(주인)와 명령을 수행하는 자(대리인)는 분리되어 있다. 사회주의적 경제체제는 이러한 주인-대리인의 위계적 중층적 체계로 이루어져 있다.<sup>47)</sup> 주인은 대리인에게 명령을 내리고 대리인이 그에 의거하여 행위할 것을 기대한다. 공식 이데올로기 상으로 나타나 있는 것처럼, 주인-대리인 사이의 이익이 실제로 일치하는 경우에는 대리인은 주인의 명령에 의거하여 행위할 것이다. 그러나 그 이익이 불일치하는 경우, 대리인은 주인의 명령과는 다른 방식으로 행위할 가능성이 존재하며, 주인은 대리인이 주인의 이익을 추구하도록 하는 감시와 보상 체계를 설치하고 운영해야 한다.

북한의 계획경제관리 기구에서 상급자(주인)는 하급자(대리인)에게 명령과 지시를 내리고 하급자의 실행을 감시하며 확립된 판정 기준에 따라 보수를 주거나 처벌한다. 기업소에 내려진 계획지표들은 기업소의 경영활동에 대한 상부의 명령과 지시로서의 성격을 갖고 있으며, 기업소 지배인은 그러한 상급 기관의 명령과 지시를 엄격히 수행할 것을 요구받는다. 그러나 실제에 있어서 지배인이 상부의 의도와 명령에 부합하게만 현장 경영활동을 수행하

47) 폴 그레고리, 로버트 스튜어트 「러시아 소련 독립국가연합 경제의 구조와 전망」 (서울: 열린책들, 1992), pp. 231-234.

는 것은 아니다. 경제관료체제는 거대하며 또한 세부적 활동을 포함하고 있다. 따라서 상부의 명령은 실행단위의 구체적 상황에 비추어 너무 일반적인 경우가 많다. 또한 앞서 지적했듯이 상급단위와 하급단위의 이익이 반드시 일치하는 것이 아니다. 이 때 상급자가 하급자의 활동을 일일이 감시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상급자는 하급자가 상급자의 이익을 위해서 움직이도록 만들어야 한다. 이 때 필요한 것이 상부로부터 하부에 대한 감시체계뿐 아니라 자극체계이다. 하급자가 상급자가 내리는 지시의 취지를 가능한 열심히 수행하도록 하는 자극체계를 찾아내는 작업은 상급자의 과제이다. 감시체계가 보다 완전해질 수록 자극제도의 중요성은 줄어들어든다.

#### 나. 기관 및 지방 본위주의

사회주의 경제에서 이러한 주인-대리인 문제의 가장 표준적 발현 형태가 이른바 '본위주의'의 문제이다. 관료적 위계체계에서 중하급 단위의 이익은 최상급단위의 이익과 반드시 일치하지 않으며 북한에서는 이것을 이른바 기관과 지방의 '본위주의'라고 표현하면서 투쟁해야할 행태로 간주한다.

여기서는 기업소의 이익이 중앙계획당국의 이익과 달라지는 구조적 두 요인을 서술한다.<sup>48)</sup> 그것은 다음과 같다. 첫째로 중앙계획당국이 요구하는 국가 또는 전체경제의 일반이익과 기업소 경

48) Kuczynski, Op. cit., pp. 313-335.

영진과 노동자의 물질적 관심은 서로 어긋나며 따라서 기업소는 중앙계획당국의 요구와는 다르게 행위한다. 둘째로 오직 기업소의 경영진만이 기업소 경영정보를 장악하고 있으며 이러한 독점적 정보생산 능력을 수단으로 하여 기업소 경영진은 중앙계획당국의 통제로부터 일정하게 자유로울 수 있다.

사회주의 기업소는 세 가지 집단으로 구성되어 있다. 노동자, 중간관리집단, 최고경영집단이 그것이다. 기업소의 최고경영집단은 국가가 임명하며 그 임무는 해당 기업소가 국가의 일반이익을 준수하도록 기업소를 운영하는 것이다. 최고경영자에 대한 평가와 그의 출세는 그가 그 임무를 얼마나 성실히 수행하는가에 의하여 평가된다. 그러나 기업의 노동자와 중간관리집단의 관심은 무엇보다도 노동의 댓가로 취하게 되는 임금이 높아져야 한다는 것이다. 노동자와 중간관리집단은 국가에 의하여 임명되는 최고경영진보다는 기업소에 더욱 고착되어 있다. 따라서 노동자와 중간관리집단은 기업소의 운영에서 국가의 또는 인민경제 전체의 일반이익보다는 임금이 높아지는 식으로 운영되는 데 관심을 가지고 있다.

최고경영진의 경우에도 결국에는 기업소 경영에서 국가이익보다는 기업소 자체의 이익을 더욱 중요시하게 된다. 국가에 의하여 임명되는 기업소의 최고 경영진의 본래 임무는 기업소 운영에서 국가 또는 인민경제 전체의 이익이 관철되도록 하는 것이다. 따라서 기업소 운영에서 기업소내 피고용집단의 이익보다는 주로 국가의 일반이익을 대표하여야 한다. 최고집단의 이익은 기업소 운영이 반드시 노동자, 중간집단의 임금을 높이는 식으로 운영되도록 하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최고경영집단은 기업소의 원활하고



성공적 운영을 위하여 노동자와 중간관리집단의 협력을 필요로 한다. 또한 기업소의 계획목표의 성공적 달성에 의하여 최고집단의 임금이 영향을 받는다. 따라서 기업소 최고경영진도 국가일반 이익보다는 기업소 자체의 이익에 굴복하게 된다.

이는 기업소 내부의 당조직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 기업소 내의 당조직의 공식임무는 기업소 개별이익에 대하여 투쟁하고 국가와 체제의 이익을 수호하는 것이다. 그러나 당조직은 결국에는 기업소 내부의 인원으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결코 기업소 자체에 이질적 외부 집단으로서 기능하지 못한다. 책임비서가 예외가 될 수 있다고 하더라도 결국 그의 성공지표는 기업소의 원활한 운영과 기업소의 계획목표달성이다. 따라서 그 역시 기업소 내부 인원의 협력을 필요로 한다. 결국에 당조직도 예외적 시기를 제외하면 기업소 내부에 존재하는 이익체제에 굴복하게 되며 기업소의 경영이 기업소 자체의 이익에 좌우되는 상황을 받아 들여야 한다. 따라서 기업소 운영의 구체적 내용은 상급 국가기관이 내린 지침과 기준에 의거하기보다는 기업소 내부 집단의 물질적 이익을 증진시키는 선에서 이루어진다.

기업소는 계획중앙과 다른 독자적 이익을 가지고 있을 뿐아니라 기업소 내부 경영정보에 대한 독점적 수집 및 가공 능력을 통하여 상부에 대하여 그 이익을 일정하게 방어할 수 있다. 중앙계획당국이 경제운영에서 기업소에 관한 많은 정보를 필요로 한다. 그런데 중앙계획당국은 기업소에 관한 기초정보를 직접 수집하는 것, 그리고 효과적으로 직접 사용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따라서 중앙계획당국은 기업소의 경영진에 기업소의 경영정보를 수집하

여, 일정한 규칙에 따라 취합하고 중간가공하여 국가의 경제 행정 기관에 넘겨줄 것을 요청한다. 정보는 주로 다음과 같은 자료를 포함한다. 1) 기업의 현행 능력, 2) 특히 계획을 달성하는 데서 이 능력의 활용정도, 3) 기업의 생산수단에 대한 단기 장기적 수요, 4) 자신의 관할 영역 내에서의 기업의 의도, 중앙계획당국 관할 영역 내에서의 기업의 요구이다.

기업소는 중앙계획당국에 이러한 일련의 자료를 의무적으로 제출해야 한다. 그러나 기업소는 그 자료의 정보적 내용에 결정적 영향을 끼칠 수 있다. 즉 기업소는 중앙에 제출하는 정보를 자신에게 유리하게 채색할 수 있다. 중앙계획당국은 기업소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을 직접 관찰할 수 없으며, 이 기능을 기업소 경영진에게 위임하고 있다. 따라서 중앙계획당국은 기업소 경영진이 올려 보낸 자료와 정보가 사실인지 아닌지를 효과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은 매우 제한적이다. 중앙계획당국이 기업소 정보의 사실 여부를 직접 확인하고 통제하기 위해서는 방대한 자료수집 및 처리기구를 건설해야 한다. 그러나 그것은 비용이 많이 들고 또한 그 실효성도 의문시된다.

따라서 기업소의 자체의 핵심 경영정보에 대하여 얼마간 감출 수 있다. 설령 중앙계획당국이 기업소 경영에 대하여 일정한 시점에서 정확한 정보를 가지고 있다고 하더라도 기업소의 외부환경과 내부 경영상황은 계속적으로 변화한다. 더욱이나 앞서서 서술했던 것처럼 사회주의 계획경제운영전반 그리고 기업소 운영이 직면하는 특징적 상황은 만성적 자재부족으로부터 파생하는 경영상의 불확실성이다. 또한 기업의 실제 생산능력을 절대적으로 규

정할 수 있는 객관적 요소라는 것은 부재하며 그것에 대한 판단은 상당히 주관적 내용을 갖는다. 기업의 생산능력은 여러 요소와 상황의 종합적 결과이며 또한 개연성일 뿐이다. 그 주관적 개연성은 누가 판단하느냐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 다. 목표설정과 자원배당의 문제

위계적 경제관료체제에서 각급 경제행정단위의 경영활동의 가장 중요한 목표와 조건은 계획작성과정에서 결정된다. 그런데 바로 이 과정에서 가장 전형적 ‘기관본위주의’가 발현한다. 다시 말해 계획작성과정은 관료체 각 경제부문 간의 수평적 힘겨루기와 경제부문의 각 계선에서의 상-하간 수직적 힘겨루기, 즉 국가계획위원회로부터 부-연합기업소-기업소 등의 각 상-하 단계에서의 상-하 간의 힘겨루기에 의하여 결정된다.

우선 경제부문간의 자원배분문제를 둘러싸고 ‘본위주의’가 발현한다. 과두적 집단에 의하여 통치되는 사회에서 자원배분은 지도부 여러 구성원 사이의 세력균형과 의사결정 핵심체에의 접근 가능성에 의해서 결정된다.<sup>49)</sup> 정치적으로 힘있는 자가 가장 중요한 지위를 차지하고 조직상으로 중요한 지위에 있는 자가 정치적 영향력을 누리기 때문에, 정무원의 강력한 부장은 별힘없는 부의 부장에 비하여 자신의 필요와 요구를 관철시킬 가능성이 커진다. 이

---

49) Maria Hirszowicz, *The Bureaucratic Leviathan: A Study in the Sociology of Communism* (Oxford: Martin Robertson, 1980), pp. 154-155.

러한 제도화된 압력의 가장 대표적 사례는 이른바 선행부문 산업의 거대 기업체들이다. 중공업 부문과 산하 거대 기업들에 대한 자금, 원료, 노동력의 배분은 다른 덜 중요한 경제부문을 희생시킴으로서 이루어진다. 장기적으로 중공업과 대규모 프로젝트 때문에 증대된 수요는 새로운 투자를 통해서만 충족될 수 있다. 따라서 국민경제에 대한 압력도 증가한다. 전력공급 증가 필요, 원료에 대한 무한한 수요, 설비와 수송수단 배분에서의 특별한 배려, 건설업에 대한 압력 - 이 모든 요구는 계획당국자가 우선적으로 고려해야 하는 선차적인 것들이다. 또한 계획당국자는 핵심 산업과 대규모 투자계획에 대하여 특별히 배려해야 한다. 이 중에서 상당한 것들에 대해서는 군 수뇌부의 직접적 지지를 받는다. 군 수뇌부는 무기산업과 그 하청 단위가 원활히 기능하는 것에 대하여 지대한 관심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수평적 힘겨루기 뿐아니라 전체 수직계선의 각 단계에 걸쳐서 계획을 할당하는 측과 할당받는 측 사이에 계획목표설정과 자원배당을 놓고도 힘겨루기가 벌어진다.<sup>50)</sup> 할당받는 측은 가능한 한 낮은 계획목표와 높은 자원배정을 예견하는 계획을 받고자 한다. 계획중앙과 국가계획위원회는 기업소를 비롯한 하급단위를 자신의 명령에 종속시키고 각 단위의 상대적 자율성을 제한하고, 생산과정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얻기 위하여 노력한다. 역으로 기업소 등의 하급단위는 자신의 생산능력과 예비를 감추어 계획중앙의 과도한 요구를 회피하기 위하여 노력한다. 수직 위계상

50) 박형중, "북한의 관료제적 연줄 연구: 기업소 관리운영 문제를 중심으로," 『통일과 북한 사회문화 (상)』, (서울: 민족통일연구원, 1995), pp. 316-318.

의 각 경제단위는 산출을 적극적으로 늘리기 위해서 노력하기보다는 상부로부터 낮은 목표가 해당 경제단위에 주어지게 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또한 자신이 관리하게 되는 자원, 예산, 인원을 늘리기 위해서 노력한다. 계획작성과 실행과정에서 이러한 관료적 이익이 모든 곳에 만연한다. 정무원의 모든 부장, 모든 연합기업 소장, 모든 기업지배인은 계획작성 및 수행과정에서 해당 기관에 낮은 계획목표가 떨어지고 그 대신에 노동력, 자재 또는 기계설비를 우선적으로 배정받기 위해 노력한다. 낮은 목표와 충분한 자재의 배정을 확보하면 계획을 달성하기가 그만큼 쉬워진다. 또한 해당 기관에 자원, 예산, 인원을 늘리면 해당기관에서 고도성장이 일어날 수 있고 상부가 부여한 임무를 성공적으로 완수한 것으로 평가받을 수 있으며 관료적 위신과 위세가 증대한다. 또한 만성적 물자부족 때문에 설비확장을 통해서 생산을 추가로 늘리더라도 판로는 보장되어 있다. 또한 잘못된 투자에 따르는 비용소모와 재정손실이 아무리 막대하더라도 상급 국가기관이 재정적으로 도와 줄 것이라 거의 확실하게 기대할 수 있다. 또한 계획경제 위계의 거의 모든 사람이 투자결정에 크게 작게 관계하고 있지만 만약 손실이 발생하는 경우 누구도 개인적 손실을 통해 그에 대하여 책임지는 사람은 없다.<sup>51)</sup>

## 2. 계획중앙의 하부에 대한 통제의 여러 방법

사회주의 경제에서 계획중앙이 하부의 각 단위를 통제하는 가장

51) Kornai, Op. cit., pp. 162-163.

기본적인 틀은 앞서서 서술했던 위계적 조직구조와 포괄적 통제, 그리고 감시체계와 자극체계이다. 이것이 경제체제와 경제메카니즘의 공식적 측면을 이루고 있다. 여기서는 중앙이 하부를 통제하는 메카니즘을 공식 제도의 구조와 기능과 관련하여 정치사회학적 분석의 차원에서 추가적으로 설명한다.

#### 가. 권력의 계선의 다중화와 분권화

관료조직이 팽창할 수록 최상부에서 하부를 통제하는 것이 힘들어진다. 중하급간부들이 제멋대로 행위할 수 있을 가능성이 커지면 그러한 활동을 일반적 지시와 규제를 통해 막을 수 있는 가능성도 줄어든다. 지시와 규제를 늘리는 식의 단순한 조치는 문제를 부분적으로만 해결하는 적절치 못한 방법이다. 최상부는 권력계선을 다중화하고 서로 교차하게 함으로써 전체체제를 훨씬 용이하게 지배할 수 있다.

권력 계선의 다중화와 상호교차를 통해서 해결되어야 하는 문제는 첫째로, 상급단위의 중하급단위에 대한 감시, 감독, 통제는 관료기구가 팽창할 수록 어려워진다는 것이다. 상부는 자신이 설정한 여러 과제를 처리하기 위한 복잡한 중하급 위계와 단위를 만들어 그들이 상부의 명령을 실행하고 정보를 수집하여 보고하도록 해야 한다. 이를 위해 상급단위는 불가피 중하급단위에 권한과 책임을 양도해야 하며 동시에 중하급단위가 그 책임과 권한을 중앙의 뜻에서 행사하는가에 대하여 통제, 감시와 독려등을 하여야 한다. 공식적으로는 엄격한 위계체제로 상명하복의 원칙이 통용되

어야 하나 중하급 위계의 각 단위가 반드시 상급단위의 뜻에서 움직이는 것은 아니다.

권력 계선의 다중화와 상호교차를 통해서 해결되어야 하는 문제는 둘째로, 관료체제가 팽창함에 따라 증가하는 그 역기능이다. 상부는 관료체의 효율적 기능을 위하여 이러한 역기능을 통제하여야 한다. 이에는 다음과 같은 것들이 있다.<sup>52)</sup> 1) 지시와 규제의 과도한 팽창, 2) 조직구조 경직화의 불가피성, 3) 과도한 중앙집권화로 의사결정이 불가피하게 지연되어, 즉각적이고 효율적 해결을 요하는 문제에 대한 결단이 지체된다. 4) 조정활동에 과도한 시간과 노력이 들어간다. 5) 임무의 성격과 그것을 집행해야하는 조직체의 이익이 서로 따로 돌아, 조직의 활동 목표가 달라져 버린다. 예를 들어 중간관리자와 경영자는 실제 업무를 효율적으로 달성하는 측면보다는 상급자와 감독자로부터 문제를 지적당하지 않는 측면에 보다 많은 관심을 갖는다. 6) 관료는 업무상 상대하는 고객, 의뢰인, 외부자 등에 대하여 (업무내용을 외부에 대해 공개하지 않는 등) 방어적 태도를 갖는다.

권력 계선의 다중화와 상호교차 때문에 북한 당-국가의 전국적 단일위계조직은 그 최상부에서의 권력집중, 그러나 중하급 단위에서는 권력의 분권화와 분산을 그 특징으로 한다. 최상부에 권력이 집중되어 있으나 그 하부에는 수많은 개별적인 위계적 계선이 존재하여 사회의 각 부문에 대하여 일정한 권위를 행사한다. 이러한 상태의 이점은 당-국가의 복잡한 체계 내에서 한갈래의 관료조직

52) Hirszowicz, Op. cit., pp. 135-136.

은 다른 갈래의 관료조직을 감독하고 통제할 수 있게 된다. 개별 명령 위계계선을 따라서 이루어지는 감시와 역-감시뿐 아니라, 기능과 권한이 서로 유사하고 겹치는 여러 병행조직에 의해서 감시와 역-감시가 이루어진다. 이러한 모든 권력계선에 대한 통제권을 권력중앙에 집중함으로써 최고지도부는 다른 권력계선이 제공하는 정보와 압력을 사용하여 언제든지 어떤 하급 권력계선의 활동에도 간섭할 수 있게 된다. 모든 권력수단에 대한 통제권은 최상부에 집중되어 있으나 중급단위에서는 권력의 파편화에 따르는 일종의 다원주의가 그 특징이다.<sup>53)</sup> 거대한 관료조직의 내부구성을 이렇게 만들어 놓으면 중앙은 하부를 효과적으로 통제할 수 있게 된다. 예를 들어 당을 통제하는데 비밀경찰을 이용하고 당은 정권기관을 통제하도록 한다. 그리하여 바람직하지 않은 활동은 반드시 적발이 되도록 하며 징벌적 또는 치료적 조치가 따를 수 있도록 한다. 또한 한 권력계선의 힘으로만은 해결되지 않는 장애가 나타날 때마다 여러 권력계선의 힘을 합쳐서 그것을 극복한다. 예를 들어 인민경제가 직면한 애로를 극복하기 위하여 당, 정권기관, 삼대혁명소조 등 모든 기관이 가동되어 주민동원과 증산에 나서게 된다.

나. 목표만을 정해주고 그 결과에 대한 통제

단일 위계조직의 중하부에서 권력을 분권화하고 분산화하는 또

53) 박형중, 앞의 글, pp. 321-335.



다른 이유가 존재한다. 중앙집권적 경제관료체제의 공식 이미지는 모든 것이 위로부터 아래로의 명령, 아래로부터 위로의 정보전달을 통해서 이루어진다는 것이다. 그러나 실제적 운영이 반드시 이렇게 이루어 지는 것은 아니다. 실제운영은 다음과 같은 3가지 요소를 기본으로 하여 이루어진다.<sup>54)</sup>

- 1) 엄격히 중앙집권화된 조정과 통제 (위에서 서술됨)
- 2) 지시와 규칙에 의한 조정과 통제 (지시와 규칙은 하급단위가 여러 상황에서 어떻게 행위하고 반응해야 하는가를 밝힌다. 그러나 어떤 것이 언제 적용되어야 하는가에 대한 결정은 중하급 기관의 해석에 따른다)
- 3) 목표만을 정해주고 결과평가를 통한 조정과 통제 (하급단위는 상부로부터 과제를 받으나 과제달성 방식은 일정하게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다)

이러한 3가지 방식이 사용되는 이유는 다음과 같다. 즉 경제경영이 순전히 규칙, 지시, 법률에 의해서만 처리될 수 없다. 또한 경제적 협력의 복잡성, 분업의 발달 때문에 고도의 조정이 필요하다. 나아가 엄청나게 많은 과제와 상황 때문에 모든 결정을 위에서 아래로 하달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이러한 상황에 대한 대답이 목표를 정해주는 방식으로 조정하고 통제하는 것이다. 연합기업소, 기업소의 지배인은 그들에게 부여된 임무를 달성하는데서 상당한

---

54) Hirszowicz, Op. cit., p. 133.

재량을 가지고 있다. 그러나 그들은 법과 규칙을 지키고 상부의 명령을 따라야 한다. 이러한 조정과 통제 방식 때문에 각 경제단위는 형식적 규칙의 틀 내에서 상당히 독자적 결정을 내릴수 있다.

이처럼 상부는 하부에 대하여 목표만을 정해주고 그 구체적 집행에 대하여서 하부단위가 책임지도록 하며 상부는 그 결과만을 통제한다. 그런데 이 때 당국가의 상부와 중하부의 이익이 반드시 일치하는 것은 아니다. 따라서 중하부는 단순히 상부의 명령을 그대로 접수하여 집행하는 것뿐만 아니라 중하부에 만연하는 사적, 지방적 이익과 연줄망의 영향력을 고려하여 (불법적으로) 상부의 명령을 변형시킬 수도 있다. 이러한 방식때문에 상부의 명령이 하부에 도달하여 구체적으로 실천되어야 하는 때가 되면 상부의 명령과 하부의 실정을 둘러싼 수많은 협의와 조정이 필요하다. 이 때 구체적 하부단위 또는 개인은 여러 특수한 실정을 내세워 상부 명령의 적용으로부터의 예외 또는 수정을 공식-비공식적으로 요구하게 된다. 즉 하부에서는 상부 명령의 집행을 놓고 수많은 협상들이 벌어지며 이 경우에 결정적으로 작용하는 것이 개인적 영향력이다. 이러한 개인적 영향력은 과거로부터 축적된 인간적 친분과 비공식적 거래에 입각한 비공식적 교섭력에 따른다.

#### 다. 당기구의 간섭

한 계선의 관료체와 다른 계선의 관료체를 상호견제시켜서 상호 감시하고 상호 독려하도록 만드는 것은 사회주의 관료체의 특징

적 기제이다. 그런데 이러한 통제자와 독려자의 역할을 하는 여러 갈래의 관료체중에서도 당계선은 특별 역할을 지닌다. 당기구는 명령이 전달되는 위계적 여러 계선과 교차하고 있고 조직구조의 모든 부분에 침투해 있다. 이러한 당기구는 중앙지도부의 불가결한 도구이다. 그 이유와 내용은 다음과 같다.

당은 무엇보다 경제기관을 포함하여 모든 기관의 관직에 대한 포괄적인 임명권을 행사하고 있다. 공산당은 당중앙위원회로부터 공장당위원회에 이르기까지 경제행정기구와 모든 직책, 기업의 모든 경영직책에 걸쳐서 임명권을 행사한다. 이러한 임명은 경영 및 실무 능력보다는 주로 충성의 원칙(다시 말해 상급자에의 복종)에 의거하여 행해진다. 관직임명에서 복종이 가장 중요한 기준이기 때문에 경영자는 한번 임명되면 기업경영의 효율성보다는 주어진 명령(계획목표, 그때 그때의 지시 등)을 달성했는가의 여부에 의하여 평가된다.

당구조는 국가행정기구와 평행하게 조직되어 있다. 각급 경제위계는 동급의 당조직, 상급국가조직에 의하여 이중의 통제를 받고 있다. 이러한 체제의 기본구조는 다음과 같은 원칙에 기초한다. 1) 정권기관의 이중적 종속 - 정권기관의 상급단위와 해당 당기관에 종속시킨다. 2) 정권기관의 모든 위계의 관료를 당에 입당시켜서 그들이 당지도부와 당기구에 한층 의존하도록 한다. 3) 정치적, 경찰적 그리고 법적인 정교한 감독체계를 형성하여 정권기관의 관료체 내의 서로 다른 그룹이 다른 그룹을 통제하도록 한다. 4) 기관, 관료, 또는 기업소를 -지방당위원회와 당세포의 지도하에서- 당원이 아래로부터 통제하도록 하는 체계를 만든다.

이러한 체제에서 중앙집권화된 경제적 의사결정은 정치적이고 행정적인 이중의 성격을 가진다. 이러한 측면이 명령형 계획경제의 핵심구성요소로서 행정명령은 동원적 캠페인과 '정치적' 통제를 혼합한다. 그러나 권위 계선이 다중화됨으로써 이익과 책임의 갈등을 발생시킨다. 노조 또는 직업동맹은 당의 권위에 종속함으로써 그 성격이 근본적으로 변화했다. 노조는 중앙에 의해서 내려진 결정을 노동자에게 전달해 주는 벨트(인전대)로서 기능하며 노동자들을 감시하고 동원하는 기관이다.

당의 활동방식 또한 특이하다. 당은 법적 규칙과 기준에 의거하기보다는 '상황의 법칙'에 따르는 초법적 기관으로서 활동해 왔다. 당의 활동의 내용은 제도적으로 또는 구체적으로 명문화되어 있지 않으며 따라서 당의 활동은 일상적 지시에 의거하여 이루어지고 있다. 당 활동의 방식은 다음과 같다.<sup>55)</sup>

1) 통상적 의사결정 통로만을 통해서 중요한 목표달성이 불가능한 경우 당기구는 직접적으로 간섭한다. 이는 당이 권력구조 내에서 특별한 지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가능하다.

2) 중하급 단위의 국가위계에서는 의사결정이 파편화되어 있고 상급단위에 얽매어 있다. 이 때 당기관은 당이 요구하는 결과를 만들어 내도록 여러 국가기관을 추스려서 공조하도록 강제할 수 있다.

3) 지방 당책임비서는 직접 고위 그리고 최고위 수준의 결단을 촉구할 수 있다. 이러한 촉구는 정치적 통로를 따라 이루어진다.

55) Hirszowicz, Op. cit., pp. 138-139; Hough, Op. cit.

그리하여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리는 공식적 경로를 넘어서며 관료적 관할영역의 한계를 무시할 수 있다.

4) 지방 당기관의 책임비서는 공식·비공식의 여러 징별권한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지방당기관의 통제는 특히 효율적이다.

5) 당책임비서는 국가기관의 관료가 공식적 규칙을 넘어서거나 반하는 활동을 하고자 할 때, 그 결정을 직접적으로 지원해 줄 수 있다. 이 때문에 국가관료의 활동이 상당히 유연해질 수 있게 되며 그리하여 수많은 적용이 가능해진다.

당에게는 이처럼 규칙과 경계를 무시하는 초법적 활동을 통한 행정적·정치적 조정기능이 허용되고 있다. 이러한 해당 분야 최고 책임자적 조정기능 때문에 당은 (앞서서 서술했던 바의) 거대 관료체제에 나타나는 여러 역기능을 그때 그때 즉응적이고 정치적으로 풀어 주는 매우 중요한 해결사 역할을 하고 있다.

#### 라. 인적 충성에 기초한 당료제

중앙의 하부에 대한 통제는 제도적 틀만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다. 그 통제의 중요한 측면은 (관료제가 아니라) 당료제의 원칙에 따르는 인사관리체계, 그리고 그에 동반하는 상급자와 하급자 간의 인격적 충성과 복종의 관계를 통해서 이루어진다.

사회주의 경제의 관리를 위한 위계적 조직구조와 포괄적 통제의 거대한 체계는 일반적으로 관료적 경제체제라고 불리고 있다. 이 체계는 위계적 조직구조, 중앙집권화된 권위구조, 명령-복종의 상-하관계의 원칙 등에서 베버가 서술했던 바의 관료체제와 유사

하다. 그러나 다른 여러 측면에서는 베버식 관료제와는 상당히 다른 구조와 운영 실태를 보여준다.<sup>56)</sup> 베버식 관료제의 기본적 틀은 합리적-합법적 권위체제에 기초하여 규칙을 적용하고 집행하는 위계적이고 전문화성에 기반을 둔 행정체제이다. 베버식 관료는 전문성을 갖춘 지식, 합리적-합법적 규칙과 절차를 적용하는 능력에 따라 법과 규칙의 한도 내에서 상당한 자율성과 안정된 고용을 누린다.

이에 대하여 사회주의식 관료제(또는 당료제)에서는 당료의 주된 임무는 당국가의 지도자가 설정해 놓은 주요과업을 달성하는 것이다. 당료제에서는 단순한 명령의 집행이나 형식적 규칙을 지키는 것은 그리 중요하지 않다. 보다 중요한 것은 위로부터의 동원이며 이데올로기적 원칙에 입각한 '당파적' 규칙의 적용이다. 즉, 당료제의 가장 전형적 당료는 "활동가-당원이다. 그는 위로부터의 정치적 명령을 구체적인 행정과업으로 해석해내며 주민을 동원하여 그 행정과업이 집행되도록 하는 것이다. 만약 그를 위해 규칙을 왜곡하거나 어기는 것이 필요한 경우 당료는 그렇게 한다. 당료의 실적을 평가하는 주요 기준은 (중앙에서 작성되어 내려온 계획이 설정하고 있는) 과업의 달성 여부이기 때문에 상급자도 설령 하급자가 규칙을 왜곡하거나 어기더라도 이를 묵인한다.<sup>57)</sup>

이러한 당료의 선발과 임명 과정과 기준 역시 베버식 관료와는 다른 과정과 기준에 의거한다. (베버식) 관료 또는 테크노크라트

56) Jan Pakulski, "Bureaucracy and the Soviet System," *Studies in Comparative Communism*, Vol.XIX, No.1, Spring 1986, pp. 3-24.

57) *Ibid.*, p. 19.

에게 필요한 것은 법적 (절차적) 기술적 지식이지만, 당료에게 필요한 것은 과업 실천에 대한 의지와 이데올로기적-정치적 '전문성'이다. 이러한 '전문성'에 포함되는 것에는 주요 목표에 대한 지식, 중심고리, 과업, 그리고 이러한 과업을 달성하는 데 전략적으로 중요한 인물과의 친분이다. 이러한 인물적 이데올로기적 요소의 중요성 때문에 당료의 자질은 공식 교육체계에 의하여 습득되기 어려우며 또한 일반적 기준에 의해서 평가하기도 어렵다. 따라서 당료 요원의 선발은 보통 조직단위의 선택적 추천의 형태를 띤다. 이때 비공식적 연줄과 정치적 고려가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한다. 오랜 동안에 걸친 인간적 인물적 접촉에 의해서만 당료 후보의 정치적 신조, 에너지, 이데올로기적 지식과 충성심이 발전할 수 있고 또한 적절하게 평가될 수 있다.

베버식 관료제에서와는 달리, 당료제에서는 공식적 권력구조와 실질적 권력구조가 다르며, 당기관이 행정기관에 대하여 우위를 점하고, 당과 국가의 위계에는 서로 겹치는 임무와 확연하지 않은 분업관계가 성립하며, 형식적 규칙보다는 정치적 판단이 종종 적용되고, 초법적 그리고 불법적 행위가 만연하며 묵인된다. 이데올로기와 정치지도부의 인적 권위가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며, 법적 한계를 넘어서는 동원적 방법이 종종 사용된다. 또한 당료의 활동 원칙과 방식, 선발과 임명의 이러한 특징 때문에 당료제에서 특징적인 것은 인적 충성과 연줄에 기초한 인간들의 위계이다. 따라서 여기서는 형식적 규칙보다 인적 충성관계가 더 중요하며 일반적 기준과 규범보다 인적 충성과 연줄관계에 기초한 편파적 기준과 규범이 더 중요한 역할을 한다.

당료제적 인적 충성과 연줄의 위계체계에서 모든 주민의 당과 국가에 대한 그리고 하급자의 상급자에 대한 종속은 매우 포괄적이고 자의적이며 또한 강하다.<sup>58)</sup> 당국가는 모든 주민에 대한 유일한 고용자이다. 모든 주민은 생계유지를 위하여 국가부문에서 직장을 찾아야 한다. 당국가는 또한 영토 내의 모든 경제적 자산과 용역에 대한 포괄적 관리권을 가지고 있다. 이러한 독점고용권과 포괄적 관리권을 기초로 당국가는 당국가에 이데올로기적으로 동조하고 정치적으로 협력하는 자에게 편파적인 물질적 보상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상급자에 대한 하급자의 평가와 보상과 관련하여 정해진 객관적 규칙이 존재하지 않으며 평가와 보상은 주관적 판단에 주로 근거하고 또한 공공의 통제로부터 완전히 벗어나 있다. 이러한 배경 때문에 하급자는 상급자에 대하여 업무상의 능력 보다는 인적 충성관계로 보답해야 하며, 공적인 대의명분의 원칙 보다는 상급자를 만족시키기 위한 편파적 기준에 의거하여 활동한다. 이처럼 관직의 공공의무에 대한 관념이 사라진 인적 충성에 기초한 위계관계에 참여하는 자에게 있어서 결정적으로 중요한 것은 위계적 관직의 사다리를 올라가 출세하는 것이며, 또한 관직에 머무는 동안 그 관직을 이용하여 가능한한 사적 이익을 도모하는 것이다.

당국가의 공식적 권한과 위계관계에 기초하여 당국가에 의하여 공식적으로 유지되며 충성스러운 주민 일부계층에 대하여 후하게 보상하는 편파적 후견-피후견의 관계의 망이 성립한다. 다시 말해

---

58) Walder, Op. cit., pp. 1-27.



원칙적으로 당료는 당과 당의 노선에 충실하는 것에 대한 댓가로써 당국가가 제공하는 포괄적 특권을 누리지만 이러한 체계는 해당 당료와 활동가 또는 하급자의 해당 각급 당기관의 당책임비서, 그리고 해당 기관장에 대한 인물적 충성과 융합되어 있다. 이 경우 해당 단위의 최고책임자가 하급자들에 대하여 매우 포괄적 권한을 가지고 있다. 하급자는 상급자에게 자신의 출세경로뿐만 아니라 생활경제적 측면, 즉 주택, 교육, 식료구입, 보건의료, 기타 특별소비재 등을 의존한다. 따라서 상급자가 하급자의 운명 경로에 대하여 공적 사적으로 재량을 부릴 수 있는 공간은 매우 넓다. 상급자에 의한 이러한 매우 포괄적인 하급자 통제권은 공적 측면과 사적 측면이 구별할 수 없을 정도로 혼합되어 있으며 따라서 상급자와 하급자간의 인적 충성에 기초한 명령과 복종의 체계가 성립하고 기능한다.

#### 마. 당료의 특권체계

당료가 된다고 하는 것은 권력엘리트에 포함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러나 동시에 여타 특권의 정교한 망에 참여한다는 것을 뜻한다. 중앙의 하부에 대한 통제, 또는 하부의 중앙에 대한 충성은 바로 이러한 당료제적 특권체계의 특성과도 관련한다.

물자부족이 만연하며 대부분의 소비재와 용역의 품질이 매우 낮은 경제체제에서 특권은 금전적인 것이 아니라 무엇보다도 공급이 딸리는 재화와 용역의 형태로 제공된다.<sup>59)</sup> 당료에 끼게되면 식료공급, 보건의료, 주택과 여가 등에서 특별한 시설을 이용할 수

있다. 이는 주로 특별 상점, 병원, 주택구역, 휴양소 등을 특별한 범주의 사람에게만 허가하는 형태로 이루어진다. 특권체계의 다른 요소에는 외국여행, 관용차의 사용, 최고인민회의와 같은 선거된 기관의 위원 등이 있으며 이는 추가적 특권과 관련되어 있다. 이러한 특권체계의 매우 중요한 측면은 이 특권체계 자체가 특권 당료층의 위계적 구조를 반영하고 있다는 것이다. 당료를 위한 특별한 시설과 특권은 등급지위에서 있고 수혜자의 위계에 따라 제공된다. 이러한 방식으로 특권체계는 당료 엘리트 구성원이 누구인가를 밝혀 주고 보상하며 또한 당료 엘리트 내의 규율과 구조를 유지하기도 한다.

이러한 당료의 공식적 특권은 또한 그가 관직의 권위를 사적으로 오용하여 누릴 수 있는 비공식적 특권과 연계되어 있다.<sup>60)</sup> 당료는 자신이 관할하는 행정경제기관의 여러 통계의 조작, 그 재산과 노동력의 사적 용도로의 사용 등을 통해 개인적 특권과 부를 불법적으로 늘이거나 개인적 목적을 추구할 수 있다. 그리하여 그는 뇌물, 선물, 상호 보호 등의 기회를 만들어 내며, 또한 이러한 기회를 앞으로의 출세, 특혜, 그리고 재정적 벌이 등의 원천으로 만들 수 있다는 것을 뜻한다. 관직의 권위의 오용을 통한 이러한 비공식적 특권의 행사는 불가피하게 그것에 협조하며 묵인하는

59) 이에 관해서는 특히 F. J. M. Feldbrugge, "The Soviet Second Economy in a political and legal Perspective", Edgar L. Feige ed., *The Underground Economies: Tax evasion and Information Distortion*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1989), pp. 297-338.

60) Jan Winiecki, *Resistance to Change in the Soviet Economic System: A Property Rights Approach* (London: Routledge, 1991)

상하급 동조자와 연루되어 있다. 연루자들은 공모를 통해 발생한 불법적 물질적 부와 특권을 공유한다. 상하급의 당료들은 사실상의 내밀한 도당을 형성하여 다른 구성원이 관리하는 국유재산의 불법적 유용과 공모의 결과로 탄생하는 물질적 부에 의하여 전 구성원이 이익을 보도록 조정한다. 또한 이러한 비공식적 특권은 이차경제의 망과 연결되어 있다. 당료 엘리트에게 허용된 일부 특권은 이차경제에서 매우 중요한 가치를 발휘한다. 외국여행을 통해서 국내에서는 구할 수 없는 물건을 사올 수 있고 또한 특별 판매소도 동일한 역할을 한다. 보다 일반적으로 말하여 당료 엘리트의 구성원이 된다고 하는 것은 공식적 지위와 특권을 공공연히 또는 암묵적으로 사용하여 이차경제에 개입하고 그리하여 거래를 유리하게 이끌 수 있다는 것을 뜻한다.

이 경우에 당료는 사실상, 당 또는 국가 조직에 충성과 복종을 바치는 댓가로 그에 해당하는 배당금을 받고 있는 것과 마찬가지로이다. 이러한 관계가 당료체계의 응집성을 유지해 주는 가장 중요한 요소이다. 사회주의적 당료체제를 유지해 주는 것은 당료들 사이의 이데올로기적 연대감이 아니라 그들이 이 체제에 참여함으로써 누리게 되는 구체적 물질적 이익이며 그 물질적 이익은 체제가 당료에게 허가하는 공식적 특권 뿐만 아니라, 당료가 자신의 권위와 특권을 이용하여 저지르는 불법적 행위를 통한 물질적 특권 또한 그가 이차경제에 개입하여 누릴 수 있는 물질적 이익까지 포함하고 있다. 거의 모든 당료들이 이러한 물질적 이익관계에 연루되어 있기 때문에 당료체제의 최상부가 중하급자의 이러한 행태에 대하여 심하게 제재를 가할 수는 없다.<sup>61)</sup> 때때로 제재가

가해지지만 그것은 전체적 정치안정을 위한 또는 정치적 반대자를 처벌하기 위한 표본적 상징적 징벌의 성격을 띤다. 또는 거의 모든 당료와 주민이 이러한 거래에 연루되어 있기 때문에 최고 당국자는 언제든지 필요한 경우에 거의 모든 당료와 주민에 대하여 형법적 제재를 가할 수 있게 된다. 이러한 상황은 거의 모든 당료와 주민을 당국가의 자의적 권력의 행사와 법적용에 한층 의존하게 만들며 그러한 상황을 통치를 위하여 이용하고 있다.

## 제 V 장 기업소 지배인의 경제관념과 행태

### 1. 기본환경

북한 사회주의 기업소의 지배인은 엄격한 위계적 경제관리 조직의 최말단 기관인 기업소의 운영을 위임받고 있다. 그는 위로부터 당기관의 동의를 받아서 임명되며, 그의 임무는 위로부터 내려오는 계획명령을 기업소의 경영활동으로 구체화시켜서 달성해야 하는 것이다. 그의 경영활동의 거의 모든 주요 내용은 위로부터 내려오는 기업소 계획에 상세히 서술되어 있으며 그의 임무는 기본적으로 충실히 그것을 집행하는 것이다. 그의 활동은 또한 기업소의 여러 상급 경제행정기관으로부터 또한 기업소내의 당조직과

---

61) Maria Los, *Communist Ideology, Law and Crime* (New York: St. Martin's Press, 1988)

지방당조직에 의하여 감독받고 또한 독려받고 있다.

그러나 기업소 지배인이 처한 상황은 상당히 모순적이다. 그는 기본적으로 위에서 내려오는 계획명령을 마찬가지로 위에서 주어지는 기준과 규칙을 준수하면서 완수해야 한다. 그러나 그렇게 하기에는 기업소의 경영환경이 너무도 불확실하다. 기업소에 주어지는 계획은 작성과 집행 과정에서 계속하여 수정되고 있으며 또한 자재공급이 규칙적으로 이루어지지 않는다. 따라서 만약 계획이 명령하고 있는 대로, 규칙대로, 기업소를 운영하는 경우 기업소는 주어진 계획목표를 달성할 수 없게 된다. 또한 상급기관에서의 기업소에 주어지는 계획목표가 일반적으로 과도하기 때문에 상급기관의 요구를 그대로 받아들이면 기업소의 운영이 곤란해져 목표달성이 원천적으로 불가능하게 된다.

기업소의 생산과 경영 활동의 외부환경이 이처럼 매우 불확실하고 그것은 개인적 문제가 아니라 경제체제의 구조적 문제의 성격을 갖고 있지만, 기업소 경영상에 발생하는 모든 문제점에 대해서는 기업소 지배인의 개인책임으로 간주된다. 기업소의 생산과 경영에서 애로가 발생하고 계획대로 되지 못하며 그리하여 결국 생산목표 달성이 어렵게 되는 가장 중요한 이유는 기업소의 외부환경 때문이다. 그러나 북한의 최고책임자와 공식문건들은 그러한 사항에 대한 책임을 주로 실무 책임자에게 지우고 있다. 기업소 외부환경의 불확실성의 원인이 경제체제의 구조적 문제이다는 것에 대하여서는 침묵한다. 따라서 기업소 경영활동에서 나타나는 모든 일에 대한 책임은 기업소 지배인의 개인적 책임이고 그의 개인적 노력에 의해서 극복될 수 있는 것으로 간주한다.<sup>62)</sup> 이러한

논리를 통하여 상급 단위는 하급단위 책임자에 대하여 심각한 개인적 압력을 행사하여 하급 책임자가 분발하도록 강제한다.

이러한 환경에서 모든 경제행위자가 경제체제의 구조적 문제를 지적하고 그에 대하여 시정 또는 개혁을 요구하는 것은 금지되어 있다. 따라서 하급단위의 생산책임자들은 구조가 발생시킨 문제를 개인적 차원에서 각자 해결해야 한다. 이 상황에서 지배인의 가장 중요한 임무는 계획목표를 달성하여 국가의 최고지도부와 자신을

- 
- 62) “그러면 지금 일부 공장들이 제대로 돌아가지 못하고 자기 능력을 다 내지 못하는 원인이 어디에 있습니까? 공장들에서 만부하를 견디지 못하는 데는 물론 여러가지 원인이 있습니다. 원료와 자재가 잘 공급되지 않아 생산을 제대로 못하는 경우도 있으며 설비를 제때에 보수정비하지 않아 기대를 세우게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또한 로력이 모자라는것도 하나의 원인으로 되고있습니다. .. 그러나 공장들이 제대로 돌아가지 못하는 근본원인은 거기에 있는것이 아닙니다. 일부 공장들이 제대로 돌아가지 못하고 자기 능력을 다 내지 못하는 근본원인은 공장, 기업소 지도일군들이 보수주의와 관료주의, 경험주의, 요령주의에 사로잡혀있는데 있습니다.” 김일성, “공업부문에서 사상, 기술, 문화의 3대혁명을 힘있게 벌릴데 대하여” 공업부문 3대혁명소조원들을 위한 강습에서 한 연설 1973년 2월 10일, 「김일성저작집」 제28권, p. 147; “정무원 위원장, 부장들이 자재가 넉넉히 공급되면 계획을 하고 자재가 좀 적게 공급되면 계획을 못해도 일없는것으로 생각하며 계획을 못한 책임을 다른 사람에게 넘겨썩우는 식으로 일한다면 그들에게 무슨 자력갱생, 간고분투의 혁명정신이 있다고 말할수 있겠습니까. 자재가 모자라면 모자라는 자재를 가지고 계획을 수행할 방도를 찾아내고 의화가 긴장하면 한푼이라도 의화를 적게쓰고 맡겨진 경제과업을 수행할 대책을 세우며 당과 혁명을 위하여, 조국과 인민을 위하여 조금이라도 더 좋은 일을 하고 더 많은 일을 하기 위하여 모든것을 다 바쳐 투쟁하는 사람이라야 참다운 공산주의혁명가라고 말할수 있습니다.” 김일성, “인민경제의 계획규률을 강화하며 사회주의건설에서 새로운 양양을 일으킬데 대하여”, p. 411.; 김일성, “산업운수부문에서 나타난 결합들과 그것을 고칠 대책에 대하여” 1954년 3월 21일, 「사회주의 경제관리문제에 대하여」, 제1권 (평양: 조선로동당출판사, 1970), pp. 124-125.

임명한 상급자의 비위를 거슬리지 않는 것이다. 또한 계획목표 달성은 기업소는 상급 등의 여러 물질적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그를 통해 지배인은 기업소 내부 중하급 관리자와 노동자들에게 물질적 혜택이 돌아 갈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그러나 위에서 요구한 내용대로 계획목표를 달성하는 것은 기업소 외부환경의 불확실성 때문에 매우 어려울뿐아니라 기업소 내부의 중간관리자와 노동자의 극도의 동원을 의미하고 있다. 따라서 그는 위에서 내려오는 계획을 달성함과 동시에 기업소 내부구성원의 이익도 충족시키는 방법을 찾아야 한다. 그런데 대부분의 경우 기업소 지배인의 상황 판단과 실제행위에서는, 상부가 요구하는 국가의 일반이익 준수보다는 기업소 구성원의 물질적 이해관계가 앞서게 된다. 그러나 외부적으로는 국가 전체 계획경제의 일반이익을 우선적으로 준수한 것으로 보여질 수 있어야만 한다. 성공하는 기업소 지배인의 가장 중요한 능력 중의 하나는 바로 이 모순적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다.

## 2. 기업소지배인의 관념과 행태

### 가.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목표 달성

기업소 지배인의 경영활동은 원칙적으로 상급기관이 제시한 여러 가지 세세한 기준과 규칙을 준수하면서 일어나야 한다. 그러나 기업소 경영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어쨌든 계획목표를 달성하는 것이다. 다시 말해 일단 기업소 지배인에게는 계획목표가 주어지

고 난후에는 기업소와 지배인에 대한 궁극적 평가는 계획목표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기준과 규칙이 얼마나 준수되었는가도 물론 중요하지만 그 보다는 한층 더 계획이 궁극적으로 달성되었는가에 의하여 이루어 진다. 따라서 지배인은 가장 중요한 목표인 특히 총량단위 또는 금액단위의 계획달성은 대체로 절대 준수하고자 하나 상부가 하달한 다른 하위 목표들 예를 들어 자재 구입의 규칙, 노동조직 등에 대한 규칙 등등의 세세한 요구에 대하여 유연하게 대응한다. 어떤 것들은 준수되고 어떤 것들은 조절되고 재해석되고 또는 상황에 따라 완전히 무시된다.

이 경우에 지배인은 상급자의 여러 요구들 중에서 상급자가 중요하다고 간주하는 것과 중요하지 않다고 간주하는 것을 구별해야 한다. 다시 말해 그의 능력의 일부는 그의 상급자가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아내는 능력이다. 지배인은 그의 상급자로 항상 “일을 잘했다”고 칭찬받을 수 있도록 자원을 요령껏 동원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고 있다. 그러나 일련의 규칙과 법을 어겨야만 일이 제대로 될 수 있고 “일을 잘했다”고 칭찬받을 수 있게 된다. 지배인은 기능적 기관에 세워 놓은 규칙, 기준, 지시 등을 지키면서 일을 해야 한다. 노동행정부는 그가 제시할 수 있는 임금을 정해놓고 있으며 재정부는 고용한계를 설정한다. 자재공급위원회는 그가 다른 행정기관과 자재를 교환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 지방의 행정경제위원회는 건설계획의 종료에 대한 인가를 해야 한다. 교통위원회의 철도관련 기능 기관은 화차가 움직이기 위한 최소한의 중량을 정해놓고 있다.

만약에 지배인이 이 모든 규칙과 법을 지키면 그는 업무를 완수



할 수 없으며 따라서 상급자도 즐겁게 해줄 수 없다. 따라서 그는 규칙을 또는 법도 어겨야 한다. 그의 상급자는 성공하기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말 것을 요구한다. 성공적인 지배인은 또한 일벌레여야 한다. 그는 직장에 살면서 먹고, 자고 마셔야 한다.

#### 나. 총생산액 최우선주의

국가가 기업소에 여러 계획지표들을 하달함으로써 기업소의 경영활동을 통제하며 그 계획지표의 달성여부에 따라 기업소를 평가한다. 기업소의 실적 평가는 상급단위에 의해서 이루어 진다. 그런데 상급단위가 하급단위의 모든 행위에 대하여 기준을 정하고 모든 행위를 그 기준에 따라 평가하는 것은 기술적으로 불가능하다. 또한 사회주의 경제는 계획 자체의 불완전성과 긴장한 계획 수행 등에서 발생하는 불균형과 애로 때문에 크고 작은 위기, 그 위기 해결시도의 성공과 실패의 끊임없는 연속 과정으로 진행된다. 그때 그때의 위기의 성격에 따라 한 두개의 계획지표가 다른 것보다 강조된다. 따라서 상급단위는 그때 그때 여러 행위와 기준 중에서 보다 중요한 행위와 기준을 선택하며 그에 따라 하급 단위의 계획수행정형을 평가한다. 따라서 계획지표들 중에서 어떤 것은 더 중요하고 어떤 것은 덜 중요한 것으로 간주된다. 이러한 중요도는 각 계획지표와 관련하여 상이하게 책정되어 있는 징벌과 보상의 체계, 그리고 최고지도자의 정책연설, 당중앙위원회 전원회의 토론 등을 통한 그때 그때의 당정책 공표를 통해서 기업소에 전달된다. 이 경우 하급자는 상급자가 중요시하는 행위와

기준을 만족시키기 위해 노력한다. 또한 그때그때 정치적으로 관심이 몰리고 있는 지표에만 집중하며 당분간 문제가 되지 않는 것들은 소홀히 된다.

가장 중요한 3가지 평가 측면들을 보면, 생산계획수행정형, 기술경제적 지표들의 계획수행 정형, 노동생산률 등이다. 이러한 지표들을 통해 국가는 기업소 경영활동의 주로 다음과 같은 측면들을 평가한다.

- 1) 생산계획수행 정형과 관련해서는 두가지 측면이 중요하다. 우선 생산량은 가능한 한 많아야 하며, 또한 품종별, 규격별로 정확한 생산이 이루어져야 한다. (총생산액, 상품생산액, 생산액계획수행을 그리고 현물지표별 계획수행을)
  - 2) 기술경제적 계획수행정형은 주로 생산비용의 측면을 평가한다. 즉, 고정재산, 유동자금, 자재 등의 사용은 최소이어야 한다. (원가저하, 수익성제고, 원단위소비기준, 원가)
  - 3) 노동생산율은 현행 그리고 과거 노동 투입은 가능한 한 적어야 한다. (노동생산능률)
- 이밖에도 중요한 것은 다음의 두 가지이다.
- 4) 이러한 모든 일은 미래의 생산을 위협에 빠뜨리지 않고 촉진시키는 방식으로 수행되어야 한다. (생산수단 이용상대, 설비의 정비 및 보수)
  - 5) 생산물의 품질은 가능한 한 높아야 한다. (품질제고계획수행분석)

이 지표들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것은 일반적으로 총생산액이다. 상급 경제관리자의 입장에서 보면 그 이유는 다음과 같다.<sup>63)</sup>

---

63) Michael Bleaney, *Do Socialist Economies Work? The Soviet and East European Experience* (London: Basil Blackwell, 1988), p. 50.

첫째로, 계획은 생산증대를 위한 선전선동의 대상인바, 산출목표는 그러한 선전선동에 가장 적절한 주제이다. 둘째로, 다른 것들 - 대표적으로 생산비용, 품질, 품종, 규격 등 -을 희생하고서라도 총생산액을 달성하는 것이 다른 것을 지키기 위해 계획미달하는 것보다 전체경제적으로 피해가 적다는 것이다. 다시 말해, 총생산 계획미달의 경우에는 수요자의 생산계획을 망치게 된다. 그러나, 총생산 목표달성 과정에서 생산품의 비용, 품질, 품종, 규격 등을 희생하더라도 어쨌든 총생산 목표를 달성하면, 무엇인가가 수요자에게 공급된다. 총생산 목표의 이러한 전체경제적 중요성에 부합하게 기업소에 대한 물질적 유인체계가 다른 계획지표 보다도 총생산액 지표달성의 경우에 매우 유리하게 구조화되어 있다.<sup>64)</sup> 따라서 기업소는 생산원가, 품질, 품종, 규격 등에 관심을 가지는 것보다 총생산액 달성에 훨씬 많은 주의를 집중한다.

총생산액이 기업소의 계획수행 평가에서 핵심이기 때문에 기업소의 경영과 상부예의 보고는 그에 적응한다. 기업은 금액상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생산품 생산에서 현물지표별 생산원칙을 어긴다. 금액상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어떤 것은 생산목표를 초과달성하고 다른 것은 목표를 채우지 않는것이다. 기업소는 월 초마다 현물지표별로 적어도 계획목표는 달성하기 위한 생산시간표를 시작하더라도, 월말이 다가옴에 따라 생산상황을 점검하고서 이렇게 판단할 수있다. 즉 모든 생산물의 목표를 규정대로 골고루 채우려고 노력한다면 총생산액 가치가 낮아져 계획미달성 평가와

64) Berliner, Op. cit., pp. 25-43.

그에 따른 손해를 감수해야 되는 위험에 빠질 수도 있다는 것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어떤 것을 희생하여 어떤 것에 집중하면 더 많은 총생산액을 채울 수 있고, 따라서 총생산액을 가장 중요한 기준으로 삼는 계획달성 여부 평가에서 계획달성평가와 그에 따른 특별보상을 받을 수 있게 되는 것이다. 이러한 판단에서 기업소는 생산 품종별 생산시간표를 조정한다.

북한의 공식문건들은 기업소의 이러한 편법에 대하여 강력히 경고하면서, 기업소가 품종별 규격별, 그리고 일, 월, 분기별로 현물지표를 엄격히 지킬 것을 요구한다. 어떤 기업소가 현물지표별 계획을 일, 월, 분기별로 지키지 않는 경우에는 생산단위들 간에 맺어지는 생산적 연계가 혼란에 빠지게 된다는 것이다. 이른바 협동생산의 문제는 산업부문간에, 기업소 간에 그리고 또한 기업소 내부의 분업관계에서도 발생한다.<sup>65)</sup>

65) 예를 들어, “협동생산규률을 어기면 인차 그와 련관된 다른 부문에 영향을 미치며 나라의 전반적경제발전에 커다란 지장을 주게 됩니다. ... 석탄공업부문에서 석탄을 계획대로 생산하여주지 않는다면 금속공업부문에서 강철을 제대로 생산할수 없으며 다른 모든 부문들에서 생산을 제대로 할수 없습니다. 이것은 마치 사람의 몸에 있는 팔다리와 눈, 코, 입, 귀 가운데서 어느 하나라도 자기 기능을 높지 못하면 온몸이 제대로 활동할수 없는것과 같습니다.” 따라서 “사회주의사회에서 협동생산계획은 결코 하고싶으면 하고 하기 싫으면 하지 않아도 되는 그런것이 아니며 인민경제모든 부문들과 공장, 기업소들에서 무조건 수행하여야 할 법적 과제입니다.” 그런데 “그러나 일부 일꾼들은 아직도 이것을 똑똑히 깨닫지 못하고 있으며 협동생산규률을 지키는 것을 대수롭지 않은 이로 여기고 있습니다. 심지어 일부 기업소 지도일꾼들은 순전히 기관본위주의적인 리해타산으로부터 출발하여 국가적으로 맞물려놓은 계획지표들을 제멋대로 뜯어고치고있으며 얼마든지 생산할수 있는 협동생산품도 생산하지 않아 전반적인민경제발전에 커다란 지장을 주고있습니다.” 김일성, “국가제산을 애호절약하며 수산업을 더욱 발전시킬데 대하

생산 계획 상으로 또는 그때 그때 당의 정책적 관심표명을 통해서 기업소가 무엇을 우선적으로 생산해야 하는 것이 뚜렷한 경우 66)에 기업소는 생산품목과 그 생산순서를 결정하는 데 별 어려움이 없을 것이다. 그러나 국가가 영토안에서 그리고 각 기업소 별로 생산되는 모든 생산품에 대하여 생산의 우선적 차례를 규정해 줄 수는 없다. 당과 국가가 우선적으로 생산을 요구하는 생산품이 무엇인가가 불분명해지는 경우, 기업소 지배인은 여러 생산품 중에서 어떤 것을 우선적으로 생산하고 어떤 것을 소홀히 해도 되는가에 대하여 결정할 수 있다. 이러한 경우에 기업소 지배인은 총생산액을 채우기 위하여 현물지표별계획의 일부를 변경할 수도 있는 것이다.

이러한 이유 때문에 북한에서도 현물지표별 계획 수행을 어기는 일은 빈번했다. 다음과 같은 김일성과 김정일의 지적이 이를 말해 준다. 김일성이 지적한 바에 따르면, “계획실행에 대한 평가를 잘

---

여 (발취)”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제4기 제19차 전원회의에서 한 결론 1969년 6월 30일, 「사회주의경제관리문제에 대하여」 제3권 (평양: 조선로동당출판사, 1970), pp. 545-546.

- 66) 그러나 전체경제적 사정과 기업소내 사정에 따라 모든 품목을 정확한 시간계획에 따라 생산하는 것이 불가능하다. 따라서 생산품의 인민경제적 또는 정치적 중요성에 따라 생산순서에 차별이 주어진다. 기업소의 생산계획은 기업소의 여러 생산품 중에서 국가가 어떤 생산품을 더 중요하게 여기고 있으며 따라서 기업소가 무엇을 우선적으로 생산해야 하는 것인가를 전달하고 식으로 되어 있다. 즉, 기업소 생산계획은 총생산액에 대한 목표 이외에도 기업소가 생산하는 개별 생산품에 대한 하위 목표를 두고 있다. 중요한 생산물의 목표는 매우 자세하게 표시된다. 현물단위로 그 수량 목표, 크기, 등급별 표시와 함께 그것의 금액도 표시되어 있다. 덜 중요한 것에 대해서는 “금속생산물”, 또는 “소비재” 등 집계단위 나와있고 금액상으로만 표시되어 있다. 또한 크기 또는 등급별 표시는 생략된다.

하는 것이 또한 중요합니다. 지금은 기업소들의 생산계획실행을 주로 금액지표에 의하여 평가하기 때문에 기업소일군들이 현물계획을 실행하는데 관심을 적게 돌리고 있습니다. 기업소들의 생산계획 실행에 대한 평가는 금액지표에 의하는 것보다 현물지표에 의하여 하는 것이 더 좋을 것 같습니다.”<sup>67)</sup> 김정일이 지적한 바에 따르면, “계획수행정형에 대한 평가에서는 금액상의 계획과 함께 현물지표별계획 수행정형을 중요하게 보아야 합니다. 금액상의 계획을 수행하였다고 하더라도 현물지표별계획을 수행하지 못하였으면 계획을 수행하였다고 볼 수 없습니다.”<sup>68)</sup>

그러나 기업소는 몇개의 다른 이유 때문에도 현물지표별 목표를 채우지 못한다. 첫째로, 어떤 특정한 생산요소의 부족이다. 물자부족이 만연한 경제에서 이는 기업소가 현물지표별 계획목표를 채울 수 없는 중요한 원인일 수 있다. 실제 생산되는 생산품은 우연히도 구입할 수 있었던 자재에 기초하여 결정된다. 둘째로, 기업소에서 현물생산계획을 정확히 이행하기 위하여 생산품목을 바꾸려고 기업소의 생산과정을 재조정하는 경우에 많은 비용이 들 수 있다. 따라서 기업소는 가능한한 생산과정을 재조정하지 않고 이미 생산하던 것을 초과생산하고자 한다. 셋째로, 다른 이유가 없더라도 생산재 생산기업은 부속품, 하청 생산품, 소비재 등의 생산을 등한시한다.

67) 김일성, “사회주의경제관리를 개선하기 위한 몇가지 문제에 대하여”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정치위원회 확대회의에서 한 결론 1973년 2월 1일, 「김일성 저작집」 28권 (평양: 조선로동당출판사, 1984), pp. 126-127.

68) 「경제사전1」 (평양: 사회과학출판사, 1985), p. 327.

따라서 계획평가에서 현물지표별 평가원칙이 얼마나 현실에서 실효성있게 적용되고 있는가 하는 것은 의심스럽다. 다른 사회주의 고전경제들에서도 존재했던 동일한 언명에도 불구하고 기업소의 계획수행 평가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여전히 총생산액일 수밖에 없다. 그 이유는 이미 앞에서 지적된 것들 때문이다. 첫째로, 총생산액이 다른 것보다 중요하게 평가될 수 밖에 없는 이유가 있다. 둘째로, 국가적으로 핵심기업소를 제외하고 국가가 그 밖의 기업소의 현물지표별 계획을 세세하게 규정하고 평가할 수 있는 능력이 없다. 셋째로, 자급공급에 만성적 애로와 혼란이 존재하는 상황에서 현물지표별 생산을 완수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 다. 자재공급의 불확실성과 임기응변

자재 문제는 기업소 지배인이 기업소 경영에서 당면하는 가장 큰 애로사항이다. 그런데 기업소 지배인의 입장에서 보면 자재부족은 애초에 잘못된 계획, 다른 공장에서의 계획 미달성, 배당된 자재가 갑자기 우선순위 사업으로 돌려지는 현상 또는 그 밖의 이유 등 때문에 발생한다. 드물지 않게 기업소는 없는 자재 대신에 마침 있는 자재를 대신 사용해야 한다.<sup>69)</sup> 공식 계획체계에는 이러한 어려움에 처해 있는 기업을 도울 만한 장치가 존재하지 않는다. 어떤 자재가 부족하더라도 기업이 그 자재를 공개적으로

69) 김일성, “새 환경에 맞게 건설에 대한 지도와 관리를 개선할데 대하여” 국가건설위원회당총회에서 한 연설 1965년 3월 26일 「사회주의경제 관리문제에 대하여」 제3권 (평양: 조선로동당출판사, 1970), p. 137.

사들이는 것은 금지되어 있다. 그 이유는 그 자재의 판매자는 계획외로 해당 자재를 판매할 수 없으며, 구매기업도 계획외로 자금을 자재구매에 사용할 수 없기 때문이다.

자재가 부족한 경우 기업은 상급기관에 불평하여 다른 곳의 자재를 우선적으로 돌려줄 것을 요구하거나 공급 기업에 직접 사람을 보내어 우선적 자재를 공급해주도록 설득하는 수밖에 없다. 그것도 안되는 경우에는 필요로 하는 자재가 어디에 있는지를 직접 사람을 풀어서 알아보고 물물교환을 성사시켜야 한다. 자재공급을 위해 상급기관, 공급기업소에 영향을 미치기 위하여 해당기관의 상급관리 또는 자재공급책임자에게 해당 기업의 생산이 국가적으로 매우 중요하다는 것을 설득하든지 또는 뇌물을 주어 영향을 미쳐야 한다. 물물교환 상대기업과는 교환의 조건 등을 맞추어한다. 필요한 경우에는 대상 기업이 원하는 것을 다른 곳에서 구해주어야 한다.

이런식으로 물물교환의 망과 자재조달의 망이 생기며 이는 인적 연결망으로 형성된다. 이 때문에 전문적으로 자재만 구하러 다니는 사람들이 생겨나며 결국 수많은 사람들이 떠돌아 다니게 된다. 이들의 행태는 김일성이 보기에 따라서는 사회적 문제와 기강해이의 원인이 된다. 또한 이러한 방식의 교환은 엄격히 보아 불법적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는 묵과된다. 그 이유는 이러한 교환이 계획경제의 작동에 유익한 기능을 하기 때문이다. 이러한 교환은 당장에는 사용되지 않고 있는 자재를 당장 절실히 필요로 하는 곳으로 옮겨 주는 기능을 하기 때문이다. 부의 입장에서 보아도 산하 기업들 사이에서 이러한 거래가 일어나는 것은 좋은



일이다. 부의 계획자체가 산하 기업들의 계획의 합으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이다.

이밖에도 자재의 질적 결함과 부속품등의 부족도 문제가 된다. 자재가 만성적으로 부족한 상황, 따라서 수요자보다는 공급자 편의 위주로 생산의 품종, 규격, 질을 생산한다. 게다가 계획달성에서 질, 품종, 규격 보다는 총생산액 또는 현물단위로 표시된 양적 지표 달성이 우선시된다. 양을 위해 질이 희생된다. 또한 생산기관들은 총생산액 지표 그리고 현물단위로 표시된 계획을 달성하기 위하여 완제품 생산에만 치중한다. 계획달성이 주로 완제품 생산실적 위주로 평가되기 때문이다. 이밖에도 기술실무적 원인으로 설비의 불충분, 원자재의 부족, 기술기능의 부족 때문에 생산물의 질이 낮고 또한 오작품과 불량품의 비율이 매우 높다.<sup>70)</sup> 그러나 수요자 측에서는 공급자측의 생산물이 규격, 품종, 품질 등이 다소간 맞지 않더라도 자재 인수를 거부할 수 없다. 전혀 공급을 못받는 것보다는 일단 자재를 받아 놓고 스스로 가공하여 쓰는 행태가 일반적이다. 이 때문에 중복작업에 따르는 노력과 자재의 낭비 등이 심각하다.

어떤 기업에 서류상으로 배정된 자재가 계획을 달성하는데 충분하다고 해도 계획달성은 자동으로 보장되어 있지 않다. 계획수행 과정에서 나타나는 가장 큰 위협은 배정된 자재가 제때에 도착하

70) 김일성, “국가재산을 애호절약하며 수산업을 더욱 발전시킬데 대하여 (발취)”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제4기 제19차 전원회의에서 한 결론 1969년 6월 30일, 「사회주의경제관리문제에 대하여」 제3권 (평양: 조선로동당출판사, 1970), p. 573.

지 않는다는 것이다. 이 문제를 처리하는 방법 중의 하나는 미리 자재를 초과신청해 놓는 것이다. 그러면 시간이 지나면서 상당한 자재예비를 가질 수 있게 된다. 그렇지만 이것도 문제를 해결하지는 못한다. 상급기관도 이를 알고 있고 자재를 긴장하게 배정하는 등의 방어조치를 취하며 그리고/또는 과거에 있었던 자재공급 지장 때문에 이미 예비가 없어졌을 수도 있다. 자재를 확실히 확보하기 위한 다른 방법은 외부공급자에 대한 의존을 줄이고 가능한 모든 것을 자가생산하는 것이다. 따라서 국가 경제 전체가 정책적으로 자립경제를 지향할 뿐아니라, 지역단위, 각 부문 및 각급 기관 별로도 자급자족하는 경향이 나타난다.

필요한 자재를 확실히 확보하기 위한 노력은 기업소 단위에서는 자신의 투입물을 직접 생산하는 것 또는 평시에는 사용하지 않는 비상용 설비를 갖추는 것 등으로 나타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업소 단위에서 이러한 '자급자족'의 범위는 좁아서 기계 부속품등에 그치거나 또는 작은 제품에 한정되어 있다 그러나 부단위에서 자급자족의 정도는 상당한 것에까지 이른다. 공급측의 다른 부가 제대로 공급해주지 않는 물품에 대해서 수요자 부는 산하 기업이 필요로하는 해당 제품에 대한 모든 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한 공장을 실제로 건설할 수도 있다. 이는 생산설비의 중복 건설로서 낭비일 뿐아니라 불필요한 수송요구를 발생시킨다. 그 이유는 바로 옆에 공급원이 존재함에도 그것이 다른 부에 속하고 공급을 제대로 않는다고 하여 수요자측 부가 자신의 공급원을 직접 건설할 때 그것은 지리적으로 멀리 떨어져 있을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자가공급의 일반적 효과는 과도한 수송비용, 소규모의 비효율

적이고 비전문적 생산이다.

자가 공급으로의 정도 압력은 대외무역에도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 계획작성자는 다른 절박한 이유가 없는 한, 외국으로부터 자재가 도착하는가 마는가 때문에 자신이 계획달성이 좌지우지되는 것을 원하지 않는다. 따라서 계획가는 자가생산하는 것이 너무 비용이 많이 들거나 또는 불가능한 것만 외국으로부터 수입한다.<sup>71)</sup> 일차 제품과 발전된 서방 기계류가 그러한 품목이다. 자본주의 경제에서는 대외시장에 침투하기 위하여 수출에 노력을 기울이는 것이 기업에 도움이 될 수도 있다. 그러나 수출을 늘리는 것이 사회주의 기업가나 계획가에 반드시 이득이 되지는 않는다. 따라서 대외무역에서 수입에 의해 주도되며 대체물이 존재하지 않는 수입에 의해서 지배된다.

자재문제에 대한 안전판으로 기업이 자재를 사재기하여 과다한 재고를 가지고 있거나 평상시에는 쓰지 않는 비상용 설비를 갖추고 있거나 자가생산 등으로 매우 비효율적 경영을 하더라도 사회

---

71) “인민경제 모든 부문이 서로 밀접하게 련관된 하나의 유기체를 이루고 있는 사회주의사회에서 경제를 옹계 관리운영해나가려면 반드시 세부계획화를 실현하여야 합니다. 만일 우리에게 외화가 넉넉하다면 혹시 인민경제계획에서 맞물리지 못한것이 있다 하더라도 대외무역을 통해서 그것을 어느정도 해결할수 있을 것입니다. 가령 기계공장에 필요한 어떤 규격의 강관을 계획에 물려놓지 못한 경우가 있어도 외화만 많으면 대외시장에 나가서 필요한 규격의 강관을 사올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외화가 많지 못한 조건에서 필요한 자재를 다 다른 나라에서 제때에 사다줄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나라에서는 세부계획화를 잘하여 인민경제 모든 부문에서 요구되는 자재를 자체로 생산해내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김일성, “국가재산을 애호절약하며 수산업을 더욱 발전시킬데 대하여 (발췌)”, p. 548.

주의 경제에서 그 기업은 파산하지 않는다. 기업의 파산과 실업의 문제에 관한 사회주의 이데올로기를 도의시하더라도 이른바 연성 예산계약이 존재한다. 기업에 관한 거의 모든 중요한 결정은 기업의 상급위계에서 내려진다. 기업의 자율성은 매우 제한되고 따라서 기업 자체가 책임져야 하는 것도 제한되어 있다. 역으로 상급 기관은 해당 기업의 경영결과에 대한 책임에 연루되어 있다. 또한 기업소에 가장 중요한 것은 이윤을 내는 것이 아니라 위로부터 주어진 계획명령을 주로 양적 측면에서 달성해내는 것이다. 물론 기업소는 재정적 통제, 이른바 원에 의한 통제, 독립채산제 등을 통해 경영결과에 대한 화폐적 통제를 받는다. 그러나 화폐적으로 장기간에 걸쳐 손해가 나더라도 그 기업소는 궁극적으로 상급기관의 재정적 도움으로 희생한다.<sup>72)</sup>

#### 라. 효율에 대한 충성우선주의

기업소 지배인은 해당 당기관의 비준을 얻어 상급기관 또는 상급자에 의하여 임명된다. 이 때 임명기준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상급자에 대한 충성이며 그의 경영능력은 부차적이다. 충성은 하급자가 상급자의 입장을 무조건 지지하고 복종하는 것으로 이해된다. 따라서 가장 중요한 것은 위로부터의 명령을 수행하는 데서 그리고 상급자와의 여타 관계에서 얼마나 충성을 보였는가이다. 경제관료와 기업소 지배인의 여러 행태가 이와 관련하고 있다.

72) Kornai, *Op. cit.*, pp. 140-145.

능력보다는 충성 우선 원칙에 의하여 선발된 관리자는 기업소의 경영효율에 이중의 손실을 초래한다.<sup>73)</sup> 첫째로, 이러한 관리자는 상대적으로 무능하기 때문에 기업소 경영에 손해를 초래한다. 둘째로, 이러한 관리자는 기업소의 경영효율을 증진시키는데 힘을 쏟는 것이 아니라 상급자를 만족시켜 충성의 의무를 다하기 위하여 집중한다. 충성원칙에 의하여 선발된 관리자는 자신을 임명해 준 상급자에 대하여 인격적으로 종속되어 있으며 또한 임명해 준 댓가를 물질적으로 보답해야 한다는 부담을 갖는다. 물론 기업소 운영에 대한 공식평가 기준은 계획경제의 틀내에서의 기업의 효율적 운영이다. 그러나 실제적인 기업소 운영 평가에서 어차피 효율성의 정도는 그다지 중요한 평가기준이 아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상부로부터의 계획명령을 완수했다고 보고하는 것과 상급자와의 개인적 관계이며 이는 기업의 효율적 경제적 운영과 반드시 일치하지 않는다. 따라서 기업경영이 원초적으로 비효율적으로 이루어 지기 때문에 그에 추가적으로 기업소 지배인이 공공재산을 유용하여 실제상으로 기업소에 더욱 손해를 끼치더라도 발각되기 힘들다. 기업소 지배인이 기업소 운영과정에서 여러 형태의 불법적 조치를 통해 사적 이익을 도모할 수 있다. 그는 공공재산과 공장인력을 빼돌려 자신의 개인적 부와 편의를 증대할 수 있다. 또한 자신을 임명해 주었고 앞으로의 출세에 중요한 국가와 당의 관련자, 그리고 기업소 운영 과정에서 일어나는 여러 불법적 사항

---

73) Jan Winiecki, *Resistance to Change in the Soviet Economic System: A Property Rights Approach* (Routledge: London and New York, 1991), p. 5.

들을 묵인받기 위해서 좋은 관계유지가 필요한 여러 관련자와 좋은 관계를 유지하기 위하여 공공재산, 공적 인력, 기타 공공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

이러한 충성에 기초한 체계에서는 상급자가 하급자를 평가하고 보상하는 데서 기준이 되는 공식 행정절차나 규칙이 존재하지 않는다. 역으로 하급자의 충성에 대하여 상급자가 보상하는 경우에도 그 보상은 규칙에 구속받지 않고 이루어진다. 평가와 보상의 객관적 규칙이 존재하지 않는 체제에서만 충성은 다른 자질보다 우선적으로 평가받을 수 있다. 기업의 효율적 경영이라는 차원에서는 무능력하나 충성적인 하급자가, 능력있으나 비판적 하급자보다 상급자로부터 더 좋은 평가를 받으며 좋은 자리에 임명된다. 여기서 좋은 자리란 피임명자가 관리해야 하는 국가의 재산과 인원이 많고 그에 따라 피임명자가 공식적으로 누리는 특권이 클 뿐만 아니라, -아마도 더 중요할 수도 있는 것으로서- 비공식으로 착복할 수 있는 기회와 가능성이 증가하는 직책, 따라서 상급자에게도 보다 후하게 보답할 수 있는 직책을 뜻한다.

#### 마. 허위보고

허위보고 역시 효율보다는 실제적으로 충성의 원칙이 강조되는 것과 관련돼서 나타나는 현상이다. 상급자에 대한 충성과, 하급자가 상급자에게 사실에 부합하는 보고를 올린다는 것은 반드시 일치하지 않는다. 사실에 부합하는 보고는 상급자를 곤경에 빠뜨릴 수도 있다. 상급자가 필요로 하는 것은 하급자가 상부의 명령을

성공적으로 완수했다는 것과 또한 그 과정에서 말썽을 일으키지 않았다는 것이다. 결정적으로 중요한 것은 상부에 계획명령을 성공적으로 완수했다고 보고를 올리는 작업이다. 이 성공보고에 의해서 상하급 경제관료의 운명이 결정된다. 기업소와 각급 경제관리기관의 임금, 상급, 출세관리, 정치적 특혜 등이 계획달성 성공보고와 연계되어 있다.

또한 충성에 기초한 체계에서 하급자는 상급자의 요구를 정면으로 거부하기는 매우 힘들다. 하급자는 상급자가 무리하고 얼토당토않은 요구를 하더라도 외면적으로는 그것을 무조건적으로 또한 열광적으로 받아들여야 한다. 계획이 무리하게 책정되어 있거나 계획 내부에 모순이 많더라도 하급자는 상급자와 이러쿵저러쿵 토론해서는 안된다는 것을 오랜 경험을 통해서 알고 있다. 그 대신에 하급자는 사전에 조작된 자료 제공을 통하여 상급자의 결단에 영향을 끼치거나 계획수행 도중에 이러저러한 애로사항을 호소하여 목표를 경감받거나 더 많은 지원을 받아 내는 식의 반응을 하는 것이 좋다. 계획수행과정에서는 수행기업소 자체에는 책임이 없는 수많은 외부적 애로가 등장하기 때문에 하급자는 상급자에 대하여 얼마든지 이유를 댈 수가 있다. 또한 상급자도 하급자가 실제로 상부의 명령을 글자그대로 수행했는가의 문제와는 상관없이 하급자로부터 성공보고를 기대한다.

따라서 상부에 올리는 성공보고의 그 실제 내용은 별개의 사항이다. 하급자는 상부에 성공을 보고할 수 있기 위하여 보고를 조작하는 것이 일반적 관행이다.<sup>74)</sup> 그것이 일반적 관행이기 때문에 사회주의 국가에서는 극심한 사례의 경우가 아니면 일반적으로

거의 처벌되지 않는다. 관료제적 경제관리체계에서 최고위급으로부터 중하급 단계의 모든 각급 경제관료는 아래로부터의 계획달성 성공보고와 스스로의 성공공표에, 그리고 또한 자신이 관할하는 하급단위에서 말썽이 일어나지 않았다는 것을 공표하는 것에 관심을 가지고 있다. 각급 위계 경제단위는 하부의 성공보고를 취합할 수 있어야 자신이 관할하는 기관의 성공적 업무완수를 차상급자에게 보고할 수 있다. 계획달성 성공을 보고하면 상급자를 기쁘게 할 수 있고 임금이 완전히 지급되며 상금을 받을 수 있고 출세관리, 정치적 특혜 등에서도 좋은 전망을 할 수 있다. 물론 상부는 하부를 보고를 감사하여 보고된 것보다 낮은 실제 생산량을 문제삼고 또한 하급자를 문책할 수도 있다. 그러나 이러한 사태가 벌어지면 상급자도 함께 불이익을 당하게 된다. 즉 만약 하급기관의 진실된 통계를 취합하면 해당 상급기관은 생산목표를 달성하지 못하게 되고 또한 관할 하급기관에서 허위보고라는 말썽이 생기게 되어 감독책임을 지게 된다. 경제위계의 최말단인 기업소의 노동자의 경우에도 어쨌든 지배인이 계획목표가 성공했다고 상부에 보고하는 수완을 부릴 수 있는 '유능한' 지배인이어야 임금과 상금을 제대로 확보할 수 있다. 최고지도부도 물론 성공공표에 관심을 가지고 있다. 대내 대외적으로 성공공표를 하는 경우야 최고지도부는 정책실패의 책임과 통치정통성에 대한 도전으로부터 면제될 수 있다.

---

74) Los, Op. cit., pp. 184-189; Berliner, Op. cit., pp. 160-181; Charles Schwartz, "Corruption and Political Development in the USSR," *Comparative Politics* 11, No. 4, July 1979, pp. 425-443.



그러나 최고지도부는 전체 경제상황에 대하여 최종적 책임을 지고 있기 때문에 경제상황에 대한 올바른 정보에도 관심을 가지고 있다. 그러나 설령 최고지도부가 아래로부터의 성공보고가 상당한 정도로 허위라고 간주하더라도 그것을 대부분 묵인할 수밖에 없다.<sup>75)</sup> 실제에 보다 정확한 보고를 공표하는 것은 국내적 대외적으로 경제상황이 참담하다는 것을 공개적으로 인정하는 것이다. 또는 아래로부터의 정보보고를 거의 모두 허위라고 간주하고 허위 보고자의 처벌에 나서게 되면 나라의 거의 모든 상중하급 경제행정관료와 감독기관의 관료들을 징벌해야 한다. 또는 아래로부터의 모든 통계 작성사업과 보고를 아예 무시하고 그 대신에 직접 방대한 통계작성사업에 나서야 한다. 이는 비용문제와 기술적 문제 때문에 불가능하다.

보고를 조작하여 상부에 목표달성 보고를 올리는 것은 계획경제 운영의 상황 때문에 불가피하고 또한 일반적이다. 가장 중요한 이유는 기업소 또는 하부에 하달되는 계획목표 자체가 정상적 상황에서는 달성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그 불가능한 이유에는 세 가지가 있다.

우선 기업소에 대한 계획목표가 과중하게 주어지는 경향이 있다. 즉 기업에는 “현실적이고 동원적 목표”가 주어진다. 상-하급자

75) Los, *Crime, Op. cit.*, p. 188; 한 극단적 예를 들면, 루마니아의 사회주의 정부는 1989년 곡물생산량이 6000만 톤이라고 공표했다. 그러나 차우체스쿠 실각 이후에 등장한 새로운 정부는 그것을 1700만 톤으로 수정해 발표했다. Mary Fisher, "Politics, Nationalism, and Development in Romania", Gerasimos Augutinos, *Diverse Paths to Modernity in Southeastern Europe: Essay in National Development* (London: Greenwood Press, 1991), p. 147.

관계의 오랜 경험상 상급자는 하급자가 상급자를 속이려고 시도하는 것으로 간주한다. 실제로 하급자는 계획달성의 편의를 위하여 상부에 대하여 생산능력을 속이고 재정과 자재를 과다 신청하는 경향을 가진다. 상급자는 이에 대항하기 위하여 기업소에 일반적으로 높은 목표와 긴장한 재정과 자재를 배정한다. 나아가 국민경제의 성장목표가 야심차게 책정되어 있기 때문에 경제부문간의 균형이 긴장되어 있고 또한 그 때문에 일부에서 생산착오가 일어나 균형의 일부가 깨질 가능성이 매우 높다. 계획당국은 국민경제 부문간의 균형을 맞추고 일부의 생산착오에 대한 예비책으로 기업소에 과다한 계획목표를 하달한다. 과중한 목표에도 불구하고 임금과 상금을 타내기 위해서는 경영정보를 조작하여 목표달성에 성공했다고 상부에 보고해야 한다. 이러한 허위보고의 경우에도 상부가 모든 보고의 사실 여부를 확인할 능력도 없고 또한 오히려 하부가 성공보고를 올려주기를 바라기 때문에 말썽이 생길여지는 적다.

이러한 허위보고는 대부분의 경우 생산량을 부풀려 계획달성과 초과달성을 보고하기 위해서 행해진다. 그러나 계획목표 이상으로 초과생산된 부분을 감추기 위해서도 행해진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다. 우선 금년도 초과생산액을 그대로 보고하면 그에 기준하여 내년도의 계획목표치가 과도하게 책정되기 때문이다. 또는 자재와 완제품 재고분을 확보하면 그것은 앞으로 혹시 계획수행과정에서 어려운 상황에 직면할 경우 예비자원으로 활용될 수 있기 때문이다. 또한 초과생산의 은폐는 국가재산의 횡령, 불법적 생산 또는 불법적 판매 등을 은폐하기 위한 경우도 있다. 이러한 은폐의 경

우 이득을 보는 것은 지배인 뿐만아니라 노동자를 비롯한 여러 관련자들이다.

허위보고가 불가피하고 관행이 되는 두번째 이유는 상부가 기업소에 내리는 여러 목표와 기준이 서로 상충하기 때문이다. 일반적으로 명령형 계획경제에서 기업소에 하달되는 기업소 경영의 성공평가지표에는 다음과 같은 것이 있다.<sup>76)</sup> 1) 주요 생산물의 수량과 총가치, 2) 주요 생산물의 종류와 규격, 3) 지정된 주요 구매자에 대한 주요 생산물 판매수량과 공급시기, 4) 기타 생산물, 5) 상급기관의 주요 기자재 공급, 즉 핵심기자재 공급에 대한 중앙의 재정공급과 지정된 주요공급자의 결정, 6) 주요 생산물의 투입과 산출의 가격, 7) 총이윤 또는 손실과 이윤율, 8) 총비용목표, 9) 자재비용 기준, 10) 국가예산으로부터 교부금과 국가예산에의 납부, 11) 총산출액에 기초한 총임금기금 그리고/또는 평균임금, 직급기준과 직급율, 지역간 차이에 따른 보조금, 상급규칙, 총노동력, 12) 명시된 고정재산건설에 대한 중앙기금으로부터의 투자액, 13) 노동생산성기준과 노동생산성 증대 목표, 14) 생산기술과 새로운 생산물과 기술을 획득하는 데서의 목표, 15) 주요 관리직과 기술직의 임명, 16) 노동행정의 규칙, 17) 설비사용의 효율향상 등등.

상부에서 내려오는 목표와 기준은 상부의 명령이기 때문에 구속력을 가지고 있으나 기업소가 그 모든 것을 만족시키는 것은 원칙적으로 불가능하다. 예를 들어 위의 여러 지표중에서도 일반적으로 기업소에 가장 중요한 지표는 총생산량 또는 화폐표시 총생

76) Jan S. Prybyla, *Market and Plan Under Socialism: The Bird in the Cage* (Stanford: Hoover Institution Press, 1987), p. 29.

산액을 늘리는 것이다. 기업은 총생산량을 늘리기 위하여 생산비용이 판매가격을 상회하는 경계를 넘어서서도 생산을 확대해야 할 수도 있다. 또는 생산량을 늘리기 위하여 추가 원료를 비싸게 구입해야 하며 또한 사용 노동자 숫자와 노동시간이 늘어나 임금을 애초에 계획된 이상으로 지출해야 할 수도 있다. 즉 기업이 량 및 가치표시의 총생산을 늘리는 것하고 그 독립채산제 기업소의 채산성을 맞추는 것은 서로 어긋난다. 또한 한편에서 생산자 기업의 총생산량 또는 총생산액을 늘리는 목표와 다른 편에서 주요 생산물의 종류와 규격을 맞추는 것, 또는 생산물을 다음 단계의 생산과정의 기업에 정확한 시간에 공급하는 것은 서로 어긋날 수도 있다.

과중한 계획목표와 모순하는 계획명령에 직면하여 기업소가 계획달성에 성공했다고 보고하기 위하여 행하는 경영정보조작에는 주요한 사례에는 3가지가 있다.<sup>77)</sup> 그 첫째는 계획작성의 여러 협상과 조정과정에서 연줄을 동원해 압력을 행사하고 또한 기업의 설비 및 생산능력 등을 낮추어 보고하고 소요자재와 예산은 불리어 신청하여 기업에 유리한 계획목표와 자재배정이 이루어지도록 한다. 이 경우 계획달성이 쉬워지고 그에 따른 여러 형태의 포상도 확보된다. 특히 예기치 않은 어려움과 끊임없이 높아지는 계획목표에 대비하기 위하여 생산요소를 과잉 신청하고 또한 비축하는 것이 중요하다. 둘째로 생산품 구조를 보이지 않게 변경하여 계획목표달성을 보고할 수 있도록 한다. 이에 3가지 방법이 있

---

77) Winięcki, Op. cit., p. 34.

다. 가) 비싼 자재등을 사용하여 기업 생산품 중에서 비싼 것의 비중을 높인다. 이러하면 가장 중요한 총생산액 지표 달성이 쉬워진다. 나) 규격 이하의 품질의 제품을 생산하거나 또는 저가격의 불량자재를 사용하더라도 생산품의 가격을 낮추지 않는다. 이러하면 손쉽게 생산량목표와 이윤목표를 달성할 수 있다. 다) 가짜 신제품을 내놓는다. 소소한 품질개선에도 불구하고 신제품으로 위장하여 가격을 높이게 되면 이윤목표, 총생산액 목표 그리고 또한 생산성 목표를 쉽게 달성할 수 있다. 셋째는 완전히 거짓으로 통계를 작성하여 계획달성을 보고하고 그에 따른 보상을 확보하는 것이다.

허위보고가 불가피해지는 세번째 이유는 기업소 경영 외부환경이 매우 불확실하기 때문이다. 이 경우 특히 만성적 자재부족 상황 때문에 투입측면의 불확실성이 심하다. 지배인은 자재가 계획대로 공급되지 않을 것이 거의 확실한 것으로 판단해야 한다. 자재는 필요한 수량, 품질, 규격 등대로 공급되지 않거나 설령 공급된다고 해도 제때 필요한 곳에 공급되지 않는다. 지배인은 자재확보를 위하여 상급기관에 허위정보를 제공하며 또한 여러 방법과 경로를 통하여 비공식 압력을 행사한다. 그래도 여전히 자재가 부족하고 불규칙 공급되어 계획달성은 불확실해지는 경우 지배인은 산출구조를 조작하여 목표달성 성공을 상부에 보고하고자 한다.

#### 바. 후견망의 확보와 상호보호

기업소의 경영은 그 외부환경이 불확실한 가운데서 과도하게 높

이 설정된 계획목표를 달성해야하는 것이다. 계획목표 달성은 무엇보다도 중요한 기업소 경영활동의 목표이기 때문에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말고 완수되어야 한다. 따라서 계획목표 달성 작업은 대부분의 경우에 공식적 규칙과 기준을 어겨야 하며 관료적 계선과 절차를 뛰어넘는 협력을 동원해야 하는 작업이다. 만약 모든 일을 관료적 계선과 절차, 기준과 규칙을 고지곤대로 준수하면서 풀어가고자 하는 경우 관료적 명령구조의 경직성 때문에 기업소의 성공적 목표달성은 불가능해진다.

관료적 경직성을 풀어가는 가장 중요한 방법은 인적 연결망을 축적하여 그를 통해 의사결정의 공식절차를 우회하는 것이다.<sup>78)</sup> 지배인이 직업상 성공하기 위해서는 사람 사귀는 능력이 매우 좋아야 하며 -나중에 도움을 주고받을 목적으로 잘 사귀어 두는- 도구적 우정관계와 형제적 인연을 발전시킬 수 있는 능력이 사업 활동 능력의 일부가 된다. 좋은 연결을 가지고 있는 자는 필요할 때마다 '좋은 일'을 위해서 동원하여 특별한 대우를 받을 수 있다. 기업소 지배인 또는 당비서는 개인적 영향력과 연결망을 통하여 법적 또는 공식적으로는 불가능한 특혜를 받는다. 이러한 영향력은 우정에 기반할 수도 있지만 종종 상호적 의무감을 발전시키며 미래의 호의를 기대하는 일종의 투자로의 간주된다. 이 경우에 상대방을 설득하기 위하여 직접적인 뇌물도 주어지고 있다. 기업소

78) 박형중, 앞의 글; 그밖에도 다음 참조. Schwarz, Op.cit.; Nick Lampert, "Law and Order in the USSR: The Case of Economic and Official Crime," *Soviet Studies* Vol.XXXVI, No.2, July 1984, pp. 366-385; Steven J. Staats, "Corruption in the Soviet System," *Problems of Communism*, Jan-Feb 1972, pp. 40-47.

경영의 애로를 타개하기 위한 비공식 거래를 성사시키거나 기업소의 대외관계를 원활하게 하기 위한 상대방과 관련자에 대한 뇌물, 즉 공적인 명분을 위한 뇌물은 만연하고 있으며 또한 공공연히 묵과되고 있다.

성공적인 지배인은 사람을 잘 사귀며 인적 연줄과 뇌물을 동원하여 기업소가 직면한 애로를 해결할 줄 아는 요령꾼이다. 그는 부족한 자재조달을 위하여 자재가 어디에 있는가를 알고 있어야 하고 필요하다면 부의 경계를 넘어서서 연줄을 동원하여 자재를 확보해야 한다. 또한 기업소가 직면한 여러 어려운 문제를 풀어 줄 수 있는 강력한 후견자도 확보할 수 있어야 한다. 그 후견자를 통해서 계획에는 잡혀 있지 않는 자재를 추가로 배정받아야 하고 또는 부의 관료를 설득하여 기업소의 어려운 생산과제를 경감시켜야 한다. 또한 기업소가 직면한 애로를 풀기 위하여 혁신적 해결책도 내놓을 수 있어야 한다. 건설계획을 제때에 끝내기 위해서 불도저가 필요하다면 그는 불도저와 트럭을 교환할 줄도 안다. 계획달성을 하는데서 노동력이 모자라면 노동자를 수송하기 위해서 트럭을 빌릴 줄도 안다. 요령꾼으로서의 지배인은 어떻게 하면 숙련공을 붙잡아 둘 수 있는 가도 안다. 그는 그들에게 살 곳을 마련해 주고 항상 상금도 받을 수 있도록 해준다. 요령꾼은 공급자를 설득하여 자신에게 자재를 우선적으로 돌려주도록 설득할 수 있다. 설령 다른 기업소가 법적으로 우선권을 가지고 있더라도 그러하다.

이러한 행위가 반복되면 관료적 체제 내에서 개인적 친밀감과 주고받기가 반복하고 그 결과로 상호감싸주는 내밀한 그룹이 형

성된다. 자신의 권한 내에서 활동해야 하고 상대방이 원하는 대로 모든 것을 들어주어서는 안되는 관료가 친구로 변하고 공범으로 변한다. 그리하여 공식 비공식 요소가 겹쳐지고 상호침투하는 체제가 생겨나며 외부자는 공식적 명령위계를 준수해야 하지만 내부자는 주로 연줄을 통해서 업무를 처리하며 행정 및 경영 구조의 전략적 위치를 차지하는 상황이 발생한다. 이렇게 해서 형성되는 상호감싸주는 내밀한 그룹은 연대감, 상호책임감과 의리심을 특징으로 한다. 특히 구성원 사이의 상호부조가 조직외부로부터 또는 조직의 공식규칙을 직접적으로 어기면서 일어나는 경우 그러하다.

연줄동원, 뇌물, 횡령 등의 사실상의 부패가 성공하기 위해서는 그 실행과 은폐에서 적극적으로 돕는자 또는 묵인자가 존재해야 한다. 이러한 행위의 동기는 사회적 분업 내에서 각기 과업을 적절히 완수하는 데 서로가 매우 의존해 있는 경우, 어떤 때 규칙을 어겨야지 경감되거나 해결되는 문제와 부담을 가지고 있는 경우, 또는 아마도 앞으로 동일한 문제와 부담에 직면할 것으로 예견되는 경우 등에 발생한다. 서로 감싸주기는 상호성을 내포하나 반드시 동등한 댓가를 요구하는 것은 아니다. 상호감싸주기 그룹에는 그 임무가 공모와 부패를 방지하고 폭로하는 바로 그러한 인물도 포함되어 있다. 직업의 성격 때문에 통제자는 그들이 감독해야 하는 개인과 밀접히 접촉하고 교류해야 하며 이 과정에서 통제자는 종종 통제받는자에 의존하게 된다.

기업소가 성공적으로 계획을 달성하는 데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것은 기업소 지배인 당사자 뿐만아니라 그 하급자인 기업소 내의



중간관리자와 노동자, 그리고 상급자로서 해당 기업소에 대한 감독책임을 맡고 있는 연합기업소의 지배인, 그리고 그 상급 단위인 부의 부장이다. 나아가 이러한 위계와 관련되어 있는 각급 당조직도 그에 관심을 가지고 있다. 해당 기업소가 계획목표를 달성하면 이 모든 인물들이 상급자를 만족시킬 수 있고 물질적 정치적 혜택을 누릴 수 있다. 따라서 이 모든 인물들은 기업소 지배인이 계획목표 달성을 위하여 저지르는 불법적 사항들에 대해서 묵인하거나 협력해 주어야 한다. 그러나 규칙은 규칙이고 기준은 기준이기 때문에 기업소의 계획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저지르는 불법적 사항들에 대하여 기업소 지배인은 법적 책임을 져야 하며 해당 기업소의 감독책임을 가지고 있는 모든 기관들도 관리감독 책임을 져야 한다. 따라서 모든 해당 관련자들은 말썹이 생기지 않도록 기업소 경영활동에서의 불법적 상황을 은폐하는데 공동의 이익을 가지고 있고 그 때문에 공모하고 있다. 필요한 경우에 이러한 공모가 자연스럽게 이루어 질 수 있도록 해당 관련자들은 서로 좋은 관계를 유지하기 위하여 평소에 여러 모로 상당한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이러한 공모에 기초하여 강력한 상호감싸주기 보호동맹이 형성된다. 이 동맹은 공산당이 국가기구를 통제하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명령과 감독의 계선을 횡단하며 여러 정권기관들을 포괄하여 형성된다. 원래 당과 국가의 긴밀한 관계는 당중앙의 명령에 대한 복종을 확보하기 위해 만들어 졌지만, 해당 행위영역에서 누가 잘하고 잘못했는가를 잡아내는 것을 어렵게 만들어 실제로는 당중앙의 명령복종을 오히려 어렵게 만든다. 또한 당의 국가관직에

대한 임명권 행사도 원래는 당과 정권기관 관료의 공모와 부패를 방지하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것이다. 그러나 만연하는 감싸주기 보호동맹 때문에 당기관에 의한 지방의 핵심 간부에 대한 임명권 행사는 사적 목표를 추구하기 위한 방편으로 변해버리게 되며 그리하여 실제로는 공모와 부패를 조장하게 된다.

## 제VI장 노동자의 경제관념과 행태

### 1. 정치·사회적 측면

사회주의 당국가체제의 몇 가지 특징이 일반 주민 또는 노동자들의 그에 대한 관념과 태도에 영향을 준다.<sup>79)</sup> 그 중에서도 특히 일반주민은 공적인 것과 국가적인 것에 대하여 적극적 의무감과 책임감을 발전시키지 못한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다. 한편에서 당국가는 일반주민에 대한 포괄적 후견자로서 나타나며 주민에게 일반적 복지와 안전을 제공해주는 제도이지만 다른 편에서 국가는 그에 대한 댓가로서 주민이 정치적 의사형성에 참여하는 것을 배제한다. 이 때문에 주민의 자치능력이나 공적 책임감은 발전하지 못한다. 주민은 공적 여론 형성이나 국가적인 정책과제 등에 참여권, 그를 통해 자신의 처지를 개선시킬 가능성등이 전혀 존재

79) Ken Jowitt, *New World Disorder: The Leninist Extinction*, pp. 55-86.

하지 않는 것으로 간주한다. 공적인 것과 국가적인 것은 자신의 견해와는 상관없이 외부로부터 주어지는 이물질적인 부당한 간섭과 요구, 또한 '우리와는 상관없는 일', 따라서 가능한한 회피되어야 하는 영역으로 간주된다. 공적인 것과 국가적인 것에 대하여 공개적 여론형성을 통하여 영향을 끼칠 수 없는 상황, 후견자인 국가가 생활상의 필요와 복지를 제대로 공급해 주지 않는 상황 등에 직면하여, 일반주민은 공적인 것과 국가적인 것에 대하여 비공식적이고 불법적인 경로, 즉 개인적 연줄, 뇌물, 규칙의 무시, 그리고 공공재산과 국가경제 운영에서, 가능한 한 개인적 불법적인 축재, 다시 말해 국가재산의 도둑질 또는 태업 등을 통해 대응한다. 이 때문에 주민은 국가정책 집행에 대한 적극적 의무감도, 국가재산 보호 등에 대한 공적인 책임감도 발전시키지 못한다.

일반주민은 공적인 것과 국가적인 것에 대하여 이중의 태도를 발전시킨다.<sup>80)</sup> 한편에서는 국가의 포괄적 강제력 행사와 자신을 관리하는 상급자의 포괄적 권력과 배분력에 직면하여 일반주민과 노동자는 당국가의 요구에 의견상 순응한다. 일반주민은 당국가, 그 대표자이자 자신에 대한 관리인인 당료가 요구하는 것에 대하여 순종하는 모습을 보여준다. 그러나 이러한 순응은 강제적이고 수동적 순응이다. 주민은 외관적으로는 정권의 공식적 가치, 규범, 목표(예를 들어 수령에 대한 충성, 규율잡힌 노동, 국가재산 애호) 등에 외관상으로는 충실하지만 실제적으로는 그에 어긋나는 관념

80) Piotr Sztompka, "Civilizational Incompetence: The Trap of Post-Communist Societies" *Zeitschrift für Soziologie*, Jg.22, Heft2, April 1993, p. 90.

과 태도를 발전시킨다. 즉 정권적 과업과 공식적 중심고리에 대하여 의견적으로는 의식적으로 순응태도를 보여준다. 그러한 경우야 가족 생활과 사적 영역에 정권의 권력이 침입해 오는 것을 방지할 수 있으며 자유시간과 편안한 생활을 누릴 수 있게 된다. 또한 국유재산, 그리고 공적인 노동과정에 대해서는 가능한한 단기적이고 사적 이익을 챙긴다는 관점에서 대한다. 결론적으로 일반주민의 당국가에 대한 태도는 계산된 도구적 태도로서 가능한한 책임과 창조적 활동을 기피하며 성취보다는 안정을 선호하고 매우 수동적이며 기회주의적이다.

또한 일반주민과 노동자는 자신과 국가와의 일방적 상-하 관계, 일방적 과도한 요구-집행의 관계를 교정하는 방법을 발전시킨다. 일반주민과 노동자는 자신이 상대하는 당료와의 인적 관계를 발전시키고 또는 뇌물을 주어 매수하여 당국가의 자신에 대한 일방적 조치를 개인적 차원에서 교정하고자 시도한다. 이러한 시도는 당료의 활동방식, 개인적 태도, 그리고 이익과 잘 부합한다. 당료의 활동에서는 이른바 '당적 이익'이 앞세워 지고, 목표달성을 위한 불법적이고 자의적 판단과 조치가 허용되기 때문에 그의 활동의 합리성과 합법성을 규제한 객관적 규칙과 법규범이 존재하지 않는다. 또한 그는 오직 자신을 임명한 상급자에게만 충성을 하고 책임을 진다. 그러나 종종 법적 책임으로부터는 면제되는 특수한 신분층으로서 나타난다. 또한 그는 일반 주민에 봉사하는 것보다는 자신이 차지하는 관직과 관리하는 공적조직을 이용하여 일반주민을 지배하고 또한 자신의 사적인 물질적 이익을 충족시키는 데 관심을 가지고 있다. 이러한 포괄적 자의적 권한과 면책특권,

그리고 공조적을 이용한 사적 이익 추구가 가능하다는 것 등 때문에 당료는 연줄과 뇌물을 통해 자신에 접근해 오면서 국가규제로부터의 면제 또는 특혜를 요청하는 일부 주민에게 그가 원하는 것을 베풀수 있는 능력과 권한을 가지고 있다.

## 2. 경제·사회적 측면

### 가. 노동에 대한 도덕적 관념의 붕괴

사회주의 경제체제에서 특별히 노동자의 노동에 대한 또한 국민 경제에 대한 관념과 태도를 결정짓는 주요 요소에는 세 가지가 있다.<sup>81)</sup> 그 첫째는, 국가는 유일한 고용자이고 주요한 분배자로서 완전고용을 보장하고 물자부족에 관계없이 가격을 안정시키고 생산성에 관계없이 평균주의적 임금정책을 편다. 둘째로, 개인의 노력과 능력은 그의 소득과 지위와 관계를 가지지 않는다. 유일한 고용자이자 주요한 분배자인 국가는 정치적 기준에 따라 위계적 사회구조를 만들어 내며 개인의 권력과 특권은 그가 이 관료적 질서의 어느 등급에 속해 있는가에 따라 달라진다. 즉 개인이 정치적으로 어떤 그룹으로 등급되어 있는가, 국가적 정치적으로 우선분야인 대규모 중공업 기업소에 종사하는가 아니면 소규모 지방산업 공장에 종사하는가에 따라 개인이 누릴 수 있는 물질적 특혜와 여타 특권이 달라진다. 셋째로, 사회주의 경제에서 노동자

81) Winiiecki, Op. cit., pp. 44-45.

들은 공식 원칙으로 표명되어 있는 노력의 성격과 실제로 평가받는 노력의 질이 다르다는 것을 관찰한다. 즉, 공언되어 있는 기준은 능력에 따라 최선의 노동을 한다는 것이지만 실제로 계획을 달성하는데 필요한 노동은 경제적 산출 또는 경영의 효율성을 늘리는 것하고는 거리가 멀며 심한 경우에는 거짓보고까지도 포함한다. 따라서 노동자의 노동에 관한 도덕적 태도가 붕괴하며 실제로 자신의 상급자에게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를 파악하고 그에 따라 행동한다. 노동자의 노동에 대한 도덕성을 붕괴시키는 요인은 또한 노동보수에 관한 공식기준 (노동의 양과 질에 따른 보수)과 실제 적용되는 기준 (지배인에 대한 충성에 따른 보수)의 괴리이다.

이러한 상황의 공통된 결과는 노동자의 노동에 대한 도덕적 관념과 태도의 붕괴이다. 특히 위의 첫번째 두번째 상황과 관련하여 전체주민의 무위도식화(툼펜화) 경향이 발생한다.<sup>82)</sup> 일반주민은 추가로 노동하지 않고서도 안정된 또는 그에 더하여 향상된 소득을 원한다. 당료층에 속하는 자는 기생적 소비를 극대화하고자 하며 일반 주민은 소비의 평균주의적 안정화를 원한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경쟁을 혐오하고 안정을 추구하며 혁신과 생산적 노동에 적대적이며 특히 평균주의, 재분배와 '사회적 정의'에 경도한다. 변화에 대한 저항, 혁신하고자 하는 의지의 결여가 노동인구의 일반

---

82) Victor Zaslavsky, "Contemporary Russian Society and its Soviet Legacy: The Problem of State-Dependent Workers," Bruno Grancelli ed., *Social Change and Modernization: Lessons from Eastern Europe* (Berlin: Walter de Gruyter, 1995), pp. 45-62.

적 특징이 된다. 이러한 상황에서 노동자는 자신이 국가에 제공하는 노동의 양과 질을 가능한한 줄이고자 한다. 노동규율과 생산성이 노동자의 주요 특징이 되는 것이 아니라 노동자는 가능한한 노동을 회피하며 또한 국가 영역에서의 노동에 대하여 혐오한다. 이는 작업중의 휴업 즉 태업으로서 나타난다. 노동자는 공식적 작업시간에는 가능한한 자신의 노력을 아끼며 그에 의해서 남는 노력을 공장 퇴근후에 사적인 영업활동을 위해서 투자하고자 하는 경향을 보인다. 또한 노동자들은 노력과 보수에 관해서도 자신의 태도를 적용시킨다. 공식적으로 선언되어 있는 보수의 기준과 실제로 적용되는 것 사이의 차이가 매우 큼을 발견하고 노동자들은 거짓 계획달성 보고 등을 통하여 획득되는 블로소득을 용인한다. 또한 기업소 지배인이 이러한 블로소득을 얻고자 하는 활동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동조하고 협력한다. 그 뿐만 아니라 노동자들은 한 걸음 더 나아가서 공장자재, 생산품 등의 소소한 도둑질을 통해서 자신의 기업의 재산을 사실상 사유화한다.

#### 나. 도구적 인간관계망의 만연과 공공도덕의 타락

국가가 거의 모든 것을 통제하며, 물자부족이 만연하고 시장의 기능이 매우 제한되어 있는 경제체제의 경우, 공적인 또는 사적인 재화와 권리를 취득하기 위해서는 불가피, 특혜의 교환 또는 개인적 연줄에의 의존, 소소한 부패 등을 거쳐야 한다. 이 때문에 이러한 거래를 성사시키고 연줄관계를 유지하기 위한 도구적 인간관계가 만연하게 된다. 국가통제, 국가소유, 국가의 간섭이 극도로

만연해있는 사회주의 경제에서 개인이 어떤 사소한 일조차도 성사시키고자 하는 경우 국가관료의 허가와 협력이 필수적으로 요구된다. 그런데 이 때 국가관료는 규칙을 적용함에 있어서 상당한 재량을 부릴 수 있다. 관료의 엄격한 업무한계를 넘어서는 협력적 태도 또는 그에 대한 거부를 결정짓는 요인에는 여러 가지가 있지만 특징적으로 인적 감정과 비공식 교환관계가 중요한 역할을 한다. 즉, 호소자에 대한 개인적 감정, 상급자와의 관계를 개선하려는 고려 등등이 있다. 노동자는 관료의 의사결정에 영향을 끼치기 위하여 그와 여러 차원의 인간적 충성관계를 발전시키던가, 또는 뇌물을 통하여 움직여야 한다.

이러한 도구적 인간관계는 당료-당료, 당료-일반 주민간의 관계에서만 만연하는 것은 아니다. 그것은 일반 주민들 사이에서도 만연한다.<sup>83)</sup> 사회주의 경제에서는 물자부족이 만연하며 국가의 상업적 분배망이 수요와 공급을 균형잡아 줄 수 없기 때문에 소비자는 재화의 획득을 스스로 조직해야 한다. 나아가서 이 경제에서 화폐는 재화와 용역의 일반적 교환수단으로서 기능하지 못하고 있다. 소지하고 있는 화폐가 충분하더라도 그것이 곧바로 재화의 구매와 연결되지 않는다. 다수 구매자가 소수 판매자에 대하여 경쟁하고 있기 때문에 단순히 높은 값을 제시한다고 해서 재화를 구매할 수 있는 것도 아니다. 결정적으로 중요한 것은 찾는 재화

83) Ilja Srubar, "War der reale Sozialismus modern? Versuch einer strukturellen Bestimmung", *Zeitschrift für Soziologie und Sozialpsychologie*, Jg.43, Heft3, 1991, pp. 415-432; Walder, Op. cit.; 서재진, 「또하나의 북한사회: 사회구조와 사회의식의 이중성 연구」 (서울: 나남출판, 1995), pp. 275-284.



가 존재하는 장소를 먼저 알아내야 하고 사회적, 정치적 또는 직업상의 이유로 찾는 재화를 소유하고 있는 인물과 연결이 되어야 한다. 단순히 충분한 화폐를 가지고 있다는 사실만으로는 재화를 구입할 수 없기 때문에 이러한 거래가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비공식적 사회관계, 다시 말해 친척관계, 친구 또는 사회적 친분관계가 불가결하다. 이러한 관계와 접촉망을 통해서 또하나의 재화와 용역의 분배망이 형성된다.

이러한 또하나의 재화와 용역의 분배망에 흘러 들어오는 재화와 용역의 원천은 국가영역의 재화와 용역이다. 노동자는 공식 직장에서는 느슨하게 일하여 힘을 저축하고 그 힘을 비공식 분배망에서의 사적 활동에 사용한다. 또한 이 분배망에서 필요한 자재와 도구는 다른 곳에서는 얻는 것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노동자는 공식 직장의 자재와 도구를 동원한다. 이 분배망에는 국영 기업소가 자재가 부족한 상황에 대비하기 위하여 또는 필요한 물자와 교환하기 위하여 비축해 놓은 물자, 또는 통계조작을 통하여 빼돌린 물자가 흘러 들어 온다. 또는 국가의 상업망을 통하여 주민에게 분배되어야 할 소비물자가 빼돌려져서 흘러 들어 온다. 이러한 대안적 재화와 용역의 분배망은 국가재산의 불법적 사유화이나 정권은 이에 대하여 심하게 제재를 가하지 않는다. 그 이유는 1) 이것이 국가의 공식 급양체계의 결함을 보완해주며, 2) 주민의 관심을 소비영역에 돌려 정치적 이익결집을 방해하기 때문이며, 3) 필요하다면 언제든지 제재를 가할 수 있어서 이러한 분배망의 존속은 정권이 주민에 압력을 가할 수 있는 수단이기 때문이다.<sup>84)</sup>

사회주의 경제에 생존하는 주민에게는 일상적 생활의 일부분이

되어 버린 이러한 분배망은 그에 참가하는 개인의 도덕성과 사회적 정체성의 형성에도 큰 영향을 미친다.<sup>85)</sup> 이러한 분배망에 참여하는 개인은 사회적으로 묵인되기는 하지만 항상 비도적인 일, 그리고 불법적 또는 반합법적 일에 연루되어야 한다. 이러한 사회적 맥락에서는 개인이 자신의 욕구를 충족시키는 데 있어서 그의 사회적 지위와 가능성은 개인적 실적에 의해서 결정되지 않는다. 그 지위와 가능성은 그 개인이 어떠한 사회적 그룹에 속해 있는가에 의해서 결정된다. 개인이 추구하는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활동이라는 뜻에서의 실적은 보통 분배망의 도움에 의해서만 달성되며 따라서 공식제도가 그러한 목표달성을 위해서 열어놓은 길을 통해서 다시 말해 합법적 절차를 통해서만 이루어 지지 않는다. 따라서 자신이 일하고 있는 직장과 그 공공성에 대한 충성 대신에 자신의 가족과 자신이 속해 있는 그룹에 대한 충성이 개인의 정체성의 일부가 된다. 또한 자신의 급양 그리고 자신의 분배망의 급양을 위해서는 공식 제도, 익명적 공중에 손해를 끼쳐도 무방하며, 또한 자신 스스로의 직업적 윤리를 저버려야 한다는 사실은 전혀 이상하지 않는 정상적인 것이 되어 버릴뿐 아니라 개인의 인격의 일부로서 인식된다. 이러한 경험의 세계에 입각하게 되면 사회적 불평등 또는 생활상 직위상의 차이는 상업적, 또는 직업상의 능력의 차이 때문에 초래된 것으로 간주되지 않는다. 그 차이는 정치적으로 특권화된 그룹에 끼었는가 안끼었는가의 차이, 그리고 /또는 불법적 분배망의 구성원인가 아닌가의 차이로 간주된다. 내

---

84) Srubar, Op.cit., p.423.

85) Ibid., pp. 423-427.

그룹에 속하지 않는 다른 사람의 성공과 높은 생활수준은 비도덕적 방법으로 성취된 것이 분명한 것으로 간주된다. 즉 그것은 능력 때문이 아니라 정치적 특권의 결과이거나 또는 능력 때문이라면 그것은 불법을 저지를 수 있는 능력 때문으로 간주된다.

## 제Ⅶ장 결 론

본 연구는 북한 경제체제와 관련시켜서 북한 각계각층 주민의 경제에 대한 관념과 행태에 대하여 알아 보았다. 이러한 연구에 기초하여 다음과 같은 결론을 내릴 수 있다.

첫째로, 북한경제는 '계획경제'가 아니라 관리경제이다는 것이다. 북한 공식문헌의 개념정의에 따르면 '계획경제'란 "유일적인 국가 계획에 따라 계획적으로, 균형적으로 발전하는 경제"<sup>86)</sup>이다. 그런데 제Ⅲ장에서 서술했듯이 다른 사회주의 국가에서와 마찬가지로 북한에서 '계획의 세부화' 원칙에 따라 작성되는 '인민경제발전'에 관한 '유일적 국가계획'은 애초부터 매우 불완전하며 따라서 허구적인 것이다. 따라서 '사회주의 사회의 모든 경제활동'이 그에 따라 진행되는 것은 애초부터 불가능하며 결과적으로 '인민경제'는 '계획적으로 균형적으로 발전'하지 않는다. 오히려 인민경제 발전의 특징적 현상은 만성적 불균형이며 경제관리는 그때 그때 가장 심각한 불균형을 바로 잡기 위한 장/단기적인 연쇄적 즉응조치로

---

86) 『경제사전1』, p. 324.

서 이루어 지고 있다. 따라서 '계획경제'의 실제 운영과 발전에서 '계획'은 그리 중요하게 다루어 지지 않으며 실제로 중요한 것은 그때 그때 중심고리를 잡고 해결하는 경제관리 행위이다.

둘째로, 북한경제는 정치적으로 매우 성공적으로 운영되었다는 것이다. 잘알려져 있다 시피 사회주의적 관리경제를 효율성의 측면에서 파악하면 매우 비효율적인 경제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경제체제와 발전방식이 유지되는 이유는 어디에 있는가? 그 이유는 이러한 경제가 정치적 차원에서 보면 매우 성공적인 경제이기 때문이다. 북한경제에서 거의 모든 주요한 자원의 소유자는 법적-형식적으로는 '전인민'이다. 그러나 실제적으로 영토내의 거의 모든 자산과 자원에 대한 관리권과 처분권은 당-국가의 상층부의 족벌적 과두세력에 집중되어 있다. 당-국가의 족벌적 과두집단은 상층부에 대한 충성과 복종이라는 기준에 따라 중-하급 단위의 관리자를 선발하여, 중-하급 단위의 재산과 자원의 관리를 맡기고 있다. 상부에 대한 충성과 복종의 댓가로 중-하급 관리자는 시장경제에서와는 다른 형태의 보상, 즉 비금전적인 보상을 받는다. 그 보상의 주요한 형태는 보다 높은 직책으로의 출세할 가능성, 자식들이 더 좋은 교육을 받게할 가능성, 또한 직급 위계에 따라 차등으로 주어 지는 국가의 생활필수품, 공공용역 등의 특별 배급 등이다. 모든 '경제적' 비효율에도 불구하고, 족벌과두그룹에의 권력집중과 유지, 체제 충성집단에 특별히 보상할 수 있는 가능성의 유지 등의 측면에서 보면 이러한 북한경제는 실패한 경제가 아니다. 북한경제는 스스로가 이데올로기적으로 내세우고 있는 목표, 또는 시장경제적 감각에서 경제의 목표이어야 한다고 상정

되는 것과는 다른 정치적 목적에 의해서 운영되었기 때문이다.

셋째로, 계획중앙은 영토내의 모든 자원을 통일적으로 장악하지 못해 왔다는 것이다. 시장경제에서 각 경제단위는 독자적 의사형성 및 책임단위이다. 그러나 사회주의 북한경제에서 모든 경제단위는 중앙의 독려와 감독을 받으면서 중앙이 명령한 생산작업과 그와 관련된 업무를 집행해야 한다. 중앙이 하부를 독려하고 감독하기 위한 체계가 북한 경제관리체계의 기본성격을 보여준다. 이러한 체계는 전국가적 단일 관료위계체제로 되어 있다. 이 단일 관료체계의 이상적 운영상태는 계획이 포괄하는 모든 관계와 교환이 '치차처럼 딱딱 맞아 떨어지는 것'이므로 계획경제는 마치 거대한 기계처럼 움직여야 한다. 이러한 상황에서는 중앙의 하부 장악이 완벽해져서 모든 것이 중앙이 의도한 대로 움직이게 된다. 그 경우에는 중-하부가 상부에 대하여 허위보고를 통하여 속일 수도 없고 또한 안이함이나 국가재산의 개인적 횡령과 착복의 기회 등의 농간을 부릴 공간도 없어진다.

그러나 현실에 있어서 북한 경제에서 계획은 매우 불완전하여 그 현실적용에서는 거의 의미를 상실한다. 따라서 북한경제에서 모든 활동단위가 직면하는 것은 톱니바퀴적 기계적 확실성이 아니라 만연하는 불확실성이다. 그러나 이러한 불확실한 상황에서도 어쨌든 각 단위에 주어진 계획목표는 달성되어야 한다. 그런데 계획달성을 위해서는 불확실성을 극복할 수 있는 완충장치가 필요해진다. 그 완충장치로 작용하는 것이 계획달성을 위하여 자행되는 여러 불법적 조치들이다. 불법적 조치들이 만연하지만 그것들은 계획달성을 위하여서는 불가피하기 때문에 공공연하게 묵인되

며 그리하여 ‘계획경제’의 또하나의 (비공식적이지만) 불가피한 제도와 관행으로 정착된다.

그런데 이러한 불법적 조치와 관행의 망은 상부의 하부 통제력의 불완전성을 의미하며, 따라서 계획중앙이 영토내의 모든 투입된 그리고 산출된 자원을 장악하지 못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불법적 조치와 관행의 망을 통해 영토 내의 상당한 자원이 계획중앙의 직접적 장악을 벗어나서 중-하부의 자의대로 처분되고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자원유통은 계획경제의 내재적 결함 때문에 발생하며 일정하게는 그 결함을 보완하고 있지만, 이러한 비-계획적 자원유통 때문에 계획경제의 결함은 증폭된다. 예를 들어 그렇지 않아도 부족한 물자가 전체경제적으로 효율적으로 활용되지 못하고 여기 저기에 축장되어 있어 물자부족을 강화시킨다. 여기 저기에 완충용으로 은닉되어 있으며 직접 관리자의 필요에 따라 비공식 유통되는 물자 때문에 인민경제계획은 더욱 허구로 변화한다. 또한 이러한 물자에 대한 관리책임이 모호하기 때문에 저장과 관리에서 많은 것이 낭비되며, 또한 개인적 착복과 횡령의 대상이 된다.

셋째로, 북한경제는 ‘전인민적’ 약탈의 대상이여 왔다는 것이다. 북한에서는 영토내의 모든 자산과 자원에 대한 주인이 존재하지 않는다. 법적-형식적으로 북한내의 모든 자산과 자원에 대한 주인은 ‘전인민’이다. 그러나 이러한 주인으로서의 추상적 ‘전인민’은 존재하지 않는다. 그 대신에 ‘전인민’들 사이에 ‘전인민적 소유’에 대한 관리권이 불균등하게 분산되어 있다. 모든 관리자(‘전인민’)는 관리대상(‘전인민적 소유’)에 대하여 약탈적 태도를 갖는다.

북한에서 자산과 자원에 대한 최고관리책임자는 당-국가의 족별적 과두집단(계획중앙)이다. 이 집단은 국민경제운영에서 무엇보다도 자신이 처분할 수 있는 자산과 자원의 양이 증대하는 데 관심을 가지고 있다. 설령 국민경제적 잉여가 줄어들더라도 중앙에 집중하는 자원의 양은 줄지 말아야 한다. 사회주의 경제에서는 생산은 분산되어 일어나지만 그로부터 결과하는 잉여는 중앙에 집중한다. 과두집단은 그 집중된 잉여를 자신의 필요에 따라 생산적으로 또한 소비적으로 재분배할 수 있다. 이러한 집중된 국가적 경제 잉여의 재분배 권한이 과두집단의 권력의 토대이자 내용이다. 따라서 족별적 과두집단은 전체경제적 잉여가 증대함으로써 중앙에 집중되는 잉여의 양이 증대하는 데 관심을 가지고 있다. 그러나 전체경제 잉여가 감소하는 경우에도, 중앙에 집중되는 경제잉여의 양을 증대시키는 데 관심을 가지고 있다. 또한 국민경제적 전체잉여를 증대시킬 수는 있지만 중앙에 집중하는 잉여를 감소시킬 수도 있는 여러 개혁에 반대한다. 중앙에 집중하는 경제 잉여의 양이 증대할 수록, 그것은 곧바로 족별적 과두집단의 권력과 위신의 증대, 하급자에 대한 지렛대의 강화를 의미하기 때문이다.

상층 과두집단은 실제 생산과 배분에 대한 관리를 중-하급 단위에 위임할 수 밖에 없다. 상층 과두집단은 전체 경제 잉여의 증대를 위하여, 그리고 무엇보다도 중앙에 집중되는 경제잉여의 증대를 위하여 중-하급 단위를 관리감독하기 위한 정교한 체계를 만들어 놓는다. 그러나 관리 감독 체계의 운영에는 상당한 비용이 들며 또한 상층이 중-하급 단위를 완전히 감시한다는 것은 불가

능하다. 따라서 상층의 중하급 단위에 대한 관리감독체제는 상당히 불완전할 수 밖에 없으며 이 때문에 중-하부 관리자는 독자적 이익을 추구할 수 있다. 상층의 관심은 잉여 생산의 증대, 그리고 생산된 경제 잉여의 보다 완전한 집중화에 있다. 그러나 중-하급 관리자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관심은 직책을 유지하는 것이다. 왜냐하면 그가 누릴 수 있는 권력과 특권은 오로지 그가 그 직책을 유지할 수 있는가 없는가와만 관련되어 있기 때문이다. 그는 직책과 연계되어 있는 공식·비공식 특권을 극대화하고자 한다. 중-하급 관리자의 이러한 이익은 계획중앙의 이익과 충돌한다. 중간관리자는 잉여 생산의 실질적 증대 보다는 허위보고 등을 통해 계획된 (잉여)생산의 달성, 그리고 업무수행의 편안함을 추구한다. 나아가 상층의 감시체계의 불완전성을 활용하여 관리행위과정에서 개인적 횡령과 착복기회의 극대화를 위해서 노력한다.

일반 주민도 '전인민적 소유'의 약탈에 관심을 가진다. 이데올로기적 요구와는 다르게도, 일반주민들 사이에서 '전인민적 소유'에 대한 주인적 책임의식은 발전할 수 없었다. 일반주민은 오랜 경험을 통하여 독점 고용자인 국가가 자신의 노동에 대하여 제대로 보상해주지 않는다는 것, 또한 국가의 보상체계의 기준은 실적이 아니라 충성과 복종이라는 정치적 기준이라는 것, 또한 상층에서 부정과 부패가 만연하고 있다는 것, 국가와 경제의 여러 상황에 대하여 공개적으로 문제제기를 할 수 없다는 것 등을 인식하게 된다. 이러한 상황에서 일반 노동자는 나라에 만연하는 불공정한 상황 등에 대하여 공개적으로 목소리를 내어 개선하는 노력을 체념하게 되며 자신의 노동에 대한 댓가를 음성적으로 확보하고자



노력하게 된다. 노동자는 공식고용관계에서의 노동과정에서 자신의 능력을 완전히 발휘하지 않으며 기업소의 설비와 자재를 빼들려 사적 용도로 사용한다.

다섯번째로, 북한경제의 주역은 ‘체제기생적-사적 마피아 집단’이 들어왔다는 것이다. 북한경제에는 물론 공식 제도, 조직구조, 운영원칙이 존재한다. 그러나 공식제도와 결부되어 있으면서 한편에서 공식제도의 결함을 보완할 뿐아니라 다른 편에서 공식제도를 형해화시키는 강력한 비공식 제도, 구조, 원칙이 존재한다. ‘계획’, 경제관리체계의 불완전성, 경제운영에서의 불확실성, 또한 당료제가 내포하고 있는 상-하간의 인격적 종속 관계 때문에 비공식적이며 불법적인 조치와 관행이 만연하게 되며 그와 결부되어 체제 내부에 비공식적 사적 연줄그룹이 광범위하게 유포된다. 비공식적 사적 연줄그룹은 북한체제의 제도적 특성 그 자체 때문에 발생하고 있으며 그 제도적 조직구조와 원칙을 토대로하여 광범하게 형성된다. 즉 거시적 차원의 공식제도를 기반으로하며 그에 기생하는 미시적 권력그룹(‘체제기생적 사적 마피아’)을 형성한다.

이 미시적 권력그룹은 공식제도인 ‘계획’과 경제관리체계 자체가 내포하고, 또한 끊임없이 재생산하고 있는 불확실성을 비공식적으로 완충하고 극복하고자 하는 과정에서 탄생한다. 외부환경이 매우 불확실한 가운데서도 지상목표인 계획달성을 위해서는 공식 의사통로 이외에도 비공식적이며 사적 관계에 기초한 비공식인 정보수집과 의사교환이 끊임없이 필요하게 되며, 또한 해당부문에서 당면한 애로 타개를 위해서 비공식 경로와 불법적 방법을 통한 자원 확보 투쟁이 불가피하다. 또한 계획증상의 통제에서 벗어

난 ‘전인민적 소유’를 불법적으로 처분하여 사적으로 횡령 및 착복하고 그것을 적절히 배분하는 데서도 상호 묵인과 협조가 필요하게 된다. 이러한 가운데서 여러 종류의 불법적 조치와 관행이 정착하고 불법적 결탁과 공모, 상호부조가 정착한다. 이러한 관계와 접촉의 반복적 재생산은 곧바로 결부된 개인들의 미시적 권력그룹 형성으로 결과한다. 이러한 미시적 권력 그룹이 경제의 모든 위계, 부문, 지역에 번성하고 비공식적이고 은밀하나 실질적 의사 형성 집단으로서 기능한다.

물론 이러한 은밀한 사적 권력 그룹의 형성이 곧바로 중앙의 권력과 통제력의 약화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계획달성을 위한 불법적 조치들의 망으로서 탄생하는 비공식적 제도와 관행은 계획중앙에 이중적 의미를 갖는다. 우선 이러한 불법적 조치와 관행의 망은 계획중앙의 하부에 대한 통제를 강화시킨다. 첫째로 불법적(또는 초법적) 조치와 관행의 망을 통해서만 계획달성 또는 상부가 하부에 내리는 여러 명령의 집행이 가능하다. 따라서 중앙권력은 자신의 요구에 보다더 순응적인 하부 사적 그룹의 형성에 대하여 관심을 가지고 있으며 이를 의도적으로 육성한다. 둘째로, 계획중앙은 물론 하부가 계획을 미달성한 경우에는 하부를 징벌할 수 있다. 그런데 그 뿐만아니라 계획을 달성한 경우에도 그 불법적 조치와 관행을 걸어서 하부를 징벌할 수 있다. 즉 하부는 계획을 달성한 경우에도 계획을 미달성한 경우에도 상부의 징벌의 대상이 될 수 있으며, 따라서 하부는 어떠한 경우에도 상부의 자의적 징벌권의 망에 걸려 들어 있게 되며 그리하여 상부의 하부에 대한 장악력은 존속된다.

그러나 다른 편에서 은밀한 사적 권력그룹의 형성은 물적 자원과 정치적 권력의 배분을 둘러싼 갈등과 투쟁을 강화시키며 중앙의 하부 통제력을 약화시킨다. 은밀한 사적 권력 그룹이 형성되는 기초는 정권기관의 공식적 수평적 업무분담의 분야와 위계, 그리고 지역을 중심으로 하고 각각의 경우 해당 부문의 '향도'기관인 당기관의 권력위계를 따라서 형성된다. 북한에서 가장 지배적인 사적 권력그룹(즉 김일성과 김정일의 족벌 과두그룹)은 누리고 있는 직책 때문에 공식적으로 처분할 수 있는 국가적 자원과 직책의 배분의 조작을 통하여 하부의 다수의 은밀한 사적 권력 그룹들을 분열시켜 지배할 수 있다. 그러나 각 그룹의 가장 주요한 관심사는 자신의 그룹이 관장하게 되는 자원의 양을 증대하고 또한 여러 공식적 직책을 다수 확보하는 것이다. 자원과 직책의 양의 증대는 각 그룹이 누릴 수 있게 되는 공식·비공식 권력의 기초가 된다. 따라서 하위의 사적 권력 그룹은 계획중앙으로 집중하는 자원의 양을 가능한한 줄여서 해당 분야에 남게되는 자원의 양을 가능한한 증대시키고자 도모한다. 이러한 과정에서 상당한 양의 '전인민적 소유'는 계획중앙의 통제로부터 벗어나게 된다.

계획중앙에 집중되는 자원의 양이 줄어들게 되고 여러 가지 이유로 계획중앙이 직접 관장해야 하는 직책의 숫자가 줄어들게 될 때, 각 미시적 사적 그룹 간에 배분을 위한 투쟁은 격화될 수 있다. 그러나 그것이 반드시 공공연한 공개적 충돌의 형태를 띠는 것은 아니다. 하부의 여러 미시적 권력그룹의 권력과 특권은 기본적으로 현재의 거시적 권력구조와 특권체계가 유지되는 한에서만 가능하기 때문이다. 시장기구의 도입이 금지되어 경제에 대한 관

료적 관리체계가 유지되고 또한 비판적 여론이 금지되어 있어야 국가재산의 관리권이 관리자에게 남아 있게 되면 또한 국가재산 처분을 둘러싼 부패와 횡령 등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들은 한편에서는 현존하는 강력한 독재국가의 유지에 관심을 가지고 있으며 다른 편에서는 중앙의 하부 통제의 완화에 관심을 가지고 있다. 그러한 완화는 하부 단위가 관장하고 처분할 수 있는 자원의 양의 증대를 의미한다. 이러한 완화는 공식적인 분권화를 통해서 이루어 질 수도 있으나 각 하부단위의 사실상의 자립화 경향, 그리고/또는 해당 부문이 사실상 해당 관리엘리트의 사영 기관화를 통해서도 이루어 질 수 있을 것이다.

마지막으로 이러한 상황을 종합하여 다음과 같이 현황을 말할 수 있다. 북한 사회주의 체제는 그 태생으로부터 공식구조와 비공식구조의 혼합물로서만 존재했다. 물론 그 두 가지 사이의 관계가 항상 동일했던 것은 아니었다고 할 수 있다. 공식체제는 그 결합에도 불구하고 비공식체제에 압도당하지 않고 그 기본틀이 유지되어 왔다. 공식구조가 결합에도 불구하고 재생산될 수 있었던 이유가 존재했지만 가장 중요했던 이유는 계획중앙이 하부 단위를 장악하는데 최소한으로 필요한 만큼의 경제잉여가 중앙에 집중될 수 있었기 때문이었다. 그 비용은 다음과 같은 구성요소로 이루어 졌다.

1. 전인민경제적 생산과 투자 활동이 최소한으로 일어나는 데 필요한 비용
2. 전인민의 노동력 재생산에 드는 비용
3. 체제 충성자에 대한 특권적 보상체제와 정권위신 등을 유지하는 데 드는 비용
4. 하부 단위의 생산과 분배를 독려 감시하는 데 들어가는 비용
5. 대내적 치안 유지비용
6. 군사력 유지 비용
7. 국가의 대외적 활동 비용

그런데 잘 알려져 있듯이 현재 북한의 계획중앙, 즉 족벌 과두 그룹은 북한의 공식체제를 최소한으로 유지하는 데 필요한 경제 자원을 자신의 수중에 집중할 수 없게 되었다. 그 가장 기본적인 이유는 북한 사회주의 경제의 내재적 문제때문에 발생했던 장기간의 북한 경제의 침체이었다. 이러한 상황을 더욱 악화시켰던 것은 다른 사회주의 국가의 붕괴의 여파로 발생한 대외 경제적 충격 때문이었다.

장기간에 걸친 북한 경제의 침체는 계획중앙이 처분할 수 있는 경제잉여의 양에도 영향을 끼쳤다. 이에 따라 계획중앙이 배분할 수 있는 자원의 양이 줄어들고 그에 따라 계획 중앙의 하부에 대한 장악과 관리 능력도 줄어들었다. 이에 따라 북한의 기존의 사회주의 경제에 이미 존재하던 원심력적이고 비공식적 경향이 증대해갔다. 계획중앙은 더이상 하부 경제단위가 생산과 투자 그

리고 분배를 위해서 최소로 필요로 하는 자원을 중앙으로부터 공급할 수 없게 되었다. 그에 따라 기존에 이미 존재하던 경향이었던 하부 경제 단위의 자립화 경향, 계획외적 비공식적 활동의 증대, 다시 말해 계획외적 자재확보 경쟁, 생산된 경제잉여의 상부에서의 인도 거부 및 자의적 처분 등의 경향이 증대했다. 또한 국가가 일반 주민에게는 최소한의 식료품 마저도 보장하지 못하게 됨으로써 일반주민에 대한 통제, 또한 역으로 일반주민의 국가에 대한 의존도 약화되고 있다.

이러한 불법적 조치가 한층 강화되어 갈 수록 기존에 존재하던 미시적 사적 권력그룹의 중요성은 증대한다. 중앙의 자원 배분 능력이 약화되면서 하부 단위의 중앙에의 종속과 충성도는 약화되며 그와 동시에 미시적 사적 그룹의 상부에서의 의존도도 약화된다. 특히 권력중앙이 미시적 사적 그룹의 주요 구성원인 당정의 간부에 대하여 더이상 공식적 경로를 통한 특권을 유지해주는 것이 점점더 어려워지게 되었다. 이러한 상황에서 계획중앙의 하부 단위에 대한 감독 능력이 현저히 약화됨으로써 하부 단위의 국가재산 관리자들의 관직을 이용하여 좋게는 기관과 지방의 이익, 나쁘게는 개인적 사적 이득을 도모하는 행위에 대한 통제력도 급격히 약화되었다. 이를 배경으로 하여 당정 간부층은 과거에 구축되었던 미시적 사적 연줄과 권력의 망을 이용하여 생계의 유지와 축재를 위하여 여러 불법적 거래와 유통에 보다 적극적으로 개입하고 있다. 일반주민은 자신의 노동력의 불법적 사용, 그리고/또는 국가 재산의 유용과 도둑질을 통하여 자구책을 마련해야 하며 또한 스스로 불법적 거래와 유통에 조직하고 참여하고 있다.<sup>87)</sup>

계획중앙이 직접적으로 관장하지 못하는 불법적 경제활동의 영역이 늘어나면서 이에 거의 전문적으로 종사하는 사람의 숫자도 늘어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행위와 행위자의 증대가 곧바로 시장경제적 주체의 발생, 그리고 관념과 행태의 발전으로 이어지는 않는다.<sup>88)</sup> 그 이유는 다음과 같다. 이러한 거래는 화폐가치가 불완전한 가운데서 이루어 지기 때문에 주로 물물교환의 성격을 띤다. 또한 판매되는 물자가 부족물자이다는 것 그리고 불법적 유통과정에서 위험이 많다는 것 때문에 판매자는 단기적이고 투기적 이익을 추구한다. 그리고 판매자는 자신의 판단에 따라 언제든지 거래로부터 퇴장한다. 따라서 거래 자체가 비연속적 일회성의 성격을 갖는다. 또한 거래는 판매자와 구매자간이 인간관계에 의하여 크게 영향을 받는다. 즉 판매자는 구매자가 ‘평소에 잘알던 사람’인가 아니면 ‘우연히 한번 지나칠 사람’인가를 구별하여 차등적으로 가격을 매긴다. 또한 거래를 통해 이익금이 남더라도 생산적으로 재투자될 기회가 거의 없기 때문에 또다시 투기와 유통,

---

87) 사회주의 체제의 시기에 또한 그 붕괴 이후의 시기에도, 이러한 관계가 더욱 발전하면, 당정간부의 관계망을 중심으로하여 범죄조직이 결탁하는 ‘마피아’가 발생한다. 러시아 및 동유럽에서의 마피아 발생에 관한 서술 참조. Bernd Knabe, "Mafia und Politik in Rußland" Bundesinstitut für ostwissenschaftliche und internationale Studien, *Zwischen Krise und Konsolidierung, Jahrbuch 1994-95* (München: Carl Hanser Verlag, 1996), pp. 52-64; Maria Los, "From underground to legitimacy: the normative dilemmas of post-communist marketization" Bruno Dallago, Gianmaria Ajani and Bruno Grancelli, *Privatization and Entrepreneurship in Post-Socialist Countries: Economy, Law and Society* (New York: St. Martin's Press, 1992), pp. 119-124.

88) Kornai, Op. cit., pp. 454-455.

그리고 개인적 소비를 위하여 사용된다.

그런데 모든 활동이 관료적 정치적 통제를 받고 있고, 불법적 거래의 과정에서 나타나는 여러 범죄적 활동에 대한 보호가 필요하며, 아직도 상당한 부분의 경제자원을 국가가 처분하고 있기 때문에 생계와 축재를 위한 불법적 경제활동에서 당정간부의 개입과 협력은 결정적 의미를 지닌다. 당정간부와 불법적 경제활동 간의 관계는 다음과 같은 3가지이다.<sup>89)</sup> 그 첫째는 당정의 고위 간부와 거대 지하경제인의 결합이다. 상당한 규모의 재화를 유통하고 분배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질 수 있기 까지에는 당정 고위간부의 협력과 묵인이 불가결하다. 따라서 거대 지하경제인은 당정고위 간부 출신이거나 그 대리인일 가능성이 높다. 역으로 그러한 지하경제활동을 통하여 얻어지는 상당한 비율의 이익이 당정고위간부에게 돌아간다. 이 아래 두번째 단계에서는 소규모의 사적 거래인, 전문 지하경제 종사자 등을 포함한다. 이들의 활동 역시 중간급 당정 간부의 묵인과 협력없이 진행될 수 없기 때문에 그 이익금의 일부가 후자에게 뇌물로 전달된다. 마지막으로 이차경제에 참여하는 대부분의 일반주민과 당정간부와의 관계이다. 대부분의 일반주민은 불법적 또는 반합법적 이차경제활동을 통하여 소소한 소득을 올려서 가계에 보태고 있다. 예를 들어 불법자재를 사용한 소규모 수공업적 생산, 공장에서의 소소한 도둑질, 상점점원의 물

---

89) Maria Los, "Introduction", Maria Los (ed.), *The Second Economy in Marxist States* (New York: St.Martin's Press, 1990), pp. 7-9; Louise I. Shelley, "The Second Economy in the Soviet Union," Los (ed.), *Op. cit.*, p. 23



건 빼돌리기 등이다. 이러한 활동은 당국가의 정책에 따라, 보다 정확히 말하면 담당 당정 간부의 마음먹기에 따라 얼마 든지 국민의 대상도 또는 박해의 대상도 될 수 있다. 따라서 이러한 활동에 종사하는 일반주민은 뇌물을 통하여 그러한 박해를 피해보고자 하지만, 종종 국가와 간부의 자의적 법집행의 피해자가 된다.

# 북한주민의 정신문화체계연구: 종교관을 중심으로

---

임 순 희\*

- 제 I 장 서론
- 제 II 장 북한의 종교현황
- 제 III 장 북한주민의 종교관
- 제 IV 장 결론

---

\* 민족통일연구원 북한연구실, 정치학 박사

빈 면

## 제 I 장 서 론

한반도 통일은 당위성을 띤 우리민족의 절대과제로서, 언젠가는 필연적으로 그 때가 도래하리라는 기대감 속에 통일에로의 접근이 다각적으로 모색되고 있다. 그러나 어느 날 통일이 되어 남과 북이 만난다고 할 때, 남과 북이 상호불신 내지 적대감을 해소하지 못하고 만난다면, 그 통일은 기쁨보다는 고통만을 안겨다 줄 수도 있을 것이다. 오랜 세월 동안 적대적인 이념과 체제 속에서 상호이질화된 문화를 지녀온 남과 북이 진정한 화합, 즉 내면적인 통일을 이루려면 서로 간에 적지않은 상처를 내기도 하고, 치부를 드러내기도 해야하며, 서로 간에 이해와 신뢰를 쌓기에는 적지않은 비용과 시간이 소요될 것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통일의 과정에서 반드시 선행되어야 할 것들 중의 하나가 남과 북이 서로간의 사랑과 믿음을 회복하는 것이라 하겠으며, 이를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남과 북의 문화적인 이질화를 극복하고 동질성을 회복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하겠다.

### 1. 연구목적

남과 북의 이질화를 극복하고 동질성을 회복하기 위해서는 북한의 사회·문화에 대한 심층적인 연구가 필수적임은 주지의 사실이다. 그러나 북한연구에 있어 문화적인 접근은 연구결과의 신뢰도와 타당성에 대한 회의로 인하여 연구성과가 많지 않은 편이다. 특히 북한주민의 가치관에 대한 연구는 북한연구의 타분야에 비해

극히 부진한 편이며, 본 논문의 주제인 북한주민의 종교적 가치관에 대한 연구결과는 거의 찾아볼 수가 없다. 이는 북한연구에 있어 일반적인 한계로 지적되는 자료접근 내지 자료입수의 어려움 뿐만 아니라, 가치관 분석에 있어 가장 보편화된 기법인 설문조사를 통한 가치관 측정방법, 즉 서베이방법(survey methods)과 같은 직접적이고 경험적인 방법을 활용할 수 없다는 데에서 비롯된 것이라 하겠다. 그러나 특히 북한주민의 종교적 가치관에 대한 연구는 이상과 같은 이유에서 뿐만 아니라, 북한에는 진정한 종교, 종교인, 혹은 종교활동도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북한연구에 있어 종교문화적인 접근은 가능할 수 없다는 지적들도 있다.

남북한의 문화적인 이질화가 가장 극명하게 나타나고 있는 것은 종교이다. 이는 남북한의 종교실태와 종교활동을 비교하는 데에서 잘 드러나고 있으며, 근본적으로는 실질적인 종교의 자유 보장 여부에서부터 뚜렷한 차이를 나타내고 있다. 종교에 귀의한 귀순자들이 지적하는 바도, 남북한의 이질감이 가장 크게 나타나는 분야가 종교라고 한다.<sup>1)</sup>

이상과 같은 사실은 북한연구에 있어서의 종교 내지 종교문화적인 접근의 필요성을 시사하는 것이라 하겠으며, 연구방법론상의 근본적인 한계에도 불구하고, 북한의 종교와 북한주민의 종교관에 대한 연구는 다음과 같은 근거에서 그 중요성과 절실성을 갖는다고 하겠다.

첫째, 북한종교의 진위여부를 떠나서, 종교를 인간이 그의 삶의 궁극적 의미를 추구하는 구체적인 삶의 모습으로 이해할 때, 북한

1) 류성민, 「북한주민의 종교생활」 (서울: 공보처, 1994), p. 43.

의 종교 및 북한주민의 종교관을 통하여 우리는 북한의 정신문화가 어느 방향으로 변화하고 있으며, 우리의 유구한 문화전통과 얼마나 멀어져가고 있는가를 정확하게 가늠할 수 있다는 것이다.<sup>2)</sup>

둘째, 북한의 공식적인 종교관과 반종교정책에도 불구하고 북한주민의 종교성은 말살되지 않았다는 것이다. 종교는 인간생명의 본원적인 표현이며,<sup>3)</sup> 인간사회의 보편적 현상일 뿐만 아니라 유한자인 인간의 종교성 내지 신앙심은 인간본성의 일부라고 할 때, 북한주민의 종교성이 강압적인 정책에 의해 인위적으로 말살되었으리라고는 볼 수 없다는 것이다. 북한주민들에게 있어 종교성이 말살되지 않았음은 다음과 같은 사실로도 입증될 수 있다. 먼저, 북한주민들 사이에 종교적인 의식 내지 종교적인 관습이 남아있다고 하는 귀순자들의 증언이다.<sup>4)</sup> 그리고 다른 하나는 북한 김일성의 신격화와 신권정치체제 확립은 일면, 북한주민의 종교성을 적극 활용함으로써 가능했다고 하는 것이다.

셋째, 북한주민들 사이에는 북한당국이 통제하는 관제종교에 속한 종교인 뿐만 아니라, 박해에도 불구하고 참신앙을 지니고 사는 종교인이 없지 않다는 것이다.<sup>5)</sup>

넷째, 북한당국의 종교관 및 종교정책 변화와 그에 따른 종교단

2) 고대우, 「북한의 종교정책」 (서울: 민족문화사, 1989), 서문 참조.

3) 정대혁, “북한의 불교,” 「통일정책」 제6권 제2호, 1980, p. 43.

4) 고대우, 앞의 책, pp. 190-191; 김학준 외, 「남북의 생활상」 (서울: 박영사, 1986), pp. 199-200.

5) 고대우, 위의 책, pp. 115-121; 박완신, 「북한종교와 선교통일론」 (서울: 지구문화사, 1994), pp. 166-173; 「중앙일보」, 1996. 4. 8; 1983년 월남 귀순자 100명을 대상으로 북한 거주 당시 이들의 신앙관에 대해 조사한 결과에 의하면 10%내외가 신(하느님), 천국, 지옥, 영혼, 귀신, 부활의 존재를 믿고 있었다고 한다. 김학준 외, 위의 책, pp. 199-200.

체 및 종교인의 활동이다. 북한의 종교단체와 그에 속한 종교인들이 비록 관제 내지 어용의 성격을 드러내고는 있으나, 공개적인 종교의식과 교리로 인하여 북한주민들 사이에 의식상의 변화가 야기될 수도 있음을 상정할 때, 북한의 종교와 북한주민의 종교관을 주목하지 않을 수 없다는 것이다.

이상과 같은 관점에서 본 연구는 북한주민의 종교관을 분석하고 그 연구결과를 토대로 하여, 종교차원에서의 남북한 상호이질화의 극복 및 동질성 회복의 방법을 모색해 보고자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2. 연구방법

가치관의 분석에서 사용되는 가장 보편화된 기법은 설문조사를 통한 서베이방법이다. 그러나 극도의 폐쇄체제인 북한연구에 있어서 서베이방법이나 심층대담 등의 직접적이고 경험적인 방법은 활용이 불가능하므로, 간접적인 기법을 사용할 수 밖에 없다. 이러한 간접기법들 중에 하나가 내용분석이며, 이는 자료입수에 문제가 있거나 연구자의 자료가 문헌에 국한되어 있을 경우에 쓸 수 있는 적절한 방법이다.

북한주민의 종교관 분석도 문헌중심의 내용분석이다. 이는 주로 북한소설을 일차자료로 하며, 일차자료의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해 귀순자의 증언 및 방북자의 수기 등을 활용하고, 이와 관련된 기존의 연구결과들을 참고할 것이다. 북한주민의 종교관 분석을 위해 선행될 북한 종교에 대한 개관은, 북한의 공식 보도자료와 주

요 간행물 등을 중심으로 파악 정리하고, 국내의 관련 문헌을 참고로 하여 실태를 분석한다.

주지하듯이 연구방법의 과학성을 무색하게 하는 북한체제의 폐쇄성으로 인해 북한주민의 종교관 분석은 문헌중심의 내용분석이라는 활용가능한 차선책을 선택할 수 밖에 없다. 또한 북한원전을 일차자료로 하는 가치관분석은 연구결과의 신뢰성과 타당성에 있어 회의적일 수 밖에 없다. 북한의 공식적인 출판물에 나타나는 북한의 종교 내지 종교관은 부정일변도의 내용일 뿐만 아니라, 특히 북한 노동당 문예정책의 산물인 북한의 문학작품은 김일성·김정일 및 체제의 홍보물에 불과하므로, 북한주민의 가치관 분석을 위한 자료로서의 가치가 없다고 보기 때문이다. 그러나 북한소설은 다음과 같은 점에서 가치관 분석을 위한 일차자료로서의 가치가 있으며, 본 연구자는 이를 중시하여 북한소설을 일차자료로 활용하고자 한다.

첫째, 북한소설은 북한주민들의 현실생활과 그들의 내면세계를 비교적 자세하게 묘사하고 있다는 점이다. 그들이 주장하는 바, 소설의 묘사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심리묘사, 세부묘사라고 하는데,<sup>6)</sup> 북한소설에 등장하는 인물들의 심리에 관한 세부묘사는 심층적인 가치관 분석에 유용하다고 보는 것이다. 북한소설 분석을 통해 북한주민의 의식구조를 밝혀 논한 이온죽교수에 의하면, 소설과 같은 자료는 동시에 이중적 역할을 할 수 있는 바, 하나는 북한당국이 표방하는 공식적 가치지향을 그대로 읽을 수 있는 자료

6) 오승련, “친애하는 지도자 김정일동지께서 《주체문화론》에서 밝히신 주체의 문학형태 이론에 대하여,” 「조선문학」 (1993. 9), p. 32.



이고, 또 주민의 일상적인 삶과 생각을 있는 그대로 표현, 묘사하는 측면이 있다는 뜻에서 비교적 사실적인 자료이다.<sup>7)</sup>

둘째, 북한의 소설은 그 소재와 배경 및 상황이나 줄거리가 서로 다름에도 불구하고 거의 일률적으로 공유하고 있는 특징이, 일정한 '메시지'를 전달하고 있다는 사실이며, 이러한 사실로 인하여 특히 사회적 가치지향을 파악하고자 할 때, 북한의 소설은 특수한 유용성이 있다는 것이다.<sup>8)</sup>

북한소설은 가치관 분석의 자료로서 근본적인 한계를 지니고는 있으나, 위에서 밝힌 점들에 근거하여 분석자료로서의 유용성도 적지 않다. 북한사회에 관한 경험적 분석을 통한 실증자료가 입수 불가능한 현실에서 북한소설은 연구자의 의지에 따라 유용한 자료로 활용될 수 있는 것이다. 따라서 본 연구자는 가능한 한 많은 양의 자료를 수집하고, 그에 대한 객관적 분석을 하도록 노력하며, 체계적인 연구가 될 수 있도록 논문 구성요소들의 유기적인 통일성을 기하여, 연구결과의 신뢰도와 타당성을 높이고자 한다.

북한주민의 종교관 연구 전개과정은 다음과 같다.

제2장 북한의 종교현황에서는 북한주민의 가치관 분석에 앞서, 북한주민들의 종교관 형성에 영향을 미친 북한의 공식적인 종교관과 종교정책 및 북한의 종교실태, 그리고 공식적으로 허용되고 있는 북한주민의 종교생활을 개관한다.

7) 이은죽, 「북한사회의 체제와 생활」 (서울: 법문사, 1993), p. 240. 또 다른 책에서 이은죽 교수는 소설이 사회학적 자료로서 가치가 인정되는 바를 보다 더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있다. 이은죽, 「북한사회연구」 (서울: 서울대학교출판부, 1990), pp. 237-238.

8) 이은죽, 「북한사회연구」, p. 238.

제3장 북한주민의 종교관에서는 소설을 중심으로 하여 북한의 주요 간행물 속에 나타나는 북한주민들의 종교적 관념 내지 행태를 분석한다.

제4장 결론에서는 이상의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하여, 북한주민의 종교관에 있어 특징적인 면을 밝히고, 종교 차원에서의 남북한 이질화의 극복 및 동질성 회복의 방법을 모색해 보기로 한다.

## 제II장 북한의 종교현황

신(神)개념을 종교의 가장 기본적인 특성으로 하면, 종교란 영적인 존재에 대한 믿음이다.<sup>9)</sup> 그러나 종교경험의 대상을 인격적 신으로 한정하지 않고, 인격적 신이나 그렇지 않은 성스러운 것을 포함하는 어떤 힘이라고 하면, 종교란 신자들이 그들의 자연적·사회적 환경에 선행하고 또 그보다 우월하다고 간주하며, 그와 관련하여 의존감을 표현하고, 그 앞에서 특정의 행동유형을 따라야 할 의무를 지니고 있다고 간주하는 어떤 힘들과 관계되는 한 사회집단의 공동적 담화 및 실천구조를 의미한다.<sup>10)</sup>

이와 같이 정의되는 종교적 신앙과 의식은 여러가지 근원에서 일어나는 관성적인 불안과 근심을 덜어주는 역할을 하며, 퍼스낼리티의 성장과 통합, 특히 자아내의 갈등의 해결과 정서적인 질환

9) 오경환, 「종교사회학」 (서울: 서광사, 1990), p. 243.

10) 위의 책, p. 57. 여기에서 말하는 어떤 힘들이란, 인격화된 혹은 그렇지 않은, 다양한 혹은 단일한 힘들을 말한다.

의 요범이 될 수 있다.<sup>11)</sup> 또한 여러가지 종교적인 사상은 개인의 심리적 동기와 가치지향 및 주체적인 의식구조의 형성에 큰 영향을 끼칠 뿐만 아니라, 한 사회의 문화구조, 특히 가치체계의 근거가 됨으로써 사회변동과 발달의 한 원인, 즉 독립변수가 되기도 한다.<sup>12)</sup>

본 장에서는 위에서 서술한 바와 같은 개념의 종교에 대한 북한의 공식적인 가치지향과<sup>13)</sup> 종교정책을 논하고, 북한당국이 허용하는 종교의 실태와 북한주민의 종교활동에 대하여 개관하기로 한다.

## 1. 북한의 종교관과 종교정책

### 가. 북한의 종교관

주지하듯이 북한은 김일성정권 창립 이래 반종교적이며 부정적인 종교관을 표방하여 왔다. 이는 김일성이 종교와 관련하여 행한 일련의 담화와 교시에서 명시적으로 드러나고 있다.

11) 정재식, 「종교와 사회변동」 (서울: 연세대학교 출판부, 1990), p. 13.

12) 위의 책, p. 16.

13) 사회과학 분야에서 가장 보편적인 가치관의 개념정의는 클러크혼(C. Kluckhohn)의 정의로, 그는 “가치란 이용가능한 행위의 양식, 수단, 목표의 선택에 영향을 미치는, 한 개인 또는 한 집단에 특유한, 바람직한 것에 대한 명시적 또는 묵시적 관념”이라고 정의하고 있다. Clyde Kluckhohn et al., "Values and Value Orientations in the Theory of Action," in Talcot Parsons, Edward A. Shils et al., *Toward a General Theory of Action* (Cambridge, Mass.: Harvard University Press, 1951), p. 395.

종교는 반동적이며 비과학적인 세계관입니다. 사람들이 종교를 믿으면 계급의식이 마비되고 혁명하려는 의욕이 없어지게 됩니다. 결국 종교는 아편과 같은 것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sup>14)</sup>

우리가 지향하는 공산주의는 과학적 공산주의입니다. 그러므로 공산주의에 대한 신념은 사람들이 죽어서 《천당》이나 《극락세계》에 갈 수 있다는 것을 설교하는 종교의 교리를 믿는 것과는 아무런 인연도 없습니다.…… 옛날사람들은 이 세상에는 착취와 압박, 투기와 절투, 가난과 슬픔만 있는 줄 알았지 그러한 사회악을 없애고 이 땅위에 모두다 행복하게 사는 사회를 건설할 수 있다는 것을 몰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예수교와 불교의 교리에 귀를 기울이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현대 과학기술은 《천당》과 《극락세계》가 없다는 것을 현실적으로 증명하였습니다. 사람이 죽은 다음 《천당》이나 《극락세계》에 갈 수 있다는 것은 결국 사람이 죽어서 락을 볼 수 있다는 말인데 죽은 다음에야 무슨 락이라는 것이 있겠습니까.<sup>15)</sup>

종교는 역사적으로 지배계급의 수중에 장악되어 인민들을 기만하며 착취, 억압하는 도구로 리용되었으며 또 근대에 들어와서는 제국주의자들이 후진국가 인민들을 침략하는 사상적도구로 리용되었습니다.<sup>16)</sup>

미국은 오래전부터 종교의 간판을 든 선교사들을 우리나라에 파견하여 각지에 레베당을 짓고 기독교와 승미사상을 퍼뜨렸으며 장차 조선을 지배하기 위한 준비사업을 수십년동안 진행하였습니다. 이것은 미국이 조선사람들을 동정하고 있는 듯이 가장하며 종교의 탈을 쓰고 자기의 세력을 조선에 부식하기 위한 음흉한 책동이었습니다.<sup>17)</sup>

14) 「김일성저작집 5」, p. 154.

15) 「김일성저작집 26」, p. 571.

16) 「력사사전 I」 (평양: 사회과학출판사, 1971), p. 231.

17) 「김일성저작선집 1」, p. 173.

이상의 내용을 종합해 보면, 김일성의 종교관은 다음의 세 가지로 집약된다.

첫째, 종교는 일종의 미신이다. 즉 “불교, 기독교, 회교 등 어떤 형태의 종교이든, 그것은 다 현실이 인간의식에 환상적으로 외곡되어 반영된 것으로서, 그 내용은 전체가 허위적이다.”<sup>18)</sup> 이러한 종교는 아편과 같은 것이어서 계급의식을 마비시키고, 혁명의욕을 상실케 한다.<sup>19)</sup>

둘째, 종교의 기능은 피착취계급에 대한 착취계급(지배계급)의 착취와 억압의 도구이자, 제국주의적 침략의 사상적도구로서의 역할이 전부이다.<sup>20)</sup>

셋째, 미제국주의야말로 종교를 침략의 사상적도구로 하여 조선 침략을 꾀한 인민의 적이며, 따라서 종교와 미제는 동시에 타도되어야 할 주된 적이다.<sup>21)</sup>

18) 「철학사전」, p. 490; 종교를 미신과 동일시하고 미신타파, 즉 종교타파를 주제로 한 대표적인 작품은 북한의 혁명연극 ‘성황당’이다.

19) 마르크스에 있어서도 종교란, 민중과 소외된 계층에 대하여 그들의 투쟁의지를 격하시키는 역할을 하는 민중의 아편으로 비판되고 있다. 마르크스에 의하면 “종교는 억압받는 피조물의 한숨이고…… 그것은 민중의 아편”이다. 오경환, 앞의 책, p. 184에서 재인용.

20) 마르크스주의에 의하면, 종교는 사회적 착취의 다양한 형태를 옹호하는 이데올로기의 방패역할을 한다는 것이며, 이것이야말로 맑스주의가 기본으로 삼고 있는 종교말살이유의 핵심이다. 박영호, 「교회와 공산주의」(서울: 기독교문서선교회, 1984), p. 35.

21) 북한문헌에 나타나는 바, 종교비판은 기독교(개신교)에 대한 것이 비교적 많으며, 특히 미국인 선교사에 대한 비판은 증오심과 적개심으로 일관되어 있다. 고태우, 「북한의 종교정책」, pp. 129-135. 참조; 이른바 북한의 예술영화인 ‘최학신의 일가’, ‘중치기 노인의 생애’, ‘김목사의 일가’ 등은 이와 관련된 작품들이다.

이상과 같은 김일성의 종교관은 마르크스, 레닌의 종교관을 거의 답습한 것이었다고 하겠으나, 미제국주의와 종교를 연관시켜 동시에 타도되어야 할 주적(主敵)으로 규정하였음은, 마르크스-레닌주의를 사상적 토대로 한, 여타 사회주의 정권의 종교관과 다른 점이었다고 하겠다. 다시 말해서, 프롤레타리아에 의한 폭력혁명을 요체로 하는 공산주의와, 비폭력, 사랑, 신뢰를 중심사상으로 하는 종교와는 상호수용이 불가능한 상황에서, 유일지배체제 확립과 한반도 적화통일을 획책하던 김일성은 한반도 공산화통일에 최대 장애요인으로 등장한 미국을 종교로 위장한 제국주의자로 규정하여 부정적인 종교관 내지 종교박해의 한 근거로 삼은 것이며, 이로써 종교와 미제에 대한 동시타도가 타당성을 갖도록 한 것이다. 또한 이러한 논리가 6.25 전쟁의 참화를 겪은 북한주민 대부분에게 설득력 있게 작용하였음도 사실이다.

북한정권 수립이래 김일성이 표방해 온 부정적인 종교관은 북한의 공식적인 종교적 가치지향에 그대로 반영되었으며, 그 구체적인 예가 종교관련 용어의 사전적 정의이다.<sup>22)</sup>

구약성경은 주로 미신으로 가득찬 유대민족의 민족신화가 기본내용으로 되어 있다. 신약성경은 환상적 인물인 예수크리스트의 언행록이 기본이다.…… 기독교는 이와 같은 미신적인 교리로써 사람들을 회유기만하는 반동사상독소이며 인민의 아편이다.<sup>23)</sup>

22) 김일성의 종교관을 체계적으로 정리한 대표적인 북한문헌은 1959년에 정하철이 썼다고 하는 “우리는 왜 종교를 반대하여야 하는가”이다. 이 글의 내용은 종교의 의미와 종교발생의 역사적 기원, 종교의 반동적 해독성, 종교말살의 의의와 방법 등이 김일성의 종교관에 입각하여 서술되어 있다. 고태우, 앞의 책, pp. 283-304에 부록으로 실려있음.

불교는 기원전 6세기 인도의 석가가 조작해내었다는 것으로서 력대통치배들이 인민을 억압, 착취하는 사상적 도구의 하나로 사용하여 온 종교이며,<sup>24)</sup> 불교의 허황한 교리는 착취계급과 피착취, 피압박 인민들 사이의 적대적 대립을 가리우며, 근로자들에게 무저항사상을 주입시키고 그들을 착취계급의 영원한 노예로 엮어매는 데 이바지할 뿐이다.<sup>25)</sup>

미제국주의자들은 19세기말부터 조선에 레배당을 짓고 신교(장로교, 감리교, 성결교 등)를 퍼뜨려 제놈들의 앞잡이들을 길러냄으로써 조선에 대한 음흉한 침략계획을 실시하여 왔다. 해방후 미제침략자들은 남조선을 강점하자 제놈들이 길러온 친미적인 예수교도 분자들을 식민지통치의 중요한 앞잡이로 삼아왔으며…… 26)

반종교적이며 부정일변도적인 북한의 종교관이 변화를 보인 것은 1980년대 중반에 이르러서이다. 그러나 그 조짐이 엿보이기 시작한 것은 1970년대 초부터였다고 하겠다. 1970년대 초에 조성된 동서화해 분위기 속에서 7·4 남북공동성명이 발표된 이후, 북한에서는 그동안 유명무실했던 ‘조선기독교도연맹’, ‘조선불교도연맹’, ‘천도교중앙지도위원회’ 등의 종교단체가 공식적인 활동을 재개하고, 점차 대외적으로 활동영역을 넓히었을 뿐만 아니라, 주요 불교사찰이 복원되는 등 종교관의 변화조짐이 나타나기 시작한 것이다. 이러한 변화의 조짐은 1980년대에 들어서 행해진 기독교의 신약전서 번역 발간(1983년), 남북 고향방문단의 분단 이후 최초의

23) 「철학사전」, p. 95.

24) 「력사사전 I」, p. 960.

25) 「철학사전」, p. 288.

26) 「력사사전 II」, p. 168.

평양에서의 예배와 미사(1985년) 등으로 보다 더 구체화되었으며, 1986년에 발표된 한 담화에서 김정일은 자신의 종교관의 일단(一端)을 다음과 같이 피력하기에 이른다.

수령님께서서는 종교를 악용하는 반동적 지배계급과 제국주의자들의 책동을 배격하시었지 종교와 종교신자를 배척하신 일이 없습니다. 종교에는 나쁜 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좋은 점도 있습니다. 종교에서 사람들이 서로 사랑하면서 평화롭게 살라고 주장하는 것은 좋은 점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sup>27)</sup>

북한은 이전의 부정적인 종교관으로부터 종교의 긍정적인 면도 인정하는 변화를 보이기 시작한 것이다. 이후로 일단(一團)의 주체사상가들에 의해 김정일의 종교관에 입각한 주체사상과 기독교의 접목이 시도되고,<sup>28)</sup> 주체사상의 종교관이 정립되기에 이른다. 즉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은 김일성주석의 주체사상을 기초로 하여 기독교에 대해 종래의 맑스주의와는 다른 견해를 가지고 있으며,<sup>29)</sup> “주체사상은 맑스-레닌주의와 구별되는 새로운 종교관을 밝혀주고 있다.”는 것이다.<sup>30)</sup>

주체사상을 기초로 하여 정립했다고 하는 북한의 종교관은 다음

27) 박승덕, “기독교에 대한 주체사상의 새로운 관점,” 「기독교와 주체사상: 조국통일을 위한 남북 해외 기독교인과 주체사상가의 대화」 북미주 기독교학자회 1989-1992 연례대회 자료집 (서울: 신앙과 지성사, 1993), p. 81.

28) 위의 책, pp. 80-86 참조.

29) 김영훈, “로동당의 기독교 통일합작 드라마,” (1995년 3월 29일 <한국논단>이 주관한 ‘광복 50주년 기념 범민족대 토론회’에서의 발표문), p. 10.

30) 박승덕, “주체사상의 종교관,” 「기독교와 주체사상」, p. 182.



과 같이 요약된다.<sup>31)</sup>

첫째, 인간생활의 객관적 조건을 위주로 하여 종교를 해석하고 평가한 맑스주의의 종교관은<sup>32)</sup> 사람을 중심으로 종교를 고찰하고 평가하지 못한 데에 근본적인 약점이 있다. 주체사상은 사람을 중심으로 하는 과학적 방법론에 의거하여, 종교의 본질적 내용, 역할에 대한 심오하고 전면적인 이해를 준다.

둘째, 종교는 그 발생의 동기와 목적에서 보나, 교리의 핵심에 비추어 볼 때, 객관세계 보다는 인간의 본성적 요구와 직접 결부되어 있다. 종교는 압박과 착취, 예속과 불평등에서 벗어나려는 사회적 인간의 요구와 이해관계를 반영하여 나왔다. 천도교, 기독교, 불교, 회교의 발생 모두가 그러하다. 이러한 종교의 창시자들은 사람들을 온갖 죄악과 고통, 불행에서 구원하고 그들에게 평등하고 화목한 생활을 보장해 주려는 념원으로부터 교리를 내놓았기 때문에, 후세에 이르기까지 많은 사람들로 부터 커다란 존경을 받고 있는 것이다.

셋째, 주체사상은 사람중심의 세계관으로서 신중심의 세계관인 종교와 질적으로 구별된다. 그러나 이것은 주체사상이 종교에 긍정적인 면이 전혀 없다고 인정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다.

31) 이 부분은 1991년 5월 '북미주 기독교자회 제25차 연례대회'에서 발표된 평양 사회과학원 주체사상연구소 소장 박승덕의 "주체사상의 종교관"에서 발췌 요약한 것이다. 「기독교와 주체사상」, pp. 182-194.

32) 마르크스는 불의하고 비인간적이며 냉혹한 사회, 인간에게 사회적 소외와 고통을 안겨 주는 사회에서 종교가 발생하는데, 비인간적인 사회에 사는 사람들 중에서도 특히 소외 가운데서 고통스럽게 사는 인간들이 자신의 소망을 투사하고 종교를 만든다고 한다. 오경환, 앞의 책, pp. 167-200 참조.

종교는 비록 신중심의 세계관이지만, 자기 운명을 개척하려는 인간의 본성적인 요구를 구현하고 있고, 신과의 관계에서나마 그러한 요구를 실현하는 길을 밝히려 한다는 점에서 긍정적인 측면을 가지고 있다.

넷째, 주체사상은 사람중심의 방법론에 기초하여, 종교에 나쁜 점만 아니라 좋은 내용이 있다는 것을 밝히고, 그것을 옹당하게 평가하고 있다. 종교는 사회적 인간의 본성과 결부되어 있기 때문에, 인류공동의 이상인 사랑과 평화, 사회정의와 평등, 영생을 내세우고 있으며, 그것을 중요한 내용으로 삼고 있다. 사랑과 평화, 정의와 평등, 영생에 대한 종교교리는 인류의 보편적 이념을 구현한 좋은 사상이라고 평가할 수 있다. 주체사상에서도 사랑과 평화, 정의와 평등, 영생은 중요한 이념으로 되고 있다.

다섯째, 맑스주의는 종교의 본질과 내용을 비과학적이고 반동적이라고만 본 데로부터 종교의 역할에 대해서도 부정적인 평가를 내렸다. 맑스는 종교를 '인민의 아편'으로 단죄하였으며, 레닌은 그것을 '내세의 행복'으로 인민을 기만하는 '값없는 정신적 브린디술'로 규탄하였다. 맑스주의는 모든 종교교리를 착취계급에게 복무하는 반동사상으로 보고 종교의 사회적 역할도 인민대중에 대하여 해독적인 것이라고 인정하였다. 그러나 종교에는 그 교리의 좋은 점으로부터 흘러나오는 긍정적 역할도 있다.

여섯째, 주체사상은 민족을 통일하고 인민대중의 자주성을 실현하며 인류공동의 번영을 이룩하기 위한 투쟁에서 현대종교의 긍정적 역할이 더욱 높아지기를 바라며, 이러한 투쟁에서 종교인들과의 연대와 협작을 강화 발전시킬 것을 주장한다. 우리 당은 주

체사상으로부터 출발하여 종교인들의 신앙을 존중하고 종교의 좋은 점을 살려 그들이 민족 공동의 위업, 인류의 자주위업 수행에 적극 나서도록 고무해왔다.

요약하건대, 김정일의 종교관에 입각하여 정립되었다고 하는 주체사상의 종교관에 의하면, 종교는 인간의 본성적 요구와 직접 결부되어 있으며, 그 중심사상에 있어서도 주체사상과 상통하는 바가 있으므로 종교의 긍정적인 면과 이로부터 나오는 종교의 긍정적인 역할을 인정하며, 민족통일과 인민대중의 자주성 실현, 인류 공동의 번영을 이룩하기 위한 투쟁에서 종교인들과의 연대와 협작을 강화 발전시켜 나가겠다는 것이다.

일견, 반종교적이고 부정적인 마르크스주의적 종교관에서 벗어난 듯한 주체사상의 종교관은 1980년대 중반 이래 북한의 종교관련 문헌에 동일하게 반영되어 있으며, 몇 가지 예를 열거하면 다음과 같다.

우리 북조선에서는 종교의 자유를 인정한다. 그리고 주체사상과 천주교의 교리는 배치되지 않는다. 예수님의 가르침의 근본이 인간에 대한 사랑인 것과 같이 주체사상도 인간중심의 철학이기 때문에 인간을 사랑하고 인간을 위한다는 점에서는 공통된다.…… 우리는 죽음 뒤의 부활과 영생을 믿는데 주체사상에서는 조직 속에서 영생한다고 가르친다.…… 주체사상의 영생이 지상의 것인데 비해 우리는 천상의 영생을 믿는 차이는 있으나 영원한 생명을 추구한다는 점에서 서로 상통하며, 생명관이 없었던 사회주의사상 보다는 우리의 신앙과 더 가까운 면이 있다.<sup>33)</sup>

33) 조계길, 「북한은 변하고 있는가」 (서울: 삼민사, 1990), p. 125.

위대한 수령님께서서는 종교를 악용하는 것을 반대 배격하셨지, 종교와 종교인들을 멀리 하시거나 차별하신 적이 한번도 없으시었고, 오히려 송구스러우리만큼 종교인들의 신앙생활을 존중해 주셨습니다.…… 종교를 믿는가 믿지 않는가 하는 것을 개인의 의사에 맡기며, 종교는 믿어도 조선사람의 얼을 가지고 내나라 내민족을 위해 믿어야 한다는 것이 경애하는 수령님께서 가르치고 계시는 종교의 중핵이라고 믿습니다.<sup>34)</sup>

지도자선생께서는 <하느님>도 없고 <천당>도 없는 것은 사실이지만 현실적으로 착취사회에서 지배계급의 착취와 압박 밑에서 믿을데가 없고 고생스럽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하느님>이라도 믿고 <천당>에 가서 잘 살아 보겠다고 생각한다고 하여 그것이 죄로 될 것은 없다고 말씀하시였다.…… 친애하는 지도자선생께서는 이렇듯 종교에 대한 주체적 견해를 밝혀주시였다. 이 견해는 사람을 중심으로 종교를 보는 독창적인 견해이다. 친애하는 지도자선생께서는 종교에 대한 옳은 견해를 가지고 종교인들과의 단결을 강화하여 조국통일위업을 촉진시킬데 대하여 가르치고 계신다.<sup>35)</sup>

지난날에는 종교교리를 주로 굴종과 순종의 교리로…… 반동적 교리roman 인정하는 견해들이 있었다. 물론 종교교리 가운데는 그러한 교리가 대부분인 것만은 사실이다. 그러나 종교교리 가운데도 긍정적인 것이 있다. 기독교의 교리에서 정의와 인도주의 정신을 담은 교리라든가 사람들이 서로 사랑하면서 화목하게 지낼데 대한 교리, 불교의 권선징악과 평등의 교리, 우리나라에서 발생한 천도교의…… 평등의 교리는 인민대중의 자주적 지향을 결부시킨 교리라고 본다.<sup>36)</sup>

종교에 대한 올바른 리해를 가지고 종교를 믿는 사람들과의 사업

34) 고기준, “나의 신앙생활을 돌이켜 보며,” 「평양방송」 1994. 4. 16.

35) 림기우, “종교에 대한 주체적 견해,” 「조선사회민주당」 (1992. 1), p. 13.

36) 하용길, “종교에 대한 올바른 리해를 가져야 한다,” 「조선사회민주당」 (1993. 2), p. 51.

을 잘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사람들이 종교를 믿게 되는 것은 대체로 현실생활에서의 고통과 불행을 숙명적인 것으로 받아들이고 래세에 가서라도 행복한 생활을 누리보자는 넘원으로부터 출발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종교를 믿는 사람을 나쁘다고 할 수 없습니다. 나쁜 것은…… 저들의 지배에 순종시키기 위한 수단으로 종교를 악용하는 반동통치배들입니다. 진보적인 종교인들은 사람들이 서로 사랑하면서 화목하게 살 것을 바라고 있습니다.…… 우리는 남조선 종교인들이 조국통일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투쟁하고 있는 것을 높이 평가하여야 하며 그들과 단결하여야 합니다.<sup>37)</sup>

이상과 같은 북한 종교관의 변화는 헌법상에도 명시된 바, 1992년 4월에 개정된 북한 사회주의헌법 제68조는 “공민은 신앙의 자유를 가진다. 이 권리는 종교건물을 짓거나 종교의식 같은 것을 허용하는 것으로 보장된다. 누구든지 종교를 외세를 끌어들이거나 국가사회 질서를 해치는데 리용할 수 없다.”라고 밝히고 있다.<sup>38)</sup> 또한 1992년에 발간된 북한의 ‘조선말대사전’에 수록된 종교관련 용어의 뜻풀이도 종교관의 변화를 공식적으로 시사하고 있다. 1981년에 발간된 ‘현대조선말사전’과 비교해 볼 때, ‘조선말대사전’에서의 종교관련 용어의 개념이 비교적 객관적인 관점에서 정의되어 있는 것이다.

교회: 낡은 사회에서 반동통치계급의 정치적 비호 밑에 근로자들의 계급의식을 마비시키고, 예수교의 교리와 사상을 선전하며 퍼뜨

37) 김일성, 「우리 민족의 대단결을 이룩하자」 (동경: 재일본조선인총련합회, 1991), pp. 13-14.

38) 1972년 사회주의헌법 제54조에는 “공민은 신앙의 자유와 반종교 선전의 자유를 가진다.”라고 규정되어 있었다.

리는 거점으로서, 신자들을 모아놓고 예배를 보게하며, 여러가지 종교적의식을 하는 곳.<sup>39)</sup>

- 현대조선말사전 -

교회: 교리나 종교의식의 공통성으로 결합된 일정한 종교단체.<sup>40)</sup>

- 조선말대사전 -

불교: …… 불교에서는 모든 사람에게 다 고통이 있는데 여기서 벗어나는 길은 오직 부처를 믿고 현실생활을 잊어버리는 데 있다고 설교한다. 불교의 반동성은 사람들에게 불행으로부터 벗어나기 위하여서는…… 모든 욕망을 억제하고 운명에 순종하여야 한다고 하며…… 노예적인 굴종사상과 무저항주의를 설교하는 데 있다. 불교는 낡은 사회에서 지배계급의 이익을 위하여 복무하였으며……봉건시기 우리나라에도 들어와 봉건지배계급의 사상적 지배도구로 리용되면서 인민대중의 계급의식과 투쟁의식을 마비시키고 우리나라의 문화와 과학발전에서 막대한 해독을 끼쳤다.<sup>41)</sup>

- 현대조선말사전 -

불교: 동방에 퍼져있는 세계 3대종교의 하나 불타(부처) 석가모니의 교리를 따르며 그를 교주로 숭상한다. 고대인도의 노예소유자사회가 완성되던 역사적 환경에서 기원전 6세기경에 인도의 칸디스강 중류지방에서 생겨나 인도전국과 아세이에 급속히 퍼져 오늘에 이른다. <불타>(부처)는 범어로 <진리를 깨달은 자> 또는 <슬기있는 자>라는 뜻이다. <인간을 고뇌에서 해방>하며 자비심을 베푸는 것을 리념으로 하고 속세를 떠나 도를 잘 닦으면 <극락세계>에 이른다고 설교한다. 여러 류파로 갈라져있다.<sup>42)</sup>

- 조선말대사전 -

39) 「현대조선말사전」 (평양: 과학백과사전출판사, 1981), p. 229.

40) 「조선말대사전 I」 (평양: 사회과학출판사, 1992), p. 296.

41) 「현대조선말사전」, p. 1254.

42) 「조선말대사전 I」, p. 1509.

천도교: 봉건사회 말기 우리나라에서 발생한 종교의 하나…… 사회를 구원하는 길은 모든 사람들이 천도교를 믿고 자기를 수양하여 도덕적으로 완성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깨지 못한 농민들을 우매화하고 투쟁의식을 마비시키는데 리용되기도 하였다.<sup>43)</sup>

- 현대조선말사전 -

천도교: 우리나라 종교의 하나인 <동학>을 갑오농민전쟁 이후시기 고쳐 이름지은 것. 교조는 최제우이다. <사람이 곧 한울>이라는 것을 기본교리로 내세우고 <보국안민>의 지향밑에 <지상천국>을 건설할 것을 주장한다.<sup>44)</sup>

- 조선말대사전 -

한편, 1980년대 중반이래 북한의 종교관이 긍정적인 변화를 나타내게 된 데에는 다음과 같은 대내외적 배경이 작용했다고 보겠다.

첫째, 대외적인 이미지 개선의 일환책이다. 1980년대 이래 지속되는 경제난의 심화와 외교적인 고립은, 북한으로 하여금 대서구관계 개선의 필요성을 절감케 하였으며, 대서구관계 개선을 위해서는 대외적인 이미지 개선이 요구되었으므로, 이를 위한 방책의 하나로 종교관의 변화를 시도했다고 보는 것이다.

둘째, 대남통일전략전술의 일환책이다. 한반도 공산화통일이라는 대남정책의 궁극적 목표를 은폐하고, 남한의 대다수 인구인 종교인들에게 접근하여 대남통일전선을 구축하고자, 이른바 주체사상의 종교관을 공식화했다고 보는 것이다.<sup>45)</sup>

43) 「현대조선말사전」, p. 2027.

44) 「조선말대사전Ⅱ」, p. 506.

45) 이와 관련하여 다음의 내용들은 주목할만 하다. “우리나라 종교인들은 그

셋째, 김정일 이상화를 위한 일환책이다. 김일성이 지녔던 카리스마도 없고, 항일무장투쟁의 경력도 없는 김정일을 이상화하기 위해, 북한당국은 김정일을 위대한 사상가, 주체사상의 유일한 해석권자로 내세우고 있는 바, 종교의 중심사상 내지 교리를 포용하는 주체사상의 종교관을 정립함으로써 김정일의 사상적 탁월함을 과시하였다고 보는 것이다.<sup>46)</sup>

넷째, 북한주민에 대한 사상통제의 일환책이다. 북한주민에 대해 생활원리로서 기능하는 주체사상에 근거하여 종교를 포용 해석함으로써, 대내외적 환경변화에 따른 잠재적 종교인구의 사상적 동요와 혼란을 통제함과 동시에 주체사상의 절대적 우월성을 강변했다고 보는 것이다.<sup>47)</sup>

---

수가 적지 않을 뿐 아니라 거래들에게 미치는 종교의 영향력도 크기 때문에 조국통일운동에서 종교인들이 차지하는 위치와 역할도 자못 중요하다.…… 종교인들은 이 애국전통을 계승하여 조국통일의 주인, 연방제통일의 지지자, 촉진자, 민족화합의 중개자, 선구자의 역할을 옹계 수행함으로써 거래의 숙망인 조국통일 위업을 실현하는 데 특색있는 기여를 하여야 할 것이다.” 홍경관, “조국통일과 종교인의 자세,” 「조선사회민주당」(1993. 3), pp. 56-57; 한 귀순자의 증언에 의하면, 1975년 김일성은 한 ‘비밀교시’에서 “우리 조국 남반부에 수많은 종교인들이 살고 있는데 그들이 우리가 종교인들을 다 죽인다고 생각을 하면 그들도 우리를 반대하는데 합세할 것이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도 불필요한 중앙종교 조직을 만들고 있는 것입니다.”라고 밝힌 바 있다. 강광식 편저, 「북한의 실태」(서울: 한국정신문화연구원, 1987), p. 130.

46) 주체사상은 종교교리 안에 있는 긍정적인 사상들(사랑과 평화, 정의와 평등, 영생)을 포섭하고 그것을 새롭게 발전시키고 있으며, 종교가 내세운 영생의 이상까지도 현실세계에서 실현하는 길을 밝혀준 탁월한 사상이라고 한다. 박승덕, 앞의 글, p. 190.

47) 북한의 주체과학원 연구원에 의하면, “주체사상은 사회과학적 이론 가운데 하나이면서 국내에서는 종교까지 포함하고 있다.…… 다만 종교가 영생을 내세우며 구하는 반면 우리는 현세에서 이루자는 것이 다를 뿐”이라고



이상과 같이 볼 때, 주체사상의 종교관은 역시 위에서 지적한 요인들을 고려한 종교정책의 변화를 뒷받침하기 위해 만들어진 논리에 불과하다고 하겠다.<sup>48)</sup> 그러나 주체사상의 종교관과 종교정책의 변화 자체는 북한주민들에게 적지않은 영향을 미치리라고 본다.

#### 나. 북한의 종교정책

정권 수립이래 북한의 종교정책은 이중성을 띠고 전개되어 왔다. 북한의 종교정책은 궁극적으로 종교말살을 의도하고 있으나, 북한당국은 김일성정권과 사회주의체제의 확립 및 유지 차원에서 회유와 탄압, 또는 억제와 이용이라는 이중적인 정책을 전개해 온 것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북한의 종교정책을 다음의 세 단계로 나누어 개괄적으로 살펴 보기로 한다. 첫째 단계는 회유와 억압의 시기, 둘째 단계는 탄압의 시기, 셋째 단계는 억제와 이용의 시기

한다. 「중앙일보」, 1996. 1. 26.

48) 북한의 성직자인 한 목사에 의하면, “종교인들이 누리고 있는 부러움 없는 생활은 결코 하나님이나 그 어떤 신에 의해서 이룩된 것이 아니다. 그것은……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주석의 불면불휴의 노고에 의해 이룩된 것”이라고 한다. 김남식, “북한영상이 청소년들에 미치는 영향,” 「북한」(서울: 북한연구소, 1992. 3), pp. 139-140; 또한 조선기독교도 연맹 서기장이었던 고기준 목사는 그의 수기에서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다. “그러기에 우리 종교인들은 위대한 주석님과 김정일장군님께 우리의 운명을 전적으로 의탁하고 하느님과 같이 받들고 따르는 것입니다.…… 위대한 김일성주석님과 경애하는 김정일장군님을 조선의 하느님과 같이 믿으며 높이 받들어 모시고 따를 때 민족의 숙원인 나라의 통일은 반드시 이루어지리라고 굳게 확신합니다.” 고기준, 앞의 글.

이다.<sup>49)</sup>

### 1) 회유와 억압의 시기(1945-1949년)

해방후 공산정권 수립을 전후하여 종교인에 대한 회유와 억압을 동시에 병행한 북한의 종교정책은 당시 북한당국이 취한 일련의 조치들에서 잘 드러나고 있다. 먼저 북한당국은 1946년 2월 수립된 북조선임시인민위원회가 발표한 20개조 정강에서 “전체 인민에게 언론 출판 집회 및 신앙의 자유를 보장시킬 것.”(제3조)을 명시

49) 북한의 종교정책에 관한 몇 편의 연구결과는 다음과 같이 구분하고 있다. 종교의 제거기(소련군점령하-60년대초), 종교부재의 갈등기(1960년대-1970년대말), 종교의 외부적 표출기(1980년대), 고태우, 앞의 책; 고태우 “북한의 '80년대 종교적 상황변화의 분석,” 『북한학보』 제12집, pp. 210-215; 관찰통제기간, 탄압말살기간, 기독교의 이용시기, 김영훈, “로동당의 기독교 통일합작 드라마,” (1995년 3월 29일 ‘한국논단’이 주관한 ‘광복 50주년 기념 범민족대토론회’에서의 발표문); 민주건설시대의 종교, 조국해방전쟁시대의 종교정책 사회주의건설시대의 종교, 최근의 종교정책, 류성민, 앞의 책, pp. 108-124; 제한시기(45-48), 탄압시기(49-53), 말살시기(54-72), 종교단체등장시기(73-80), 종교활동부활시기(81년이후), 변진홍, “민족복음화의 십자로,” 한국천주교회 통일사목연구소 편, 『가톨릭교회와 민족복음화』 (서울: 일선기획, 1990), pp. 198-201; 인민민주주의혁명 시기의 종교(-47), 인민민주주의혁명의 강화발전단계에서의 종교(47-58), 사회주의 완전승리를 위한 계속혁명단계에서의 종교(58-현재), 범성, “북한의 종교,” 강정구 편집, 『북한의 사회』 (서울: 을유문화사, 1990), pp. 282-300; 저항기(45-53), 해체기(53-70), 피이용기(71-87), 재생기(88년이후), 윤이흠, “종교단체와 종교생활,” 최명 편집, 『북한개론』 (서울: 을유문화사, 1990), pp. 514-525; 제한기(45-49), 탄압기(50-53), 말살기(54-60), 억이용기(70년대-현재), 박완신, 앞의 책, pp. 132-164; 제한기(8.15-46), 탄압기(47-50), 말살기(6.25-60년대), 억이용기(70년대이후), 윤동현, “북한의 종교정책 변화과정과 전망,” 『통일논총』 (서울: 국토통일원 통일연수원, 1990), pp. 205-216.

하고, 1948년 헌법에서도 “모든 인민은 신앙 및 종교의식 거행의 자유를 가진다.”(제14조)라고 명시하여 종교 및 신앙의 자유를 법적으로 보장하고 있다. 그러나 이와 동시에 북한당국은 1946년의 토지개혁과 1948년의 중요산업국유화 조치 등으로 종교의 물질기반을 붕괴시키고,<sup>50)</sup> 북조선불교도총연맹(1945년), 북조선천도교청우당(1945년), 북조선기독교도연맹(1946년), 전국유교연맹(1947년) 등의 종교단체를 결성, 통일전선 산하 사회단체로 활동하게 함으로써 종교인의 내부분열을 초래하는 등<sup>51)</sup> 종교인에 대한 회유와 억압을 병행해 나가면서 종교말살 정책을 전개해 나간 것이다.

북한 김일성정권은 마르크스-레닌주의를 사상적 토대로 하여 수립된 정권이다. 따라서 북한정권이 지향한 종교관은 기본적으로 반종교적, 부정적인 종교관일 수 밖에 없다. 그러나 해방 후 북한의 종교상황은 공산정권 수립에 있어 가장 큰 장애요소로 등장하였다. 이는 근본적으로 종교의 속성이 반공적이라는 데에서 기인하는 것이었으며, 또한 당시 북한의 종교는 마르크스-레닌주의적 종교관으로 극복하기에는 너무나 큰 저항세력으로 존재하고 있었

50) 종교단체 소유의 토지몰수, 종교단체가 운영하던 기업재산 몰수, 신자들의 헌금 금지, 시주 및 탁발 금지, 종교단체 건물의 타용도 전용 등의 조치를 통해 종교활동 및 종교의식 거행의 억압을 꾀함.

51) 당시 천주교에 대한 정책은 다른 종교와 달랐다고 보는 견해가 있다. 즉 기독교도 연맹, 불교도연맹 등과 같이 어용조직화 하여 정치적으로도 이용하거나 교인들을 회유하는 데 이용하지 않았으며, 이는 천주교의 세력과 외국인 성직자들이 많았던 점 등이 고려되었기 때문일 것이라고 한다. 고태우, 앞의 책, pp. 60-61; 이러한 이유 외에도 당시 천주교인의 수가 비교적 적었기 때문이라는 견해도 있다. 류성민, 앞의 책, p. 132.

기 때문이다. 따라서 반종교적인 공산정권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북한당국은 종교를 억압과 동시에 회유의 대상으로 다룰 수 밖에 없었던 것이며, 보다 더 구체적인 이유는 다음과 같이 집약할 수 있다.

첫째, 해방을 전후하여 북한의 종교는 대단히 큰 세력으로 존재하고 있었다는 것이다. 해방전 북한의 평양은 동양의 예루살렘이라 불릴 정도로 기독교가 성행했으며, 천도교와 불교인구도 무시할 수 없을 정도의 세력이었다.<sup>52)</sup>

둘째, 거대한 세력으로 존재하는 종교인구는 사회주의 건설을 위한 도구적 집단으로서의 적지않은 가치가 있었다는 것이다.

셋째, 희생적인 항일투쟁을 벌였던 기독교를 비롯한 종교세력을 무조건 배척, 탄압할 수는 없었다는 것이다.

넷째, 당시 북한 사회에서 가장 강력한 민족주의 세력으로 드러났던 종교인들을 포섭하여 통일전선을 구축, 가능한 선까지 이용하고자 했다는 것이다.<sup>53)</sup>

정권수립을 전후하여 북한당국은 이상과 같은 이유들에 근거한 전략적 고려에서 종교인들에 대한 회유책을 병행했던 것이며,<sup>54)</sup>

52) 해방을 전후하여 북한 지역에서 신도가 가장 많았던 종교는 천도교(대략 150만 명으로 당시 북한인구의 16%로 추정)이며, 그 다음이 불교(대략 50만 명으로 추산), 기독교(약 20만 명으로 추산), 천주교(5만 7천명으로 추산) 순으로 집계되고 있다. 류성민, 앞의 책, pp. 128-134.

53) 변진홍, “해방공간에서의 북한 공산정권과 교회,” 한국천주교 회통일사목연구소 편, 앞의 책, p. 173.

54) 여기에서 회유란 북한정권이 종교인들에 대해 민주개혁 및 사회주의 건설에 지지 동참하고 통일전선 구축에 협조적이기를 요청한 것을 의미한다.

그 결과 일부의 종교인은 북한 공산정권에 동조하고 그 나머지는 숙청 내지 학살, 또는 월남하는 사태를 빚게 된다. 결국 북한당국의 종교회유책은 종교억압 내지 탄압을 위한 일시적 방편에 불과했던 것이다.<sup>55)</sup>

## 2) 탄압의 시기(1950-1971년 )

회유와 억압을 병행하던 북한의 종교정책은 1950년에 들어서면서 탄압일변도의 정책으로 바뀌게 된다. 반제반봉건투쟁의 기치아래 4년여에 걸친 정권수립 과정을 마치고 한반도 무력통일을 계획한 북한은, 남침을 대비하여 후방 강화의 일환책으로 종교인에 대한 본격적인 탄압을 시작한 것이다. 이 때부터 북한당국은 종교

55) 이 시기 북한당국의 반종교적 정책에 대한 수정주의적 견해는 다음과 같다. 즉 종교에 대한 초기 북한정권의 강압적대도는 사회주의체제로 전환되는 과정에서 나타난 기계적 결과로서, 종교단체의 토지몰수도 종교탄압이나 신앙의 자유 억압에 주된 목적을 둔 것이기 보다는 반봉건적 민주변혁의 일환으로 실시된 것이라고 한다. 종교는 종교 자체로서 관심의 대상이 되었던 것이 아니라 사회주의 건설에의 도움여부가 평가기준이었으며 사회주의 건설이라는 목표달성의 수단으로 종교를 이용하는 데 중점을 두었다는 것이다. 류성민, 앞의 책, pp. 109-114. 이와 유사한 견해는 다음의 글에서도 나타난다. 법성, 앞의 글.

해방후 북한당국의 교회탄압에 대한 수정주의적 해석에 따르면, 기독교 탄압은 기독교의 순수하지만은 않은 어떤 면 때문이었다고 한다. 즉 해방후 북한교회의 부르조아적 계급성, 기독교의 숭미사상 내지 제국주의적 침략의 동조세력으로서의 성격 때문에 기독교가 탄압대상이 되었던 것이므로, 북한 공산주의자들이 처음부터 마르크스주의의 교리적 요구 때문에 종교, 특히 기독교를 금지 탄압하려는 원칙을 가지고 있었다는 주장은 사실에 비추어 검토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유종선, “남북종교 교류확대 가능성과 통일에의 영향에 관한 연구,” 『94 북한 및 통일연구 논문집』 제 4권 (서울: 통일원, 1994), pp. 92-113 참조.

의식 거행 금지, 종교서적 소유자 색출 등을 통해 종교활동을 철저히 탄압하기 시작했으며, 이러한 종교탄압을 가일층 심화시킨 정치적 사건은 1950년에 일어난 6. 25동란이었다. 전후 김일성정권은 전쟁참화의 근원을 종교인들로 지목하여 탄압을 본격화 한 것이다. 이 시기에 있어서 탄압의 주요대상은 기독교이었다. 김일성정권에게 있어서 6. 25남침은 미제국주의로부터의 남조선해방을 의미하는 이른바 ‘조국해방전쟁’이었으며, 기독교는 미제의 한반도 식민지화에 도구로 사용된 것으로 간주되어 왔기 때문이었다. 이러한 견지에서 전후 김일성정권은 반미감정을 고조시키면서 기독교를 반혁명세력으로 매도하여 탄압하는가 하면, 여타 종교인들에 대해서도 전시(戰時)에 한국군과 미군에 대해 협조적이었다는 죄목 등으로 탄압을 본격화하게 된다. 요컨대, 한국전 종전과 더불어 북한에는 살아있는 종교가 없어져 버렸으며,<sup>56)</sup> 1955년 이후 북한은 표면상 한 사람의 종교인도 하나의 종교시설도 남아 있지 않은 신앙의 불모지대화 하고 만다.<sup>57)</sup>

위에서 서술한 바와 같이 1950년대 들어 본격화된 종교탄압은 1958년 부터 1960년초 까지 진행된 ‘중앙당 집중지도사업’과 1967년부터 1970년까지 실시된 ‘주민재등록사업’으로 보다 더 조직적이고 체계적인 형태를 띠게 된다. 북한당국은 중앙당집중지도사업을 통해 종교인과 그 가족을 ‘반혁명적요소’로 분류, 특정지역으로 거주를 제한하고 특별감시대상으로 규정하였으며<sup>58)</sup> 주민재등록사업

56) 윤이홍, 앞의 글, p. 518.

57) 변진홍, “민족복음화의 십자로,” p. 200; 이 시기에 있었던 주요 탄압사례는 박완신, 앞의 책, pp. 147-149 참조.

을 통해 이를 보다 더 강화한 것이다.<sup>59)</sup>

한편, 이 시기에 있어서 특징적인 것은 북한의 종교정책이 김일성의 정권장악을 위한 정치전략적 차원에서 행해진 물리적인 종교탄압에 그치지 않고, 본질적인 종교비판을 통한 탄압, 즉 반종교논리의 세뇌를 통한 종교말살 정책으로 진행되어 갔다고 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북한당국은 반종교서적 및 영화, 연극 등을 제작하여 출판, 공연하였으며, 그 대표적인 작품이 혁명연극 ‘성황당’과 영화 ‘최학신의 일가’, 그리고 대표적인 반종교이론서적 ‘우리는 왜 종교를 반대하여야 하는가’이다.<sup>60)</sup> 1959년 발간된 이 선전책자에서는 반종교활동의 이론적 근거를 다음과 같이 밝히고 있다.<sup>61)</sup>

첫째, 종교는 착취계급들이 근로자들을 억압하고 착취하는 유력한 정신적 도구로 이용되어 왔으며, 근로자들이 의식적으로 사회를 개조하고 발전시켜 나가는 것을 방해하고 있다.

둘째, 종교는 내세를 설교함으로써 사람들에게 현실에 대한 무관심성, 현실도피적인 사상에 젖게하고 착취계급들에게 복무하면서 평범한 근로대중을 정신적으로 억압하고 노예화하는 도구로

58) 집중지도사업의 목적 가운데 하나가 주민의 성분분류에 있었다. 즉 북한 주민을 사회성분을 표준으로 혁명적요소, 반혁명적요소, 복잡한 계층으로 구분하여 반혁명적요소 중 지수한 경우는 포섭을 하는 한편 그렇지 못한 경우는 고립 감시 강제이주 처단 중노동 등의 형벌을 가하였다. 민병천, 「북한공산주의」(서울: 대왕사, 1983), p. 199.

59) 주민재등록사업의 결과에 따라 북한주민을 다시 51개 계층으로 나누고 종교인들에 대해서는 기독교신자 37, 불교신자 38, 천주교신자 39, 유학자 40, 천도교신자 32 등 고유번호를 부여, 감시대상으로 분류함.

60) 북한의 반종교 이론서적은, 유재천, “사회·문화 : 교화 도구화의 문제점,” 이상우 외, 「북한 40년」(서울: 을유문화사, 1988), p. 268 참조.

61) 고태우, 앞의 책, pp. 283-298.

이용되어 왔다.

셋째, 종교는 대중의식 속에 무기력하고 타락된 정신을 불어넣어 줌으로써 사회주의 건설을 위한 근로자들의 자각적이고 현실적인 노력과 투쟁을 방해하며 전진운동에 지장을 준다.

넷째, 종교는 식민지 약소국가에 대한 제국주의적 침략정책에 있어 중요한 무기로 이용되어 왔다.

요컨대, 이상과 같은 이론적 근거에서 “가장 선진적이며 과학적인 맑스-레닌주의 사상과 그와는 반대로 가장 낙후하고 반동적인 종교적 사상이 서로 양립될 수 없음은 당연한 일”이라는 것이다. 62) 또한 이 책자를 통해서 북한당국은 “우리 당은 바로 이러한 종교나 미신과는 철두철미하게 비타협적이다. 그러나 당은 종교적인 신앙이나 의식을 강요적인 방법이나 결정으로써 이를 일거에 해결할 것이 아니라 꾸준한 설복과 교양, 그리고 계몽과 사회적인 실천활동을 통해서 이를 극복할 것”이라고 반종교투쟁의 원칙적인 입장을 밝힘으로써 63) 이 시기에 있어서도 종교탄압 내지 말살을 위해 회유책을 병행할 것임을 시사하고 있다. 즉, 이전 시기와 마찬가지로 이중적인 종교정책을 펴나가겠지만 그 궁극적인 목적은 종교말살에 있다는 것이며, 이러한 의도는 다음의 글에서도 잘 드러나고 있다.

그러나 모든 종교인들을 악질 종교인들과 동일시하고 모든 반혁명 분자라고 속단하는 것은 옳지 않다. 우리는 일부 양심적이고 우리 당을 따르고 우리의 사회주의 건설을 지지하는 종교인들을 꾸준히

62) 위의 책, pp. 300-301.

63) 위의 책, p. 301.



계몽 교양하며 점차 사물에 대한 옳은 인식을 가지고 종교를 스스로 버리도록 방조를 주어야 할 것이다.<sup>64)</sup>

앞에서 서술한 바와 같이, 1950년 6.25동란 이래 북한의 종교정책은 유형무형의 탄압으로 일관하였으며, 1970년대초에 이르러서 북한은 의형상 종교부재의 사회가 되어 버리고 만다. 1971년, 북한의 김일성은 일본의상과의 대담에서 “당의 사상교양 결과 모든 인민들은 종교의 허황성과 비과학성을 인식하여 종교가 없어진 것이라 할 수 있다.”라고 밝힌 바 있으며,<sup>65)</sup> 1972년의 사회주의 헌법에 ‘반종교선전의 자유’를 명시함으로써 북한의 반종교적 입장을 법제적으로 확립하고 이로써 종교탄압을 합법화하기에 이른 것이다.<sup>66)</sup>

북한의 관제 종교단체도 김일성의 일인지배체제가 확립되던 1960년대 전반에 활동을 멈추며 1966년 부터 1970년대초 까지 자취를 감추게 된다.<sup>67)</sup> 이 시기에 이르러 북한에서는 대내외적으로 종교의 활용가치가 없어진 것이다.

### 3) 억제와 이용의 시기(1972-1996년 현재)

1970년대에 들어서면서 국제정세는 화해분위기에 휩싸이게 된

64) 위의 책, p. 304.

65) 고태우, 앞의 글, p. 226에서 재인용.

66) 1972년의 사회주의 헌법 제54조: 공민은 신앙의 자유와 반종교선전의 자유를 가진다.

67) 고태우, 앞의 글, p. 212.

다. 이러한 추세에 대처하기 위해 남북한도 조심스런 접근을 시도하게 되며, 그 결실이 1972년의 남북적십자회담과 7.4 남북공동성명이다. 이 후 북한의 종교정책은 변화를 나타내기 시작한다. 국제적인 화해분위기, 남북대화, 그리고 구소련과 동구 및 중국 등지에서의 종교활동 재개<sup>68)</sup> 등 대외환경의 변화는 북한정권으로 하여금 외형상의 종교부재를 불가능하게 한 것이다.<sup>69)</sup>

이 시기에 있어 외형상의 종교부재로는 대외적인 변화에 대처하기 어려워짐에 따라 북한당국은 중앙종교조직들의 활동을 재개하는 등 종교정책의 변화를 시사하게 된다. 조선불교도연맹, 조선기독교도연맹이 각종 국제회의에 참석하고, 국제 종교단체 가입을 신청하는 등 대외적으로 북한종교가 실재하고 있음을 알리고자 한 것이다.<sup>70)</sup> 그러나 이러한 활동의 주목적은 북한종교에 대한 한

68) 과거 공산주의 국가들의 종교활동은 종교과 학교교육의 분리, 공산당 지지 전제, 종교단체의 독자적인 활동 불가, 외국종교의 간섭배제 등 제한적으로 허용되었다. 현재 구소련 및 동구권 사회주의 국가들에서는 전면적인 종교의 자유가 허용되고 있으나 중국에서는 삼자정책(三自政策), 즉 자전(自傳), 자급(自給), 자양(自養)을 통해 종교활동의 자유를 제한하고 있으며, 모든 종교활동은 헌법 등 모든 국가법률에 위배되지 않아야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82년 개정헌법에 “국가는 정상적인 종교활동을 보장한다. 어떤 사람이든지 종교를 이용해서 반혁명활동을 진행하면 안된다.…… 국가 교육제도의 활동을 방해하는 행위를 하면 안된다. 종교는 외국의 지배를 받지 않는다(35조 2항)”라고 명시하여 외형적인 신앙의 자유를 인정함과 동시에 종교탄압의 근거를 마련해 놓고 있다.

69) 한 연구자는 이 시기를 ‘종교부재의 갈등기’라고 개념화한 바 있다. 시기적으로는 주체사상의 이론적 실제적 틀이 잡혀가고 김일성 일인지배체제가 확립되던 1960년대 부터 7.4 남북공동성명에 따른 남북대화의 전개 등의 새로운 상황에 따른 종교부재의 갈등현상이 나타난 1970년대말 까지이다. 즉 외부적인 종교형태의 완전부재는 대내외적인 변화에 대응하는 데 적지않은 갈등을 드러냈다는 것이다. 고태우, 앞의 글, pp. 210-215 참조.

70) 조선불교도연맹이 1974년 11월 아시아 불교도 평화회의에 참가하였고 기

국측의 관심에 대응하고 국제사회에서의 종교적 고립을 벗어나기 위한 것이었으며, 따라서 종교정책의 변화라기 보다는 전략전술상의 변화를 보인 것 뿐이었다. 즉 북한당국은 종교말살을 궁극적 목적으로 한 종교탄압과 억제정책을 지속하되, 대외환경의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외형상으로 종교실재를 가장하고 종교를 역이용하는, 전략전술상의 변화를 보이기 시작했다는 것이다. 1972년의 개정헌법에 신앙의 자유와 함께 반종교선전의 자유를 명시함으로써 종교탄압의 법적 근거를 마련해 놓았다고 하는 것과, 1970년대 북한의 지하교회 실상 및 종교탄압에 대한 귀순자들의 증언은<sup>71)</sup> 이를 뒷받침 해주고 있다.

한편 이 시기에 있어 북한은 대남공산화 전략에 있어서도 종교를 적극 이용하였는 바, 1970년대 한국의 유신체제를 비난 공격하고 한국내외의 반체제인사들과 반한단체 및 반한종교인들을 회유, 친북화(親北化) 하는 데에서 관계 종교단체들을 전면에 내세웠으며 이는 기대수준에 이르는 성과를 얻기도 하였다.

위에서 서술한 바와 같이 1970년대초 국제적인 해빙분위기 속에서 북한의 종교정책은 대내적 억제와 대외적 이용이라는 전략전

---

독교연맹은 1974년 세계교회협의회에 가입을 신청했으나 거부 되었으며 1975년 1월에는 아시아 기독교 평화회의에 참석하였다. 1970년대초 북한은 국제적인 종교단체에 참석하거나 가입을 신청함으로써 북한의 종교실재를 인정 받고자 했으나 기대이하의 성과였으며 다만 북한과 우호적 관계에 있던 나라에서의 국제적 종교회의(1976년 공산권국가들 이 주축이 된 기독교평화회의에 가입)에 적극 참여하여 자신들의 주장을 담은 성명서 결의문 등을 채택하였다. 류성민, 앞의 책, pp. 143-144; 류성민, 「남북한 사회문화교류에 관한 연구」 (서울: 현대사회연구소, 1994), pp. 22-23 참조.

71) 고태우, 앞의 책, pp. 115-121 참조.

술상의 변화를 보이기 시작했으며, 이러한 변화는 1980년대에 들어서면서 가일층 심화되고 외형적으로 다소 전향적인 변화를 보이게 된다. 종래 북한당국은 관제 종교단체를 내세워 주로 대외적인 종교활동에 치중해 왔으며, 종교단체 본연의 활동은 거의 없이 대남정치비난 성명서 발표에 주력해 왔다. 그러나 1980년대에 들어서면서 북한은 기독교 관련서적 출판(1983년-1984년 성경과 찬송가), 불교사찰공개(1979년 묘향산 보현사), 가정교회 공개<sup>72)</sup> 해외에서의 종교모임 주관(1981년 비엔나에서 '제1차 조국통일을 위한 북과 해외동포 기독교자 간의 대화'를 개최), 서방권국가 종교인의 방북과 남북한 종교인의 접촉 허용 등 종교상의 문호를 개방하기 시작한 것이다.

1980년대 중반을 넘어서면서 북한종교정책의 전향적인 변화추세는 보다 더 적극화된다. 이 시기에 북한은 종교인의 외국방문(1985년 조선기독교도연맹 간부의 중국교회방문)<sup>73)</sup> 남북고향방문단의 분단이후 최초의 평양에서의 미사와 예배 허용(1985년), 교회 및 성당건립(1988년 봉수교회, 장충성당 신축공개), 천도교 가정교당 건립, 조선종교인협회 창설(1989년 북한내 각 종교단체의 대표자들로 구성), 해외동포를 대상으로 한 종교관련 비디오제작 살포(1989년 '신앙의 자유를 누리는 사람들'), 남북 종교인회담 제의 등을 통하여 종교정책의 전향적인 변화를 보다 더 적극화하며,

72) 가정교회의 대외적 노출은 신앙활동의 제한된 공인을 의미하기 때문에 비록 북한당국이 의도하지 않을지라도 북한종교에 매우 중요한 결과를 초래하게 된다. 윤이흠, 앞의 글, p. 523.

73) 북한 종교인들의 해외순방 및 방문현황은 류성민, 「남북한 사회문화 교류에 관한 연구」, p. 25 참조.

특히 공인된 종교적 성소, 곧 교회와 성당, 절 등지에서 공식적으로 종교고유의 의식을 거행하게 함으로써, 북한의 종교가 종교본연의 활동을 개시했음을 대내외적으로 과시한다.<sup>74)</sup> 1988년을 기점으로 북한의 종교는 다분히 정치적 성격을 띠고 있는 종교인 연맹의 단계를 벗어나서 절이나 교회와 같이 사회적으로 공인된 성소에서 종교적 신행의 공식표현으로서의 종교적 행사를 갖기에 이른 것이다.<sup>75)</sup> 또한 이러한 변화에 즈음하여 1987년 김일성은 “나는 종교를 믿지 않지만 종교인들을 나쁘게 생각하지 않는다.…… 우리는 종교를 믿는 사람들과도 다같이 손잡고 새 조선건설을 함께 해 나가려고 한다.”<sup>76)</sup> 라고 밝힘으로써 종교관의 변화를 피력한 바도 있다.

그러나 이상과 같은 전향적인 변화에도 불구하고 이 시기에 있어서도 북한의 종교정책은 이중성을 띠고 전개된다. 즉 동구공산권의 개방과 사회주의 붕괴, 남북대화 및 교류 등에 직면하여 북한당국은 사상통제 조치의 일환으로 대내적으로는 종교의 억압과 폐쇄정책을 보다 더 강화한 것이다.<sup>77)</sup>

74) 80년대말 부터 북한 종교단체의 종교기념일 행사 소식이 북한의 언론매체를 통해 보도되기 시작하였다.

75) 그러나 이러한 변화에 수반되는 종교의 교세, 조직, 종교적신념의 성격 등, 변화의 실질적인 내용에 관하여는 알려진 바가 없다. 윤이흠, “북한의 종교실태,” 「통일문제연구」 제1권 2호 (서울: 국토통일원, 1989 여름), pp. 214-215; 윤이흠교수는 88년 이후를 북한종교의 재생기로 개념화 하고, 88년을 계기로 북한의 종교는 성격을 달리했다고 한다. 윤이흠, 앞의 글.

76) 유종선, 앞의 글, p. 111에서 재인용.

77) 85년 남북고향방문단 교환 때에 북측의 가족 친지들이 보여준 종교에 대한 부정적인 태도와 대다수 귀순자들의 종교에 대한 무지, 북한의 종교 의식을 체험한 방북자들의 수기는 이를 입증해 주는 단적인 예들이다.

1980년대에 들어 북한이 종교정책이 전향적인 전략전술상의 변화를 보이게 된 데에는 다음과 같은 배경적 요인이 작용한 때문이라고 하겠다.

첫째, 1980년대 중반 이후 나타난 구소련과 동구권 사회주의 국가들에서의 개혁과 개방, 민주화 추세와 한국 북방외교의 성공적인 추진이다. 이로 인한 외교적 내지 종교적 고립을 벗어나기 위해 북한당국은 종교의 문호개방을 선택한 것이다.

둘째, 1980년대 이래 지속되어 온 경제난이다. 점차 심화되는 경제난을 극복하기 위해 대서방접근이 불가피해진 북한당국은 대서방 이미지 개선의 일환책으로서 북한의 종교실재를 대내외적으로 과시하게 된 것이다.

셋째, 대남통일전략전술의 변화이다. 한국의 정치적 불안정을 틈타 다수의 인구를 차지하는 한국의 종교세력과 통일전선을 구축하기 위해 종교의 이용을 적극화 한 것이다.

이상과 같은 배경에서 이루어진 북한종교의 대외적 개방은 1990년대에 들어서면서 또 한 차례의 외형적인 전환을 시도한다. 이 시기에 이르러서는 해외에서의 남북한 종교인들의 접촉 뿐만 아니라, 한국 종교인의 직접 방북도 허용하고 헌법개정을 통해 반종교선전의 자유를 삭제하며(1992년), 종교관련 용어가 객관적으로 뜻풀이된 조선말대사전을 발간(1992년)하고, 반석교회(칠골교회)를 건립하는 등 북한 종교정책의 큰 변화를 시사한 것이다.

지금까지 북한의 종교정책을 ‘회유와 억압의 시기’, ‘탄압의 시기’, ‘억제와 이용의 시기’ 등으로 나누어 개관해 보았다. 위에서 서술한 바와 같이 해방 이후 1996년 현재까지 이중성을 띠고 전

개되어 온 북한의 종교정책은 대내외적 환경의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전략전술상의 변화를 거듭해 왔으며, 주체사상의 종교화를 획책하는 단계에까지 이르렀다.

북한의 종교정책 내지 종교활동에 대한 평가는 대체적으로 부정적이다. 신앙의 자유를 법적으로 명시하고, 공인된 성소에서 종교 의식을 거행하며, 또한 종교교류를 적극화하는 등 외형적인 종교 개방을 실현해 나갔음은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겠으나, 북한 종교정책의 근본적인 의도와 북한종교의 내면을 살펴보게 되면 부정적인 평가를 면할 수 없는 것이다. 북한 종교정책에 대한 부정적 평가의 근거는 다음과 같이 집약된다.

첫째, 헌법상으로는 신앙의 자유를 명시하고 있으나,<sup>78)</sup> 초법적 성격을 갖는 북한 노동당규약에는 종교 및 신앙에 대해 언급한 바가 없다. 또한 김일성 유일사상체계확립 10대원칙에 반종교적인 내용을 명시해 놓고 있으며,<sup>79)</sup> 북한헌법에는 “종교단체에서 행정적행위를 한 자는 1년 이하의 교화노동에 처한다(528조)”, “종교단체에 기부를 강요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257조)”라고 규정되어 있다.

둘째, 종교단체 및 종교지도자들의 정치적 기능과 활동이다. 임기가 1995년까지인 최고인민회의 제9기 대의원 가운데 종교계 대

78) 1992년 개정헌법에 “신앙의 자유”를 명시하고는 있으나 동시에 “누구든지 종교를 의세를 끌어들이거나 국가사회 질서를 해치는 데 리용할 수 없다.”라고 명시하여 종교탄압의 법적근거를 마련해 놓고 있다.

79) 유일사상체계확립 10대원칙 4조 10항에 “김일성의 혁명사상에 어긋나는 봉건유교사상, 수정주의, 교조주의를 비롯한 온갖 반당적 반혁명적 사상 조류를 반대하여 투쟁하며 김일성의 혁명사상 주체사상을 철저히 고수한다.”라고 명시하였다.

표 6명이 포함되어 있으며,<sup>80)</sup> 천도교, 기독교, 불교, 천주교 등 4개 종교단체는 1989년 조선종교인 협의회를 결성, 대남 전위기구인 ‘조국통일민주주의전선’ 산하에 있고, 단체대표들은 통일정책 심의위원회에 소속되어 있다.

셋째, 북한의 종교단체들은 당의 외곽단체로서 대남선전선동 및 대남비방, 해외동포 및 해외종교인 포섭, 국제적 종교단체들과의 연대성 도모 등 주로 정치적인 활동양상을 보이고 있으며, 각종 종교행사에서도 순수 종교의식을 거행하기 보다는 연방제통일 주장, 한국정부의 통일 및 대북정책에 대한 비난 등 정치적 색채를 숨김없이 드러낸다.<sup>81)</sup>

셋째, 종교의 자유에 있어 기본적인 것은 신앙의 자유와 선교의 자유이다. 그러나 북한 헌법에 명시된 신앙의 자유는 북한당국이 임의로 해석할 수 있는 단서가 붙은 신앙의 자유이며, 선교의 자유는 허용되지 않고 있다.<sup>82)</sup>

80) 조선기독교도연맹위원장 강영섭, 서기장 고기준, 조선불교도연맹위원장 박태호, 천주교인협의회대표 장재철, 천도교의 정신혁, 유미영 등 이다.

81) 김일성은 다음과 같이 북한 종교단체 결성의 이유를 밝힌 바 있다. “우리는 종교를 반대하면서도 왜 중앙에 종교단체를 조직해 놓고 있는가고 이야기들이 많습니다. 우리는 조국을 통일시키지 못하고 있으며 국제적으로 많은 종교인들이 있으므로 우리가 종교를 인정하지 않는다고 하면 우리를 반대하는 적이 많아지기 때문입니다.…… 우리조국 남반부에 수많은 종교인들이 살고 있는데 그들이 우리가 종교인들을 다 죽인다고 하면 그들도 우리를 반대하는데 합세할 것이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도 불필요한 ‘중앙종교조직’을 만들고 있는 것입니다.” 고태우, 앞의 책, p. 129에서 재인용.

82) 북한은 92년 개정헌법에 “누구든지 종교를 외세를 끌어들이거나 국가사회 질서를 해치는데 리용할 수 없다”라고 명시하여 이를 구실로 선교활동의 자유를 허용하지 않고 있다. 실례로 한 폴란드계 프랑스인이 불어 번역요원으로 채용되어 평양에 체류하다가 선교활동을 했다는 이유로 92



넷째, 북한종교의 대남관련 활동이 한반도의 공산화통일을 목표로 한 대남통일전선 구축이라는 전략적 차원에서 전개되고 있다.

83) 북한당국은 주로 한국내 진보적 종교인들과 북한에 연고가 있는 해외동포 및 종교인들과의 교류에 비중을 두어 왔으며, 북한의 종교단체들도 대남비방 및 선전선동의 정치활동에 주력해 왔다.

다섯째, 북한당국은 정치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종교를 이용하고 있다. 이를테면 북한의 종교정책이 법개정을 통해 변화를 나타낸 때는 시기적으로 남북대화가 활성화 되었던 1972년과 1992년 이었으며, 또한 북한 종교정책의 전향적 변화 추세가 적극화되었던 1980년대 중반 이후는, 구소련 및 동구권에서 개혁 개방 민주화의 열풍이 거세지고, 한국의 북방정책이 성공리에 추진됨으로써 북한의 외교적고립이 초래된 때였다. 특히 1990년대에 들어서면서 북·미 사이에 종교인 교류가 점증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1995년 1월말 북한의 종교인들이 백악관 조찬기도회에 참석하여

---

년 2월 북한당국의 공식 추방명령에 따라 북한에서 추방된 바 있다.

「중앙일보」, 1992. 4. 26.

- 83) 통일전선운동과 종교에 관한 북한의 주장에 따르면, 반미구국통일전선 운동에서 종교신자들과 연합을 실현하는 것은 남조선의 현실적조건에서 매우 중요한 의의를 가지며, 종교인들을 혁명의 편에 전취함에 있어서 노동계급의 당이 견지하여야 할 원칙은 다음의 네 가지이다. 첫째, 하층종교인들(절대다수가 근로인민)과의 사업에 기본을 두면서 그들 속에서 반제에 국주의교양과 계급교양 종교교리의 반동성을 계몽시키는 정치선전사업을 진행하여 그들을 각성시키고 혁명투쟁에 적극인입하는 것이다. 둘째, 종교교파의 특성을 고려하여 그에 맞게 사업하는 것이다. 셋째, 일정한 전술적 단계의 정치적목표를 연합의 정치적기초로 하면서 이에 점차 종교발생의 근원을 소멸할 전략적과업을 결합시키는 것이다. 넷째, 상층종교인들과의 사업을 잘하는 것이다. 「주체사상에 기초한 남조선혁명과 조국통일 이론」, (평양: 사회과학원, 1975), pp. 112-114.

클린턴 대통령과 인사를 나누기까지 했다는 것은, 북한이 대미관계 개선을 위해 전략적으로 종교를 적극 활용하여 왔음을 입증하는 단적인 예라고 하겠다.<sup>84)</sup>

여섯째, 북한당국은 주체사상의 종교화를 획책하고 있다. 앞에서 서술했듯이 북한당국은 종교의 중심사상 내지 교리를 포용하는 주체사상의 종교관을 정립한 바 있다. 북한당국이 주체사상과 종교적 사상 및 교리를 조화시킨 근본적인 의도가 곧 주체사상의 종교화이다. 주체사상을 종교로 대체함으로써 개방화에 따른 북한주민의 사상적동요를 막고, 기존의 신정체제를 유지 강화해 나가겠다는 것이다.

일곱째, 종교를 김일성 우상화에 활용하고 있다. 예를 들면 천도교에서는 “김일성 주석님이 영도하시는 올바른 정치를 받들어 나가야 인내천의 이념을 구현하여 후천개벽을 이룩하고 지상천국건설의 최고목적을 실현할 수 있다.”고 강변하는가 하면, “김일성 주석님이시야말로 천도교에서 말하는 한울님이시다…… 전지전능하신 현세의 한울님이시다.”<sup>85)</sup>라고 하여 천도교의 한울님과 김일성을 동격화 하였다. 또한 기독교에서는 “기독교사상과 주체사상은 동일하다…… 북한의 정치제도하에서 비로소 기독교정신은 그 완성을 보게 됐다.”<sup>86)</sup>라고 하여 종교사상과 주체사상을 접목시키는

84) 북한은 바티칸의 국제적 영향력에 주목하여 바티칸과의 관계개선을 모색하고자 1987년 6월 평양에서 개최된 ‘비동맹특별각료회의’에 바티칸대표단을 초청하였으며 바티칸은 한국천주교의 장익신부를 포함한 대표단을 파견한 바도 있다.

85) 「내외통신」, 642호 (1989. 6. 2)

86) 「경향신문」, 1989. 12. 23.

가 하면, “우리 종교인들은 위대한 주석님과 경애하는 김정일장군께 우리의 운명을 전적으로 의탁하고 하느님과 같이 받들고 따르는 것입니다.”<sup>87)</sup>라고 하여 하느님과 동격으로 김일성 김정일을 숭배할 것을 강조하고 있다.

이상과 같은 근거에서 북한의 종교정책에 대한 평가는 부정적일 수 밖에 없으나, 외형적이거나 북한의 종교관과 종교정책에 전향적인 변화가 일어났다고 하는 그 자체는 장기적인 전망에서 긍정적으로 평가된다. 외형적이고 제한적인 종교개방이지만 그 사상과 교리, 의식 등은 북한주민들에게 잠재되어 있는 인간 본연의 종교성을 자극할 것이기 때문이다.

## 2. 북한의 종교실태

북한 종교의 현존에 대해서 상반되는 두 가지의 견해가 있다.<sup>88)</sup> 하나는 북한에는 종교가 존재한다고 볼 수 없다는 부정적인 견해이다. 이는 주로 귀순자 및 방북자의 증언과 북한 종교단체의 대내외적 활동을 근거로 하여 주장되고 있다. 다른 하나는 북한에도 종교가 존재한다는 긍정적인 견해이다. 이는 주로 북한종교의 개방 및 외형적인 성장을 근거로 하여 주장되고 있다.

북한종교에 대한 상반된 주장을 종합해 볼 때, 외형상으로는 북한 종교의 실재를 부인할 수 없다. 그 실체가 어떻든 간에 북한에서도 법적으로 신앙의 자유가 보장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사찰과

87) 고기준, 앞의 글.

88) 류성민, 「북한주민의 종교생활」, pp. 33-50 참조.

교회, 성당 등 성소(聖所)가 있으며, 종교의식이 거행되고 있고, 신자를 자처하는 사람들이 종교의식에 참여하고 있으며, 종교단체들의 대외적인 활동도 부단하게 행해지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신앙의 자유 및 선교의 자유, 그리고 종교단체 운영의 자율성 및 성소활동의 독자성 등에 비추어 보면, 북한에는 진정한 의미에서의 종교가 아닌 관제 내지 어용 종교가 존재한다고 하겠으며, 북한주민들의 지하신앙생활에 대한 귀순자들의 증언은<sup>89)</sup> 북한종교의 현실을 미루어 짐작케 한다.

요컨대 현실적으로 북한종교의 실재를 부인할 수는 없으나, 북한의 종교는 종교본연의 기능을 하지 못하고 대외적 활용가치가 높은 정치적 도구로서의 기능만을 한다고 보겠다.

본 절에서는 이상과 같은 북한종교의 실태 및 북한주민의 종교생활을 개관해 보기로 한다.

## 가. 불교

해방 후 북한지역에는 전국 31개의 대본산(大本山) 가운데 9개의 대본산과, 전국 1,200여개의 말사(末寺) 가운데 400여 개의 말사가 산재해 있었으며, 1,600여 명의 승려와 50여 만명의 신자가

89) 고태우, 앞의 책, pp. 115-121; 박완신, 앞의 책, pp. 166-172 참조. 신앙의 자유가 법적으로 보장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1970년대 북한주민들의 지하신앙생활은 심한 탄압을 받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 또한 1985년 9월 남북 고향방문단 교환 때에 종교와 관련해 북한주민들이 보여준 무지와 부정적인 태도는 북한종교의 실상을 단적으로 입증해 주고 있다. 박완신, 위의 책, pp. 162-163.

있었던 것으로 알려져 있다.<sup>90)</sup> 그러나 수적으로만 방대했을 뿐 체계적으로 조직화되어 있지 않아, 북한의 불교는 가장 먼저 공산정권에 회유되어 어용 불교도단체를 결성하였다. 1945년 12월에 발족된 ‘북조선불교도총연맹’이 그것이다.

북한의 불교는 1946년 초부터 실시된 토지개혁으로 인해 경제적 기반을 상실함으로써 침체되기 시작하였으며,<sup>91)</sup> 북한당국에 의해 결성된 ‘북조선불교도연맹’도 1972년 ‘조선불교도연맹’으로 개칭, 정식화되기까지 별다른 활동이 없었다.

‘조선불교도연맹’은 1976년 아시아 불교도 평화회의에 정식회원국으로 가입한 이후, 각종 국제회의에서 대남비난에 주력하는 등, 당의 외곽단체에 걸맞는 활동을 보여 왔으며, 1991년 10월에는 미국 로스엔젤레스에서 남북 불교대표자회의 및 합동법회를 개최한 바도 있다. 또한 ‘조선불교도연맹’은 1988년 5월 묘향산 보현사에서 40여 년만에 석탄절 기념법회를 개최한 이래, 매년 불교의 3대의식인 열반절(음 2.15), 석탄절(음 4.8), 성도절(음 12.8)에 즈음해 기념법회를 열고 있으나, 설법의 대부분은 대남비방과 통일투쟁 선동에 할애하고 있다.<sup>92)</sup> 불교종파나 종단이 없는 북한에서는 조

90) 고태우, 앞의 책, pp. 56-57; 류성민, 「북한주민의 종교생활」, p. 130 참조.

91) 사찰소유 재산이 몰수되고 승려들의 종교활동이 금지되어 사찰은 황폐해지고 신도들은 월남하거나 지하로 잠적하였다.

92) 96년 열반절 기념법회에서도 “한국과 미국이 통일연원에 역행해 무분별한 전쟁소동을 벌이고 있다”라고 주장하면서 “해내의 전체 불교인들이 반정부투쟁에 떨쳐나설 것”을 호소하고 “남북한과 해외의 전체 불교인들이 민족대단결과 ‘10대강령’의 기치아래 굳게 뭉쳐 통일운동을 벌여나갈 것”을 요구하였다. 「내외통신」 9989호.

선불교도연맹이 전국의 불교도를 관장하고 있으며, 위원장은 박태호(법명은 학림)이고, 대선사라고 호칭되고 있다.<sup>93)</sup>

현재 북한의 불교신도는 1만여 명이며, 북한전역에 60여 개의 절이 있고, 300여 명 되는 승려들은 대선사, 선사, 대덕, 중덕 등으로 이루어져 있다.<sup>94)</sup> 또한 1989년 김일성의 지시로 설립된 승려양성기관인 불교학원이 평양 광범사 내에 있다.<sup>95)</sup> 북한 불교의 종파는 조계종이며 승려는 모두 대처승이다.

한편 북한의 사찰들은 승려와 불교도들을 위해 불교의식을 거행하는 성소로서 보다는 문화재로서 보존, 관리되고 있으며, 그 기능은 대략 두 가지로 설명되고 있다.

첫째, 불교사찰은 북한 주민들에게 민족적 긍지와 자부심을 심어주는 문화재로서의 가치가 높다고 한다. 불교사찰은 우리 조상들의 슬기와 재능이 깃들어 있는 귀중한 문화유산이며, 우리 선조들의 우수한 건축술과 우리나라의 유구한 문화전통을 보여주는 귀중한 역사적 유적으로서, 인민들에게 민족적 긍지와 자부심을 심어 주는데 적극 이바지하고 있다는 것이다.<sup>96)</sup>

93) 류성민, 「북한주민의 종교생활」, pp. 156-158.

94) 96년 2월 북경에서 열린 남북종교인회의에 참석한 조선불교도연맹 부위원장 황병태 대선사의 설명. 「동아일보」 1996. 3. 3; 1985년 북한의 불교신도 수도 1만 여명, 승려의 수도 300여 명이었다. 박완신, 앞의 책, p. 157; 북한에는 보현사 광범사 등 많은 사찰이 복구되어 현재 약 60여 개의 사찰이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류성민, 「북한주민의 종교생활」, p. 138.

95) 불교학원은 표면적으로는 '조선불교도연맹 중앙위' 소속으로 되어 있으나 실제로는 북한의 종교정책을 총괄하고 있는 당통일전선부 6국의 지도 통제하에 '조국통일민주주의전선 중앙위' 제6국에서 관장하고 있다.

96) 「평양방송」, 1991. 2. 14; 허순산, "대성산 광범사," 「천리마」 (1991. 6)

들째, 문화휴식 공간으로서의 기능이다. 김일성이 교시한 바, 불교사찰은 유원지로서의 맛을 돋구워 주므로 사찰 주변 유원지를 더 잘 꾸려서 근로자들과 참관자들의 문화휴식을 보다 즐겁게 해야한다는 것이다.<sup>97)</sup>

이상과 같이 북한의 불교사찰들은 그 종교적의미와 기능을 상실한 채 다만 문화재로서의 가치만이 강조되고 있으며, 다른 불교문화유산들도 유사하게 평가되고 있다. 한 예로 북한당국은 ‘팔만대장경’을 다음과 같이 설명하고 있다.

팔만대장경은 리조실록과 함께 가장 큰 국보적가치와 문화사적 의의를 가지는 민족문화유산의 하나이며 고려인민이 창조한 최대의 걸작품이다.…… 팔만대장경은 물론 불교의 여러가지 교리와 불타의 설교를 묶은 책이다. 그러나 불교의 교리와 설교를 보기 전에 그의 갈피갈피에 깃든 고려인민의 민족정기를 먼저 찾아보아야 한다.…… 팔만대장경은 출판문화사적 가치가 큰 것으로 하여 우리나라와 민족의 큰 자랑으로 되고 있는 것이다.<sup>98)</sup>

앞에서 서술했듯이 북한 조선말대사전에서 불교에 대한 정의는 비교적 객관적이다. 그러나 철학사전, 조선문화어사전, 역사사전 등에서는 불교를 부정적으로 정의하고 있다.<sup>99)</sup>

p. 80.

97) 「평양방송」, 1991. 2. 14.

98) 김자연, “우리민족의 귀중한 국보이자 자랑인 팔만대장경,”

99) 철학사전은 1985년, 조선문화어사전은 1973년, 역사사전은 1971년에 발간되었으며, 조선말대사전은 1992년에 발간되었다. 조선말대사전이 1992년에 개정 발간 되었으므로, 그 이전에 발간된 사전의 내용이 개정되었을 수도 있고, 아니면 개정될 수도 있다. 따라서 북한의 공식적인 종교관을 분석하는 데 있어서는 이러한 점을 고려해야 할 것이다. 이 글에서는 철학사전,

…… 불교는 인과보응설, 생사륜회설, 천당지옥설과 같은 황당한 교리를 설교한다.…… 이러한 허황한 교리는 착취계급과 피착취, 피압박인민들 사이의 적대적대립을 가리우며 근로자들에게 무저항사상을 주입시키고 그들을 착취계급의 영원한 노예로 엮어매는데 이바지할 뿐이다.…… 불교는 4세기 후반부터 우리나라에도 침습하여 봉건통치배들이 인민들을 기만하고 억압착취하기 위한 사상적도구로 복무하였다.<sup>100)</sup>

북한에서의 불교는 당의 외곽단체로서 존재하는 조선불교도연맹을 중심으로 활동이 이루어지고 있을 뿐, 불교신도들의 신앙생활에 대해서는 소개된 것도 알려진 것도 없다. 또한 불교사찰들은 김일성의 교시에 따라 문화재적 가치 및 인민들의 문화휴식 공간으로서의 기능만이 강조되고 있다. 불교의 사전적정의도 대체적으로 부정적이며 승려 및 불교신도들의 수도 10여년 전과 동일하게 발표되고 있다. 이렇게 볼 때 북한의 불교가 종교본연의 활동 및 기능을 하고 있다고는 볼 수 없다. 그러나 불교사찰이 복원되고 불교의식이 거행되고 있다는 사실 그 자체만으로도 북한의 불교는 변화를 나타내고 있으며, 이러한 변화가 북한 주민들에게 미치는 영향도 적지 않으리라고 본다.

조선문화어사전, 역사사전 등이 개정되지 않았음을 전제로 하였다.

100) 「철학사전」, pp. 288-289; 「조선문화어사전」, p. 453; 「역사사전」, p. 960 참조. 북한 불교관련 용어의 사전적정의에 대해서는, 류성민, 「북한종교연구 I」 (서울: 현대사회연구소, 1992), pp. 22-40 참조.



## 나. 유교

북한에는 제도종교로서의 유교가 존재하지 않는다.<sup>101)</sup> 1947년에 유교연맹이 발족하여 그 후 약 10년 간 존속했었다고 하나,<sup>102)</sup> 유교연맹의 활동이나 유교신도들에 관해서는 알려진 것이 없다. 또한 분단직전 북한에는 개성의 성균관과 전국 129개소에 향교가 있었으나 1989년에 대대적인 보수가 있었던 것으로 알려진 개성의 성균관을 제외하고는 북한의 향교가 거의 방치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북한의 사전에서 유교는 종교적 의미 보다는 사회 정치사상 내지 윤리도덕 학설로 뜻풀이 되어 있으며 비판적으로 평가되어 있다.

중국봉건사회에서 오랜 기간에 걸쳐 존속된 정치, 윤리도덕 학설 창시자는 공자이며 유교의 경전은 4서5경이다.…… 유교의 의식으로서 하늘, 공자, 조상에게 제사지내는 일이 있다. 유교는 중국에서 천 년 이상 존재하면서 봉건질서를 유지하고 봉건사회의 수명을 연장하는 데서 많은 작용을 하였다. 유교가 고구려시기에 들어온 이후 우리나라의 사회, 정치, 문화, 도덕, 풍습 등에 커다란 영향을 미치었다.<sup>103)</sup>

101) 한 연구자에 의하면 유교가 북한당국의 반종교정책에 의해 다른 종교보다 타격을 덜 받고 살아 남은 데에는 그것이 현대의 직전시대에서 한국사회 성원을 전면적으로 지배했었다는 것 말고 그것이 이미 제도종교가 아니었다는 역설적이유가 있다고 한다. 조혜인, “북한의 종교-유교적 유산을 통하여,” 『동아연구』 제25집 (서울: 서강대학교 동아연구소, 1992), pp. 104-105.

102) 황인호, “북한에서의 종교부활이 주민의식 구조와 체제변화에 미칠 영향,” 『북한·통일연구논문집』 제6권 (서울: 통일원, 1991), p. 225에서 재인용.

기원전 6세기 경에 중국에서 발생하였으며 봉건적 룬리도덕을 중심 내용으로 한 사회정치적 및 종교적학설. 근로인민에게 노예적골종의 사상을 주입시키고 봉건통치배들의 리익을 옹호하는데 복무하여 반동적이며 관념론적인 교리를 펴뜨려왔다.<sup>104)</sup>

봉건유교도덕: 봉건유교도덕을 관통하고 있는 기초적규범은 인, 의, 례, 지이다.…… 유교에서는 인민대중속에 봉건제도에 대한 맹목적인 순종의식과 봉건도덕관념을 주입하기 위하여 인, 의, 례, 지 등을 천이나 천리에 의하여 인간에게 선천적으로 부여된 것이라고 설교한다. 봉건유교도덕의 기본내용은 삼강오륜이다.…… 삼강오륜은 본질에 있어서 중앙집권적 봉건전제제도, 봉건적가족제도를 비롯한 봉건제도와 질서를 유지하고 강화하기 위하여 만들어진 것이다. 봉건유교도덕에서 가장 근본적인 것은 부모에게 맹종맹동할 것을 요구하는 효성이다.…… 봉건유교도덕에서 설교하는 효성은 우리 인민이 부모를 진심으로 존경하고 정성을 다하여 섬기는 전통적미풍, 인간의 응당한 도리로서의 효성과는 본질적으로 구별된다.<sup>105)</sup>

봉건유교사상: 유교교리를 내용으로 하는 봉건통치배들의 보수적이며 반동적인 사상…… 4세기 후반기에 이르러서는 우리나라에도 급속히 전파되어 력대봉건국가들의 통치사상의 하나로 리용되었다.…… 반동적인 봉건유교사상은 오랜 시기에 걸쳐 봉건지배 계급들에게 복무하면서 사람들 속에 깊이 뿌리박았기 때문에 그 여독은 사회주의제도가 세워진 다음에도 오래동안 남아 있으면서 우리의 혁명투쟁과 건설사업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sup>106)</sup>

이상과 같이 북한에서 유교는 종교의 개념 보다는 사상 내지 학

103) 「조선말 대사전 2」 p. 1620.

104) 「조선문화어사전」, p. 1007.

105) 「철학사전」, pp. 281-282.

106) 위의 책, p. 282.

설로 정의되고 있으며, 봉건통치배들의 통치사상으로 비판되고 있다. 그러나 제도종교로서 실재하지도 않고, 반동적인 사상으로 비판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유교의 도덕원리는 북한 주민들의 인간관계에 있어 내면적 규범으로 작용하고 있으며,<sup>107)</sup> 소수 권력자들의 권력 및 체제유지에도 적극 이용되고 있음이 주지의 사실이다.

#### 다. 천주교

해방을 전후하여 북한에는 4개의 교구에 3명의 주교, 90명의 사제, 그리고 약 5만7천여 명의 천주교신자가 있었던 것으로 알려져 있다.<sup>108)</sup> 앞절에서 밝히었듯이 해방 후 천주교에 대한 북한당국의 정책은 다른 종교에 대한 것과는 달랐다. 즉 불교와 기독교에 대해서는 어용 종교단체를 만들어 교인들을 회유하는 등 정치적으로 구로 이용하였으나, 천주교에 대해서는 그렇게 하지 않았다. 그 이유는 타종교에 비해 천주교인의 수가 적었을 뿐만 아니라, 천주교인들의 반공의식이 강했기 때문에<sup>109)</sup> 북한당국이 처음부터 어용

107) 제3장에서 상술할 것임.

108) 류성민, 「북한주민의 종교생활」, p. 132; 변진흥, “해방공간에서의 북한 공산정권과 교회,” pp. 168-170 참조.

109) 한 귀순자의 증언에 의하면 지난 3월 북한 원산조선소의 ‘김일성 영생탑’이 폭파되었다고 한다. 일설에 따르면 이같은 체제저항 정신은 원산에 있다가 북한당국에 의해 폐쇄된 한반도 최대규모의 천주교 베네딕도 수도원으로부터 영향받은 바 크다고 한다. 「세계일보」, 1996. 7. 13; 폴란드(1980년) 헝가리(1956년) 체코슬로바키아(1968년) 등 전후 사회의화 된 뒤에 반체제 폭동이 일어난 나라들은 모두 가톨릭교권에 속한다.

조직화할 대상으로 다루지 않았다고 볼 수 있다. 또한 천주교는 바티칸을 중심으로 조직화되어 있으며, 다수의 외국인 성직자들이 포함되어 있었으므로<sup>110)</sup> 공산정권이 포섭대상으로 다루기 쉽지 않았던 종교세력이기도 했다.<sup>111)</sup>

북한의 천주교도 불교와 마찬가지로 공산정권의 토지개혁과 산업국유화 조치로 인해 경제적 기반을 잃고난 후 점차 와해되었으며, 1988년 조선천주교인협회가 결성되고 난 후에야 천주교의 실재가 표면화 되고 활동이 재개되었다.

조선천주교인협회의 활동도 북한내 타종교의 활동과 유사하다. 그러나 협회조직의 취지는 비교적 정치성이 적으며 “교회의 발전과 권익옹호”, “교인 호상간의 연계와 단합도모”, “복음정신에 기초” 등을 강조하는 등, 종교단체 본연의 성격과 기능을 강조하고 있다.<sup>112)</sup> 이는 시기적으로 보아 북한당국이 대외전략전술적 차원에서 종교의 활용을 적극화한 즈음에 천주교단체를 결성했기 때문만이 아니라, 천주교의 최고위중앙조직인 바티칸을 의식한 때문이라고도 볼 수 있다.

현재 북한에는 평양에 장충성당이 하나 있으며, 사제가 없이 신자들만으로 주일공소예절이 행해지고 있고, 약 3천5백 명의 신자가 있다.<sup>113)</sup> 천주교는 개신교 보다 교세가 약하며 기독교처럼 가

110) 당시 북한에는 신부 54명 수사 43명 수녀 37명 등 외국인 성직자가 내국인 보다 많았다고 한다. 류성민, 「북한주민의 종교생활」, p. 132.

111) 북한당국은 천주교가 기독교도연맹에 가입하도록 회유, 협박 하였으나 천주교측의 강한 저항으로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고 한다. 변진홍, “해방공간에서의 북한공산정권과 교회,” pp. 180-182.

112) “자료해설: 조선천주교인협회 결성,” 한국천주교회통일사목연구소 편, 앞의 책, pp. 323-328.

정교회가 있고<sup>114)</sup> 현재 로마에서 사제수업을 받는 신학생이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또한 조선천주교인협회는 한국 및 해외 천주교단체와의 교류에 적극 호응하는 등 대외적인 활동에 많은 관심을 나타내고 있으며,<sup>115)</sup> 북한상주(常駐) 사제영입과 김수환추기경의 방북을 희망하는 등 바티칸과의 연계를 모색하고 있다.<sup>116)</sup>

한편 북한 조선말대사전에도 천주교는 객관적으로 뜻풀이가 되어 있다.

카톨릭교: 기독교의 정통적인 교리를 신봉하는 기독교의 한 류파. 로마법왕을 중심으로 하는 로마카톨릭교와 회랍정교로 갈라져 있는데 흔히 전자를 이른다. 로마카톨릭교는 로마제국이 동서로 분열되면서 1054년에 로마를 중심으로 세계적 또는 보편적인 종교라는 뜻에서 카톨릭이라는 명칭을 띠고 형성되었다. 기독교의 가장 기본적인 류파로서 세계 기독교신자의 과반수를 망라하고 있으며 여러나라들에 보급되어 있다.<sup>117)</sup>

그러나 북한의 철학사전과 역사사전에는 천주교에 대해 비판적

113) 조선천주교인협회 장재철 위원장에 의하면 1988년의 신자 수는 8백명이었으며 1991년의 신자 수는 1천2백58명이었는데 그동안 숨어있던 구교우를 발굴해내 신자 수가 3천여 명으로 늘어났다고 한다. 또한 현재 조선천주교인협회에 등록된 북한신자 수는 3천5백명이며 선교용 책자를 제작, 전교에 힘쓰고 있으나 무신론에 젖어있는 북한상황에서 신규신자 영입은 거의 불가능한 형편이라고 한다. 「평화신문」, 1995. 2.12; 한편 북한에서는 천주교신자 찾기운동이 전국적으로 벌어지고 있으며 원산지 지역에서 신자들의 집회가 주기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고 한다. 「평화신문」, 1995. 5. 7.

114) 「동아일보」, 1996. 3. 3.

115) 박완신, 앞의 책, pp. 52-53.

116) 「평화신문」, 1995. 2. 12.

117) 「조선말대사전 2」, p. 658.

부정적으로 설명되어 있다.

카톨릭교: 기독교 구교에 속하는 교파…… 근세에 들어와 기독교 신교가 널리 퍼진 다음에도 카톨릭교회는 교세를 늘리기 위한 책동을 강화 하였으며 동방침략의 길잡이로서 여러 나라들에 침입하였다.…… 미제를 우두머리로 하는 제국주의자들의 종교침략 책동으로 오늘 남조선에서의 카톨릭교세는 날로 강화되고 있다.<sup>118)</sup>

로마카톨릭교회: 발생 첫날부터 지배계급의 수중에 장악되어 인민들을 기만하며 착취억압하는 도구로 되었으며…… 현재 이 교회는 각종 반동단체들을 통하여 반공산주의 반민주주의 책동 세차게 타오르는 민족해방운동을 탄압하는데 적극 가담하고 있으며 세계 반동의 원흉인 미제의 충실한 침략도구로 되고 있다. 오늘 남조선에서 이 교회는 인간도살과 반공산주의 운동을 악랄하게 추동하고 있다.<sup>119)</sup>

바티칸: …… 로마카톨릭교의 중심지이며 미제의 침략정책 수행에 적극 복무하고 있는 자본주의 나라(도시국가)…… 바티칸은 또한 미제를 비롯한 제국주의나라 독점체들과 밀접히 연결되어 있는 대독점체이며…… 대토지소유자이다.<sup>120)</sup>

위에서 서술한 바를 종합해 볼 때, 공식적 외형적으로는 종교본연의 성격과 기능을 강조하고 있지만, 북한의 천주교 역시 타종교와 마찬가지로 북한당국의 정치적 도구로서 기능하는 바가 크며, 북한의 천주교가 바티칸과의 연계를 모색하는 것도 천주교 고유의 조직성 때문이라기 보다는 북한당국의 정치적 의도가 더 크게

118) 「철학사전」, pp. 568-569.

119) 「력사사전」, p. 640.

120) 위의 책, p. 854.

작용하는 것이라고 하겠다.

#### 라. 개신교

해방 전 북한의 평양은 ‘동양의 예루살렘’, ‘조선의 예루살렘’이라 불리울 정도로 교회와 신자가 많았다. 조선중앙년감 1950년판의 기록에 의하면 당시 개신교신자 수는 약 20만 명, 장로 수는 2,142명, 목사 수는 410명, 전도사 수는 498명으로 집계되어 있다.  
121)

해방 후 북한의 개신교는 공산정권 수립에 커다란 장애세력이었다. 특히 1945년 9월에 결성된 기독교 사회민주당(후에 사회민주당으로 개칭)의 조직적인 정당활동은 소련점령군과 공산당에게 위협적인 것이었으며 개신교 탄압의 실마리를 준 것이기도 하였다.  
122) 북한당국은 개신교의 조직적인 저항을 탄압함과 동시에, 교인들을 회유하기 위하여 김일성의 외조부뻘 되는 강양욱을 내세워 1946년 북조선 기독교도연맹을 조직 하였으며, 이 때 많은 개신교 목회자들과 신자들이 희생되었고, 일부는 월남하는 사태를 빚었다.  
123)

한편 북한당국은 기독교를 미제침략의 동조세력 내지 지지세력으로 몰아 강압적으로 탄압 하였으며, 따라서 6.25동란을 전후하

121) 「조선중앙년감」 (1950), p. 365.

122) 고태우, 앞의 책, p. 67.

123) 당시 월남한 기독교인들의 수는 10만으로 추산되고 있다. 류성민, 「북한 주민의 종교생활」 p. 131.

여 가장 많은 피해를 입은 것이 개신교였다.<sup>124)</sup>

여타 종교단체와 마찬가지로 북조선 기독교도연맹도 1960년대 말까지 별다른 활동이 없었다. 북조선 기독교도연맹을 개명한 조선기독교도연맹은 1960년대 말부터 강양욱 위원장이 조선기독교도연맹을 대표하여 몇 차례에 걸쳐 동남아시아와 아프리카를 순방하고, 1974년 조선기독교도연맹 이름으로 세계기독교회협의회(WCC)에 회원가입을 신청하면서 대외적으로 그 실재를 드러냈다.<sup>125)</sup>

조선기독교도연맹도 다른 종교단체와 다를 바없이 북한정권의 정치적 도구로서 기능하고 있으며,<sup>126)</sup> 북한의 종교단체들 가운데 가장 활발한 대외활동을 하고 있다. 북한당국은 한국 및 서구의 다수의 개신교인구를 주목하여 한국 및 해외동포 종교인에 대한 접근과 미국과 일본을 비롯한 대서구 접근에 있어 북한의 개신교를 적극 활용하고 있는 것이다.<sup>127)</sup> 그러나 조선기독교도연맹은 대외적인 정치적 기능 외에 전국의 기독교신자 관리와 성경 및 찬송가 편찬 등 종교단체 본연의 활동도 하고 있다.<sup>128)</sup>

124) 고태우, 앞의 책, p. 110.

125) WCC측에서는 조선기독교도연맹이 북한의 기독교신자, 성직자, 교회 등에 관한 실태를 파악하지 못하고 있음을 이유로 가입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북한 기독교도연맹의 대외활동에 관하여는, 조동진, “통일운동 50년사와 민족교회,” 「민족통일과 한국기독교」 (서울: 한국기독교학생회출판부, 1994), pp. 49-51.

126) 한 예로 북한 봉수교회에서 있었던 부활절예배에서 담임목사 이성봉은 설교를 통해 연방제통일을 위한 남북, 해외 기독교인들의 연대투쟁을 촉구하고 대남 정부 비방을 한 바있다. 「내외통신」 9997호 (1996. 4. 9).

127) 북·미간 개신교 교류, 북한 개신교와 해외동포 개신교인들과의 교류는 비교적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으나 한국과의 교류는 별다른 진전이 없다고 하는 사실은 북한당국이 정치적으로 하에 북한의 개신교를 이용하고 있음을 말해 주는 단적인 예다.



현재 북한에는 평양에 봉수교회와 반석교회(일명 칠골교회)가 있으며<sup>129)</sup> 500여 개소의 가정교회와<sup>130)</sup> 1만여 명의 신자, 30여 명의 목사가 있고, 1972년에 개원된 평양신학원이라는 신학교(神學校)가 있다. 또한 김일성종합대학교에는 종교학과가 개설되어 1989년 9월학기에 30명 정원으로 강의를 시작하였다. 봉수교회에는 담임목사와 부목사, 전도사 등이 교역자로 봉직하고 있으며 장로 집사, 권사 등이 교회의 재직을 맡고 있다.

주일예배는 전통적예배의식에 따라 진행되지만 설교의 내용은 정치적이며, 성가대는 평양음악무용대학 출신의 여성음악교사 15명으로 구성되어 있다.<sup>131)</sup> 또한 신자의 90%가 여자이고 대부분 50대 이상이며 어린이가 오지 않아 주일학교는 없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sup>132)</sup>

128) 1983년 신약성경과 찬송가 출판, 1984년 구약성경 출판, 1990년 신·구약 성경 합본출판. 북한의 성경은 우리나라의 공동번역을 상당히 많이 참조하였으며 찬송가는 해방 전 북한장로교의 찬송가를 참고하여 만든 것이라고 한다.

129) 반석교회는 1990년 김일성이 그 어머니 강반석을 기념하여 재건한 예배당으로교회 100m 전방에 강반석의 좌상이 있다고 한다. 이정근, “북한교회, 종교자유의 청신호인가,” 『통일한국』 (1991. 6), p. 49; 반석교회는 해방 전에 있었던 하리교회를 재건한 것으로 강반석은 당시 하리교회 집사였다고 한다. 『방송선교』 (1989. 9-10); 김일성종합대학 종교학과장에 의하면 북한 8개도에 하나씩 도립교회당을 세울 것이라고 한다. 이정근, 앞의 글, p. 49.

130) 가정교회는 6.25전쟁 때부터 시작했으며 많게는 20-30명, 적게는 7-8명이 모인다고 한다. 『한겨레신문』, 1989. 4. 26.

131) 이정근, 위의 글, p. 47; 한 방북자의 글에 의하면, 봉수교회 성가대원들은 모두 평양음대 출신이며 교원(교수, 또는 교사)으로 재직중 이었다고 한다. 이찬삼, 『평양특파원』 (서울: 중앙일보사, 1990), pp. 156-157.

132) 『동아일보』, 1990. 11. 7, 청년회, 학생회 등도 없다고 한다.

북한 조선말대사전에서 개신교는 객관적으로 뜻풀이 되어 있다.

신교: 종교에서 새로운 교리는 뜻으로 프로테스탄트를 이르는 말. 16세기의 종교개혁 때 새로운 교리와 계를을 주장하면서 로마카톨릭교에서 갈라져 나온 기독교의 교파이다.<sup>133)</sup>

그러나 철학사전, 조선문화어사전, 력사사전 등에서 개신교의 뜻풀이는 비판적, 부정적이다.

프로테스탄트교: 16세기 구라파에서 진행된 종교개혁운동에 의하여 생겨난 기독교의 신교파…… 프로테스탄트교의 특징은 특히 20세기에 들어와 많은 교파들이 교리와 종교활동의 현대화, 세속화의 방향으로 움직이고 있는 것이다. 미신의 허황성이 드러난 현대조건에서 신의 존재를 하나의 상징으로 간주하면서 비종교적기독교를 만들려 하고 있다…… 신교의 이런 특징들은 인민대중속에 기독교의 굴종과 타협사상을 보다 손쉽게 침투시키려는 부르주아지의 요구를 반영하고 있다…… 신교는 구미침략자들 특히 미제국주의자들의 아세아침략의 길잡이로 복무하였다…… 미제의 종교침략 정책의 후과로 오늘 남조선에는 수백만의 기독교인이 있는데 그중 대부분이 신교도이다.<sup>134)</sup>

해방 전 강한 교세를 지녔던 북한의 개신교는 공산정권 수립과 함께 그 세력을 잃고 한낱 어용단체에 지나지않는 조선기독교도연맹의 이름으로 실재를 나타내고 있다. 그러나 북한의 개신교는 북한에 실재하는 종교들 가운데 가장 활발하게 대외적인 종교활동을 벌이고 있으며, 대내적으로도 비교적 적극적으로 종교본연의

133) 「조선말대사전」, p. 1911.

134) 「철학사전」, p. 584.

기능을 수행하고 있다. 종래 북한의 종교정책으로 미루어 볼 때, 이는 곧 북한당국이 정치적 의도하에서 대내외적으로 개신교를 적극 이용하고 있음을 말해 주는 것이라 하겠다. 그러나 한편 북한의 개신교가 가장 활발한 종교활동을 벌이고 있으며, 특히 대내적으로 비교적 적극적인 종교본연의 기능 내지 활동을 보이고 있음은, 북한주민들 사이에 적지않은 개신교 신자가 지하교회를 중심으로 신앙생활을 하고 있음을 반증하는 것이라고도 하겠다.<sup>135)</sup> 즉 북한당국은 지하교인들을 회유하여 관제 내지 어용종교인으로 만들기 위해 개신교의 활동을 적극화하고 있다고 보는 것이다.

#### 마. 천도교

해방을 전후하여 북한에서 신자의 수가 가장 많았던 종교가 천도교이다. 당시 북한의 천도교신자는 약 169만여 명으로, 그 숫자는 한반도 전체 천도교신자의 70%에 달하였다.<sup>136)</sup> 또한 천도교는 수적으로만 방대하였던 것이 아니라, 일제치하에서 천도교의 전위단체인 천도교 청우당을 조직하여 반일운동 및 신문화운동을 전개하는 등, 민족주의적이고 현실참여적인 종교활동을 통해서 막강한 교세를 확보하고 있었다.

135) 북한의 지하교회 및 교인들에 대한 증언은 많다. 고대우, 앞의 책, pp. 115-121; 「카타쿰소식」 (1992. 4), pp. 4-6; 「국민일보」, 1989. 11. 8; 「주간조선」, 1989. 9. 3; 「월간조선」 (1996. 12), pp. 260-288 참조.

136) 고대우, 위의 책, p. 63. 또 다른 문헌에는 해방 당시 북한의 천도교신자 수가 약 280여만 명이었던 것으로 기술되어 있다. 류성민, 「북한주민의 종교생활」, p. 189.

북한당국은 이와 같은 천도교의 교세를 공산정권 수립과정에서 이용하기 위해 1945년 북조선 천도교 청우당을 결성하였을 뿐만 아니라<sup>137)</sup> 1946년에는 조선천도교 중앙지도위원회를 결성하는 등, 천도교 교세에 적극 접근하였으며 천도교와의 긴밀한 협조관계유지에 주력하였다.

북한의 천도교는 천도교청우당 결성 이후 별다른 활동이 없었으며<sup>138)</sup> 1970년대에 들어서면서 부터 천도교 청우당 중심으로 활동하기 시작하였다. 노동당의 우당으로서 존속하고 있는 천도교 청우당 역시 노동당의 정치적 도구로 기능하고 있으며, 특히 1972년 남북대화가 시작되면서 대남선동공세에 있어 전위적 역할을 담당해 오고 있다.<sup>139)</sup> 그러나 조선 천도교회 중앙지도위원회는 1986년부터 천도교 창도 기념일인 천일기념식을 행하고 있으며, 1994년에는 단군제를 거행하는 등 종교본연의 활동도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sup>140)</sup>

137) 북조선 천도교 청우당은 1946년 재창당 되었다가 1950년 월북한 남조선 청우당을 흡수통합하여 조선천도교 청우당으로 발족되었다.

138) 1948년에 “남북통일을 위한 천도교인 3.1재현운동”과 관련된 천도교계 지도자들이 대량 체포 투옥되는 과정에서 북한 천도교를 실질적으로 지도하였던 간부들이 처형당함으로써 천도교 조직체계가 와해 되었으며, 이에 대해 북한 력사사전은 다음과 같이 서술하고 있다. “천도교청우당은 그 지도적지위에 잠입했던 민족반역자, 반동분자들을 청산하고 그의 여독을 없애는 투쟁을 통하여 자기대렬을 정비하였으며……” 「력사사전」, p. 742.

139) 윤재근 외, 「북한의 문화정보 I」 (서울: 고려원, 1991), pp. 221-224.

140) 「내외통신」 9283호 (1994. 12. 21) 북한당국은 1993년 10월 단군과 그의 부인의 유골을 발굴했다면서 단군릉 재건에 착수, 1994년 10월 단군릉 준공식을 가졌으며 12월에 평양 강동군의 단군릉에서 천도교인들이 참석한 가운데 단군제를 거행하였다고 한다. 또한 단군제는 천도교의 제례를 기본으로 하고 여기에 단군대종교의 제례와 조상전래의 제법 등을

천도교 청우당은 북한내에 유일한 종교단체적 성격을 띤 정당이  
며, 천도교회 중앙지도위원회와 연관을 맺고 있다. 그러나 천도교  
청우당과 조선천도교 중앙지도위원회는 조직상으로만 이원화되어  
있을 뿐 실제활동은 단일단체처럼 하고 있다.

천도교 청우당 중앙위원회 위원장은 유미영으로, 1989년 사망한  
최덕신의 처이며 최고인민회의 대의원이고, 범민련 북측본부 중앙  
위원 겸 재북평화통일 촉진위원회 고문 등을 맡고 있다. 또한 천  
도교는 아직도 북한에서 신도 수가 가장 많은 종교로 되어 있으  
며,<sup>141)</sup> 천도교 청우당 위원장을 비롯한 일부 청우당원들은 타종교  
단체지도자들에 비해 정치적 영향력도 큰 것으로 알려져 있다.<sup>142)</sup>

북한의 천도교신자 수는 1만5천여 명이며, 교당이 평양 및 각도  
별로 산재해 있고, 일반신자들은 일요일에 10명에서 20명씩 전교  
실에 모여 시일례식이라는 예배를 드리고 있으며, 이 때 도정 교  
정 등 나이가 많고 공로를 세운 고참신도가 의식을 지도한다고  
한다.<sup>143)</sup>

북한에서 천도교는 타종교에 비해 비교적 긍정적인 평가를 받고  
있다. 이는 천도교가 민족주의적이며 현실참여적이었고, 농민의  
지지를 받았을 뿐만 아니라, 사회주의 건설과 통일전선에 적극 참  
여했다는 점에 근거해서이다. 북한의 사전에서도 천도교는 긍정적  
으로 서술되어 있다.

배합해 진행됐다고 한다.

141) 류성민, 「북한주민의 종교생활」, p. 191.

142) 류성민, 「북한주민의 종교생활」, pp. 136-137.

143) 2월 말 북경에서 열린 남북종교인회의에 참석한 조선 천도교회 중앙지  
도위원회 부부장이 밝힌 것이다. 「동아일보」, 1996. 3. 3.

천도교 청우당: 천도교 청우당은 8.15해방 후 북조선에서 천도교를 믿고 있던 농민들을 주로하여 조직된 민주주의적 정당이다. 1946년 2월 8일 평양에서 창립되었다. 천도교 청우당은…… 조선로동당의 로선과 정책을 지지하고 새 조국건설에 참가하였다. 천도교 청우당은 조선로동당이 령도하는 민주주의 민족통일전선의 한 성원으로 서 조국의 평화적 통일과 공화국 북반부에서 반제반봉건적 민주주의 혁명수행에 참가하였다.…… 청우당은 조국해방전쟁 시기에는 전선원호와 후방의 공고화를 위한 사업에 참가하였다. 전후 사회주의 혁명과 사회주의건설 시기 조선로동당의 자주적 조국통일 방침을 지지하고 그의 실현을 위하여 투쟁하였고…… 오늘 청우당은 조선로동당의 로선과 정책을 받들고 공화국 북반부에서 사회주의 건설과 조국통일 위업의 축진을 위하여 계속 투쟁하고 있다.<sup>144)</sup>

천도교: 우리나라 종교의 하나인 동학을 갑오농민전쟁 이후시키고쳐 이름지은 것. 교조는 최제우이다. <사람이 곧 한울>이라는 것을 기본교리로 내세우고 <보국안민>의 지향 밑에 <지상천국>을 건설할 것을 주장한다.<sup>145)</sup>

천도교: 19세기 중엽 우리나라에서 발생한 종교. 동학 또는 동학교라고 부르다가 1905년에 천도교로 이름을 고치었다. 우리나라에서는 19세기 중엽에 리조봉건 통치배들의 책동과 구미 자본주의 열강의 침입으로 낡고 반동적인 봉건유교사상과 서구라파로 부터 침습한 예수가 각종 허위적인 종교미신 사상을 퍼뜨리면서 사람들의 사상의식을 쪼먹고 있었다. 이러한 역사적 환경에서 당시 일부 민족의식이 강한 사람들이 나라의 장래를 우려하면서 주자성리학과 예수교의 교리를 반대하고 동학(조선의 학문이란 뜻)을 제창하여 나왔다.…… 해방 이후에 공화국 북반부에서는 천도교인들이 천도교 청우당을 조직하고 민주주의 민족통일전선 운동에 적극 참가하여 왔다.<sup>146)</sup>

144) 「력사사전」, p. 742.

145) 「조선말대사전」, p. 506.

한편 북한당국이 정권 및 체제유지와 관련해서 천도교와 긴밀한 협조관계를 유지하고 있음은, 다음과 같은 천도교측의 강변에서도 잘 드러나고 있다. 즉 “천도교는 체험을 통하여 위대한 수령 김일성 주석께서와 친애하는 지도자 김정일 선생님께서 영도하시는 정치를 받들 때 인내천의 이념이 구현된 후천개벽을 이룩하고 지상천국 건설의 최고목적을 실현할 수 있다는 것을 확신하게 되었다”는 것이며,<sup>147)</sup> 따라서 “청우당원들과 천도교인들은…… 김일성 주석과 친애하는 김정일 선생님을 민족의 위대한 영수로 높이 모시고 만민복지의 지상천국 건설이념을 끝까지 실현할 것”이라고 한다.<sup>148)</sup>

## 6) 무속신앙

한국인에게 있어 전통적 민간신앙의 뿌리는 깊다. 특히 무속신앙은 민중의 신앙으로서 민간신앙의 주요부분을 차지하고 있으며, 오랜 역사를 통해 한국인의 의식구조 근저에 자리하고 있는 토속적인 신앙이다.<sup>149)</sup> 무속신앙은 정통종교화하여 보편화된 것은 아

146) 「철학사전」, pp. 547-548.

147) 「평양방송」, 1991. 4. 6.

148) 「중앙방송」, 1991. 2. 8; 조선천도교중앙지도위원회는 1996년 10월 3일 개천절을 맞아 단군제를 열고 김일성 김정일이 전설로 전해왔던 단군을 개원시조로 찾아주었다면서 金父子를 조선의 하늘님이라고 칭하였다. 「내외통신」, 1996. 10. 4.

149) 무속의 종교성여부와 관련해서는 다음의 글을 참조하였다. “무속을 미신이라 하는 것은 일정한 종교신앙자들에 의한 타종교에 대한 멸시나 과

니었지만, 고래(古來)로 한국인의 의식 속에 깊이 내면화되어 그들의 생각과 행위를 지배하고 규제하는 하나의 생활규범적인 기능을 하기도 하였다.

해방 전 북한에서의 무속신앙도 상당히 활발했던 것으로 알려져 있다.<sup>150)</sup> 그러나 공산정권 수립이후, 북한당국은 무속신앙적 행위를 비과학적인 미신이라 하여 철저히 단속하였으며, 이에 따라 무당, 점쟁이, 성황당 등 무속신앙적 요소들을 찾아볼 수 없게 되었다. 또한 북한의 사전에서도 무속신앙과 관련된 용어들은 매우 부정적으로 개념정의 되어있다.

미신: 전날에 과학적 세계관을 가지지 못하고 문화적으로 깨어나지 못한 사람들이 자연과 사회의 사물현상을 어떤 초자연적인 힘과 그것의 작용에 의한 것이라고 맹목적으로 믿는 것.<sup>151)</sup>

샤머니즘: 종교미신적 관념에서 영혼을 숭배하는 일종의 원시종교. 세계의 넓은지역에 퍼져있었다. 무당들이 믿던 미신도 이에 속한다.<sup>152)</sup>

샤머니즘: 영혼을 믿는 미신의 한 형태…… 그 특징은 무당들이 원시적인 종교행사를 직업적으로 담당하는 것이다.…… 샤머니즘은 사

---

학(특히 자연과학)의 입장에서 보는 시각이다.” 최길성, 「한국무속의 이해」 (서울: 예전사, 1994), p. 227-228 참조; “‘궁극적인 것에 대한 믿음’이라는 광의의 종교정의를 따른다면 무속도 하나의 종교라 할 수 있다.” 최길성, 위의 책, p. 56.

150) 해방 전 북한지역은 산이 많아 산을 중심으로 한 산신신앙이 널리 퍼져 있었다고 한다. 마을단위로 공동체의 의례로 모셔지던 산신당이 곳곳에 있었으며, 북한지역에 속해있는 개성부근 덕물산은 8도무당의 본산지로 최영장군을 모신 일종의 메카로 알려져 있다. 「내외통신」 제970호.

151) 「조선말대사전」, p. 1219.

152) 「조선말대사전」, p. 1719.



회가 더욱 발전함에 따라 착취계급의 보다 세련된 사상적도구인 기독교 회교 불교 등 종교에 의해 점차 없어지게 되었다. 그러나 이러한 종교들에도 샤머니즘의 잔재들은 남아있다.<sup>153)</sup>

무당: <귀신을 부린다>는 허황한 미신에 따라 행동하는 일종의 마술사 무당은 귀신 또는 초자연적인 힘을 마음대로 <부려> 재난을 물리치고 복을 가져올 수 있다고 믿는 미신에 따라 행동한다.…… 무당이 귀신을 <섬기기> 위하여 거울을 <신체>로 삼고 북, 방울과 같은 것을 울리면서 굿과 풀이를 하는 종교적행사를 일반적으로 샤머니즘이라고 한다.…… 무당은 원시사회 이래로 사람들의 일상생활과 지적발전에 막대한 해독을 끼쳤으며 특히 계급사회에서는 정치적 지배세력과 결탁하여 인민대중을 억압착취하는데 복무하였다.…… 해방후 공화국 북반부에서는 무당이 완전히 없어졌으나 남반부에서는 미제침략자와 그 주구들이 오늘도 이것을 인민들에게 무지와 몽매를 강요하고 자기들의 반동적통치를 합리화하며 인민들의 반항을 무마하는 수단으로 리용하고 있다.<sup>154)</sup>

위에서 서술했듯이 북한당국은 해방후 북한에서는 무속신앙적인 행위가 근절되었다고 말한다. 그러나 당국의 철저한 단속에도 불구하고 최근들어 북한에서는 무속적 행위가 점점 성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최근들어 북한에서는 부적을 갖고 다니거나,<sup>155)</sup> 관상, 손금, 점을 보는 미신행위가 늘어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이같은 미신행위는 청소년층에게 까지 확산되고 있어, 북한당국은 ‘미신행위풍습 근절을 위한 비판토론회’를 개최하는 등, 미신행위 확산방지에 고심하고 있다는 것이다.<sup>156)</sup>

153) 「철학사전」 p. 363.

154) 「력사사전」, pp. 807-808.

155) 부적(符籙)은 주부(呪符)라고도 한다. 부적은 재앙이나 잡귀를 물리칠 수 있는 주력(呪力)을 가진 글자라는 의미가 있다.

그런가하면 북한에서 널리 퍼지고 있는 무속행위 가운데 하나인 점복(占卜)행위는 북한당국에 의해 거의 묵인되고 있으며, 1980년대 후반 들어서는 당·정·군 간부들이 이름난 점쟁이의 단골손님이 되었다고도 한다.<sup>157)</sup> 실제로, 몇 사람의 귀순자들에 의하면 그들은 북한탈출을 결심한 후 불안한 마음에서 점쟁이를 찾아갔었다고 하는 증언도 있다.<sup>158)</sup>

북한주민들 사이에 무속행위가 만연된 것은 대체적으로 1980년대 이후라고 한다. 이러한 사실은 북한의 심각한 경제난으로 인해 북한주민들이 생활에 위기를 느끼며 심리적으로 매우 불안한 상태에 있음을 반증하는 것이라고 하겠다.<sup>159)</sup>

한편, 김일성 사후 북한당국은 김일성의 신성(神性)을 부각시키려는 의도에서, 여러차례에 걸쳐 북한전역에서 특이한 자연현상,

- 156) 방북자들의 증언에 의하면 북한의 청소년들은 부적을 지니고 다니거나 점을 치기도 하며, 이외에도 주패(트럼프)를 가지고 신수떼기를 하면서 운수, 질병 발생여부, 진학문제 등을 결정하고 있고, 노년층에서는 사주나 궁합을 보아 결혼을 결정하며, 길일(吉日)을 택해 결혼식을 하고, 정안수를 떠놓고 정성을 비는 등 미신행위가 만연되고 있다는 것이다. 「내외통신」 제7373호 (1991. 7. 10); 「내외통신」 (1996. 6. 6).
- 157) 「내외통신」 제995호; 귀순자 김용에 의하면, 80년대 말부터는 점쟁이들의 영향으로 북한주민들 사이에 조상에게 제사지내고 성묘하는 사람들이 갑자기 늘어났다고도 한다. 김 용, 「머리를 빠는 남자」 (서울: 자작나무, 1993), pp. 262-264.
- 158) 탈북 전에 '소문난 점쟁이'를 찾아가 앞일을 점쳐 보았다는 귀순자로는 임영선, 이옥금, 정순영 등이 있으며, 그들 말에 의하면 결과적으로 점쟁이의 말이 맞았다고 한다.
- 159) 한 연구자에 의하면, 과거 조선시대의 우리민족은 여러종교를 함께 지니고 있었지만 삶의 위기에 이르러서는 대체로 무속에 의존하였다고 한다. 다시 말해서 삶의 위기는 무력의 종교적 역할을 증대시켰었다는 것이다. 이필영, 「조선후기의 무당과 굿」 「정신문화연구」 16권 4호 (서울: 한국정신문화연구원, 1993)

즉 기적 현상이 발생했다고 선전하고 있다.<sup>160)</sup> 이는 곧 김정일 세습체제의 정통성을 유지 강화하기 위하여 북한 주민들 사이에 내재해 있는 무속신앙적 종교성을 이용하고자 하는 의도를 지닌 것이라 하겠다.<sup>161)</sup>

## 7) 대중교

김일성의 교시에 의하면 “대중교란 우리나라의 건국신화에 나오는 환인, 환웅, 환검을 신주로 하는 순수한 조선종교”이다.<sup>162)</sup>

북한은 1993년 평양 인근의 단군릉에서 단군의 유골과 유물을 발견했다고 발표하면서, 김일성이 단군의 직계자손이라는 주장을 하고 있고, 단군교를 부활시키려는 움직임이 있다고 알려지고 있다.<sup>163)</sup> 그러나 대중교의 교단, 신도 등에 관해서는 알려진 바가 없으며, 사전적 정의도 긍정적이지만은 않다.

단군신화: 고조선의 건국신화…… 단군신화는 우리 민족의 역사의 유구성을 말하여준다…… 종래 단군조선과 단군은 봉건사가나 부르

160) 「동아일보」, 1995. 8. 1; 「한국일보」, 1996. 7. 15.

161) 한민족에게 있어 무속신앙은 전통적 민간신앙의 주요부분이었으며, 한국 민간신앙에서 구름, 태양, 별 등과 같은 자연현상과 새, 꽃, 산, 바다, 짐승 등 자연물은 각기 신성한 의미를 지니고 있었다. 또한 무속신앙에서는 인신을 섬기었는데 특히 생전에 위대한 업적을 쌓고 존경받았던 인물은 사후에 특정지역의 수호신이 되기도 하였다.

162) 김일성, 「세기와 더불어」 3권 (평양: 조선로동당 출판사, 1992), p. 392.

163) 「내외통신」 제875호 (1993. 11. 25); 최근들어 북한당국이 묘향산의 단군사(단군교도들의 집단 신앙처소)와 단군릉을 복원하고, 고조선 유물유적 발굴사업의 성과를 과시하고 있음은 북한정권의 정통성이 역사적으로 입증되고 있음을 강변하기 위한 의도로 풀이되고 있다.

췌아 민족주의사가에 의하여 실재한 고대국가, 실재한 인물인 것처럼 과장되기도 하였다. 단군신화는 거짓말을 많이 담고 있으며 또한 고조선통치배들이 계급적지배를 합리화하기 위하여 꾸며낸 부분도 있기는 하나 당시의 현실을 일정하게 반영한 것이었다.<sup>164)</sup>

조상숭배사상: 조상들의 신을 섬기는 원시종교…… 조상숭배는 계급 사회에 들어오면서 계급성을 띠게 되었으며 통치배들의 통치지위를 옹호해 주는 국가보호신에 대한 여러가지 신화와 전설들을 낳는데 까지 이르렀다. 고조선의 건국신화인 단군신화도 이렇게 되어 만들어졌다.<sup>165)</sup>

대종교는 조선민족 고유의 종교로서 우리나라의 원시조인 단군과 그 교리를 믿고 숭배하는 종교이다.…… 대종교는 19세기 말 20세기 초 외래침략자 특히 일본침략자들의 우리나라에 대한 침략책동이 발광적으로 진척되던 시기 우리 인민의 애국애족 정신과 민족자주의식의 발현으로 발생하였다. 발생초기 단군교라고 불리웠는데 일제의 탄압책동을 피하여 단군이라는 이름대신 크다는 뜻으로서 <대>자와 신적인 사람 혹은 원시조라는 뜻을 가진 <종>자를 붙여 대종교라고 이름지었다.…… 대종교에 의하면 원래 단군은 나라를 세우고 사람을 교화하기 위하여 신교를 만들었는데 이 신교는…… 13세기 이후부터 20세기초 까지 700년 동안 불교나 유교를 비롯한 외래종교에 의하여 짓눌려 빛을 뿌리지 못하다가 라철이 다시 일으켜 빛내었다고 한다. 대종교를 중흥시킨 기본목적은 일제의 조선침략과 식민지 정책으로 인하여 망국의 비운이 무겁게 드리웠던 역사적시기 나라를 비록 망한다 하더라도 조선민족의 일만은 지켜내어 살아 숨쉬게 하자는 데 있었다.…… 대종교는 우리민족의 원시조를 내세우고 하느님을 믿어도 조선의 하느님을 믿을 것을 주장하는 측면에서 긍정적의의가 있으나 실존한 인물을 신적인 존재로 우상화하고 내세운 제한성을 면할 수 없다.<sup>166)</sup>

164) 「력사사전」, pp. 472-473.

165) 「철학사전」, pp. 461-462.

166) 량만석, “우리민족의 고유종교 - 대종교,” 「철학연구」 (1994. 3)

### 제III장 북한주민의 종교관

종교관 분석에서 사용되는 가장 보편화된 기법은 설문조사를 통한 서베이 방법이다. 또한 종교관 분석을 위한 관점으로서 일반적인 설문내용은 다음과 개념화된다. 즉 인간기원, 신의 존재, 종교의 필요성, 내세의 존재, 영혼의 존재<sup>167)</sup> 세계관, 인성관(人性觀), 내세관(來世觀), 대신앙관(對信仰觀), 종교역할관, 종교선택관<sup>168)</sup> 등이 그것이다.

북한은 극도의 폐쇄체제이며 통제체제이고 감시체제이다. 따라서 북한주민의 종교관 분석은 설문조사를 통한 서베이 방법이 불가능하며 간접기법의 하나인 문헌중심의 내용분석을 할 수 밖에 없다. 또한 북한당국이 주장하는 바, 북한의 종교가 대내외적인 개방을 공식화 하였다고는 하지만, 대부분의 귀순자와 방북자의 증언으로 미루어 볼 때,<sup>169)</sup> 대체적으로 북한주민들은 종교에 대해 무지하며 부정적인 견해를 지니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위에 열거한 것과 같은 종교관 분석을 위한 일반적인 관점들로 북한주민의 종교관을 분석한다는 것은 무리이다.

167) 안귀덕 외, 「한국의 청소년문화 (II)」, (서울: 한국정신문화연구원, 1992), pp. 306-311.

168) 홍승직, 「한국인의 가치관연구」, (서울: 고려대학교 출판부, 1969), pp. 145-158.

169) 류성민, 「북한주민의 종교생활」, pp. 36-40, 48-49; 고영환, 「평양 25시」, (서울: 고려원, 1992), pp. 75-76; 1993년 귀순한 임영선씨에 의하면 북한에 살았을 당시 그는 종교에 대한 아무런 개념이 없었고 종교에 대한 관심도 없었다고 한다. (1996년 5월 7일 서면질의).

북한주민의 종교관 분석은 북한의 소설 속에 나타나는 북한주민들의 종교적 심성을 구명(究明)해 내는 것에 초점을 두고 행해진다. 즉 소설에 등장하는 인물들의 관념 및 행태에 있어 어떠한 종교성이 드러나는가를 살펴보고자 하는 것이다. 북한의 신정체제적 특성<sup>170)</sup>과 우리민족 전래의 무속신앙적 사고, 유교문화적 정서 등을 주목한다면<sup>171)</sup> 소설분석을 통한 북한주민의 종교적 관념 내지 행태 구명도 의의있는 연구가 되리라고 본다.<sup>172)</sup>

이 장에서 북한주민의 종교관은 유교적, 기독교적, 무속신앙적 관념 및 행태 등으로 각각 나누어 분석된다.<sup>173)</sup>

- 
- 170) 신정체제에서는 통치권의 당위를 초인간적인 절대자의 신성(神性)에서 구하며 통치권은 인민의 신심(信心)에 기초하여 행사한다. 이상우, “김일성체제의 신정적특성,” 『동아연구』 제15집 (서울: 서강대학교 동아연구소, 1988. 10), pp. 1-2; 극도로 신격화된 김일성 김정일의 우상화 과정에서는 특히 기독교와 무속신앙적인 종교 교리 및 사상이 적극 활용되었다.
- 171) 전쟁 이전까지만 해도 한국사회에서의 종교는 이미 한국화되어 버린 불교와 유교가 대표적인 종교였으며 이것 자체가 한국사회에서는 일종의 기층문화적인 성격을 이룩하고 있었다. 다시말해서 대다수의 사람들이 어떤 특정 종교의 신자가 아니라 할지라도 그들의 생활양식 자체가 전통적인 종교의 속성을 반영하고 있었다고 할 수 있다는 것이다. 진덕규, “종교,” 『사회과학과 정책연구』 제6권 제3호, p. 154.
- 172) 북한주민의 종교관은 북한주민의 종교개념을 정의한다거나 북한주민의 특정 종교에 대한 관념 내지 생각, 태도 등을 구명하기 보다는 소설 속에서 북한 주민들이 어떠한 종교적 관념 및 행태를 나타내는가를 구명하여 북한주민의 종교적 심성을 논하고자 하는 것이다.
- 173) 소설 분석과 귀순자 및 방북자의 증언을 종합해 본 결과 북한주민들에게 있어서, 유교 그리스도교 무속신앙 외의 종교와 관련되는 관념 및 행태는 별로 나타나지 않고 있다.

## 1. 유교적 관념 및 행태

유교란 공자 및 그 후계자들의 가르침을 말한다.<sup>174)</sup> 유교는 계시종교로서의 그리스도교와는 달리 신앙의 대상으로서 절대적 존재가 없는 종교이다.<sup>175)</sup>

유교인이 실천해야 할 보편적인 덕은 인이며, 인의 근본은 효이다. 유교에서는 말하기를 “효는 덕의 근본이며, 효도와 우애는 인을 행하는 근본이다”라고 하여 부자(父子), 형제 사이의 인간적 사랑으로서 효제(孝弟)의 도덕적 실천은 하늘이 인간에게 내려준 도덕성을 실현하는 근본적 방법이라 인식되고 있다.<sup>176)</sup>

174) 이기동, “유교사상의 핵심은 중용사상,” 『전망』 (1995. 2), p. 155.

175) 유교의 종교성에 관해서는 다음의 책을 참조. 줄리아 칭 지움, 임찬순의 옮김, 『유교와 기독교』 (서울: 서광사, 1993), pp. 32-37. 여기에서 저자는 유교란 어의적으로 공자에 의해서 발전된 어떤 이데올로기를 의미하며, 자신은 유교란 개념을 유교적 전통 전체를 가리키는 것으로 사용한다고 밝히고 있다. 또한 그는 유교는 여전히 세속종교로 남아있고 어디에 있는 앞으로도 세속종교로 남아있을 것이라고 하며, 기본적으로 유교가 종교인가 철학인가 아니면 그 중간의 어떤 것인가 하는 물음은 유교를 재평가하는 작업에 별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한다; 유교의 종교성과 관련된 또 하나의 견해에 따르면, 서구적인 의미의 종교개념에서는 유교의 종교성은 애매하여 단정하기가 어려운 것은 사실이지만, 제례(祭禮)가 유교의 본질적인 구조에 자리잡고 있으며 또한 제례가 근본적으로 종교적 성격을 내포하고 있다면 유교가 종교적인 사상체계라는 것은 명확한 것이라고 한다. 즉 유교의 종교적 특성은 제사에 있어서 천(天)과 조상의 신(神)을 하나의 근원 속에 통일시켜서 신앙하고 있는 데서 찾아볼 수 있으며 또한 천의 인간 속에 내재화를 믿고 성실과 경건으로 인간의 완성, 천의 체현을 이상하는 신앙은 유교의 본질적인 종교적 성격이라는 것이다. 금장태, 『유교사상과 종교문화』 (서울: 서울대학교 출판부, 1994), pp. 229-231.

176) 금장태, 위의 책, p. 227.

덕과 인의 근본인 효는 부모를 섬기는 데서 출발하며, 효는 부모 생시(生時)에는 물론 부모 사후에까지도 행해야 할 실천윤리로 강조되고 있다. 여기에서 효란 자식의 부모에 대한 일방적인 관계만을 지칭하는 것이며, 부모생전에 있어서의 효도(부모를 섬기는 일)의 개념은 다음과 같다. 즉 부모를 존경하는 일, 부모에 시중드는 일, 부모를 부양하는 것, 부모의 마음을 즐겁게 하는 것, 부모의 뜻을 받드는 것 등이 그것이다.<sup>177)</sup> 또한 부모사후의 효는 예법에 맞게 제사를 드리는 데에서 실현된다.

한편 유교의 대표적인 윤리 덕목인 오륜은 인의 구체적인 실현을 위한 인간관계의 실천윤리이다. 인간관계의 보편적 윤리로서 강조되고 있는 오륜은 부자유친(父子有親), 군신유의(君臣有義), 부부유별(夫婦有別), 장유유서(長幼有序), 붕우유신(朋友有信) 등을 내용으로 하고 있다.

조선왕조 이래, 한국인에게 있어 유교는 종교라기 보다는 보편적인 생활윤리 내지 규범체계였고, 정치이념 내지 정치철학이었으며, 한국사회의 모든 영역에 적지않은 영향을 미치어 왔다. 따라서 조선왕조 500년 전통의 유교문화적 사고는 한국인의 정서에 있어 기본토양을 이루고 있으며 북한주민들도 예외가 아니다.

이상과 같은 관점에서 유교의 보편적인 덕 내지 윤리덕목이 북한주민들에게서는 어떻게 나타나고 있는가를 살펴보기로 한다.

177) 최재석, “한국가족의 전통적 가치의식,” 『아세아문제연구』 제7권, 2-4호 (서울: 고려대학교 아세아문제연구소, 1964), pp. 22-26.



## 가. 효

북한소설을 통해서 보면 북한주민들의 부모에 대한 효심 내지 효행은 지극한 것으로 묘사되어 있다.

중편소설 「세대」에 등장하는 한 젊은이가 그의 부모에게 보낸 편지의 한 구절을 보면, 여기에서 그는 부모의 깊은 사랑과 기대에 대한 보답으로서, 또한 아들된 도리로서 부모를 모시겠다는 뜻을 밝히고 있다.<sup>178)</sup>

사랑하는 아버지, 어머니! 저는 싸리골의 부모님들을 내 힘껏 끝까지 모시겠습니다. 저는 부모님들의 아들입니다.…… 존경하는 아버지, 어머니!…… 부모님들도 이제는 늙으셨으니 제가 도시에 모셔다 편안히 지내시도록 하자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는 것이 저를…… 품에 안아키워준 부모님들의 사랑과 기대에 보답하는 것이고 아들된 도리라고 생각합니다.<sup>179)</sup>

다음의 소설에서는 어머니에 대한 존경과 공지로 인해 매사에 어머니의 뜻을 따르며 또한 그렇게 하는 것을 자식으로서의 마땅한 도리라고 생각한다.

<전 어머니의 말씀을 따를 때마다 응당 아들로 그래야 하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또 그래서 후회한 적도 없었구요.> 선선히 대답하는 태진의 얼굴에는 진심이 어려있었다. 사실 그는 지금까지 언제 한번 어머니 의사를 거역한 적이 없었다. 그렇게 하는 것은 자식으로서의 도리와 함께 관리위원장 사업을 보는 어머니에 대한 존경으로부터

178) 유교 윤리에서 효도의 기본개념은 은혜에 대한 보답이다.

179) 김삼복, 「세대」(평양: 문예출판사, 1985), pp. 104-105.

시작된 것이었다.<sup>180)</sup>

다음의 소설에서는 부모 사후에까지도 효행을 보이는 사람에 대해 감동하는 장면이 묘사되어 있다.

<부친 산소를 찾아가네..... 부모를 모시는데서는 자네들 가난한 사람들이 늘 보아야 지극하더군. 나두 이젠 가난한 사람이 되었으니 선친을 모시는 데서도 자네들하구 달라서야 되겠나.>  
정기호는 듣고보니 정말 감동되었다. 그는 머리를 끄덕이며 진심으로 말했다. <자네 효성이 놀랍구만! 어서 가보게.><sup>181)</sup>

다음의 예에서도 부모 사후에까지도 효가 계속되어야 한다는 우리 전통사회의 유교적 가치관이 내재되어 있음을 시사하고 있다.

<..... 저한테 그래도 누이가 어머니나 같은데 왜 누이 손에 의지하고 싶지 않겠나요? 하지만 난 고향으로 가야해요. 아버지의 넋이 깃들고 유골이 묻힌 땅인데 달리할 수도 없잖아요.><sup>182)</sup>

이상에서와 같이 소설 속의 북한 주민들은 부모 공경과 섬기는 일을 소홀히 하지 않으며, 부모사후에도 효를 실천하는 것을 중요시 여기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물론 북한 소설에서는 유교에서 강조하는 바, 부모사후의 효를 실현하는 것, 즉 예법에 맞게 제사 드리는 것을 묘사한 대목을 찾아보기는 어렵다. 그러나 남한사회를

180) 김용한, 「청춘의 시작과 끝은 언제」 (평양: 금성청년출판사, 1990), p. 194.

181) 장동일, “두친구,” 『조선문학』 (1994. 3) p. 74.

182) 김혜영, “아름다움을 자랑하라,” 『청년문학』 (1991. 9) p. 39.

배경으로 한 작품 중에는<sup>183)</sup> 제사 및 성묘를 묘사하고 있으며, 월간 「조선문학」의 한 글에서는 이를 전통적인 풍습이라고 말하고 있다.<sup>184)</sup>

오늘은 추석날이다. 세상떠난 사람들의 분묘를 찾아가 제사를 차려 놓고 고인을 회고하는 우리민민의 전통적인 풍습이 깃든 날이다.<sup>185)</sup>

요약하건대, 귀순자 대부분의 증언으로 미루어 볼 때,<sup>186)</sup> 북한 주민들은 유교의 제사와 성묘를 소홀히 하지 않으며, 북한당국도 북한주민들의 이와같은 유교문화적 관념 및 행태를 묵인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sup>187)</sup>

183) 백은팔, “이대로 더는 못살아,” 「조선문학」 (1993. 3), p. 66.

184) 북한당국은 조상숭배를 “계급사회에서 착취계급이 계급적 지배를 합리화하는 풍습과 사상”으로 규정한 바 있으며, “유교는 조상숭배에 긴밀히 결합하여…… 량반 통치배들은 계급적 모순을 은폐하여 투쟁의식을 약화시키는 봉건 유교도덕과 혈연관념을 고취하기 위하여 조상에 대한 숭배를 계속 장려”하였다고 비판한 바 있다. 또한 김일성은 제사에 대하여 말하기를 “음식을 많이 차려놓고 제사를 지내는 것도 낡은 생활습성의 하나이다.…… 제사를 지내는 것은 죽은 사람을 잊지 않기 위함이다. 그러므로 제사날에 무덤에다 꽃을 갖다 놓던가 가족들이 한자리에 모여서 경건한 마음으로 죽은 사람의 지난 날의 투쟁을 회상하면서 그가 다하지 못한 일을 살아있는 사람들이 마저하기 위하여 더욱 노력하자는 결의를 가지는 것이 좋을 것이다.”라고 한다. 「로동신문」, 1974. 1. 13, 한국정신문화연구원 편, 「북한의 실상」 (서울: 한국정신문화연구원, 1986), p. 142에서 재인용.

185) 김광남, “추석날에 핀 살구꽃,” 「조선문학」 (1995. 3), p. 13.

186) 이옥금씨에 의하면, 북한사람들도 조상은 지극히 모신다고 한다. 제사는 조부모까지 2대를 모시는데 추석, 한식, 선달그믐, 그리고 고인의 생일 등 1년에 4차례 지내며, 조상이 돌아가신 뒤 첫 해와 둘째 해에는 돌아가신 날 제사를 지내지만, 그 다음부터는 생일날 생일제를 지낸다고 한다. 또한 제사음식은 정성을 다해서 준비한다고 한다.

187) 공산정권이 수립된 이후, 북한에서 제사는 단속대상이 되었었다. 그러나

한 귀순자의 증언에 의하면, 1995년 7월 8일 김일성 사망 일주를 맞아 북한주민들은 집에서 음식을 장만해 영생탑 앞에 들고가 가구별로 제사를 지냈다고 한다.<sup>188)</sup> 또한 한 방북자에 의하면 북한에서는, 김정일이 공식적인 권력승계를 김일성의 3년상이 끝난 후로 미루고 있음은 북한당국이 “인민의 정서를 존중하기 때문”이라고 말하고 있다고 한다.<sup>189)</sup> 이러한 사실들은 북한주민들 사이에 유교문화적 정서가 면면이 이어져 내려오고 있음을 시사하는 것이라 하겠다.

#### 나. 남아선호 및 남존여비관

주지하듯이 유교의 제사는 부계조상에 한하여 장남 중심으로 행

---

당국의 단속에도 불구하고 일반가정에서는 은밀하게 제사가 행해졌으며, 1960년대 후반기에 들어서면서는 추석날에 성묘하는 것과 직계가족에 대한 탈상까지의 제사는 묵인되었다고 한다. 한국정신문화연구원 편, 앞의 책, pp. 141-142; 한 방북자의 수기에는 북한의 가정에서 제사지내는 모습을 형언하기를 “돌아가신 분들의 혼을 부르듯 정성을 모아 제사를 지낸다.”라고 하고 있다. 이은일, 「나에겐 또 하나의 조국이 있었다」(서울: 지문사, 1992), p. 108; 1995년 5월에 행한 귀순자 조영호 외 2인과의 면담 및 설문조사에 따르면 북한의 새 세대들은 돌아가신 부모와 조상의 제사 성묘 등에 대해 긍정적이라고 한다.

- 188) 1996년 귀순한 정순영씨의 증언이다. 그러나 이는 마음에서 우러나서 한 것이 아니라 북한주민들이 한 가구씩 제사를 지낼 때 적위대원들이 그 순서대로 이름을 적었기 때문이라고 한다. 「동아일보」, 1996. 7. 13; 영생탑이란 “위대한 수령님은 영원히 우리와 함께 살아 계신다”라고 새겨진 탑을 말하며 그 높이가 아파트 6층 높이나 된다고 한다.
- 189) 「서울신문」, 1996. 5. 12; 평양의 한 시인은 그의 시에서 “인민이 바라고 세계가 기다리는 추대를 미루시고 3년간 상복을 벗을 수 없다고 하시며 조상전래의 관습에 이 세상 처음으로 공산주의자의 도덕리리관을 창조하신 김정일동지...”라고 말하고 있다. 「내외통신」, 1996. 7. 5.

해지며, 제사에 있어서 여자는 간접적인 역할만을 한다. 즉 여자는 제사를 드릴 아들을 낳아 기르고 제사음식을 준비하는 데에만 필요한 존재이다. 그러나 이에 반해 남자는 제사에 있어 절대적으로 필요한 존재이다. 제사는 남자에 의해서만 전승되고 상속되기 때문이다. 따라서 유교에는 남아선호와 남존여비의 관념이 강하게 내재되어 있다. 이러한 유교적 가치관은 북한주민들의 의식 속에도 깊이 뿌리내려져 있으며, 소설속에서 어렵지 않게 찾아볼 수 있다.

다음의 예에서는 한 아버지가 집안의 대를 잇는 문제와 관련하여 남아선호관을 드러내고 있다.<sup>190)</sup>

외아들을 가진 부모들이 남달리 자식을 애지중지 하는 것은 많은 경우 가정의 대를 잇는 문제와 결부된 조심스러운 심리일 것이다. 그래서 내가 아들을 군대에 내보낼 때 옆에서들은 외아들을 꼭 군대에 보내겠는가고 한마디씩 했다.<sup>191)</sup>

다음의 예에서는 한 새 세대 여자가 아들이 없음을 안타까워 하는 어머니를 위로하면서 은연중에 자신의 남아선호관을 드러내고 있다.

<넌 꼭 간석지 건설장에 가야만 하겠니?..... 사업소에 그냥 남아 아버지를 도와주면 오죽이나 좋겠니? 남들이 부러워하게.....>.....  
<너를 보내는 아버지두 속으로는 무척 서운해 하실거다. 끝끝한 아들이라도 있다면 몰라두.....> <아이참, 어머니두..... 제 꼭 아들구

190) 유교에서는 효도의 의무와 제사의 전승 및 상속 때문에 아들로 집안의 대를 이어가야 함을 중요시한다.

191) 정영중, "사공령감," 『조선문학』 (1995. 6), p. 53.

실을 하겠어요. 그래서 아버지질 힘껏 돕겠어요.>192)

위에 인용한 예문 외에도 북한주민들의 남아선호관은 부모의 자식에 대한 기대, 자랑, 아들을 가진 동료와 이웃에 대한 부러움 등으로 묘사되고 있으며, 부모세대 뿐만 아니라 새 세대들에게서도 남아선호관이 강하게 나타나고 있다.

다음의 예는 여자를 수다스럽고 경박한 존재로 묘사하고 있는 소설의 한 대목이다.

오래간만에 만난 아버지와 아들은 기쁨을 금치못해 하면서도 입술이 가벼운 여자들과는 달리 말 보다는 눈과 표정으로 더 많은 이야기를 주고받는 듯 싶었다.193)

소설 「삶의 향기」에서는 남성중심적인 부부관계를 당연시하는 대목이 있다.

<도대체 너자에게 무슨 큰 뜻이 있겠다구…… 도무지 녀인들은 생활을 모르거던. 아이들을 훌륭히 키우는 일이며 가정의 화목과 알뜰한 꾸림이 곧 녀성의 희망중에서 큰 몫을 차지한다는 것 쯤이야 알고 있어야 할 게 아닌가.>194)

남편을 돕는 것을 안해로서의 본분으로 미덕으로 생각하며 살아온 안해는 본때있게 그림을 그려 보겠다던 꿈을 가슴속에 이수히 묻어둔 채 그냥 출판물 보급원으로 일하고 말았던 것이다…… 이것은 어쩔 수 없는 안해들의 생활이 아닐가?195)

192) 윤리태, “어제와 오늘,” 「조선문학」 (1991. 6), p. 41.

193) 전세창, “초불,” 「조선문학」 (1993. 3), p. 30.

194) 정현철, “삶의 향기,” 「조선문학」 (1991. 11), p. 42.

다음의 몇 가지 예에서는 북한 새 세대 여자의 자기비하적인 관념과 행태가 나타나고 있다.

가정이란 여성의 운명이 결정되는 세계가 아닌가. 처녀시절에 아무리 보람차고 행복한 생활을 누렸다 해도 어떤 남편을 만나 가정을 이루는가에 따라 그의 운명은 다시 결정되기 때문이다.<sup>196)</sup>

차체에서 헝하니 뛰여내린 진옥은 나더러 용접기를 가지러 가자고 했다. 나는 어처구니가 없었다. 처녀가 용접을 하다니?..... 알지도 못하는 주제에.....<sup>197)</sup>

<여자로서 차마 어려운 말을 하지않으면 안되는 사정을 리해해주길 바래요..... 나같은 건 버려도 좋아요. 전 워낙 동무의 짝이 될만한 여자가 못되여요. 밍구 무식하구..... 보잘 것 없는 여자의 말이라도 이걸 꼭 명심해 주세요.><sup>198)</sup>

이상과 같은 남존여비관은 귀순자의 증언에서도 확인되고 있다.

청소부가 없는 북한대학에서는 교실청소를 여대생들이 일체 도맡아 해야했다. 그리고 제대군인 학생들은 유교사상이 짙 들어차 가지고 어린 여대생들에게 이것 가져오라, 저거해라 하면서 자기 종처럼 부려 먹었으며 말을 안 들으면 그녀들의 머리카락을 잡고 구타를 하곤 하여.....<sup>199)</sup>

195) 정현철, 위의 글, p. 43.

196) 김용한, 앞의 책, p. 236.

197) 장옥순, "청춘시절," 「청년문학」 (1992. 8), p. 40.

198) 안선옥, "고백," 「조선문학」 (1991. 1), p. 37.

199) 전철우, 「평양 놀새 서울 오렌지」 (서울: 자유시대사, 1994), pp. 117-118.

같은 나이라 해도 여학생은 남학생에게 존댓말을 해야 합니다. 여학생들은 남학생에게는 ‘동무’ 제대군인에게는 ‘동지’라고 합니다.<sup>200)</sup>

북조선에서는 여자를 무조건 낮추어 보고 거칠게 다루는데……<sup>201)</sup>

북한당국은 남존여비사상을 일컬어 착취사회의 반동적윤리도덕관이며, “남존녀비의 낡은 봉건사상 가운데서 중요한 것은 유교에서 퍼뜨린 남존녀비사상”이라고 비판하고 있다.<sup>202)</sup> 그러나 위에서 서술한 바와 같이 북한주민들 사이에서는 유교의 남아선호 및 남존여비 관념과 행태가 강하게 드러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 다. 장유유서관

북한 소설을 통해 보면 북한주민들 사이에는 연상(年上)과 연하(年下)의 관계가 대체적으로 엄격하다. 즉 나이 어린 사람이 나이 든 사람에게 경의를 표하며 예의를 갖추고 공손하게 대한다.

리만섭은 그들의 이야기를 방해하고 싶지 않았다. 젊은이들이 자기가 불쑥 나타나면 무안해 할 것같은 생각도 든다.…… 리만섭은 할 수 없이 그들한테로 다가갔다. 윤희는 몸가짐을 바로 하며 자기가 앉았던 따스한 풀밭을 내어준다.<sup>203)</sup>

200) 좌담, “북한의 청소년생활,” 『민족지성』 (1989. 5), p. 112.

201) 위의 글, p. 111.

202) 『철학사전』, p. 138.

203) 황청일, “봄씨앗,” 『조선문학』 (1994. 11-12), p. 45.



윤희는 무릎을 꿇은 채 두 손으로 술잔을 받쳐들며 입을 연다. <저를 친딸처럼 생각하시고 잘못하는 일이 있으면 제 때에 꾸짖어 주세요.><sup>204)</sup>

<아버인 정말 좋은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인생을 많이 체험한 늙은이들에게서 그런 말을 들을 때면 힘이 생기지요.><sup>205)</sup>

그러나 장유유서관에 대한 귀순자의 증언은 위에서 서술한 것과 다르다. 귀순자 김만철씨에 의하면 특히 북한의 새 세대들은 옛날보다 예의범절이 없어졌으며, 어른들에게 깽뚝이 인사하는 것을 볼 수 없다고 한다.<sup>206)</sup> 또한 1989년도에 망명한 북한의 대학생도 북한에서는 연장자에 대한 예절이 지켜지지 않고 있다고 한다.<sup>207)</sup>

소설의 내용과 귀순자의 증언을 종합해 보건대, 북한주민들 사이에는 유교의 장유유서관이 점점 희박해져 가고 있음을 미루어 짐작할 수 있으며, 이는 특히 새 세대들에게 있어서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현상이라 하겠다. 다음의 예는 이러한 사실을 잘 묘사하고 있다. 이 대목은 술집에서 한 젊은이가 아버지뻘 되는 나이든 사진사에게 불손하게 맞서는 장면이다.

<젊은 동무, 조용조용 말하오. 어디 동무네들 뿐이요.> 건너편 식탁에 앉은 얼굴에 병색이 도는 중늙은이가 우렁우렁한 성대로 주의를 준다.…… <내 입을 가지고 내 말을 하는데 참견하지 마시오.>…… <어린 사람이 말버릇이 곱지 못하군. 그러문 어데가서 사랑을 받지

204) 황청일, 위의 글, p. 47.

205) 백보흠, 「우리의 벗」 (평양: 문예출판사, 1990), p. 15.

206) 국토통일원, 「김만철일가 북한실태 증언록」 (서울: 국토통일원, 1987), p. 30.

207) 좌담, 앞의 글, p. 111.

못하네.> <미안하지만 난 사랑을 받을 나이가 지났습니다. 어린 사랑이 아니라 공민권을 가진 어른이니까요.> 사진사는 얼굴이 창백해졌다.208)

지금까지 효, 남아선호 및 남존여비관, 장유유서관 등을 중심으로 북한주민의 유교적 관념 및 행태를 살펴 보았다. 위에서 서술한 바와 같이 북한주민들 사이에는 유교적 관념 및 행태가 강하게 드러나고 있으며, 이러한 유교적 관념은 그들의 교우관에 있어서도 예외가 아니다. 즉 소설에서나 귀순자의 증언에서나, 북한주민들은 친구 및 우정에 대해 커다란 의미를 부여하고 있으며, 친구 간에 신의를 중요시하고 그 신의도 강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209)

한편 북한당국은 인간관계를 위계적으로 통제, 합리화 시키는 유교문화적 전통을210) 이용하여 유교의 핵심개념인 효와 충을 김일성에 대한 충실성으로 대체하고 김일성에 대한 우상숭배를 조장하여 왔으며, 또한 유교의 전통적인 가치관인 가족주의를 이용하여 김일성 우상화는 물론 김정일 권력세습까지도 정당화 합리

208) 이상경, “최근 북한문학에 나타난 세대간의 갈등에 관한 연구,” 『94 북한 및 통일연구 논문집』 제2권 (서울: 통일원, 1994), pp. 118-119에서 재인용.

209) 임순희, “북한 새 세대의 가치관,” 『통일과 북한 사회문화』 (서울: 민족통일연구원, 1995), pp. 178-183.

210) 유교의 도덕윤리는 인간관계에 있어 서열과 위계질서를 중시하고 상하의 종적인 지배복종 관계를 엄격히 하였으며, 하위자에 대해서는 상위자에 대한 의무만을 강조하였다. 따라서 이와 같은 지배복종의 원리가 바탕이 된 유교적 정치질서에 있어서 지배자와 피지배자의 관계는 가부장적 권위에 의한 지배와 이에 대한 의무화된 복종의 관계로 설정되었다.

화시켜 왔음이 주지의 사실이다.<sup>211)</sup> 이는 곧 북한정권이 북한주민들의 의식구조에 깊이 내면화되어 있는 유교문화적 정서를 통치차원에서 활용한 것이라 하겠다. 즉 김일성을 아버지<sup>212)</sup> 노동당을 어머니당으로 칭하고, 김일성의 배려는 육친적인 사랑으로 표현하며, 당과 수령에 대한 ‘인민’의 절대충성과 복종은 아버지 사랑과 은총에 대한 당연한 보답으로 인식케 하고, 또한 김정일의 권력세습은 이른바 ‘주체혈통’의 논리로서 정당화 하는 등, 북한정

211) 북한의 사전적 정의에 따르면 가족주의란, “리기적인 목적을 위해 서로 싸고 돌면서 무원칙한 정실관계를 맺는 사상관점이나 행동”으로 그 사상적 근원은 “봉건유교사상, 부르췌아 사상에서 나온 개인리기주의”이며, 이러한 가족주의를 없애기 위해서는 주체사상교양과 집단주의 교양을 강화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철학사전」, p. 43, 「정치사전」, p. 4 참조; 그러나 북한사회가 실제로 드러내는 성격은 하나의 거대한 가족주의이다. 즉 북한사회의 구성원리이자 주민생활의 원리이며 규범인 집단주의에서 전통적인 가족주의 성향이 나타나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북한의 가족주의는, 김정일의 이른바 ‘사회정치적 생명체론’에서도 극명하게 나타난다. 사회정치적 집단은 수령, 당, 대중의 통일체이며, 여기에서 수령, 당, 대중은 하나의 생명으로 결합되어 운명을 같이 하는 사회정치적 생명체이므로, 그 사이에서는 혁명적 의리와 동지애의 관계가 이루어지게 된다. 즉 혁명적의리와 동지애는 개별적 사람들을 하나의 사회정치적 생명체로 결합시키는 작용을 한다는 것이며, 이는 곧 혁명적 의리와 동지애에 의거하여 수령과 각 개인이 혈연적인 관계를 맺게 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와 같은 혈연적인 관계로 형성된 사회정치적 집단은 곧 하나의 가족공동체라 할 수 있다. 여기에서 김일성은 아버지이고 당은 어머니이다. 그리고 북한인민은 수령과 당으로부터 생명을 받은 친형제들이다. 또한 수령으로부터 받는 사회정치적 생명은 영생하는 것이기 때문에 친부모로부터 받는 유한적인 육체적 생명에 절대 우선한다. 따라서 수령에 대한 충실성과 동지애는 절대적이고 무조건적이며 각 개인은 자신의 가족보다도 거대한 하나의 가족공동체인 국가에 헌신해야 마땅하다는 것이다.

212) 유교의 개념에 따르면 정치적인 군주는 천명을 받은 자이고 하늘의 아들이며 백성의 아버지요 스승이다. 줄리아 칭, 위의 책, p. 229.

권은 북한주민들의 유교문화적 정서를 통치차원에서 적극 활용한 것이다. 따라서 소설을 통해 보면, 김일성과 김정일에 대한 북한주민들의 관념 및 행태에서는 유교문화적 정서가 강하게 배어나오고 있다.

<친애하는 지도자동지의 은덕만 받아안은 우리들이 백성된 도리를 너무도 못하고 있네.....>213)

위대한 김정일동지의 령도를 충성으로 받들어 나가는 것은 어버이 수령님의 유훈..... 우리 녀성들은 언제 어디서나 장군님에 대한 절대적인 숭배심을 간직하고 그이의 사상과 령도에 끝없이 충직한 충신, 효녀가 되어야 할 것.....214)

다음은 북한의 가요에서 나타나는 가족주의적 정서다.

우리 아버지는 김일성장군,  
우리의 거처는 당의 보살핌일세,  
우리들은 형제자매들,  
우리들은 세상에 부러워할 것 없어라.215)

사람들 모두다 하나로 뭉치여  
지도자 동지를 모시고 따르네  
라라라라라 노래를 라라라라라 부르자

213) 김명진, 「소원」 「소원」 (평양: 문예출판사, 1992), p. 11; 북한에서 김일성 초상화 앞에 절하는 것은 그가 나라의 왕이기 때문에 그렇게 한다는 한 귀순자의 증언도 있다. 「북한, 그 충격의 실상」, 「월간조선」, (서울: 조선일보사, 1991), p. 94.

214) 「로동신문」 1995. 3. 8.

215) 가요, 「우리들은 세상에 부러워할 것 없어라」 중에서, 양성철 외, 「북한 기행」, (서울: 한울, 1986), p. 35에서 재인용.

행복한 내 나라 하나의 대가정.<sup>216)</sup>

또한 북한은 북한주민들을 김정일의 ‘한식술’로 칭함으로써 국가 가족주의의 또 다른 단면을 보여주고 있다.

장군님의 한식술! 이것은 위대한 수령, 위대한 령도자를 어버이로 모시고 사회주의 대가정의 한식술이 되어 자주적이며 창조적인 삶을 누려가고 있는 우리 인민에 대한 호칭이다.…… 우리 인민을 장군님의 한식술이라고 부르게 되는 것은 온 나라 전체인민이 위대한 장군님을 닮아 사상과 풍모는 물론 정서와 생활감정까지도 장군님과 똑같은 혼연일체이기 때문이다. 위대한 장군님을 닮아 장군님과 혼연일체를 이룬 장군님의 한식술, 이 식술은 위대한 장군님의 혈통, 주체형의 피줄기를 혈통으로 하는 하나의 집단이다.…… 사회정치적 생명체로서의 장군님의 한식술은 영생불멸의 주체사상을 생명소로 하고 있다.…… 우리 인민은 장군님의 한식술이 됨으로써 세기적위인의 식술, 만경대가문, 백두산가문의 식술이 된 위대한 인민으로 되었다.<sup>217)</sup>

## 2. 기독교적 관념 및 행태

기독교는 유일신, 절대자 ‘하느님’을 신앙의 대상으로 하는 종교이다. 기독교 신자들은 우주의 신비와 인생의 문제에 관하여 하느님에게서 답을 얻으며, 그의 ‘말씀’대로만 살려고 한다. 기독교는 “한 인간이 터득하고 깨달아서 문제의 해결책을 제시하는 것이 아니라 하느님이 손수 길을 가르쳐 주시고 인간을 불안과 공포, 고

216) 조 근 “빠스에서,” 북한우수단편선 「빠국새가 노래하는 곳」 (서울: 살림터, 1994), p. 333.

217) 「로동신문」, 1996. 2. 5.

통과 죽음에서 구원하시는 종교”<sup>218)</sup>이며, 이처럼 하느님이 스스로 드러내 보임으로써만 인간이 그 해결책을 알 수 있기에 기독교를 계시종교라 한다.

기독교 신자의 삶의 원리는 믿음과 희망과 사랑이며 그 중에 으뜸가는 것은 사랑이다(성서, 고린토 전서 13장 13절 참조). 성서에 따르면, 기독교의 신앙의 대상인 하느님의 외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모범을 따라 하느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인간의 참 삶, 영원한 삶이라는 것이다.

주지하듯이 북한은 여타의 종교와 마찬가지로 기독교에 대한 신앙의 자유를 인정하고 있으나, 종교정책의 이중성으로 인하여 참 기독교, 참 기독교 신자가 자유로이 종교활동을 할 수 있을까 의문시되고 있다. 북한소설에서도 기독교의 유일신인 하느님은 부정적으로 묘사되고 있다.

동네사람들은 최로인을 바라보면서 혀를 찼다. 하늘이 굽어본다는 말도 아마 허무맹랑한 말인가 보다. 어떻게 하나님이 있다면 저렇게 착한 사람에게 것처럼 모진 울가미를 씌울수 있단 말인가?<sup>219)</sup>

일본군의 대륙진출이야말로 류정설의 머리에 하느님이 던져준 행운의 빛발이었다.<sup>220)</sup>

218) 가톨릭 교리신학원 엮음, 「예비자 교리서 초대받은 당신」 (서울: 서울대학교출판부, 1991), p. 27.

219) 「한 자위단원의 운명」, p. 114.

220) 위의 책, p. 66. 위의 글에서 ‘류정설’이라는 인물은 권모술수에 능하고 대범한 척하면서도 만사에 용의주도한 사람으로 그려져 있다.

일견으로 보면 인간의 상상에 의하여 세상에 태어났으면서도 인간을 굴복시키고 위압한 <하느님>과 비슷한 것이었다. 그것이 지난 시기 건축의 사명이었는지도 모른다.<sup>221)</sup>

그러나 북한소설에는 기독교적인 어휘들, 즉 영생, 사랑, 믿음, 죄악, 용서, 복락, 감사, 낙원, 희망, 구세주, 기쁨 등이 적지 않게 등장하고 있으며, 등장인물들에게서는 기독교적인 사상도 엿볼 수 있다.

북한주민의 기독교적 관념 및 행태는 영생, 사랑, 구세주, 전지전능, 믿음, 희망, 기쁨, 감사, 낙원, 죄의식 등을 중심으로 살펴 보기로 한다.

### 가. 영생

기독교는 “영원한 생명에 대한 희망”을 가져다 주는 종교이다. 성서에 기록된 바, “하느님은 이 세상을 극진히 사랑하셔서 외아들을 보내 주시어 그를 믿는 사람은 누구든지 멸망하지 않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여 주셨다(요한복음 3장 16절)”고 한다. “예수 그리스도야말로 참 하느님이시며 영원한 생명(요한의 첫째 편지 5장 20절)”이라는 것이다.

기독교에서 말하는 ‘구원받음’은 영생을 의미한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이 가능하고, 구원 받는다는 것은 곧 영원불멸, 영생을 의미하는 것이다. 이와 같은 의

221) 한웅빈, “품에 대한 이야기,” 『조선문학』, (1993. 2), p. 11.

미의 영생은 북한의 소설과 시에서도 나타난다.

은별은 자책감에 입술을 깨물었다.…… 혁명기는 언제 어디서나 장군님께서 안겨주신 래일을, 기쁨도 있고 행복도 있고 희망도 활짝 꽃피게 될 래일을 안고 살아야 한다. 그러한 혁명가의 인생만이 티끌만한 동요도 모르고 변함도 없이 영생의 길을 내닫게 될 것이다.

222)

<상략>

죽음에도 영생을 열어주는 어머니당의 품

<하략>

- 사회주의 신념 -중에서<sup>223)</sup>

윗 글에서는 기독교의 하느님이 아니라 김일성과 김일성의 노동당 대한 믿음으로 살아가면 영생을 얻을 수 있다는 것인데,<sup>224)</sup> 북한의 소설과 시작품에는 이와 유사한 대목들이 많다.<sup>225)</sup>

222) 전홍식, 「영생의 권리」 (평양: 문예출판사, 1992), p. 211.

223) 최승철, “사회주의 신념,” 「조선문학」 (1993. 2), p. 56.

224) 또한 북한은 주체사상이 진리이고, 그 진리를 받아들이면 영생한다고 말한다. 즉 “주체사상을 신념으로 받아들이면 그 진리의 길에서 생을 마치고 죽어서도 그 길에서 영생하는 인간으로 되는 것”이라고 한다. “좌담회 - 누리에 빛발치는 주체의 태양,” 「천리마」 (1995. 4), p. 24.

225) 김일성에 대한 믿음으로부터 영생이 온다고 하는 북한의 주장은 이른바 ‘사회정치적 생명체론’에서 논리적으로 설명된다. 즉 “혁명의 주체는 수령, 당, 대중의 통일체이다. 인민대중은 당의 령도밑에 수령을 중심으로 영생하는 자주적인 하나의 사회정치적 생명체를 이루게 된다. 이와 같은 사회정치적 생명체로 결속된 인민대중의 생명은 영원하다. 개별적인 사람들은 수령, 당, 대중의 통일체인 사회정치적 집단의 한 성원이 됨으로써만 영생하는 사회정치적 생명을 지닐 수 있다. 사회정치적 집단의 생명의 중심은 이 집단의 최고뇌수인 수령이다.” 김정일, “주체사상 교양에서 제기되는 몇 가지 문제에 대하여,” pp. 166-168. 기독교에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영생을 말하고 있으나, 북한에서는 사회정치적



또한 김일성 사후 북한에서는 김일성의 영생을 내용으로 하는 소설과 시작품이 많다. 그러나 이들 작품에서 말하는 영생은 ‘누구로부터’ 부여받은 영생이 아니라, 김일성의 죽음을 안타까워 하고 김일성을 그리워하는 마음에서 그의 영생을 바라는 것이라고 하겠다.<sup>226)</sup>

<상락>

가까이 바라보시며 기뻐하시게  
 늘 우리 모습 바라보시며 안심하시게  
 여기 만수대 맞은편 대동강기슭에  
 탑을 세웁니다

<하락>

- 탑을 세웁니다 -중에서<sup>227)</sup>

그 1년을 우리 인민은 어버이수령님께서 생존해 계실 때와 다름없이 수령님과 함께 살아왔다. 어버이수령님께서 영생하시면서 변함없이 우리당과 혁명을 승리에로 고무하고 계심을 심장으로 느끼며 철석같이 믿으며 살아왔다..... 영생하시는 민족의 위대한 어버이를 영원히 높이 받들어 모시려는.....<sup>228)</sup>

다음에서는 김정일의 생모인 김정숙의 영생을 말하고 있다.

집단에서의 영생을 말하고 있다.

226) 이러한 영생은 무속신앙적 관념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볼 수도 있다. 이에 대해서는 후술하기로 한다.

227) 홍민식, “탑을 세웁니다,” 『조선문학』 (1995. 5), p. 35.

228) 박철, “우리 수령님 영생하신다,” 『조선여성』 (1995. 4), p. 7; 북한당국은 김일성의 시신을 ‘영생의 모습’으로 안치해 놓았다는 ‘금수산기념궁전’을 일컬어 ‘주체의 최고성지’라고 말한다. “금수산이여, 길이 전하라,” 『천리마』 (1996. 4), pp. 19-20.

<상락>

저 붉은 기발아래 영생하시는  
어머니를 부르며  
이 세상 하나의 목소리로 호느깍니다

<하락>

- 세계의 벗들과 함께 -중에서<sup>229)</sup>

북한소설에 등장하는 ‘영생’이라고 하는 어휘는 주로 김일성 김정일과 관련지어져 사용된다. 그러나 몇 작품에서는 예외도 발견된다. 다음의 작품에서는 아들의 영생을 말하고 있다.

그 아름다운 미래속에 자기도 영원히 살 것 같았다. 희생된 아들이 길이 살아있을 것이라고 하던 수산협동일군의 말이 생각났다. 그렇다. 그 말이 정녕 옳았다.<sup>230)</sup>

## 나. 사랑

성서에 이르기를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사랑이 얼마나 큰지 생각해 보십시오. 하느님의 그 큰 사랑으로 우리는 하느님의 자녀라고 불리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과연 하느님의 자녀입니다 (요한 I 서 3장 1절)”라고 한다. 또한 성서는 ‘하느님은 사랑이시며’ 여기에서 사랑은 ‘하느님에게 대한 우리의 사랑이 아니라 우리에게 대한 하느님의 사랑’임을 말하고 있다. 그리고 이러한 하느님을 사랑하는 일은 곧 하느님의 계명을 지키는 것이며, 하느님의 계명

229) 홍현양, “세계의 벗들과 함께,” 『조선문학』 (1992. 12), p. 34.

230) 김원중, “희망의 새,” 『조선문학』 (1991. 2), p. 18.

은 무거운 짐이 아니라고 한다. 기독교의 성서를 관통하고 있는 핵심언어는 ‘사랑’이다. 성서에 의하면, “네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님이신 너희 하느님을 사랑”하며, “네 이웃을 네 몸같이 사랑하라”고 가르친다.

이상의 내용을 종합해 보면, 기독교에서 말하는 사랑이란 ‘인간에 대한 하느님의 사랑’, ‘하느님에 대한 인간의 사랑’, ‘인간 상호간의 사랑’ 등으로 집약할 수 있다. 이와 같은 의미를 갖는 기독교의 사랑은 북한소설에서도 찾아볼 수 있다. 다만 기독교의 하느님이 김일성 김정일로 둔갑하여 있음이 다를 뿐이다.<sup>231)</sup>

아, 친애하는 김정일동지이시여  
열렬한 사랑의 인간 당신은  
위대한 사랑의 화신이시옵니다<sup>232)</sup>

우리 살 수 없으라  
사랑의 그 빛발 없이는  
삶도 운명도 미래도 한 품에 안아  
행복의 한 길로 이끌어 주는 사랑  
그 위대한 사랑은 그대로 믿음<sup>233)</sup>

세계가 부러워하는 나라에서 사는 인민의 한 사람인 우리 매 당원  
들과 근로자들은 친애하는 지도자동지께서 베푸시는 사랑의 정치를

231) 이를테면 북한에서 김정일은 “각계각층의 인민들에게 차별없이 사랑과 믿음을 안겨주시며 모든 사람들의 정치적 생명을 책임지고 이끌어 주고 계신다.”는 것이다. 리원웅, “인덕정치의 빛발아래 이룩된 일심단결의 대풍모,” 『조선녀성』 (1995. 2), p. 21.

232) 리동수, “투철한 숭배관을 심어주는 심장의 송가,” 『조선문학』 (1994. 4), p. 39.

233) 『천리마』 (1992. 2), p. 21.

젓줄기로 삼아 당과 수령에 대한 충실성, 인민에 대한 무한한 헌신성으로 자기 생을 가장 아름답게 장식해야 할 것이다.<sup>234)</sup>

우린 오직 어떤 경우에도 우리를 키워준 당의 은덕에 당의 사랑에 보답해야 할 그 의무밖에 없소.<sup>235)</sup>

수령님의 하해와도 같은 사랑에 너인들은 흐르는 눈물을 건잡지 못하였다.…… <이렇게 큰 사랑을 받고 사는 우리들처럼 행복한 사람이 이 세상에 어디 또 있겠어요.><sup>236)</sup>

한편, 북한에서는 사랑의 개념이 다음과 같이 정의된다.

사랑: 어떤 대상을 귀중히 여기고 아끼는 마음 또는 태도. 자기의 요구와 지향에 부합되며 가치를 가지는 대상에 대한 호감과 우의, 애정과 애착 등 정서적 체험으로 나타난다.…… 사랑은 사람들로 하여금…… 사랑하는 대상을 위해서 자기를 바치려는 헌신적 정신을 낳는다.…… 사랑에 대한 사랑 가운데서 가장 고귀한 것의 하나는 혁명적 동지애이다.<sup>237)</sup>

따라서 기독교의 ‘이웃에 대한 사랑’이 북한소설에서는 ‘혁명적 동지애’로 나타난다.<sup>238)</sup> 소설 속에서 북한주민들 사이의 동지적 감

234) 강선규, “사랑의 권리,” 『조선문학』 (1992. 9), p. 68.

235) 남대현, 『칭춘송가』 하권 (서울: 공동체, 1988), p. 135.

236) 백철수, “축복,” 『조선문학』 (1992. 10), p. 47.

237) 『철학사전』, p. 300.

238) 이른바 ‘사회정치적 생명체’의 논리에 따르면, 사회정치적 집단은 수령, 당, 대중의 통일체이며, 수령, 당, 대중은 하나의 생명으로 결합되어 운명을 같이하는 사회정치적 생명체이므로, 그 사이에서는 혁명적의리와 동지애의 관계가 이루어지게 된다고 한다. 즉 혁명적의리와 동지애는 개별적 사람들을 하나의 사회정치적 생명체로 결합시키는 작용을 한다는 것이며, 이는 곧 혁명적의리와 동지애에 의거하여 수령과 각 개인이 혈연적인 관계를 맺게 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정 내지 동지애를 엿볼 수 있는 몇 가지 예를 들면 다음과 같다.

사회적 집단의 대가정에 자신의 전부를 맡기고 사는 우리 청년들은 자신의 문제와 동지의 문제를 별개의 것으로 계선을 긋고 갈라놓을 줄 모른다. 하기에 그들은 자신에게 제기하는 스스로의 요구를 동지들에게도 똑같이 요구하는 것을 옹당한 도리로, 의무로, 권리로 간주하는 것이다.<sup>239)</sup>

우리 청년들이 자기 개인을 위해서가 아니라 당과 혁명, 조국과 인민, 동지와 집단을 위하여 모든 것을 다 바쳐 투쟁할 때 그것은 참된 삶이라고 할 수 있다.<sup>240)</sup>

<우정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뭐겠나? 자기 보다 동무가 잘 되기를 바라며 또 잘 되도록 도와주는 것이겠지..... ><sup>241)</sup>

집단의 사랑만이 있고 그 사랑 속에서 배출된 수많은 영웅들이 사는 지금 사회는.....<sup>242)</sup>

모든 사랑의 표적은 헌신이고 사랑이 없을 때 헌신할 수 없기에 사랑은 귀중한 것이다.<sup>243)</sup>

239) 현희균, 「새 땅」 (평양: 문예출판사, 1991), p. 326.

240) 우정숙, “우리 시대 청년들의 참된 삶,” 「친리마」 (1995. 2), p. 79.

241) 김용한, 앞의 책, p. 326; 북한에서 우정이란, “동지들 사이에 서로 사랑하고 도와주는 살뜰한 정”을 의미하며, “특히 자신 보다 당과 수령을 위하여 조국과 집단을 위해 자기의 모든 것을 서슴없이 기꺼이 바칠 각오가 되어있는 사람에게만 참다운 우정이 있는 법”이라고 한다. “명언해설,” 「조선문학」 (1993. 4), p. 29; 우정이란 결국 ‘혁명적 동지애’를 뜻한다고 하겠다.

242) 동성립, “좋은 땅,” 「조선문학」 (1993. 6), p. 58.

243) 류정옥, “매력,” 「조선문학」 (1991. 9), p. 44.

#### 다. 구세주, 전지전능

성서는 하느님이 당신의 외아들을 구세주로 보내셨음을 말하고 있으며, 네 가지 복음서에는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가 행한 갖가지 기적이 기록되어 있다. 예수 그리스도는 많은 병자를 고치고, 마귀를 쫓아버리며, 빵 다섯 개와 물고기 두 마리로 오천 명을 먹이고, 물위를 걷는 등 많은 기적을 행하며 구세주로서의 전지전능함을 드러내 보이고 있는 것이다. 또한 성서는 이러한 예수가 전설상의 인물이거나 신화적인 존재가 아닌 인류역사상 실존인물이었음을 말하고 있다.

기독교 신자에게 있어서 예수는 구세주이며, 삶의 전부이다. 이는 다음과 같은 신앙고백에서 잘 나타나고 있다. “나의 간절한 기대와 희망은 내가 무슨일이나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고 늘 그러했듯이 지금도 큰 용기를 가지고 살든지 죽든지 나의 생활을 통틀어 그리스도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나에게서는 그리스도가 생의 전부입니다. 필립비 1장 20-21절”

북한에서는 김일성과 김정일을 일컬어 ‘우리의 구세주’라고 한다.<sup>244)</sup>

인류는 언어와 피부색은 서로 달라도 한결같이 위대한 수령님을 저 하늘의 태양에 비기고 인간생명의 구세주로 높이 칭송하며 따르는 것 아니겠는가.<sup>245)</sup>

244) 북한은 김정일을 일컬어 ‘사상리론의 구세주’라고도 한다. 「조선신보」 1996. 8. 14.

245) 서춘, “인류의 영원한 태양,” 「천리마」 (1995. 7), p. 37.

## &lt;상략&gt;

거룩하신 김정일, 당신은  
 저의 운명의 <신>이십니다  
 들도 없는 우리 운명의 구세주이십니다<sup>246)</sup>

## &lt;하략&gt;

아 세상에서 제일로 위대하신 수령님의 그 품 없이 우린 못살아. 하  
 늘이 바다되고 바다가 땅이 돼도 수령님만 계시면 우리 삶은 꽃피  
 네.…… 수령님을 천세만세 모시고 살리.<sup>247)</sup>

## &lt;상략&gt;

수천년 하느님을 믿던 인류는  
 처음으로 사람중의 위인을 숭배하리라  
 신의 자리에 인민을 세워주신  
 불세출의 성인 김일성동지를!

## &lt;하략&gt;

- 비통한 력사의 순간에 -중에서<sup>248)</sup>

이상과 같이 ‘북한인민의 구세주’라 불리우는 김정일의 탄생은  
 예수의 탄생과도 흡사하게 묘사되어 있다. 즉, 김정일이 태어났다  
 는 1942년 2월 16일에 하늘에서 열 여섯명의 신선이 내려와 김정  
 일이 태어난 한 ‘귀틀집’을 향해 큰 절을 올리며, 그의 탄생을 축  
 하했다는 것인데<sup>249)</sup> 이는 동방박사 세 사람이 베들레헴의 한 구유  
 에서 탄생한 아기예수를 경배하러 온 것과 흡사하게 묘사되어 있

246) 리동수, 앞의 글, p. 38.

247) 「천리마」 (1990. 4), p. 2.

248) 최승철, “비통한 력사의 순간에,” 「조선문학」 (1994. 8), p. 25.

249) “백두광명성전설 - 하늘에서 내려온 열여섯 신선,” pp. 15-16.

는 것이다.

또한 ‘북한인민의 구세주’ 김일성은 오직 인민을 위해 한 평생을 살아왔고, 인민을 위해서라면 불가능한 것이 없는 전지전능한 불사적인 신과 같은 존재이다.

우리가 하는 모든 사업이 수령님의 교시를 집행하는 것인데 그 사업은 우리 인민에 대한 수령님의 뜨거운 사랑으로부터 시작된 것……(250)

북한소설에서 ‘북한인민의 구세주’인 김일성의 전지전능함은 성서에 기록되어 있는 예수의 기적과 유사하게 묘사되어 있다.

위대한 장군님께서서는…… 떡 세개를 가져오게 하시더니 집으로 들어가려면 사흘이 걸리겠는데 이것을 조금씩 먹고 물을 마시면 배가 부를 것이라고 말씀하시었습니다. 그 청년은 경애하는 장군님께서 가르쳐주신대로 했습니다. 그랬더니 하루에 떡 한개씩을 가지고도 배고픈 줄 모르고 무사히 집에까지 돌아올 수 있었습니다.<sup>251)</sup>

그제야 장군님께서서는 담장우에서 내리시여 넓은 수로를 건너가시였다. 그런데 장군님께선 마치 땅우를 건듯이 물우를 딛고 걸어 건느시는 것이였다. 그것을 바라보는 제자들은 자기들이 호박잎을 딛고 건는것이 몹시 부끄럽게 생각되였다.<sup>252)</sup>

250) 이은죽 「북한사회연구」, p. 268에서 재인용.

251) 조선청년사 편, 「백두산의 장수별」, p. 87. 이는 성서에 기록된 바, 예수께서 빵 다섯 개와 물고기 두 마리로 오천 명을 먹이신 기적을 연상케 한다. 마태오 14장 13절-21절 참조.

252) “백두산 장수와 두 제자,” 「조선문학」 (1994. 3), p. 10. 성서에는 예수께서 물위를 걸으신 기적이 기록되어 있다. 마태오 14장 22절-33절 참조.



다음의 예에서는 김일성이 구약성서에서의 ‘모세의 기적’과 흡사한 조화를 일으키고 있다.

이 때 바위우에서 강쪽을 바라보고 계시던 위대한 장군님께서서는 오른손을 천천히 머리우로 드시며 먼산을 굽어보시였습니다. 그러자…… 맑게 개였던 하늘에 갑자기 안개가 끼며 우리가 울고 천둥이 치기 시작하였습니다.…… 우뢰소리가 그치며…… 안개가 서서히 걷히더니 강우에 넓은 다리가 펼쳐졌습니다.…… 유격대원들은 재빨리 다리로 강을 건넜습니다. 유격대원들이 모두 다리를 건넌 다음…… 다리는 온데간데 없이 사라졌습니다. 조금 있더니 뒤따라오던 일제 <토벌대>놈들이 강가에 이르렀습니다.<sup>253)</sup>

#### 라. 믿음, 희망

성서는 이르기를 “하느님의 자녀는 누구나 다 세상을 이겨냅니다. 그리고 세상을 이기는 승리의 길은 곧 우리의 믿음입니다(요한 I서 5장 4절)”라고 말한다. 예수 그리스도는 하느님의 아들이고 구세주임을 믿으면 현세의 어려움을 이겨내고 구원받을 수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기독교 신자의 신앙생활은 하느님의 계시대로 믿고 살아가는 것이다. 또한 기독교 신자의 영적인 삶의 원리인 ‘성서말씀’은 믿음을 가진 모든 사람들에게 구원을 가져다 주는 기쁜 소식, 곧 복음이다.

북한주민들의 믿음의 대상은 김일성과 김정일이다. 북한주민들은 김일성과 김정일의 ‘말씀’, 즉 김일성교시와 김정일명언, 주체사상을 받들고 살면 성공한 삶을 이룰 수 있고, 현세에서의 지상낙

253) 조선청년사, 앞의 책, p. 44.

원도 이를 수 있다고 한다.

…… 포부가 남달리 크고…… 시원시원한 조선공들이었다. 위대한 김 일성동지의 높은 뜻을 받들어 실천으로 꽃피우는데서 기쁨과 행복, 삶의 전부를 찾는 그들이었다.<sup>254)</sup>

옳은 리상이란 우리의 친애하는 지도자동지를 위하여 자기의 온 녀트 과 심장을 바칠 수 있는 그런 생활 속에서 세워지는 목표니까, 그런 목표를 위해 바친 삶이야말로 진정 성공한 삶이고……<sup>255)</sup>

우리 고향마을은 논 이랑 하나하나에도 밭 이랑 하나하나에도 아버 이 수령님의 발자취가 어려있지요…… 세 차례나 우리마을을 다녀 가신 아버지 수령님께서는 우리 청년들이 이 대지에 튼튼히 뿌리를 내리구…… 나는 믿습니다. 우리들이 두 배, 세 배 더 힘을 내어 일 한다면 모두가 부러워하는 그런 공산주의 리상촌이 우리 마을에도 일떠서리라고 말입니다.<sup>256)</sup>

또한 북한주민들은 김일성과 김정일의 ‘인민에 대한 믿음’을 감 사히 여기며, 그 믿음으로부터 큰 힘과 용기를 얻는다.

아버지 수령님의 믿음어린 편지를 받고도 소식 한장 띄우지 못 한 죄스러움이 한가슴에 가득차있는 그였다.<sup>257)</sup>

<그 때 우리는 위대한 수령님의 사랑과 믿음이면 어떤 선박이든 다 무어낼 수 있다고 생각했고 또 그에 보답하는 길에 조선공의 참다

254) 김정길, 「믿음」 (평양: 문학예술종합출판사, 1996), p. 170.

255) 정영중, “복무는 희생이 아니다,” 「청년문학」 (1993. 11), p. 38.

256) 장유선, “도시처녀 시집와요,” 「조선영화」 (1994. 2), p. 72.

257) 윤승상, “회담,” 「조선문학」 (1993. 6), p. 30.

운 삶이 있다고 여기지 않았습니까.>258)

<상략>

아, 이런 사랑 이런 믿음이라면  
세상에 못해낼 일이 무엇이라  
기쁨도 슬픔도 함께 나누시며  
위험할 때나 준엄할 때나 함께 계시며  
힘을 주시고 지혜를 주시는  
어버이수령님

<하략>

- 우리의 생명수 - 중에서259)

#### 마. 기쁨과 감사

성서는 이르기를 “항상 기뻐하십시오. 늘 기도하십시오. 어떤 처지에서든지 감사하십시오(테살로니카 I, 5장 16-18절)”라고 가르친다. 기독교 신자는 어떤 처지에서든지 하느님에 대한 믿음 안에서 항상 기쁘게, 감사하는 마음으로 살아야 한다는 것이다.

북한소설을 통해 보면 북한주민들은 김일성이 세워준 사회주의 체제, 사회주의제도에서 ‘당과 수령의 영도’아래 언제나 기쁘게, 감사하는 마음으로 살아가고 있다. 또한 북한 소설에서는 ‘기쁨’이란 어휘가 많이 등장하는데, 여기에서 말하는 ‘기쁨’이란 거의 대부분이 당과 수령의 뜻을 따르고 끝까지 관철하여 ‘당과 수령에게 드리는 기쁨’을 뜻한다. 그리고 이러한 ‘기쁨’을 바치는 데에서 북한주민들은 기쁨을 느낀다.

258) 김정길, 앞의 책, p. 8.

259) 한원희, “우리의 생명수,” 『조선문학』 (1993. 9), p. 11.

이 고마운 제도와 당을 위하여 무엇인가 자기로서의 기여를 할 수 있다고 확신한 사람만이 누릴 수 있는 가장 값진 행복을 저는 지금 체험하고 있습니다. 첫사랑이 아무리 귀중하다 한들 어찌 이 행복, 이 기쁨, 이 보람에 비기겠습니까.…260)

우리 시대의 아름다운 지향은 한 마디로 당에 기쁨을 드리는데 있을 거예요.261)

일생을 고스란히 충효로 불타는 당의 딸답게 일하고 또 일하면 누구나 자기의 한 생을 기쁨이 많은 시절로 충만시킬 것이었다…… 그는 남을 위하여 늙지않고 사회와 조국을 위하여 오래 산다는 아버지의 말씀을 비로소 깨달았다. 그것이 곧 기쁨이고 행복이 아닐가?262)

<이제부터 우리가 온실 남새농사를 더 잘 지어서 아버지 수령님께 꼭 기쁨을 드리자꾸나.>263)

과연 태어난 첫날부터 모든 것은 지절로 나의 생활에 찾아와 주지 않았던가. 유치원도 학교도 병원도 그리고 집도… 자식에게 필요한 것이라면 부모는 자식이 요구하기 전에 풀어준다. 행운을 레사로운 것으로 되게 해 준 위대한 수령님과 친애하는 지도자 동지… 우리가 어떤 아버지, 어머니를 모시고 있는지 순간이라도 망각한다면…… 고마워 고마워 우리 당이 고마워264)

260) 리광식, “벗에 대한 이야기,” 북한우수단편집 「때국새가 노래하는 곳」, p. 115.

261) 박용운, 「지향」 (평양: 문예출판사, 1992), p. 221.

262) 김수범, “기쁨많은 시절,” 「조선문학」 (1991. 8), p. 26.

263) 김은석, “푸른 꿈,” 「청년문학」 (1991. 10), p. 48.

264) 한웅빈, “‘행운’에 대한 기대,” 북한우수단편집 「때국새가 노래하는 곳」, p. 317.

## 바. 낙원

성서에는 세상끝날에 의인들이 모여살게 될 하늘나라, 즉 ‘하느님 아버지의 나라’에 대한 비유가 많다. 그에 따르면 어린아이의 마음을 가진 사람, 의로운 사람들만이 모여살게 될 그곳에는 악행도 없고, 슬픔도 없고, 괴로움도 없고, 아픔도 없고, 빈부의 격차도 없고, 지위의 높고 낮음도 없다. 현세에서 하느님의 ‘말씀’대로만 살아간 사람들이 어느 것 하나 부족함 없이 평화롭게 살아가는 ‘천국낙원’이다. 그리스도교 신자는 내세에 ‘천국낙원’에 들어가 영원히 살기를 원하며, 이를 위해 하느님의 ‘말씀’대로 살아간다.

북한주민들은 북한 사회주의체제를 일컬어 ‘세상에 부럼없는 지상낙원’이라고 하며, 다음과 같이 노래한다.

인민이 선택한 사회주의는 모두가 살기좋은 낙원이라네<sup>265)</sup>

우리 모두 사회주의 국가를 노래부르세

억압으로부터 해방된 지상의 천국을

<중략>

아! 포근한 품속에 있는 우리는 축복받았네

무엇보다도 인간이 가장 소중하다네

아! 우리나라는 세상에서 최상인 사회주의국가

위대한 지도자가 세우셨네<sup>266)</sup>

그이를 하늘처럼 높이 모시고 있는 우리나라에서는 인류가 기원하던 모든 것이 래세가 아니라 현실로 꽃피는 지상천국이 펼쳐진

265) 가요, “사회주의는 우리거야,”의 3절가사, 「천리마」(1992. 1) p. 48.

266) 양성철 외 편저, 앞의 책, pp. 35-36에서 재인용.

것이 아닌가!.....267)

저는 소조기간 뿐 아니라 한 생을 깡그리 바쳐서라도 아직 도시를  
달지 못한 이 산골마을을 보다 살기 좋은 락원으로 일떠세우립니다.  
268)

독일의 작가 루이제 린저는 북한 사회주의체제야말로 '익명의 기독교인'들이 모여 사는, 교회가 필요없는 그리스도교적 국가라고 말한다.

북한 사회주의 현실에 대해 비판을 가하는 것은 부끄러운 일이 될  
것이다..... 온갖 정치, 경제적인 속박에서 해방되어 구속없이 평화  
롭게 살아갈 수 있는 나라가 또 어디에 있는가?269)

<당신들, 무신론적인 북한사람들은 기독교 방식대로 살고 있습니다.  
당신들은 익명의 기독교인입니다. 당신들은 사랑의 생활을 하고 있  
으며 그것을 사회주의혁명의 건설이라고 부릅니다. 당신들은 살인을  
하지 않으며..... 남을 위하는 마음으로 살고 있고 삶에 대한 믿음을  
갖고 있습니다.>..... 나는 갑자기 예수 그리스도가 북한으로 이주했  
으며 신은 기독교인의 배신 때문에 무신론자의 곁에 있다는 생각이  
들었다. 생활화된 기독교..... 거기에 교회가 필요할까?>270)

위에서 말하는대로 북한이 기독교적인 사회라고 한다면, 북한  
사회주의체제는 말그대로의 '지상낙원', '지상천국'일 것임에 틀림  
없다.

267) 림병순, "하늘에 대한 생각," 「조선문학」, (1994. 9-10), p. 73.

268) 로종익, "목표," 「조선문학」, (1991. 8), p. 43.

269) 루이제 린저 지음, 강규현 옮김, 「루이제 린저의 북한이야기」, (서울: 형  
성사, 1988), p. 202.

270) 루이제린저 지음, 한민 옮김, 「또 하나의 조국」, (서울: 공동체, 1988), pp.  
182-183.

## 사. 죄의식

성서는 말하기를 죄를 짓는 자는 누구나 하느님의 법을 어기는 자이며, 법을 어기는 것이 곧 죄라고 한다.<sup>271)</sup>

북한소설을 통해 보면 북한주민들은 죄의식을 많이 느낀다. 그들은 부모에 대해서, 친구에 대해서, 이웃에 대해서 죄의식을 느끼고 참회한다. 그러나 그들이 가장 많이, 크게 죄의식을 느끼는 대상은 김일성과 김정일에 대해서이며, 그들의 ‘교시’를 관철하지 못하였거나 ‘교시’에 어긋나는 일을 했을 때, 김일성과 김정일의 ‘은덕’과 ‘배려’를 잊고 그에 보답하지 못하였을 때 죄의식을 느낀다.

동무들! 이런 형편에서 물동이를 한해 먼저 이지 않으려고 아무런 타산도 없는 수도공사를 벌였다가 만약 과원공사에 지장을 주어 내년 과수생산을 떨어뜨리면 우리는 수령님과 당앞에 씻을 수 없는 죄악을 범하는 것으로 됩니다.<sup>272)</sup>

돌이켜보면 친부모의 사랑에도 비길 수 없는 하해같은 은총과 가르침을 받아온 자신이건만 그 천분의 하나, 만분의 하나도 보답하지 못했으니 내가 무슨 혁명전사의 의리를 다해온 인간인가? 나는 수령님 앞에 죄를 지어도 대죄를 지은 인간이다.<sup>273)</sup>

<…… 저는 불초한 자식이예요. 대죄를 짓고 천벌을 받아 마땅한 몸이예요. 제가 농사를 잘 짓지 못하여 우리 수령님께서 생의 마지막

271) 「신약성서」, 요한 I서 3장 4절 참조.

272) 이은죽, 「북한사회연구」, p. 268에서 재인용.

273) 서재진, 「북한주민의 인성연구」 (서울: 민족통일연구원, 1992), p. 70에서 재인용.

순간까지 농촌길을 걸으시며 인민생활을 두고 그토록 심려하시었고  
그래서 너무도 일찌기 우리결을 떠나시었어요.>274)

아버이 수령님의 믿음어린 편지를 받고도 소식 한장 띄우지 못한  
죄스러움이 한가슴에 가득차있는 그였다.275)

오늘 아침도 그랬고 밤도 깊은 이 때에 로고어린 현지지도의 먼길  
을 다녀오신 위대한 장군님을 이런 루추한 자리에 모신 것이 더없  
이 죄스러웠다.276)

<그럴 수 없어요. 쇠들품위를 더 올릴 수 있는 좋은 착상을 묵여두  
고 저품위광석을 고품위광석에 얹혀서 제철소로 보내는 것은 죄악  
이에요.>277)

장진삼은 수령님께 진실을 말해야 함을 깨달았다.…… 일군이든, 평  
범한 그 누구든 아버이 수령님의 은혜를 안고 살면서 그에게 진실  
을 감춘다는건 얼마나 죄스러운 일인가.278)

다음의 예에서는 동지에 대해 죄의식을 느끼고 있다.

다른 한편으로는 량심이 가리키는 곳으로 가려는 동지의 앞길을 본  
의 아니게 내가 가로막고 있다는 죄의식에서였다.279)

지금까지 북한소설에서 나타나는 북한주민의 기독교적 관념 및

274) 김명익, “연백별 사람들,” 『조선문학』 (1995. 5), p. 61.

275) 윤승상, 앞의 글, p. 30.

276) 차승철, “새싹,” 『조선문학』 (1993. 4), p. 16.

277) 림종엽, “다시 출발지점에서,” 『조선문학』 (1992. 12), p. 58.

278) 백남룡, “옛정,” 『조선문학』 (1991. 4), p. 22.

279) 로정법, “고향의 모습,” 북한우수단편선 『쇠찌르레기』 (서울: 살림터, 1993), p. 158.



행태를 살펴 보았다. 소설을 통해 보면 북한주민들에게 있어서는 기독교적인 관념과 행태가 뚜렷하게 드러나고 있다. 굳이 기독교와의 차이를 지적한다면, 신앙의 대상이 하느님이 아닌 김일성·김정일이라는 것과, 내세의 천국낙원이 아닌 현세의 지상낙원을 추구한다는 것 등이 다를 뿐, 북한소설에서 기독교적인 관념 및 행태를 적지않게 찾아낼 수 있다는 것이다.

북한당국은 공산정권 수립을 전후해서 부터 김일성 유일체제 확립에 이르기까지 특히 기독교에 대해 극심한 탄압을 하였던 것으로 알려져 있다. 그러나 상술한 바와 같이 북한주민들에게서 기독교적 심성이 드러나고 있다는 것은, 북한주민들 사이에 종교성이 말살되지는 않았음을 입증하는 것이라 하겠으며,<sup>280)</sup> 또한 기독교의 교리와 사상을 모방한 김일성·김정일의 우상화과정에서<sup>281)</sup> 북한주민들에게 내재되어 있는 기독교적 심성이 보다 강하게 형성된 것이라고 하겠다. 이와 관련해서 한 가지 예를 더 들면, 김일성 사후, 김정일 세습체제의 정통성을 굳히기 위해 북한은 또 다

280) 한 연구결과에 의하면 지금까지 귀순한 사람들의 대부분이 그리스도교에 귀의했으며, 이는 귀순자들이 환경변화에서 오는 심리적 불안감을 해소하기 위해 '절대자를 향한 의존감'을 강하게 느끼기 때문인 것이라고 풀이하고 있다. 오해정, 「귀순 북한동포의 남한사회 적응실태」(서강대학교 공공정책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1995), p. 53. 이는 곧 북한주민들에게 있어 그리스도교적 심성이 내재되어 있으며, 이를 이용해 북한당국이 그리스도교의 신처럼 김일성을 우상화 하였음을 반증하는 것이라고도 할 수 있다.

281) 김일성우상화가 그리스도교를 모방했다고 하는 귀순자의 증언은 많다. 예를 들면, 한국의 찬송가와 김일성찬가가 비슷한 가락이며(김용, 앞의 책, p. 56), 성서 속의 예수의 역사는 김일성전기와 아주 흡사하다고 한다. 김현희, 「북한」(서울: 북한연구소, 1991. 8), pp. 123-124.

른 하나의 기독교 교리를 모방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성서에 기록된 바, 하느님은 당신의 아들을 사랑하여 모든 것을 그의 손에 맡기었으며, 아버지로부터 전권을 위임받은 예수는 당신의 모든 행동과 말씀을 아버지의 뜻에 맞추었고, 이렇게 함으로써 아버지와 아들의 완전한 일치가 이루어졌다고 한다. 이러한 교리를 모방하여 북한당국은 김일성과 김정일의 일치를 주장하고 있는 것이다. 이는 다음의 시에서 잘 나타나고 있다.

우주처럼 끝없는 수령님의 사랑은  
 친애하는 그이의 사랑으로 우리 몸에 닿고  
 해빛처럼 밝은 수령님의 미소는  
 친애하는 그이의 미소로 우리 몸을 감쌉니다<sup>282)</sup>

<상략>

언제나 두분은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우리 하는 일 끝까지 보아주시며  
 조언도 주시고 기뻐도 하실분  
 대를 이어가며 인민의 운명을 다 맡아 주실분  
 그이는 김정일동지  
 자애로운 그 모습에서 수령님의 영상을  
 인민은 언제나 뵈고삼니다  
 - 두 분 -중에서<sup>283)</sup>

<상략>

음성도 모습도  
 사상도 의지도  
 어버이 수령님과 그리도 같으신

282) 한원희 “신년세배 드리웁니다,” 『조선문학』 (1994. 1), p. 7.

283) 김종백, “두분,” 『조선문학』 (1995. 3), p. 4.

경에하는 김정일장군이시기에  
 높이 모시립니다  
 어버이수령님 모시던 그 마음으로  
 태양을 따르는 해바라기처럼  
 김정일장군님을 모시립니다  
 <하락>284)

### 3. 무속신앙적 관념 및 행태

무속신앙이란 천신(天神), 산신(山神), 가신(家神), 성황당, 사당, 귀신 등 초월적인 존재들의 힘에 의존하여 복을 구하려는 제화구복주의(除禍求福主義)에 기초한 민간신앙 형태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무속신앙의 핵심은 초월적인 존재의 힘에 대한 인정 내지 의존이며, 이에서 비롯되는 무속신앙적 특징은 비합리적 신비주의, 운명주의,285) 지배-복종의 정당화 등을 들 수 있다.

공산화 이후 무속적 관습을 미신으로 규정하여 철저히 금지시킨 것으로 알려진 북한에서도 최근들어 무속신앙적 현상이 나타나고 있으며, 점차 확산되어 가고 있다고 한다.286)

284) 민병준, “천년이 가도 만년이 가도,” 『조선문학』 (1995. 1), p. 7.

285) 운명주의란 인간생활에 있어서 모든 길흉화복이 인간의 능력에 의해서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인간 능력 밖의 초자연적인 힘에 의해서 결정된다는 믿음이다. 김재영 외, 『정치문화와 정치사회화』 (서울: 형설출판사, 1990), p. 70.

286) 북한에서 무속신앙적 현상이 점증하고 있음과 관련해 볼 때, 다음과 같은 주장은 의미를 갖는다. “우리들은 언제나 점쟁이의 마음을 가지고 살고 있다. 그러므로 점쟁이는 존재한다. 이러한 보편적인 심리 때문에 민족이나 나라가 달라도 점쟁이는 존재한다.” 최길성, 앞의 책, 210-211; “개명된 서양에도 여전히 마법사와 신비스런 제의식이 있고, 가장 개화된 사람에게도 신비스런 마술적 경향과 행동들이 존재하고 있는 것처럼,

북한주민의 무속신앙적 관념 및 행태는 무속신앙의 주요 개념인 하늘, 자연물숭배, 영혼불멸, 점복·예조, 운명주의, 재수, 망아상태(황홀경) 등을 중심으로 살펴본다.

### 가. 하늘

무속은 원칙적으로 다신(多神)을 믿기 때문에 기독교의 유일신적 구조가 이질감을 준다. 그러나 한국에도 ‘하느님’이라는 지고신(至高神)적 신이 존재한다. ‘하느님 갑소사’라든지 ‘하늘이 무섭지 않으나?’ ‘하늘이 아는 사람’이라는 표현 등에서 그러한 존재가 발견된다. 무속에는 이러한 하느님에 대한 의식·관념이 있다.<sup>287)</sup>

북한소설에서도 무속적인 ‘하느님’, 즉 하늘에 대한 의식 내지 관념이 나타난다.<sup>288)</sup>

다음의 예는 일제치하에서 자위단원들의 횡포에 한 노인이 울부짖으며 하는 말이다.

<어허 하늘도 무심쿠니! 망할놈의 세상, 날벼락이라도 꼭 치지 않구, 으호호...><sup>289)</sup>

---

오늘날 분명히 북한에도 아직 무당이 있을 것이다. 그것은 바로 우리의 무의식 세계에 있는 인간 본질의 한 심층이다.” 루이제 린저, 「또 하나의 조국」, p. 178.

287) 최길성, 앞의 책, p. 267.

288) 귀순자 이옥금씨에 의하면, 자신은 북한에 있을 때 ‘예수’나 ‘부처’라는 말은 들어보지도 못했지만, 그저 다급한 일이 생기면 ‘하느님’을 불렀으며, 이는 물론 종교에서 말하는 하느님은 아니었다고 한다.

289) 「한 자위단원의 운명」, p. 339.

다음은 결혼을 하루 앞둔 외아들을 자위단원으로 끌어가려는 친일 한국인에게 한 노인이 애원하는 장면이다.

<…… 인륜대사는 하늘도 굽어 보신다는데 방금 래일로 대사를 치르게 된 자식을 끌어가면 어떻게 한단 말이웁니까?><sup>290)</sup>

이 외에도 북한소설에는 하늘에 대한 원망과 기대, 감사 등이 다음과 같이 묘사되어 있다.

아, 하늘아, 너는 왜 콧 무너지지도 않는 것이냐? 너는 무엇을 버티었기에 그렇게도 지독하고 모질단 말이냐!…<sup>291)</sup>

하늘이 무심하지 않다면 너희들 뒤에는 꼭 복을 누릴게다.…<sup>292)</sup>

<하늘이 도왔구나.…><sup>293)</sup>

북한측 주장에 의하면,

우주가 생겨나고 지구에 인류가 생존하기 시작하였을 그 때에는 하늘은 원시인들에게 하나의 공포의 대상이었다. 우뢰가 울고 번개가 치는 현상이 그들에게는 노한 하늘의 조화로 간주되었으며…… 그 과정에 하늘이라는 신비와 우상이 생겨나 그것을 절대적인 존재로 숭상해 왔을 것이며 여기에서 하늘에 대한 소박하고 몽매한 신앙심이 자랐을 것이다. 사회가 발전하고 계급이 생기면서 그 신앙심은

290) 위의 책, p. 248.

291) 위의 책, p. 476.

292) 위의 책, p. 122.

293) 위의 책, p. 358.

여러가지 종교의식으로 화하면서 차차 지배계급들의 통치수단으로 리용되었다. 하늘은 초자연적인 존재로 하느님이나 신선이 살고 있는 래세의 천당으로 설교되었고 그 종교적 관념 속에 사람들은 자기앞에 가해지는 몸진 고통이나 악행을 순종으로 감수하였다.……294) 라고 한다.

그러나 북한에서는 김일성과 김정일을 칭하기를 ‘하늘’이라고 한다.

당신은 강하십니다 언제나 이기십니다  
당신은 나의 하늘 영원한 하늘입니다295)

그이를 하늘처럼 높이 모시고 있는 우리나라에서는 인류가 기원하던 모든 것이 래세가 아니라 현실로 꽃피나는 지상천국이 펼쳐진 것이 아닌가!…… 만약 하늘에 신이 있다면 그도 우리 장군님께서 지니신 무한대한 예지와 도량, 슬기 앞에 무색하여 얼굴을 붉힐 것이다.…… 종교인들의 절대적인 신앙심속에 존재하는 하늘은 허상에 불과하지만 우리 인민들의 절대적인 숭배심 속에 존재하는 것은 현실의 하늘이신 김정일 장군님이시다.296)

또한 북한에서는 김일성과 김정일을 일컬어 ‘하늘이 낸 위인’이라고도 하며, ‘하늘이 낸 위인’이기 때문에 김일성 김정일과 관련하여 천지조화 현상이 빈번하게 나타난다고 한다.

294) 림병순, 앞의 글, p. 72.

295) 위의 글, p. 72.

296) 위의 글, p. 73; 또한 북한당국은 김정일을 일컬어, 김정일과 같은 인물은 전세기에도 없었고 먼 후세에도 다시 없을 위인 중의 위인이며 현재의 하느님이라고 말하기도 한다. 「내외통신」 1996. 3. 21.

<…… 우리야 이 집에서 대를 이어 살면서 위인들을 잘 맞이하라는 하늘의 계시를 받지 않았느냐? 첫번째 위인은 이미 맞이했었고 이번에 두번째위인이 백두산정에 내렸은즉 조만간에 우리 집에도 들리실텐데……><sup>297)</sup>

<상략>

만약에 하느님이 정녕 있다면  
우리에게 거래의 태양을 보내주신  
그 하느님께 무릎꿇고 엎드려  
백번만번 절을 올리리라

<하략>

- 그림던 땅에서 -중에서<sup>298)</sup>

하늘이 낸 위인을 비선폭포에 모시여 천지가 조화를 부리는가 흐렸던 하늘이 갑자기 개이고 하늘중천에 아름다운 무지개 다리를 놓았다.…… 립하가 지난지 오래고 이제 소만이 박두했는데 여적 진달래가 피여있으니 참으로 신기하지 않은가!…… 그이께서 묘향산에 대한 실무시찰을 하신 첫 날 흐렸던 하늘이 맑게 개이고 비선대에 진달래가 활짝 피여난 것은 다 천지조화라 아니할 수 없는 것이다.<sup>299)</sup>

광장 주석단에 위대한 김일성주석께서 나오시자 갑자기 하늘이 확 열리고 그리로 눈부신 해빛이 쏟아져 내리는 것이었다. 기적과 같은 일이었다.…… 명절 당일날 비가 멎은 것도 그이께서 천기조화를 일으키시여 구름을 밀어내고 해빛을 이끌어 오신 것이었다. <아 친애하는 김정일 동지는 천기를 타고나신 분이시구나, 하늘이 낸분이 아니고서야 어떻게 이런 천기조화를 부리실 수 있을까.><sup>300)</sup>

297) “백두광명성전설 - 두번째 위인을 맞다,” 「조선문학」 (1992. 10), p. 39.

여기에서 첫번째 위인은 김일성, 두번째 위인은 김정일을 말한다.

298) 김동호, “그림던 땅에서,” 「조선문학」 (1992. 11), p. 62.

299) “백두광명성전설 - 진달래 답사단,” 「조선문학」 (1995. 5), p. 31.

300) “백두광명성전설 - 비는 어떻게 멎었는가,” 「조선문학」 (1994. 4), p. 34.

다음의 예는 김정일을 상징하는 이른바 ‘백두광명성’이 조화를 일으키는 대목이다. 지난 84년 홍수를 당한 한국의 수재민들에게 김정일이 쌀을 포함한 많은 구호물자를 보내주었는데 이를 받은 한 가정에서 신기한 일이 일어났다는 것이다.

다음날 아침 어머니는 밥을 지으려고 부엌에 나가 쌀독을 열었다. 그런데 이게 웬일인가? 어제 많은 쌀을 퍼내어 밥을 지었었는데 쌀독에는 쌀이 그냥 그대로 있는 것이었다.…… 복讎하늘엔 커다란 장군벌이 떠서 찬란한 빛을 뿌리고 있었다.…… 백두광명성이 밝은 빛을 뿌리고 있었다.…… 백두광명성이 밝은 빛을 뿌리면 사람들에게 행복을 주고 기쁨을 주는데…… 병곳-하고 광명성이 갑자기 더 밝은 빛을 뿌렸다.…… 어머니는 일어나 곧장 부엌으로 들어갔다. 쌀독을 열어보니 독안엔 또 쌀이 그득해진 것이었다.<sup>301)</sup>

이 외에도 김정일은 많은神通력을 보여준다. 어린 나이에 조화를 일으켜 하룻밤 사이에 백두산 밀림속에 온천목욕탕을 지어놓았으며,<sup>302)</sup> 손가락으로 안개를 움직이고, 고함 한 마디로 ‘미국비행기들’을 쫓아버린다.<sup>303)</sup> 또한 김정일은 말 한 마디로 태풍중심권에 든 침몰직전의 배를 무사히 구조해 내며,<sup>304)</sup> ‘항일무장투쟁’ 당

301) “백두광명성전설-벼나무,” 「조선문학」 (1994. 5), pp. 15-16. 김정일이 보내준 쌀을 땅에 심었더니 쌀알에서 싹이 트고 벼모가 자라 올라 가을엔 많은 쌀을 수확할 수 있었으며, 이 벼나무는 날이 갈수록 점점 더 많이 퍼져 가난한 사람들을 구원해 주고 있다고 한다.

302) “백두광명성전설 - 밀림속에 생겨난 목욕탕,” 「조선문학」 (1992. 12), pp. 16-18.

303) “백두광명성전설 - 안개낀 국사봉,” 「조선문학」 (1993. 3), pp. 20-21.

304) 무전으로 김정일의 말이 전달되자마자 배가 가는 앞에만 태풍이 조용해



시에는 어린나이에 ‘룡마’를 타고 ‘룡천검’을 휘두르며 일본군을 물리쳤다고도 한다.<sup>305)</sup>

또 하나의 ‘하늘이 낸 위인’인 김일성은 이른바 ‘항일무장투쟁’ 시기에 온갖 다양한 조화를 일으킨다. 예를 들면 김일성이 쏜 한 방의 총알은 수십수백발이 되어 날아가며, 김일성이 눈을 한 번 감았다 뜨면 큰 돌맹이들이 훑훑 날아다니고, 천리밖에 있는 유격대 공작원들이 순식간에 변신을 한다. 또한 김일성이 손을 머리위에 들고 명령하면 바위벼랑이 무너져내리고, 먹장구름이 몰려와 소낙비가 내리며, 김일성은 구름을 잡아타거나 하늘에서 ‘룡마’를 불러내려 타고 다닌다.<sup>306)</sup> 이 외에도 김일성은 땡수를 길들이며,<sup>307)</sup> 일본군을 최면술로 다스린다.<sup>308)</sup> 그리고 이러한 김일성이기에 자연물인 바위까지도 그를 흠모하여 그가 있는 방향으로 머리를 돌려 옮겨앉았다고 한다.<sup>309)</sup>

또한 김일성 사후에는 온갖 자연물이 김일성의 죽음을 슬퍼하여 기이한 현상을 나타내기도 한다. 자연물까지 김일성의 죽음을 애도했다는 것인데, 다음의 글에서는 김일성의 죽음을 슬퍼하여 한 이름드리 백양나무가 소복을 했다고 한다.

---

지고물결이 잔잔해졌다고 한다. “백두광명성전설 - 태풍을 길들이다,” 『조선문학』 (1994. 2), pp. 39-41.

305) “백두광명성전설 - 어린장수,” 『조선문학』 (1993. 10), pp. 23-25.

306) 이 외에도 김일성은 솔방울로 폭탄을 만들고 모래알로 쌀을 만들며, 김일성이 술법을 쓰면 하늘이 울고 땅이 움직이며, 김일성은 축지법을 쓰고 날씨를 내다보고 천리밖을 내다본다고 한다. 조선청년사 『백두산 장수별』 참조.

307) “백두산전설 - 길들여진 호랑이,” 『조선문학』 (1992. 11), pp. 15-17.

308) “백두산전설 - 최면술에 걸린 토벌대,” 『조선문학』 (1993. 7), p. 15.

309) 『조선문학』 (1993. 4), pp. 20-23.

지난해 7월 9일이였다.…… 큰길가에 서있는 수십년 자란 아름드리 백양나무의 잎이 낮부터 한잎두잎 떨어지기 시작했다.…… 이상하게도 평양쪽으로 향한 가지로부터 잎이 지기 시작하였다.…… 얼마후 백양나무는 푸른잎을 말끔히 털어버리였다. 나무정수리의 가는 가지로부터 굵직한 밑둥에 이르기까지 흰껍질에 둘러싸인 백양나무는 푸른 옷을 벗어놓고 흰옷을 갈아입은 것 같았다.…… 그 뜻깊은 백양나무가 슬픔에 몸부림치며 때아니게 자태를 변경시킨 것이 아니겠는가.<sup>310)</sup>

또한 북한은 주장하기를 김일성의 죽음을 애도하며 잠자리, 외썩독이, 산제비 등이 오열하였고,<sup>311)</sup> 김일성 사망 1주기 되던 해 7월에는 백두산에 하얀진달래가 피었으며<sup>312)</sup> 김일성 사망 2주기에 백두산이 몸부림치며 울었다고도 한다.<sup>313)</sup>

#### 나. 자연물 숭배

무속에서 신앙하는 신은 자연신계통과 인신(人神)계통이다. 먼저 자연신 계통의 무신으로는 천신(天神), 일신(日神), 월신(月神), 성신(星神), 지신(地神), 산신(山神), 수신(水神), 용신(龍神), 풍신(風神), 수신(樹神), 석신(石神), 동물신(動物神) 등이 있으며, 인신 계

310) “추모설화 - 흰옷입은 백양나무,” 「조선여성」 (1995. 4), p. 14; 이 외에 김일성의 죽음이 애석하고 안타까워 94년 추석날에 살구꽃이 피었다고 하는 글도 있다. “추석날에 핀 살구꽃,” 「조선문학」 (1995. 3), pp. 13-14.

311) 손광영, “묘향산에서 날아온 새,” 「조선문학」 (1995. 4), pp. 72-73.

312) 정춘희, “백두산의 하얀진달래,” 「청년문학」 (1996. 7), p. 38.

313) 「한국일보」 1996. 7. 15.

통의 무신으로는 왕신, 왕녀, 장군신, 대감신 등이 있다. 이들 무신은 분담된 직능의 분야에 대해서는 무한한 능력자로 나타난다. 그러나 무신은 인간에게 어떤 이성적인 계시를 통하여 그 능력을 인도, 행사하기 보다는 무서운 고통을 주는 벌로써 신의 의사를 전달 시키기 때문에 비록 인간을 수호해 주는 선신(善神)일지라도 늘 공포의 대상이 된다. 그러나 공포는 신성의 극치이기도 하다.<sup>314)</sup>

북한에서 김일성과 김정일은 하늘, 태양, 별 등으로 숭배되며, 그들의 탄생은 백두산신화 내지 전설로 성화(聖化)되어 있다. 또한 김일성 김정일의 신격화와 관련해서는 무속신앙의 신앙대상이 되는 산, 바다, 강, 나무, 꽃, 짐승, 조류 등의 자연물들이 많이 등장하고 있다. 이러한 현상은 곧 북한당국이 김일성과 김정일의 우상화에 북한주민의 무속신앙적 심성을 이용하고 있음을 입증하는 것이라 하겠다.

먼저 김일성의 출생에 얽힌 신화에서 드러나는 무속신앙적 요소이다. 천기를 타고난 김일성의 출생일에 '신비로운 자연조화'가 펼쳐졌다는 것인데, 여기에는 하늘, 구름, 번개, 우뢰, 회오리바람, 소나기, 무지개, 태양, 백두산, 대동강, 물안개, 꽃, 새 등의 온갖 자연물이 등장하고 있다.<sup>315)</sup>

김정일의 출생신화도 김일성의 출생신화와 유사하다. 여기에서도 백두산, 햇살, 우뢰, 하늘, 땅, 바람, 눈, 별, 금빛광채, 쌍무지개

314) 김태곤, 「한국 민간신앙연구」 (서울: 집문당, 1994), pp.222-223.

315) 「청년전위」 1996. 4. 14; 최덕신, 「김일성 그이는 한울님이시다」 (평양: 통일신보사, 1988), pp. 278-279; 도홍렬 외, 「민족사 입장에서 본 김일성정권」 (서울: 남북문제연구소, 1993), pp. 273-275 참조.

등이 등장하며, 하늘에서 열여섯 신선이 내려와 김정일의 출생을 축하한다.<sup>316)</sup> 또한 북한은 김정일의 출생 및 성장과정의 신비성과 위대함을 백두산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찬양하고 있다.

친애하는 지도자 김정일동지의 요람은 백두 비경이고 그이가 들으신 자장가는 백두산 원시림의 설레임 소리였고, 드넓은 천지(天池)에 메아리치는 폭포수 소리였다.<sup>317)</sup>

上記한 출생신화에 빠짐없이 등장하는 백두산은 민족의 성산으로 산신 숭배의 대상이 되었던 곳이다.

#### 다. 영혼불멸

그리스도교에 따르면, 인간은 죽어도 그 육신을 떠난 영혼은 영원히 산다고 한다. 무속에서도 이러한 영혼불멸을 믿는다.<sup>318)</sup> 무속에서의 영혼은 인간의 정령(精靈)을 의미하는 님, 혼, 영, 혼령, 등의 용어를 포괄하는 개념으로 사용되는 용어이다. 또한 무속의 영혼관에서, 영혼은 육신이 죽은 후에도 새로운 사람으로 이 세상에 다시 태어나거나 내세인 저승으로 들어가서 영생한다고 믿는 불멸의 존재이다. 무속에서 보는 영혼은 사령(死靈)과 생령(生靈) 두 종류가 있다. 전자는 사람이 죽은 후에 저승으로 가는 영혼이고,

316) “백두광명성전설 - 하늘에서 내려온 열여섯 신선,” pp. 15~16.

317) 도홍렬 외, 「민족사 입장에서 본 김일성정권」, p. 268.

318) 무속에서는 사람은 그냥 죽어버리지 않고 의례에 의해서 조상신이 된다고 한다. 최길성, 앞의 책, p. 307.

후자는 살아 있는 사람의 몸 속에 깃들여 있는 영혼이다.<sup>319)</sup>

이상과 같은 무속신앙적 관념은 특히, 김일성 사후 북한주민들이 그를 신격화하여 숭배하고 있는 데에서 잘 나타난다. 즉 무속의 인신숭배와 유사하다. 북한주민들은 김일성의 영생을 믿으며  
320) 김일성을 하나의 국조신 내지 시조신, 또는 수호신으로 섬기고 있는 것이다.

<상략>

오, 여기 평양에서  
우리 수령님 생전의 모습으로  
태양의 집에 계신다!  
여기 평양에서  
우리 수령님 영생하신다!  
여기 평양에서  
우리 수령님의 심장은 영원히 고동친다!

<중략>

그이의 발자욱 소리에서  
수령님의 발자욱 소리를 듣고  
그이의 음성에서  
수령님의 음성을 들으며

<하략>

- 평양시간은 영원하리라 -중에서<sup>321)</sup>

319) 김태곤, 앞의 책, pp. 224-225.

320) 북한주민들이 김일성의 영생을 믿는지 믿지 않는지는 그 사실여부를 확인할 수가 없다. 그러나 북한당국이 정치적인 의도를 가지고 북한주민들에게 '김일성의 영생'을 세뇌시키려 한다면, 이는 북한주민들에게 내재되어 있는 무속신앙적 심성, 즉 '영혼불멸설'에 대한 믿음을 이용하려는 것이라 하겠다.

321) 김만영, "평양시간은 영원하리라," 「청년문학」 (1996. 7), pp. 18-19.

## &lt;상략&gt;

수령님은 살아계십니다  
 한없이 인자하시고 영채로우신  
 친애하는 김정일동지의 거룩하신 모습속에  
 수령님은 언제나 살아계십니다

## &lt;하략&gt;

- 태양은 여전히 빛난다 -중에서<sup>322)</sup>

우리 민족은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에 의하여 새롭게 탄생된 영광스러운 김일성동지의 민족이다. 우리 민족의 시원이 5천년 전에 열려졌다면 세계에서 가장 존엄있고 강대한 민족으로서의 우리민족의 참다운 시원은 김일성시대에 와서 이루어졌다.<sup>323)</sup>

사회주의 조선의 시조이시며 김일성민족의 영원한 태양이신 경애하는 수령님의 위대성에 대하여 절감하면서.....<sup>324)</sup>

오늘 우리 민족은 수령을 시조로 하는 김일성민족이고 현대 우리나라는 수령이 세운 김일성조선이다.<sup>325)</sup>

한편 북한소설에서는 영혼불멸을 믿는 무속신앙적 정서가 다음과 같이 나타나고 있다.

<..... 너희들을 제발로 살아나갈 수나 있게 키워놓고 죽어야 저승에 가서라도 눈을 감은 네 에미를 만날 것 같은 생각이 들더구나..... 저 애가 다 숙성하여 우리 집의 기둥이 되었구나 하는 생각이 드는게 아니냐. 그러니 저승에 있는 너희 에미도 인젠 눈을 감아 줄 것 같기도 하고.....><sup>326)</sup>

322) 최영화, “태양은 여전히 빛난다,” 『조선문학』 (1994. 8), p. 20.

323) “조선민족은 김일성민족,” 『조선녀성』 (1995. 2), p. 16.

324) 로정순, “만고의 위인,” 『천리마』 (1996. 2), p. 10.

325) 『조선일보』 1996. 5. 1.

<명심해 듣거라. 네가 전사한 만형의 뉘를 어지럽히지 않으려거든……><sup>327)</sup>

때도 시도 없이 눈앞에 안겨오군 하는 전사한 만이의 눈길들이 발목을 휘여 잡는 것만 같아 의지의 힘만으로는 걸음발을 내어짚을 수가 없었다.<sup>328)</sup>

<난 고향으로 가야해요. 아버지의 뉘이 깃들고 유골이 묻힌 땅인데 달리할 수도 없잖아요.><sup>329)</sup>

#### 라. 점복·예조

인간운명의 미래를 예견하는 점복과 앞으로 다가올 일을 예견하는 징조인 예조,<sup>330)</sup> 즉 점복·예조신앙은 무속신앙, 풍수신앙과 함께 한국 민간신앙의 중추를 이루고 있다.

앞 장에서 서술했듯이 최근 북한에서도 점복이 성행하고 있다고 한다. 그러나 북한소설에서는 전혀 찾아볼 수가 없다. 예조도 마찬가지이다. 북한소설에서는 나타나지 않고 있다. 그러나 귀순자에 의하면 북한에서도 예조신앙이 있다고 한다. 예를 들면, 출근

326) 「한 자위단원의 운명」, pp. 158-159.

327) 전세창, 앞의 글, p. 31.

328) 위의 글, p. 34.

329) 김혜영, 앞의 글, p. 39.

330) 점복·예언은 한국 민간신앙의 중추를 이루고 있으며, 넓게는 무속의 일부를 이루고 있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점복은 무속의 특징인 가무 제례를 통한 행사가 아니라는 점에서 무속과는 구별된다. 대체로 점복·예언은 개인의 운명론에 치중되어 있다. 유동식 「민속종교와 한국 문화」(서울: 현대사상사, 1978), pp. 271-272.

길에 여자가 가로 건너가면 재수가 없다, 새벽에 까치가 울면 기쁜 소식이 온다, 까마귀가 울면 재수가 없다, 아침에 장례행렬을 보면 그 날은 운이 좋다, 거미가 천정에서 내려오면 손님이 온다 등이 그것이다.<sup>331)</sup>

#### 마. 운명주의

인간이 점복에 의지하려는 데에는 두 가지의 기본관념이 작용하는 바, 하나는 미지의 불안에서 벗어나자는 것이요, 또 하나는 인생은 외부의 초월적인 힘에 의해 결정되어 있다는 운명론에 대한 신앙이라고 한다.<sup>332)</sup>

운명론에 대한 신앙은 곧 운명주의이며, 이는 무속신앙의 특징이다. 무속에서는 인간의 생과사, 흥망, 화복, 질병 등의 운명 일체가 신의 의사에 달려 있는 것이라 믿는다.<sup>333)</sup>

북한주민들에게 있어서 그들의 운명을 좌우하는 무신은 김일성과 김정일이다.

모든 여성들과 녀맹원들은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를 운명의 수호자로, 민족의 위대한 어버이로 절대적으로 숭배하고 따르며 영원히 우러러 모시고…… 334)

331) 고태우, 앞의 책, p. 190.

332) 유동식, 앞의 책, p. 272.

333) 김태곤, 앞의 책, p. 223.

334) 박연호,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는 영원히 우리와 함께 계신다,” 『조선 여성』 (1995. 4), p. 11.



우리의 운명이시고 하늘이시며 태양이신 김정일장군님을 높이 받들어.....335)

다음의 예에서는 한 세 세대 여의사가 눈이 먼 영예군인과의 만남을 운명의 계시라고 말한다.

그것이 그 어떤 운명의 계시가 가져다 주는 필연적인 귀결이 아닐가 하는 숙명적인 생각에 잠겨들었다.<sup>336)</sup>

다음의 예에서는 여성의 운명이 결혼과 함께 남편에 의해 다시 결정된다고 말하고 있다.

가정이란 녀성의 운명이 결정되는 세계가 아닌가. 처녀시절에 아무리 보람차고 행복한 생활을 누렸다 해도 어떤 남편을 만나 가정을 이루는가에 따라 그의 운명은 다시 결정되기 때문이다.<sup>337)</sup>

#### 바. 재수

무속신앙의 주요관심은 현세에서 풍요한 생명과 재물을 소유하고 탈없이 평안을 누리며 살자는 데 집중되어 있다.<sup>338)</sup> 무속에서는 재물이나 좋은 일이 생길 수 있는 운수, 즉 재수를 중시한다. 북한소설에서는 드물게 나타나는 말이며, 최근의 부정적인 세태를 비판하는 내용에서 등장한다.

335) “비범한 위인의 하루,” 「천리마」 (1996. 2), p. 14.

336) 김혜영, 앞의 글, p. 36.

337) 김용한, 앞의 책, p. 236.

338) 유동식, 앞의 책, p. 271.

다음의 소설대목은 텔레비전에서 '추첨제 저금추첨'을 보면서 어린 손녀가 할아버지에게 하는 말이다.

<할아버지, 오빠는 정말 재수 없어요. 나두, 언니두 그리구 아버지, 어머니 것두 모두 한 두번씩 등수에 들어 돈이 붙어났는데 오빠 것만 한 번도 맞지 않았어요.><sup>339)</sup>

#### 사. 망아상태(忘我狀態), 황홀경

샤머니즘의 가장 기본적인 알맹이는 망아상태이다. 이를 학술적으로는 '엑스터시', '트랜스'라고 부르는데 일종의 강신(降神)상태를 동반시키는 환희의 상태, 황홀경에 들어간 상태를 말한다. 우리나라 무속에서도 이러한 망아상태가 기본이 된다.<sup>340)</sup>

이와 같은 망아상태는 김일성 김정일에 열광하는 북한주민의 정서 속에서도 발견할 수 있다. 이와 관련하여 귀순자의 증언을 예로 들면 다음과 같다. 먼저 고아출신의 한 귀순자의 말이다.

고아들은 김일성의 초상앞에서 웃고 손뼉치고 행복의 눈물을 흘릴 정도로 김일성을 숭배했다.<sup>341)</sup>

339) 전세창, 앞의 글, p. 29.

340) 최길성, 앞의 책, p. 181; 망아상태, 즉 황홀경에서 사람은 시간과 공간의 제약으로부터 벗어나, 모든 창조가 가능한 신인융합(神人融合)의 세계로 들어가게 되며, 거기에서 인간은 직접 신령에게 호소할 수 있고, 또한 신의 뜻과 축복의 약속을 들을 수 있다고 한다. 유동식, 앞의 책, p. 94.

341) 아시아 감시위원회·미네소타변호사 국제인권위원회 편, 송철복의 역, 「북한의 인권」(서울: 고려원, 1990), p. 244.

다음은 폴란드 유학 중 한국으로 망명해 온 한 귀순자의 증언이다.

김일성의 얼굴을 보는 순간 정신이 멍해지고 몸이 뜨겁게 달아오르더니 저절로 눈물이 나왔습니다. 그 황홀경의 쾌감은 한동안 계속되었습니다.<sup>342)</sup>

지금까지 북한소설에 나타나는 북한주민의 무속신앙적 관념과 행태를 살펴 보았다. 상술했듯이 북한주민들에게 있어서 무속신앙적 심성은 비교적 강하게 드러나고 있다. 특히 비합리적 신비주의, 운명주의, 지배-복종의 정당화 등, 무속신앙적 특징은 다른 무엇보다도 김일성·김정일에 대한 개인숭배 현상에서 명백하게 드러나고 있다. 이는 곧 북한당국이 북한주민들 사이에 면면이 이어져 내려온 무속신앙적 관념과 행태(초월적 존재에 대한 인정 내지 의존, 신비주의, 운명주의, 지배-복종의 정당화)를 자극, 이용하여 김일성·김정일의 우상화를 꾀하고 유일신(唯一神)적 신권체제를 유지·강화해 왔음을 반증하는 것이기도 하다.

북한소설에는 잘 나타나지 않지만 귀순자 및 방북자의 증언을 종합해 보면, 북한주민들 사이에는 무속신앙적 행위가 점증하고 있다고 한다. 예를 들어 무당굿은 비밀리에 행해지지만, 점복은 당국의 묵인하에 행해지고 있다고 한다.

그런가 하면 최근 북한에서는 민간신앙의 한 중추인 풍수신앙도 나타나고 있으며,<sup>343)</sup> 김정일은 ‘명당자리’를 찾아주는 위인으로도

342) 월간조선 편집부, 앞의 책, p. 51.

343) 풍수신앙에서는 천지의 기운이 생사회복을 좌우한다고 믿는다. 즉 산수

알려져 있다. 이른바 ‘기념비적 건축물’의 자리나 공장부지 등을 마련할 때, 김일성의 뜻을 받은 김정일이 ‘천지조화술’로 명당자리를 찾아준다는 것이다.<sup>344)</sup>

다음의 시는 ‘당창건기념탑’의 위치가 김정일이 잡아준 명당자리임을 노래하고 있다.

<상략>

그대들 가볍게 말하지 마시라  
이 탑의 위치 둘도 없는 명당자리라고

<중략>

그이께서 잡아주신 영광의 자리

<하략>

- 명당자리 -중에서<sup>345)</sup>

## 제IV장 결 론

북한주민의 종교관 분석은 북한 소설 속에 나타나는 북한 주민의 종교적 심성을 구명해 내는 것에 초점을 두고 행해졌다. 소설에 등장하는 인물들의 관념 및 행태에 있어 어떠한 종교성이 드러나는가를 살펴 본 것이다.

북한소설의 내용분석과 귀순자의 증언 및 북한체험자의 수기 등

의 영기(靈氣)가 인간의 길흉화복을 조절한다고 믿어 영기있는 지형을 찾아 묘자리와 집터를 잡는 것이다. 김태곤, 앞의 책, p. 29; 귀순자 임영선에 의하면 북한에서도 묘자리를 보여주는 지관이 있다고 한다.

344) “백두광명성전설 - 명당자리,” 『조선문학』 (1993. 9), pp. 22-24.

345) 강립석, “명당자리,” 『조선문학』 (1995. 5), p. 35.

을 종합분석한 결과는 다음의 여섯가지로 집약된다.

첫째, 북한주민의 종교성은 말살되지 않았다. 종교말살을 궁극적인 목적으로 한 북한당국의 이중적인 종교정책에도 불구하고, 북한주민의 종교적 심성은 인간본성의 일부로서 표출되고 있다는 것이다.<sup>346)</sup>

둘째, 북한주민의 일상생활에서 인간본성의 일부로서 드러나는 종교적 심성에는 특히 유교적, 기독교적, 무속신앙적 요소가 많이 내재되어 있다.

셋째, 북한주민의 종교적 관념 및 행태에 있어서는, 특히 유교문화적 사고 내지 정서가 강하게 배어나오고 있다.<sup>347)</sup> 이는 곧 북한주민에게 있어서도 유교는 종교라기 보다는 보편적인 생활윤리 내지 규범체계로서, 정치이념 내지 정치철학으로서 작용하고 있음을 입증하는 것이라 하겠다.<sup>348)</sup>

346) 여기에서 말하는 종교성이란 일반적 의미에서의 종교성이다. 그러나 북한주민의 종교성과 관련해서 다음의 사실도 주목해야 한다. 즉 북한주민의 사회화의 특징인 집단적 조직화, 획일화는 김일성 김정일 우상화의 한 방도로도 이용 되었으며, 이로 인해 형성된 북한주민의 사회적 성격은 수동적, 타율적, 폐쇄적, 동조적이고, 또한 단순하고 의존적이며 권위주의적이고 금욕적이다. 이러한 성향도 종교적인 심성과 유사하다는 것이다.

347) 북한주민의 유교적 관념 및 행태와 관련하여 볼 때 다음의 주장은 충분한 설득력을 갖는다. “특히 지도자 자신들의 생활양식과 뇌리 속에 유교적 지향이 살아 남아 있을 때, 그것은 그들의 ‘반유교’정책을 무력하게 만들 것이다. 더욱이 그러한 유산이 체제유지에 위협이 되지 않고 오히려 도움이 될 수 있을 때 더욱 그러할 것이다.” 조혜인, 앞의 글, p. 105.

348) 조선왕조 500년 전통의 유교문화적 사고는 한국인의 정서에 있어 기본토양을 이루고 있다고 할 때, 북한주민도 예외가 아님이 입증된 것

넷째, 북한주민의 관념 및 행태에서는 기독교적 심성이 비교적 많이 드러나고 있으며, 이는 특히 김일성과 김정일을 신앙의 대상으로 하여 강하게 나타난다.

다섯째, 북한주민에게 있어서도 무속신앙적 관념 및 행태가 비교적 강하게 나타나고 있으며, 특히 비합리적 신비주의, 운명주의, 지배·복종의 정당화 등, 무속신앙적 특징은 김일성과 김정일에 대한 개인숭배 현상에서 명백하게 드러나고 있다.

여섯째, 북한소설에서는 찾아볼 수 없으나 귀순자의 증언에 의하면, 최근 북한주민들 사이에서는 점복, 무당굿 등 무속신앙적 행위가 점증하고 있으며, 풍수신앙도 나타나고 있다.<sup>349)</sup>

이상과 같이 북한주민의 관념 및 행태에서는 종교적 심성이 드러나고 있으며, 특히 유교, 기독교, 무속신앙적인 관념 및 행태가 많이 나타나고 있다. 여기에서 특기할 만한 점은 다음의 두 가지이다. 하나는, 북한주민의 종교적 관념 및 행태는 김일성과 김정일의 우상화와 관련지어져 나타나고 있다는 점이다. 이러한 현상이 뜻하는 바는, 북한당국이 북한주민들 사이에 내재되어 있는 유교와 기독교, 그리고 무속신앙적인 종교적 심성을 통치차원에서

---

이다. 다음의 글은 한국인의 유교문화적 정서를 잘 설명해 주고 있다. “오늘날 제도종교로 분류되고 있지 않고 따라서 자신을 그 신자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많지않음에도 불구하고 실제적인 영향력에 있어서는 어느 제도종교 못지않는 존재라고 할 수 있는 것은 바로 그토록 오랜기간 미쳤던 절대적 영향력이 사람들의 의식 및 행동구도에 깊이 새겨져 있기 때문인 것이다.” 오경환, 앞의 책, p. 108.

349) 무속신앙을 포함해서 민간신앙이 한국 민간인의 정신생활에 미치는 영향, 즉 종교적기능은, 민간층의 살아 있는 현재적 종교로서 정신적 불안의 해소, 생활적 희망의 부여, 역사의식과 심적유대의 강화 등으로 지적된다. 김태곤, 앞의 책, pp. 332-333.

활용하여 김일성과 김정일의 우상화를 꾀했으며, 그 과정에서 북한주민의 종교적 심성이 강하게 형성되었다고 하는 것이다. 다른 하나는, 북한주민에게 있어서 유교적 관념 및 행태와 무속신앙적 관념 및 행태는, 북한주민의 생각과 행위를 지배하고 규제하는 하나의 생활윤리 내지 생활규범적인 성격을 띠고 나타난다는 점이다. 다시말해서 오랜 전통의 유교문화적 사고와, 고래로 한국인의 의식 속에 깊이 내면화되어 있는 무속신앙적 관념 내지 습속은 북한주민에게 있어서도 생활윤리, 또는 생활규범적인 기능을 하고 있다는 것이다.

북한주민의 종교성은 북한주민의 사회적 관계속에서 작용하는 생활윤리 내지 생활규범적 성격을 띠고 나타나며, 특히 김일성과 김정일에 대한 우상숭배에서 극명하게 드러난다. 이를 바꾸어 말하면 북한주민이 드러내고 있는 종교적심성은 다음의 두 가지 요인에 의해서 형성되었다는 것이다. 하나는 북한주민들 사이에서 면면이 이어져 내려온 한국인 고유의 종교적 관념 및 행태이며, 다른 하나는 북한주민들 사이에 내재되어 있는 종교성을 적극 활용한 김일성과 김정일의 우상화이다.<sup>350)</sup>

「조선말대사전」에서 종교관련 용어들이 비교적 객관적으로 설명되어 있고, 북한당국의 공식적인 종교관 및 종교정책이 전향적으로 변화 되었다고는 하지만 북한주민의 종교관은 여전히 긍정적이지 못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한 북한체험자의 말에 의하면, 북

350) 북한의 정치는 종교와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다. 북한에서 종교와 정치의 관계는 지도자가 신성(神性)을 지닌 존재로 숭배의 대상이 되는 신격화유형이다.

한사람들의 신앙심은 아주 약하며 북한청년들의 종교에 대한 관점은 냉정하거나 적대적이라기 보다 멸시적이고 야유적이라고 해야 옳을 것이라고 한다.<sup>351)</sup> 이러한 현상은 근본적으로 종교에 대한 무지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북한주민들에게도 참종교, 참신앙을 알게 해주어 자발적인 종교성 표출을 유도하고, 왜곡된 종교관을 바로 잡아주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한국 종교인들의 적극적인 종교교류 시도의 의지가 필요하다.

종교는 대외접촉 및 교류의 중요한 요소 내지 수단이다. 경제난이 심화되고 있는 북한당국으로서는 대외이미지 개선을 통한 서방세계와의 접촉 및 교류협력이 불가피하며, 이를 위해 종교를 활용하고 있다. 따라서 북한당국의 전향적인 종교관이나 종교 자유의 원칙적인 보장은 변화가 없을 것이며, 이는 북한주민의 자발적인 종교성 표출과 남북 종교교류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된다.

또한 종교와 정치의 어느 것인가가 다른 편을 조작, 이용한다면 결국 양자를 파멸로 이끌게 된다고 할 때,<sup>352)</sup> 종교를 이용한 북한신권체제의 정치는 머지않아 북한주민들의 불신을 초래할 것이며, 동시에 북한의 관제 내지 어용종교는 점차 종교본연의 역할을 찾게 될 것이다. 그 때에는 북한주민의 종교성이 자발적으로 표출될 수 있을 것이며, 참 종교인으로서의 신앙생활을 해나갈 수 있을

351) 안드레이 란코프, 「평양의 지붕밑」 (서울: 연합통신, 1992), pp. 78-79.

352) 시전민부(柴田敏夫), “현대국가에 있어서의 정치와 종교,” 시전민부 편, 편집부 역, 「정치와 종교」 (서울: 교양사, 1988), p. 207.



것이다.

인간은 완전한 종교성을 가지고 태어나는 것이 아니고, 개인의 종교성은 사회화의 과정을 통해서 발전하고 육성되며 변하거나 소멸하는 것이라고 할 때,<sup>353)</sup> 오랜 세월을 사이비 종교집단에서 살아 온 북한주민의 종교성은 우리 국민의 종교성과 이질적인 것일 수도 있다. 따라서 남북한 이질화의 극복 차원에서 북한주민의 종교성 내지 종교관에 대한 연구는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

353) 오경환, 앞의 책, p. 74.

# 통일전후 사회환경변화에 따른 통일교육 방향설정 연구

---

김 용 호\* · 홍 용 표\*\*

제 I 장 머리말

제 II 장 통일의 도래와 사회환경의 변화

제 III 장 통일전후 사회환경변화에 대비한  
통일교육 방향설정

제 IV 장 맺음말

---

\* 민족통일연구원 북한인권정보센터, 정치학 박사

\*\* 민족통일연구원 북한인권정보센터, 정치학 박사

빈 면

## 제 I 장 머리말

통일에 대한 관심과 기대가 커지면서 통일과 관련하여 예상되는 문제점들을 최소화하기 위해 통일대비계획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는 인식이 확산되고 있다. 통일과 관련하여 나타날 수 있는 문제점들은 크게 물리적인 측면과 정신적인 측면, 그리고 기술적인 측면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

물리적 측면의 문제점들은 통일비용에 관한 것이다. 통일비용의 문제는 동서독간의 통일과정에서 드러난 것으로 국민적 통일준비에 대한 경각심을 더해주고 있다. 남북한간 통일에 소요될 통일비용의 규모는 경제학자들에 따라 다소 차이가 있지만<sup>1)</sup> 30여 년에 걸쳐 상당량의 통일비용을 들여야만 통일된 한국이 통일 이전 남한경제의 성장율을 유지할 수 있다는 데에는 어느 정도 의견이 일치되어 있다. 여기에는 통일과정에서 발생하는 대량난민들의 생계지원과 낙후된 지역에 대한 사회간접시설 확충 등에 소요되는 비용이 포함된다.

정신적 측면의 문제점들은 의식구조 개선을 통해 통일에 대한 국민적 합의를 도출하는 것과 민족의 동질성 회복에 관련된 것들이다. 남한의 경우 통일과 관련하여 예상되는 문제점들이 대두되면서 남한에서는 갑작스러운 통일에 대한 부정적 의견이 나타나고 있다. 예를 들어서 통일의 당위성에 대해서는 포괄적인 국민적 합의가 이뤄진 상태지만 그 형태와 시기에 있어서는 명확한 의견

1) 「중앙일보」, 1996. 8. 12.

수렴이 이뤄지지 않고 있으며, 통일에 대한 가치혼란이 심화되고 있다. 특히 ‘통일은 반드시 이뤄져야 하지만 내 세대에서만큼은 곤란하다’는 식의 통일에 대한 시간적 ‘넙비’ (NIMBY: Not In My Backyard) 현상, 즉 넘그(NIMG: Not In My Generation) 현상이 점차 확산돼 가고 있다는 관측이다. 반면에 북한은 남한에서의 흡수통일 논의에 신경질적 반응을 보이면서 ‘흡수통일’ 논의는 통일 과정을 지연시킬 뿐이라는 경고를 하고 있다.

기술적 측면의 문제들은 통일에 대비한 관련 지식과 기술 축적을 통해 통일이 된 후에도 지속적인 경제발전이 가능하도록 조정하는 것과 관련된다. 통일후 지속적인 발전을 통한 사회안정과 국제사회에서의 경쟁력을 확보할 수 없게 된다면 통일 이전보다 오히려 국력 수준이 저하될 수도 있다. 통일후의 지속적인 경제발전을 통한 국민 전체의 삶의 수준 향상은 통일의 정착과 안정화를 위하여 매우 중요한 문제로서 통일독일의 경우도 이것이 주요 과제 중 하나로 남아 있는 실정이다.

통일에 대비하기 위해서는 여러 측면에서의 계획과 정책이 수립돼야 하겠지만 아무리 많은 액수의 통일비용과 다양한 계획이 마련되었다고 해도 정신적 혹은 기술적 측면의 문제들에 대한 해결 노력이 없이는 통일과정이 술한 난관에 부딪힐 수밖에 없다. 그런데 이러한 문제들의 해결은 단기간 내에 이루어지기 어려운 것으로서 지속적이고 체계적인 교육에 의존할 수밖에 없다.

물리적 측면과 기술적 측면의 과제가 경제적 방법을 동원해 해결돼야 할 문제들이라면 정신적 측면의 문제는 교육을 통해 해결돼야 할 문제들이다. 통일의 전단계와 그 과정 및 이후에 이르는

오랜 기간에 걸쳐서 통일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모든 교육행위들은 통일교육이라고 지칭할 수 있는데, 독일의 경우 이와 같은 통일에 대한, 통일을 위한, 통일에 대비한 교육활동들은 통일과정에서 없어서는 안될 매우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여 왔으며, 앞으로도 독일의 발전을 위해 중요 역할을 수행할 것으로 예상된다.

통일시대를 대비하기 위한 교육의 중요성에도 불구하고 우리 국민들의 절반 이상은 통일과 관련된 교육을 받은 적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 여론조사에서 통일교육을 받은 적이 있는가를 묻는 질문에 20대 응답자의 경우 52.5%, 30대는 56.5%, 40대는 61.8%, 50세 이상은 73.0%가 통일교육을 받은 적이 없다고 답하였다.<sup>2)</sup> 이같은 수치는 단순한 수치상의 문제가 아니라 현재 일반인들이 가지고 있는 통일에 대한 부정적 인식의 정도와도 관련되는 문제로서 통일과정에서 야기될 수 있는 혼란의 정도와도 비례할 수 있는 것이다. 그러나 이처럼 통일교육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통일교육이 특별히 필요하지 않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전체의 0.6%에 불과해 대다수의 사람들이 통일에 대비한 교육활동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sup>3)</sup>

일반 국민들이 통일교육의 필요성을 지적하면서도 이것이 구체적인 교육활동으로 연계되지 않는 것은 실제로 접할 수 있는 통

2) 민족통일연구원, 「1994년도 통일문제 국민여론 조사결과」 (서울: 민족통일연구원, 1994) 참조.

3) 민족통일연구원, 「1995년도 통일문제 국민여론 조사결과」 (서울: 민족통일연구원, 1995) 참조.

일관된 교육프로그램이 부족하고 교육의 기회가 극히 제한적이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다. 현재 통일교육은 학교교육의 일부로 도덕이나 윤리 등의 특정 교과목에서 실시하고 있는데, 학습목표가 포괄적으로 제시되어 있지 못하고 1990년대 이후의 상황을 제대로 다루고 있지 못하며 일관성도 부족하다고 지적되고 있다.<sup>4)</sup> 특히 입시교육 위주인 학교교육에서 통일교육은 현실적으로 중시되기 어렵고 대부분 피상적으로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아서 실효성을 기대하기가 어렵다고 판단된다. 그러나 그나마도 학교를 마친 후에는 접할 기회가 거의 없어서 대다수의 일반인들은 통일에 대비한 실질적인 준비가 어려운 실정이다.

통일교육은 무엇보다도 통일이 초래할 환경의 변화를 염두에 둔 상황에서 준비되어야 실효성을 거둘 수 있다. 앞서 언급한 바와 마찬가지로 통일은 정치, 경제, 사회 등 실생활과 직결된 거의 전 분야에 걸친 환경의 변화를 초래할 것이기 때문에 교육대상자는 무엇보다도 자신의 생활과 직결된 환경의 변화에 민감할 수밖에 없으며, 이를 도의시한 통일교육 프로그램에는 호응도가 낮을 수밖에 없을 것이다. 즉 통일이 가져올 사회전반적인 환경의 변화를 미리 예측하여 이에 대비한 통일교육 프로그램을 마련하지 않을 경우 현실과 동떨어진 교육내용으로 말미암아 통일교육이 실효성을 상실할 위험이 따를 수 있고 자칫 급조된 교육내용에 의존할 가능성마저 상존하는 실정이다.

뿐만 아니라 통일의 전후 과정에서 요구되는 교육은 특정 연령

---

4) 신상조, “통일교육의 현주소”, 『교육개발』 (1993. 8), p. 32.

층의 학생이나 집단뿐 아니라 전국민을 대상으로 이루어져야 하며 현재 실시되고 있는 것처럼 단순한 이념교육 수준에 머물러서도 안된다. 통일을 정착시키기 위한 교육은 전국민을 대상으로 실시되어야 하며 여기에는 남북한 주민이 모두 포함된다는 점을 고려할 때, 통일교육의 학습대상자는 매우 다양하고 광범위할 것으로 예상할 수 있다. 또한 통일교육은 그 특성상 사회 전분야를 대상으로 하므로 교육에 포함되어야 할 내용이 매우 다양하며, 가치 및 태도 변화를 위한 교육에서부터 실질적인 기술교육에 이르기까지 매우 여러 유형의 교육이 요구된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학습자들의 연령, 사회경제적인 배경, 직업 등 여러 가지 요인에 따라서 필요한 혹은 필요로 하는 교육내용이 달라질 수 있다.

본 연구는 통일과정에서 수반되는 제한경의 변화를 예측함에 따라 통일이 초래할 교육환경의 변화를 도출해 냄으로써 통일문제에 대해서는 상대적으로 생소한 교육전문가들로 하여금 통일교육의 방향설정과 프로그램의 작성시 참고자료로 활용되도록 하기 위해 수행된 것이다. 이를 위하여 우선 통일이 가져올 사회환경의 변화를 정치, 경제, 문화, 환경 및 군사적 측면으로 나눠 검토해보고 이같은 환경의 변화를 흡수함은 물론 이를 활용, 더욱 효율적인 교육효과를 거둘 수 있는 통일교육의 방향을 모색해보고자 한다.



## 제II장 통일의 도래와 사회환경의 변화

현시점에서 예상되는 통일<sup>5)</sup>의 형태는 여러 가지를 상정해 볼 수 있어서 통일의 형태에 따라 교육을 비롯한 전반적인 사회환경의 변화에 커다란 차이가 있을 것임은 물론이다. 여기에서 '통일' 혹은 '통일시대'라는 용어는 통일 이전의 단계로부터 통일이 실현되고 그 직후 과도기를 거치는 이른바 통일과정까지를 포함하는 것으로 규정할 수 있다. 그것은 여러 가지 통일형태—독일의 흡수 통일, 베트남에서의 전쟁을 통한 통일, 다시 무력분쟁 상태로 돌아가긴 했지만 예멘의 경우에서 볼 수 있는 합의통일—중에서 어떤 유형이 한반도에 실현될 지 불분명한 상황하에서 완전한 통일이 실현되어 남북한이 완전통합된 상태만을 통일시대라고 규정할 경우 최소 30여 년 이후의 상황을 언급해야 하기 때문이다.<sup>6)</sup> 이것은 현시점에서 다소 비현실적인 논쟁을 불러일으킬 수 있다.

통일이 성사되지는 않았지만 가시화되었을 단계, 즉 통일직전의

- 
- 5) 이 글에서의 통일은 시장경제에 기초한 자유민주주의체제하의 통일을 지칭하는 것으로 가정한다. 물론 통일의 형태는 여러가지가 있을 수 있겠지만 통일에 대비한 계획이나 대비책 등은 계획을 수립하는 측이 주체가 되는 통일을 기본 가정으로 할 수밖에 없다는 제약을 안고 있다. 북한과의 공동연구가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상황이고 북한이 단독으로 마련한 통일대비계획을 일방적으로 수용하는 것이 실질적으로 불가능한 상황임을 고려한다면 이와 같은 가정하에서만 연구가 진행될 수 있다. 그러나 이글에서는 통일 이후 남북한의 상황을 남북한 주민 모두의 입장에서 최대한 객관적으로 분석, 반영하고자 하였다.
- 6) 독일의 경우도 완전한 통일을 이뤘다고 보기는 힘들다. 아직도 동독지역과 서독지역간에는 개발격차가 있을 뿐 아니라 동독주민들의 소외감도 완전한 통합에의 저해요소가 되고 있는 실정이기 때문이다.

단계부터 정치, 경제, 문화, 환경, 군사 등 사회 각분야는 빠른 속도로 변화되고 사회의 전반적인 구조도 통일 위주로 재편되는 상황이 얼마든지 발생할 수 있다. 이와 같은 사회환경의 변화에 따라 요구되는 교육의 모습과 내용은 절대적인 영향을 받을 것이다. 따라서 통일을 준비하고 정착시키기 위해 필요한 교육의 내용을 살펴보기 위해서는 우선 통일에 따르는 사회환경의 변화가 어떠한 모습으로 이루어질지 예측하여 보는 것이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이에 따라 본 장에서는 통일교육의 기본 바탕이 될 통일 이후 사회환경의 변화 모습과 예상되는 문제점들을 예측해 보고자 한다.

우선 정치적으로 통일은 남북한 정치제도의 융합이라는 과정을 필연적으로 거치게 된다. 민주주의체제에 기반을 둔 통일을 가정할 경우 북한지역의 경우는 전면적인 정치제도의 변혁을 필요로 한다. 이 과정에서 북한지역은 경쟁에 의한 선거와 같은 전혀 새로운 정치제도의 도입이 불가피하다. 현재 북한지역에는 남한의 국회적인 최고인민회의 대의원선거가 5년마다 치뤄지게 되어 있으나 북한정권수립 이후 단 한 차례도 대의원선거가 임기에 맞춰 실시된 적은 없었다.<sup>7)</sup> 현재의 제9기 대의원선거는 지난 1990년 4월 22일에 실시됐다. 임기대로라면 1995년에 있어야 할 선거가 아직도 실시되지 않은 실정이다. 북한식 선거에 익숙한 북한주민들이 다수의 후보자가 참여해 열띤 선거유세를 벌리고 공정선거 시

7) 북한 최고인민회의의 대의원의 임기는 제1기 대의원이 3년, 2기부터 9기까지 4년으로 규정돼 있었다. 현재의 9기 대의원도 임기 4년으로 선출되었으나 1992년 4월 9일의 개정헌법에 따라 임기가 5년으로 연장되었다.

비가 항상 문제시되는 선거풍토에 제대로 적응할 수 있을 것인지는 전적으로 북한주민들의 정치사회화 과정의 효율성 여부에 달려 있다. 통일 이후 변화된 정치환경은 남한의 정치상황에도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친다. 특히 지역분할구도로 말미암아 수도권에서의 득표여부가 선거의 관건이 되던 과거와는 달리 대략 남한유권자의 1/3이 될 것으로 추정되는 북한지역에서의 득표 여부가 선거에서 새로운 변수로 등장하게 돼 각 정당은 북한지역에서의 득표전략 수립을 등한시할 수 없는 상황이 전개될 것이다.

한편 통일 이후 정치환경의 변화에 따라 세력 확장을 위한 정치권내의 경쟁은 더욱 심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남한유권자들은 종래 지역할거주의의 산물이라고 비난하던 지역기반의 정치지도자 대신 통일시대에 걸맞는 새로운 지도자의 등장을 요구할 가능성이 적지 않아 남한의 기존 정치구도의 재편이 예상된다. 북한지역의 지도자그룹 역시 어떤 형태로든 통일 이전 북한지역의 기득권층을 대변하는 정치세력을 구축하려는 노력을 기울이게 될 것이므로 통일 이후 정치권의 양상은 마치 해방 이후의 상황처럼 매우 복잡해 질 수 있다. 이 과정에서 북한지역 유권자들에 대한 일부 몰지각한 후보자들의 물량공세나 북한에 연고를 가졌다고 주장하는 후보들에 대한 남한내 일부 반정부세력의 무조건적인 지지현상이 없을 것이라고 단언하지 못하는 실정임을 감안한다면 남북한 주민 모두가 변화될 정치체제에 대한 나름대로의 시각을 갖는 것이 더욱 중요해진다고 할 수 있다.

통일과정에서 가장 커다란 혼란을 불러일으킬 것으로 예상되는 분야는 역시 경제분야이다. 우선 공산주의식 배급제에 익숙한 북

한주민들이 시장경제에 기초한 자유주의 경제체제에 적응하는 일은 그리 쉽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동서독간의 통합 이후 자유주의 시장경제체제에 적응하지 못한 동독지역 실업자들이 급증했던 사례는 남북한간의 통합과정에서도 얼마든지 발생할 수 있다. 그러나 이것은 생각만큼 어렵지 않을 수도 있다. 북한 내부에서는 이미 사회주의경제체제의 한계가 드러남에 따라 사적 거래가 늘고 있는 실정이다. 농산물 생산부족으로 '개인띠기발'이라는 개인 경작지가 늘어 여기서 생산되는 작물을 개인이 식량으로 사용하거나 매매하는 것이 암암리에 성행하고 있다. 또한 가내공업 등의 형태로 의류, 빙과나 과자류의 판매가 공공연하게 이뤄지는 실정이기도 하다. 특히 해외교포를 친척으로 둔 가정의 경우 이들이 북한을 방문하면서 주고간 외화가 빈부격차의 원인이 되고 있다. 물품부족으로 북한 원화로는 돈이 있어도 사고 싶은 물건을 못사는 경우가 허다하지만 외화전용상점의 경우 외국관광객 유치와 해외교포들이 주고간 외화를 거둬들이기 위해서라도 다양한 물품을 준비하고 있어 생필품은 물론 외제물건 등 사치품목의 구입도 가능하다. 자연 '외화와 바꾼 돈표'<sup>8)</sup>의 가치는 법정교환비율을 넘어 원화의 100배까지도 뛰어올랐다고 북한을 방문하고 돌아온 인사들이 전한다.

통일이 가져올 경제 분야의 변화 중에서 가장 큰 것은 인구이동

8) 북한의 화폐구조는 북한의 원화와 '외화와 바꾼 돈표'로 이원화돼 운영된다. 원화와 외화와 바꾼 돈표의 법정 교환비율을 2:1, 즉 북한돈 2원을 주면 외화와 바꾼 돈표 1원을 내준다. 외화와 바꾼 돈표와 美달러와의 교환비율은 역시 2:1, 즉 미국돈 1달러면 외화와 바꾼 돈표 2원을 주는 식이다.

을 꼽을 수 있다.<sup>9)</sup> 통일 직전 단계에 가능할 것으로 보이는 상품 및 자본의 이동과는 달리 인구의 이동은 이주요인의 동시다발적 분출로 인해 통일의 실현과 동시에 갑작스럽게 나타날 가능성이 농후하다. 단순노동인력의 부족현상이 나타나는 남한의 인력수급 구조를 고려해 볼 때 북한인구의 유입은 자원배분의 효율화 측면이 있어 순기능적 현상이라고도 간주할 수 있지만 이들 유입인구의 대부분이 대도시주변에 정착하게 될 경우 이미 포화상태에 있는 주택과 교통 등 사회적 흡수능력이 문제시될 가능성도 농후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특히 북한지역의 유희노동력 유입으로 전반적인 노동임금 수준이 저하될 것이며 이에 따른 남한지역 단순노동자들의 불만 역시 사회문제화될 수 있다는 분석도 제기되고 있다.<sup>10)</sup>

한편 북한지역에서는 실업이 만연할 것이라는 분석이 제기되고 있다. 공산주의체제는 특성상 완전고용을 목표로 하기 때문에 효율성과 관계없이 한 업종에 불필요한 노동력이 집중돼 있는 경우가 많다. 그러나 통일에 따라 효율성과 경쟁을 중시하는 자본주의 경제체제로 전환될 경우 북한기업들의 감원은 불가피하고, 따라서 많은 노동력이 실직상태에 빠지게 될 것이라는 관측이다. 이와 함께 북한경제가 시장경제화하는 과정에서 배급제라는 북한지역 내 소득보장 시스템이 상실되면서 북한경제는 절대빈곤과 심각한 인플레이션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아질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sup>11)</sup>

9) 박진, “통일후의 경제생활, 어떻게 달라지나,” KDI 연구보고서, p. 2.

10) 위의 글, pp. 2-3.

11) 위의 글.

남한의 경우 새로운 사업을 시도하거나 기존의 사업을 확장하고자 하는 중소기업들의 북한지역 진출 사례가 빈번해질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북한지역의 사정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채 북한지역에 진출할 경우 정부차원의 지원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데, 정부의 지원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다면 이들 기업의 도산 가능성도 적지 않다고 전망된다. 남한에서의 어려운 기업현실을 북한지역 진출로 극복해보려는 중소기업들이 적지 않은 실정이고, 이들의 움직임을 일일이 규제할 수 없는 현실이고 보면 이 역시 또다른 사회문제로 대두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통일은 수십년간 서로 다른 환경에서 살아온 이질적인 두 문화집단의 조우로 인한 문화충돌 현상을 가져올 것이며, 상대적으로 국제화된 남한의 사회와 김일성의 '주체사상'으로 교육받은 북한지역 주민들의 폐쇄적 사고방식의 충돌현상도 야기될 것으로 예상된다. 생활방식과 사고방식의 차이로 인한 충돌은 민족의 동질성회복에 장애요인이 되는 것으로 사소한 일상생활에서부터 예상외로 심각한 문제로 대두될 수 있다. 예를 들어서 철저하게 통제된 사회에서 사상학습과 집단생산 방식에 익숙한 북한주민들은 자유와 방임에 대한 분별력이 없는 상황에서 갑작스런 일탈욕구의 분출 등으로 혼란을 겪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 뿐만 아니라 옷차림의 차이에서 남북한 주민들의 외관상 구분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돼 이같은 현상은 더욱 심화될 소지를 안고 있다. 특히 남한여성들의 자유분방한 옷차림에 대한 북한주민들의 거부감과 생소함이 부정적으로 표출될 가능성도 있다.

한편 경제적으로 우위에 있는 남한주민들이 북한지역 주민들에

게 가질 수 있는 일종의 우월감은 실질적인 사회적 통합을 저해할 수 있는 요소로 부각될 수 있다. 일부 남한주민들은 통일을 달성했다는 성취감이 차차 식어가면서 북한주민들에 대한 우월감의 과시나 멸시, 의도적 회피 등의 행태를 보이는 등 남북한 주민들 간에 갈등의 소지가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더구나 통일로 말미암아 적지 않은 통일비용과 세금부담의 증가가 필요시때 단기적으로 남한경제가 위축될 것이 예상되는 만큼 남한주민들의 북한지역 주민들에 대한 불만소지는 적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현재 남한에 진출해 있는 연변지역 교포들이 남한주민들로부터 느끼는 일종의 모멸감 등의 감정을 통일후의 북한주민들이 느낄 가능성도 적지 않다고 판단된다.

이와 같은 남북한 주민들의 상호에 대한 몰이해는 통일 이후에도 실질적인 민족통합의 걸림돌로 작용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러한 것은 통일이 이루어진 베트남의 예에서도 쉽게 찾아볼 수 있다. 지난 1994년 베트남을 방문한 한국의 기자단을 베트남 경찰이 안내하였는데, 통일 이전 북베트남의 수도였던 하노이에서 기자단을 태운 버스를 길을 가득 메운 인파가 좁처럼 비켜주려 하지 않자 오토바이를 타고 안내하던 경찰들은 호루라기만을 불뿐 별 조치를 취하지 못해 이동시간이 꽤 많이 걸렸다고 한다. 그런데 이들이 남베트남의 수도였던 호치민시(옛 사이공)를 방문했을 때 똑같은 현상이 벌어지자 경찰들이 곤봉으로 인파를 마구 때려 쓰러뜨리는 것을 목격하고 베트남에 아직 실질적인 통합이 이뤄지지 않았음을 실감했다는 것이다. 또한 독일의 경우 동서독 주민들이 서로를 Ossi(동독주민들을 비하한 표현)와 Wessi(서독주민들을 비

하한 표현)로 부르면서 서로에 대해 여전히 거리감을 갖고 있는 것을 쉽게 볼 수 있다.<sup>12)</sup> 이와 같은 사례에서도 보듯이 서로간의 문화적 충격을 극복하고 이루어지는 주민들간의 통합은 단시간내에 해결될 수 있는 사안이 아니라는 점은 시사하는 바가 크다.

생활방식과 사고방식의 차이 이외에 북한주민들에게 또하나의 문화적 충격요인이 될 수 있는 것으로 신문, 방송을 비롯한 컴퓨터 등의 다양한 첨단 정보매체의 유입을 들 수 있다. 우선 다양한 정보매체에 익숙치 않은 북한주민들에 대한 언론의 영향력은 막대할 것으로 판단된다. 당기관지인 「로동신문」과 정부기관지인 「민주조선」 등의 주입식, 공지식 언론에 익숙했던 북한주민들은 언론보도 자체를 맹목적으로 믿을 가능성이 있다. 특히 통일 이후 언론사들의 시청률 및 구독률 경쟁은 더욱 심해질 것으로 예측되어 남북한 주민 모두가 피해를 입을 가능성은 얼마든지 있다. 또한 통일이 이루어지는 시점에는 컴퓨터에 기반을 둔 정보통신 매체들이 새로운 사회의 간접자본으로서 생활의 기본적인 도구가 되는 성숙된 정보사회가 될 것으로 예측되는데, 정보통신 매체를 사용해본 경험이 거의 없는 북한주민들이 이와 같은 정보사회에 갑자기 접하게 될 경우 심한 문화적 충격을 겪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밖에 외국기업과 외국인들이 통일 경기 특수를 노리고 대거 통일한국에 진출할 것으로 예상되는데 이 역시 북한주민들의 문화적 충격을 더하는 요소가 될 수 있다.

통일 이후에는 환경과 관련하여 남북한 주민들간의 갈등이 심화

12) 「동아일보」 1996. 10. 1.



될 수 있다. 이미 과다 개발되어 환경보호가 절실했던 남한과는 달리 상대적으로 잘 보존돼 있는 북한의 환경을 보호해야 할 필요성이 대두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북한주민들이 저개발상태에 머무르는 것에 대한 불만을 갖게 될 가능성이 있다. 북한의 경우 이미 조성돼 있는 공단지역을 제외하면 대부분의 지역은 통일 이후 환경보존지구로 선정될 가능성이 높다. 그렇게 될 경우 이 지역 주민들은 시장경제체제에서 살아남기 위해 타지로 직장을 찾아나서던가 관광 등 서비스 업종에 종사해야 하는 제한된 선택을 강요당하기 쉬운데 이는 앞에서 언급한 부작용을 낳을 수 있다. 따라서 저개발로 인해 비교적 잘 보존된 북한의 환경을 보호하면서도 북한주민들의 피해를 극소화할 수 있는 다양한 방안들이 모색되어야 할 것이다.

통일 이후 남북한간의 교육통합을 위해서는 학제의 통합이라는 외형적 문제와 교과과정의 통합이라는 내형적 문제가 동시에 해결돼야 할 것으로 본다. 독일의 경우처럼 구서독의 교육제도를 중심으로 교육통합이 이루어진다면 북한의 교육 부문은 근본적인 변혁을 필요로 할 것이다. 북한은 4-6-4의 학제를 유지하고 있는데 이것은 우리의 초등학교격인 인민학교 4년, 고등중학교과정 6년, 그리고 대학 4년을 말한다. 전문대학격인 고등전문학교는 우리와 마찬가지로 2년에서 3년의 교육과정으로 돼있고, 단과대학은 3-4년의 교과과정으로 구성되어 있다. 북한은 유치원의 마지막 1년과정에서 고등중학교 졸업시까지 도합 11년의 의무교육을 실시하고 있는데,<sup>13)</sup> 통일 이후 적절한 교육예산이 확보되지 않는 한 북한주민들이 받아오던 이와 같은 의무교육의 혜택은 어쩔 수 없

이 중등교육 수준으로 단축될 수밖에 없게 되어 북한주민들은 상대적으로 교육기회가 축소되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다.

북한의 경우에는 교육내용에도 근본적인 변화가 일어날 것이다. 북한의 교육내용에서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김일성이나 김정일에 대한 이상화 내용이 제외되어야 하고 기본 교육내용은 전면적으로 새롭게 구성되어야 한다. 특히 통일의 도래는 현재 남한 지역에서 진행되고 있는 교육개혁이 어느 정도 안정화되는 시점일 것으로 예측되어 통일 이후 교육의 형태나 내용은 이의 영향을 받을 것으로 생각된다. 한편 북한지역에서 교육받은 학생들이 남한지역의 교육기관에 입학 혹은 편입을 하거나 그 반대의 경우에 관한 사례가 늘면서 학생들간의 갈등이나 교육내용의 충돌현상도 예상된다. 특히 전반적으로 낙후된 북한지역의 교육수준을 남한과 비슷한 수준으로 끌어올리는 것은 교육부문의 커다란 과제가 될 것으로 생각된다.

통일은 군사적 대치상태의 남북한을 하나의 국가로 만든다는 점에서 군사적 측면에서도 커다란 변화를 수반할 것이 확실하다. 인민학교에서부터 '미제'와 '남조선괴뢰'를 적으로 세뇌시키는 교육을 교과과정 전반에 걸쳐 받아온 북한주민들에게 남한과의 통합이 자동적인 '우적'개념의 변화로 이어질 것을 기대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 마찬가지로 북한에 대해 비교적 개방적인 사고를 갖고 있는 남한의 젊은 층들과는 달리 전쟁경험세대들은 북한에 대해 여전히 부정적인 경향을 갖고 있을 것이다. 이러한 현상은 예멘의 통

---

13) 「'95 북한개요」 (통일원, 1995), pp. 339-345.

합과정에서도 나타난 바 있다. 예멘은 통합초기 남북예멘의 군인들이 각각의 군복을 입은 채로 관공서나 외국공관에 대한 합동근무를 하는 등의 모습을 연출해 내기도 했지만 곧 군사내전을 겪게 됐음은 주지의 사실이다. 특히 남북한간의 군사통합은 흡수통일인가, 아닌가의 여부를 판명해 주는 척도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첨예한 관심사로 떠오를 수 있다. 서독으로 흡수통일됐던 동독군인들 중 연대장급 이상 장교들은 대부분 전역조치되었던 것을 북한의 군부엘리트가 이미 파악하고 있다는 점을 감안할 때 통일과정에서 북한군부에 의한 반통일 쿠데타가 일어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이상에서 본바와 같이 통일로 인해 기존의 사회환경은 매우 크게 변화될 것이다. 이와 같은 사회환경의 변화는 곧 교육환경의 변화를 의미한다. 사회는 곧 교육이 이루어지는 장(場)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교육은 사회의 변화와 무관하게 논의될 수 없으며 사회의 변화에 따라 교육의 요구와 내용은 변하게 된다. 특히 북한지역에서는 구동독지역의 경우처럼 ‘대대적인 변형(the great transformation)’이 일어날 것으로 예상되므로 이 지역의 사회변화를 지원하기 위해 요구되는 교육의 역할은 그만큼 크고 중요해질 것이라는 점을 예상할 수 있다. 통일교육이 제역할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이와같은 사회 및 교육환경의 변화를 수용하는 기반 위에서 입안되어야만 교육효과를 극대화시킬 수 있음은 물론 통일과정 전반을 단축시키는 데 이바지할 수 있을 것이다.

## 제Ⅲ장 통일전후 사회환경변화에 대비한 통일교육 방향설정

통일이 통일 이전 단계, 통일시점, 과도기와 정착 및 안정화의 단계를 포괄하는 것이라면, 통일교육에는 통일을 준비하기 위한 교육과 통일 이후 하나가 된 사회의 완전한 통합 및 안정화에 필요한 교육이 모두 포함되어야 한다. 통일교육은 단시일 내에 단순히 지식을 전달함으로써 이루어지는 것이라기보다는 장시간에 걸쳐 지속적으로 실시되어야 하며, 남한지역과 북한지역의 교육적 요구를 충분히 고려하여 이루어져야 하기 때문에 좀 더 장기적인 안목에서 체계적인 교육계획을 수립하는 것이 필요하다.<sup>14)</sup> 이 장에서는 앞에서 기술한 사회변화에 따라 대두될 수 있는 교육 요구를 분석하고 통일을 준비하고 지원하기 위해서 마련되어야 할 통일교육의 내용에 대해 논의하고자 한다.

독일의 사례에서 보듯이 통일교육은 통일과정에서 매우 중요한 역할을 수행할 수 있다. 우선 통일 이전 단계에서 교육은 통일을 위한 배경조건 형성에 결정적인 역할을 할 수 있다. 이질화된 남북한 주민들간의 가치나 태도의 변화를 유도할 수 있기 때문이다.

14) 독일의 경우 통일 이후 동독지역의 교육은 주로 서독의 교육제도를 따르고 있으며 동독주민들의 요구를 토대로 이루어지고 있다. 동독주민들은 이미 통일 이전에 서독의 교육에 관한 정보를 비교적 많이 가지고 있었으므로 서독의 교육제도들을 비교적 무리없이 수용할 수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간적인 촉박과 재정문제가 가장 큰 어려움으로 지적되고 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교육개발원, 「독일교육통합과 파생문제점 분석연구」(서울: 교육개발원, 1993) 참조.

또한 교육은 통일시점 이후의 과도기에서 통일사회의 정착과 안정화를 이끄는 원동력이 될 수 있다. 통일 이후 완전한 하나의 사회로의 통합은 남북한간의 동화 여부에 따라 성공여부가 판별된다. 또한 사회의 안정화를 위해서는 통일사회의 지속적인 성장과 발전이 필요하다. 이 과정에서 교육은 통일사회에서 필요한 동질성 회복의 실질적 요소인 정신적 측면에서의 동화를 유도하는 핵심요소이며 기술적 측면의 향상을 준비하는 데에 필수불가결한 요소라고 할 수 있다

통일과정에서 교육이 담당할 수 있는 이와 같은 역할에 비추어 통일교육의 목표는 크게 세 가지로 설정해 볼 수 있다.

첫째, 통일교육은 남북한간 민족의 동질성 회복에 초점을 맞추어야 한다. 통일과정을 통해 사회 각 분야에서 나타날 수 있는 남북한 주민들간의 갈등구조를 풀고 민족의 동질성을 회복하는 것은 가장 중요한 문제 중의 하나지만 남북한의 경우 이것은 가장 어려운 문제이기도 하다. 통일이 가져올 가장 커다란 혼란은 남북한 주민들이 상대방에 대한 인식의 변화를 짧은 시간내에 소화해야 한다는 것이다. 따라서 통일교육은 이러한 정신적 측면의 변화가 빠른 시일내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둘째, 통일교육은 남북한 주민들의 기술적 측면의 준비도를 높임으로써 통일사회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한다. 이것은 시의적절한 교육활동을 통해 통일에 따르는 사회·경제적인 분야의 변화에 적절히 대응함으로써 국민 각자의 생활향상에 도움이 될 수 있는 기본적인 준비를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다.

셋째, 통일시대는 세계화가 더욱 가속화되는 경향을 보일 것이므로 통일교육은 국제사회에서 개인 및 국제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질적으로 우수한 인적자원 개발에 초점을 맞추어야 한다. 이것은 남북한 주민들이 단순히 국내에서의 삶의 수준 향상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좀 더 거시적인 관점에서 세계속의 한국인이라는 인식하에 이에 대응할 수 있는 지식과 기술을 확보함으로써 국가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는 것이다.

이와 같은 교육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통일교육의 내용은 남북한 사회의 기본적인 차이점과 현실상황을 고려하여 필요에 맞게 적절히 준비되어야 한다. 우선 남한의 경우에는 통일에 대한 좀 더 적극적이고 긍정적인 자세를 가지고 통일을 준비할 수 있는 정신적인 측면의 교육이 보다 강조되어야 할 것이다. 여론조사에 따르면, 현재 남한사람들 중 대다수의 사람들은 북한에 대하여 별로 관심을 가지고 있지 않다.<sup>15)</sup> 국민의 극소수(5.6%)만이 북한에 대하여 관심을 가질 뿐 현재의 일상생활과 별로 관계가 없는 북한에 대한 이야기는 거의 화제가 되지 않거나(22.2%) 별로 화제가 되지 않는다.(33.5%) 어느 정도의 관심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38.7%)을 합해도 북한에 대해 관심을 가진 수는 응답자의 절반이 되지 않는다. 또한 남한사람들에게 있어서 북한은 여전히 경계의 대상이다. 북한을 지원이나 협력대상으로 보는 사람들보다는 경쟁, 경계 혹은 적대대상으로 보는 사람들이 더 많다. 이것은 남한사람들이 북한에 대해 부정적인 인식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반영하는

15) 민족통일연구원, 「1995년도 통일문제 국민여론 조사 결과」, (서울: 민족통일연구원, 1995) 참조.

것으로 이와 같은 부정적인 인식은 오히려 시간이 가면서 더 확산되고 있는 경향이다.<sup>16)</sup>

북한에 대한 인식에 있어서는 세대간의 차이가 뚜렷이 나타나고 있다. 북한에 비해 자유로운 사회분위기가 조성된 남한에서 북한에 대한 인식의 차이가 세대별로 극명하게 나타난다는 사실은 통일 이후 북한주민들과 어우러진 삶을 지향하는 데 걸림돌이 될 것으로 예측된다. 아래의 표에서 보는 바와 같이 북한에 대해 긍정적으로 인식하고 있는 20대가 30.8%인데 반해, 전쟁경험세대는 16.4%에 불과해 20대와 전쟁경험세대간의 긍정적 인식차는 거의 두 배정도나 편차가 날 정도이다. 특히 북한을 협력대상으로 인식하는가의 여부에 대해서는 20대가 29.9%, 전쟁경험세대가 11.0%로 3배 가까운 편차를 보이기도 한다. 이같은 기본적인 인식의 차이는 북한에 대한 식량지원여부와 같은 특정사안에 대하여 정책입안자가 정책지속성을 유지할 수 없을 정도로 양분된 여론을 형성하게 된다.

북한에 대한 무관심과 부정적 인식이 팽배해 있다는 것은 대부분의 남한 사람들이 통일을 민족적 과제로 인식하고 통일의 당위성에 대하여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면서도 통일에 대한 실질적인 태도면에서는 반드시 그렇지 않다는 사실을 뒷받침한다.

16) 1994년도의 통일문제 국민여론 조사결과와 비교하여 볼 때, 북한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은 1994년도의 40.3%에서 1995년도의 63.1%로 오히려 증가하였다. 자세한 사항은 「1995년도 통일문제 국민여론조사 결과」(서울: 민족통일연구원, 1995)와 「1994년도 통일문제 국민여론조사 결과」(서울: 민족통일연구원, 1994) 참조.

&lt;표 1&gt; 북한에 대한 인식유형

(단위: %)

질문	응답 유형	20대	30대	40대	50세이상
북한은 우리에게 어떤 대상인가	도와줄 대상	37.5	41.5	41.0	38.1
	협력대상	29.9	21.1	13.5	11.0
	경쟁대상	3.0	2.2	2.4	2.5
	경계대상	25.4	28.6	33.1	39.0
	적대대상	4.2	6.5	1.0	9.2
	무응답	0.0	0.0	0.0	0.3
북한에 대한 이미지	긍정적	30.8	24.1	25.5	16.4
	부정적	66.9	73.9	70.5	83.6
통일의 필요성	필요하다	88.8	91.3	91.6	96.7
	불필요하다	11.2	8.7	8.4	3.3
통일이 필요한 이유	민족의 재결합	59.9	59.9	62.2	51.8
	이산가족 고통해소	5.0	9.3	8.3	22.5
	전쟁 방지	14.1	15.0	12.2	20.1
	북한주민 생활향상	1.2	1.6	1.3	0.5
	선진국 진입	19.8	14.2	16.1	5.1

&lt;출처&gt; 민족통일연구원, 「1994년도 통일문제 국민여론 조사결과」 1994.

1995년도의 여론조사에서는 반드시 통일이 필요하다고 답한 사람이 58.0%였던 반면, 통일이 되면 좋지만 반드시 통일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하지는 않는다는 사람이 34.3%, 현재 상태를 유지하는 것이 좋다는 응답이 7.7%로 통일에 대해 유보적인 태도를 가진 사람도 전체의 42.0%에 달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응답자의 40.9%가 10년 이내, 26.9%가 20년 이내, 그밖에 9.5%가 5년 이내,



7.1%가 30년 이내 등 전체 응답자의 84.4%가 한세대 이내에 통일이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처럼 북한에 대한 무관심이나 부정적 인식, 그리고 통일에 대한 소극적인 태도를 가지고 있는 상황에서 통일에 직면하게 될 경우, 통일과정에서 더 많은 혼란과 어려움을 겪을 수 있고 심지어는 우리가 원하는 방식대로 통일이 이루어지지 못할 수도 있으며, 안정된 통일을 기약하는 것은 더욱 요원할 것이라고 생각된다. 이러한 점에서 통일을 준비하는 단계에서 남한의 통일교육이 주안점을 두어야 할 것은 바로 국민들의 이와 같은 태도와 의식을 변화시켜 좀 더 미래지향적이고 적극적인 자세를 갖도록 함으로써 통일에 대비한 정신적인 힘을 결집하는 것이라고 본다. 이와 함께 통일 이후 남한지역 주민들이 북한주민들과의 공동생활을 시작하게 될 때 북한주민들에 대한 몰이해나 오해, 우월감의 표현 등으로 통일과정에 부작용을 일으킬 수 있으므로 이를 최소화할 수 있는 교육이 병행되어야 한다. 한·중수교 이후 중국의 조선족 자치구인 연변지역을 방문한 일부 한국관광객들이 이 지역의 조선족들을 무시하는 태도나 달려로 팁을 남발하는 행위 등은 통일 이후 얼마든지 재현될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는 만큼 이러한 자세의 부정적 측면은 남한주민들에게 반드시 주지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1995년도 통일문제 국민여론조사 결과에 따르면, 응답자의 0.6%만이 특별한 교육이 필요하지 않다고 응답하여 국민의 대다수가 통일교육이 필요하다는 것을 인정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중요도를 구분하여 복수 응답을 적용한 결과 남한사람들이 필요하

다고 생각하는 통일교육내용은 <표 2>와 <표 3>과 같다.

여론조사 결과에서 가장 주목해야 할 점은 통일교육의 필요성을 인정치 않는 응답자가 극소수에 불과했다는 점이다. 이는 통일에 대비한 여러 분야의 계획중 교육이 차지하는 비중이 결코 적어서는 안된다는 주장을 뒷받침해 준다. <표 2>와 <표 3>에서 보듯이 통일에 대비해서 일반인들이 가장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교육내용은 북한의 실상이며, 통일대비자세, 통일이후의 상황에 대한 교육도 매우 필요한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그동안 사회전반에 걸친 통일교육이 거의 부재했다고 할 수 있는 남한의 경우 북한의 실정에 대한 정보는 거의 접할 수 없었거나 한 번 걸러진 형태로 전달되는 것이 일반적이었다. 이것은 상대방에 대한 무관심이나 잘못된 인식을 초래하기 쉽다. 상대방의 현재 상황을 아는 것은 상대방을 이해하기 위한 첫단계이기 때문이다. 북한실상의 객관적 이해를 바탕으로 통일에 대비한 상황인식을 하는 것은 통일과정을 앞당기는 데 필수적 요소가 될 것이다. 그밖에도 통일 이후의 상황에 대한 교육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적지 않았는데 이에 관한 교육은 단순히 통일 이후의 상황변화에 대한 이해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이를 준비하기 위한 구체적인 교육까지도 포함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한편 북한지역 주민들에게 통일교육은 통일사회에 적응하는 데 필수적 요소로서 통일 이후 변화된 사회에서의 기본적인 생존전략이라고 볼 수 있다.<sup>17)</sup>

17) 북한주민에 대한 통일교육은 현상황을 고려할 때 통일 전단계의 교육은 매우 어렵거나 제한적이어서 통일에 대한 논의가 구체화되거나 실

〈표 2〉 통일교육내용(1순위)

(단위: %)

		북한 실상	통일 이후 상황	통일된 국가의 경험	북한주민 공동생활 방안	남북한 통일 정책	통일 대비 자세	특별한 교육 필요없음
성 별	남자	27.9	19.0	14.3	8.8	8.3	20.9	0.7
	여자	27.1	17.5	11.5	13.0	8.9	21.5	0.5
연 령	20대	25.0	19.1	8.9	11.8	12.5	22.3	0.5
	30대	29.3	20.4	14.9	9.1	7.0	19.0	0.2
	40대	29.2	15.5	14.4	9.8	6.4	23.9	0.8
	50대	29.0	17.3	13.9	12.3	7.4	18.8	1.2
	60세~	16.1	14.3	17.9	14.3	7.1	30.4	0.0
학 력	~중졸	25.0	15.1	14.8	13.6	6.5	23.8	1.2
	고졸	28.8	18.3	14.6	10.7	9.1	18.0	0.6
	대재~	27.2	20.3	9.5	9.5	9.3	23.9	0.2
가 구 소 득	~79만원	24.0	5.2	16.7	16.7	13.5	24.0	0.0
	80~119만원	26.1	18.0	13.7	12.0	9.9	19.0	1.4
	120~199만원	27.1	21.2	14.2	10.4	6.9	19.2	1.0
	200~299만원	28.5	18.4	10.9	10.1	9.3	22.7	0.0
	300만원~	29.8	17.3	10.7	9.8	7.6	24.9	0.0
거 주 지 역	서울/경기	29.1	18.8	12.3	8.7	9.3	21.0	0.9
	경상	26.7	19.1	14.0	13.8	8.3	17.9	0.2
	전라	29.8	16.3	9.6	10.1	7.9	25.8	0.6
	충청	21.1	16.3	17.7	15.0	6.1	23.8	0.0
	강원	23.8	17.5	11.1	7.9	11.1	27.0	1.6
전 체		27.5	18.3	12.9	10.9	8.6	21.2	0.6

〈출처〉 민족통일연구원, 「1995년도 통일문제 국민여론조사결과」 (1995).

제로 통일이 이루어진 시점 이후를 상정할 수 밖에 없다.

&lt;표 3&gt; 통일교육내용(2순위)

(단위: %)

		북한 실상	통일 이후 상황	통일된 국가의 경험	북한주민 공동생활 방안	남북한 통일 정책	통일 대비 자세	특별한 교육 필요없음
성 별	남자	8.3	19.8	10.8	18.3	9.9	31.8	1.2
	여자	7.4	18.4	9.9	21.5	11.4	29.7	1.7
연 령	20대	7.5	20.5	13.0	21.5	10.5	26.3	0.7
	30대	6.8	21.7	8.2	19.1	9.2	33.3	1.7
	40대	8.8	18.8	6.9	17.6	11.1	35.2	1.5
	50대	7.8	14.1	11.6	20.4	13.5	31.0	1.6
	60세~	12.7	18.2	14.5	21.8	3.6	23.6	5.5
학 력	~중졸	9.1	14.2	11.0	20.2	12.9	30.0	2.5
	고졸	7.6	19.4	10.0	19.1	10.1	32.1	1.6
	대재~	7.2	21.8	10.4	20.8	9.8	29.4	0.6
가 구 소 득	~79만원	5.3	18.9	13.7	14.7	8.4	36.8	2.1
	80~119만원	7.9	17.1	8.6	22.1	11.4	31.1	1.8
	120~199만원	7.8	20.9	9.9	20.9	10.3	28.9	1.4
	200~299만원	8.3	16.9	11.3	18.8	13.2	30.4	1.1
	300만원~	8.0	21.0	10.7	18.8	7.1	32.6	1.8
거 주 지 역	서울/경기	9.1	19.9	8.5	19.7	10.0	31.5	1.3
	경상	7.2	18.8	10.4	19.5	10.7	31.6	1.9
	전라	7.3	16.3	12.4	24.2	12.9	24.7	2.2
	충청	6.1	20.4	12.9	19.7	10.2	29.9	0.7
	강원	3.3	18.0	18.0	13.1	11.5	36.1	0.0
전 체		7.8	19.1	10.4	19.9	10.6	30.7	1.5

&lt;출처&gt; 민족통일연구원, 「1995년도 통일문제 국민여론조사결과」 1995.

통일 이후 환경의 변화는 남한주민들보다도 북한지역 주민들에게 더 큰 영향을 보다 광범위한 분야에 걸쳐 끼칠 것이기 때문에 이 과정에서 생길 부작용의 소지도 그만큼 크다. 우선 단기적으로는 남한을 '남조선괴뢰'로 규정한 세뇌교육을 받아온 북한주민들이 남한의 우세한 경제력에 매력을 느끼게 되는 것을 기대할 수도 있다. 하지만 아무리 남한의 경제가 북한경제보다 우월하다고 해도 북한주민들이 남한경제에 능동적으로 참여하는 것이 단기간내에는 실질적으로 불가능할 것이라는 현실을 감안한다면 북한주민들이 남한주민들에 대해 가지고 있는 부정적 이미지를 긍정적인 것으로 전환하는 데에는 적지 않은 노력과 시간이 필요할 것으로 추정된다. 비단 경제생활의 방식과 같은 경제적 이유 뿐만 아니라 사회문화적으로도 북한지역 주민들의 이질감 발생가능성은 높다. 이같은 현상은 북한을 탈출, 남한에 정착해 살고 있는 귀순자들의 사고방식과 갈등유형을 통해 어느 정도 추론해 낼 수 있다. 북한의 귀순자들을 정신의학적 측면에서 분석한 한 연구결과<sup>18)</sup>는 이들이 남한사회에서 겪는 갈등의 종류를 다음과 같이 요약하고 있다.

① 일상생활에 대한 지식이 부족하다. 이것은 남한생활 초기에 중요한 문제인데, 이로 인해 귀순자들은 일상생활에 소극적인 태도를 보이는 경향이 있다.

② 남한사회의 거대한 정보량에 압도되어 자신의 지적 부족함에

18) 민성길, 전우택, "사람의 통일: 정신의학적 접근," 송자, 이영선(편), 「통일사회로 가는 길」 (서울: 도서출판 오름, 1996), pp. 100-103 참조.

대한 심한 열등감을 가진다.

③ 당에서 직업을 배분해 주는 북한과는 달리 자본주의사회에서는 능력에 따라 직업을 선택함으로써 자신의 사회적 지위가 격하되는 것에 대해 예민하며 불만스러워 한다.

④ 북한출신이라고 차별대우를 받을 가능성에 대해 늘 매우 민감한 상태에 있다.

⑤ 처음 2~3년 정도의 기간중, 자신들은 남한사람들의 말을 비교적 잘 알아듣지만 남한사람들은 자신들의 말을 잘 알아듣지 못하는 것에 대해 위축감을 가진다.

⑥ 돈에 대한 관심이 많아지고 돈을 버는 방법을 알고 싶어 하지만 개인적이고 자본주의적인 이기주의를 극도로 매도하였던 북한의 교육 때문에 선뜻 돈에 집착하기도 어려워하는 돈에 대한 이중적 가치관을 보인다.

⑦ 집단주의 의식이 강하여 자신의 문제를 개인의 문제라기보다는 자신이 속한 집단의 문제로 인식하는 경향이 있고, 문제를 해결하는 데 있어서도 정부나 집단에 의지하려는 태도가 보인다.

⑧ 이분법적 사고방식 때문에 사물에 대한 판단과 태도가 명확하며 때로는 그러한 특징이 사고의 경직성으로 나타나기도 한다.

⑨ 북한에서는 집단주의적 생활방식에 따라 가난하지만 상부상조하며 매우 강한 유대의식을 가지고 대인관계를 맺어왔던 것에 비해 남한은 부유하나 개인주의적이고 이기주의가 심하다고 생각하여 이러한 상황에 대해 비판적이며 심리적 갈등이 크다.

⑩ 남한 젊은이들의 자유분방한 행동들이 북한귀순자들에게는 비도덕적으로 보여 이에 대하여 비판적이다. 몇몇 사람들은 그런

남한사람들과 대인관계를 맺지 않으려는 태도까지 보였다. 따라서 유교적이고 전통적인 개념을 가지고 있는 북한사람들에게 남한사람의 어떤 행동은 남한사람이 스스로 인식하지 못하는 가운데 큰 충격과 심리적 단절을 유발할 수 있다. 그런 점에서 북한귀순자들은 북한사회의 유교적 전통에 대하여 옹호하려는 경향도 보였다. 이러한 경향은 그들의 자아정체성을 유지하려는 노력과 관련되어 보인다.

⑪ 혼자 귀순한 경우 외로움의 고통이 심각하며 북에 두고온 가족과 이웃사람들에 대한 죄책감이 있다.

⑫ 예상외로 북한귀순자들끼리 관계를 맺는데 어려움이 있다. 그 이유는 서로에 대한 조심스러움, 서로에게 아직 도움을 줄 만한 능력이 없다는 판단, 감정적인 비교심리, 자신이 불필요한 일에 연루될까 하는 조심스러움 등 때문이었다.

⑬ 청소년 귀순자의 경우에도 겉으로는 남한 청소년들과 잘 어울리는 모습을 보였지만 내면적으로 북에서 교육받은 김일성 주체사상 등과의 혼란을 그대로 가지고 있음이 엿보였다. 특히 남한의 친구들과 어울리지 못할 경우 북한의 친구들에 대한 강한 그리움을 호소하곤 했다.

⑭ 여성의 경우, 남한의 여성들이 보이는 데서 담배를 피운다거나, 사귀는 남자친구에게 반말을 하고 그들을 함부로 대하는 등 자유분방한 모습에 대해 놀라운 충격을 받고 있음을 이야기하였다. 이 충격은 남한여자들과의 관계를 형성하는 데 있어 심리적 제약이 되고 있다. 그러나 남성위주의 북한사회에 비해 남한에서는 여성에 대한 대우가 좋다는 것을 북한귀순자 여성들은 높게

평가하고 있다.

이같은 현상은 통일 이후 남북한 주민들간의 교류가 활발해 지는 단계에서 얼마든지 나타날 수 있다. 따라서 통일 이후 북한주민들을 대상으로 하는 교육은 남한에 대한 이해와 민족동질성 회복을 위한 교육, 경제적응교육, 사회문화교육, 통일에 따르는 사회·정신적 혼란을 최소화시킬 수 있는 교육, 정보매체의 활용을 지원할 수 있는 정보화 교육 등으로 나누어 매우 세밀하고 구체적으로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보인다. 통일 전단계에서는 이러한 교육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최근 급증하고 있는 귀순자들을 대상으로 우선 실시해 봄으로써 위에서 나타난 갈등의 효율적인 해결 방안들을 모색하여 볼 수 있다. 이러한 시도는 귀순자들의 사회적응력을 높이는 데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통일교육이 북한지역 주민들의 이질감 회복을 위해 담당해야 할 분야는 통일로 인한 사회환경의 변화로 앞에서 논의됐던 전분야라고 볼 수 있다. 먼저 정치적 통합에 우선 순위를 뒤야 하는데 남북한이 상대방을 적대시했던 과거를 청산하는 것은 실질적인 통일의 기본요소이기 때문에 이것은 중요시될 수밖에 없다. 이 문제는 가장 실현되기 힘들 것으로 예상되고 있지만 의외로 쉽게 풀릴 수 있는 문제일 수도 있다. 그 이유는 현재 북한의 통치수단에서 찾아볼 수 있다. 북한의 김일성·김정일 부자는 그동안 정권의 정통성을 항일투쟁에서 찾아왔고 그로 인해 1926년 10월 결성했다는 「타도제국주의동맹(타·동)」을 북한정권의 기원으로 취급하여 왔다. 이 때문에 북한정권은 일제로부터 해방된 이후 없어진 투쟁의 대상을 '미제국주의자'로 규정하고 남한을 이에 종속된 '괴



퇴'의 개념으로 세뇌시킴으로써 북한주민들에게 적개념을 계속 주지시켜왔다. 북한이 미국과 연락사무소를 개설하는 등 대미관계를 개선하는 과정에서 가장 큰 걸림돌로 등장한 것이 '이제는 어디서 적개념을 찾을 것인가'의 문제였다. 북한의 이와 같은 행적은 통일 이후 남북한 주민들의 통일한국에 대한 소속감을 유도할 실마리를 제공한다. 적개념을 주변국의 위협으로 대체시키고 이러한 불특정의 위협하에서 남북한이 한 배를 탔다는 사실을 주지시키는 교육프로그램을 개발할 경우 이같은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sup>19)</sup>

한편 정치통합의 내적인 요소로서는 북한주민들로 하여금 민주적 정치과정에 적응케 하는 것 등을 골자로 하는 프로그램과 북한의 정치엘리트 등에 대한 재정치화 교육 등으로 나뉘볼 수 있다. 먼저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형식적인 선거만을 경험했던 북한주민들에게 민주적 선거과정과 정치참여 등을 유도하기 위한 프로그램이 개발되어야 한다. 이러한 정치교육은 전주민을 대상으로 실시되어야 하기 때문에 교육대상자의 특성에 맞는 다양한 교육내용과 교육활동이 제공되어야 한다. 북한의 정치엘리트를 겨냥한 별도의 프로그램은 북한식 정치구조에서 엘리트의 위치 변동에 따른 부작용 가능성 때문에 특히 중요하다. 즉 북한의 정치엘리트들은 통일한국의 정치체제구조에서 더 이상 엘리트의 위치를 차지하지 못하게 될 것이므로 이들의 반발이 예상되며, 이것은 나아가 북한정권 복고 움직임이나 반통일운동 전개 등으로 구체화될 수 있기 때문이다. 교육의 핵심은 역시 군과 당 위주로 유지되

19) 이를 위해 통일을 축하하는 각종 스포츠행사를 개최해 남북한의 통일한국에 대한 응집력을 유도해 낼 수 있다는 의견도 개진되고 있다.

어오던 북한의 체제와는 달리 시장경제에 따라 군이나 당 외에도 엘리트로서 일정 위치를 점할 수 있는 많은 직장이 있다는 사실을 인식하게 하고 이의 운용원리를 터득케 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북한엘리트들에게 우선 기본적인 교육과 적성검사 등을 통해 각자에게 알맞은 새 직업을 찾도록 유도한 후 이에 따라 각 직업에서 요구되는 교육을 실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 과정에서 북한에서 기존에 습득했던 기술과 최대한 연관성있는 직업을 찾도록 할 수도 있는데 이를 위해서는 프로그램 기획단계에서 북한군의 운영체제와 원리, 병과구분 등에 대한 충분한 고려가 있어야 한다.

경제적응교육에서는 시장경제체제의 원리에 대한 이해와 이에 대처할 수 있는 능력을 키울 수 있는 교육활동이 마련되어야 한다. 통일과정에서 경제적으로 가장 심각한 우려로 논의되는 것은 인구이동과 실업인데, 인구이동은 가뜩이나 과밀한 수도권 인구의 집중현상을 악화시킬 것으로 예상돼 충분한 주택공급 등 이에 대한 완벽한 대비책이 수립되지 않을 경우 통일과정에 적지 않은 부담을 안겨다 줄 것으로 보인다. 불행히도 현재의 주택보급율을 감안한다면 한꺼번에 밀려 들어올 북한인구를 수용할 주택공급은 용이할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따라서 제도적인 이주제한정책을 실시하는 것도 대안의 하나로 논의될 수 있는데, 이것이 효율적으로 실시되기 위해서는 남한 도시로의 무조건적인 이주만이 능사가 아니라는 인식을 북한주민들이 가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북한지역에 대한 개발 청사진이 명확하게 제시되고 이에 대한 주민교육이 충분히 실시되어야 하며 이와 동시에 개발

청사진을 현실화시키는 데 필요한 실용적인 지식과 기술습득이 활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관련 교육이 제공되어야 한다.

한편 북한지역 주민들의 실업률이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이들에 대한 임금은 낮아질 것으로 남한지역 산업노동력의 상당 부분을 북한지역 노동자들이 대체할 가능성도 적지 않다. 이는 또한 남한노동자들의 불만요소가 될 수 있다. 통일에 대한 한 연구는 통일로 인해 남한에서 가장 피해를 볼 계층으로 단순노동자들을 지목하고 있다.<sup>20)</sup> 이를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대안은 북한노동자들의 경쟁력을 향상시키는 것 뿐이다. 이는 물론 산업현장에서 반복된 경험으로 이뤄지는 것이지만 경쟁력 향상이 필요하다는 내용의 의식교육과 경쟁력 향상을 위해 필요한 실질적인 교육활동을 통해 그 과정을 더욱 앞당길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교육활동들은 남북한 노동자들의 임금수준을 비슷한 수준까지 수렴시키는 과정을 단축시킬 수 있다. 따라서 실생활에 필요한 산업지식과 일부 기술 등을 소개하는 프로그램을 개발, 운용해야 할 것이다. 더구나 아직도 첨단 석유화학 개발분야보다 비날론 등 구시대적 산업소재에 신경을 쓸 만큼 낙후되어 있는 북한의 산업체계를 고려할 때 북한에 대한 산업교육은 필수적이라고 할 수 있다.<sup>21)</sup> 북한의 산업구조는 옛 소련의 구식 산업위주로 구성돼 있어 통일 이후 북한지역의 산업시설을 그대로 활용할 수 있는가에 대한 의구

20) 박진, 앞의 글 참조.

21) 북한은 전 정무원 부총리겸 무역부장으로 남한을 방문한 바 있던 김달현을 비날론 공업단지 책임자로 임명하고 있을 정도로 「비날론」소재에 대한 기대가 아직도 크다. 비날론에 대한 북한의 기대는 포항제철에 거는 남한의 기대와도 버금간다는 것이 관계자들의 증언이다.

심이 제기되고 있는 상황이므로 산업교육 프로그램 개발시에는 이에 대한 정확한 데이터를 기초로 해야 한다.

통일시대에 있어서 교육의 효과가 가장 클 것으로 예상되는 분야는 역시 사회문화분야이다. 통일로 인해 초래될 사회문화적 충격은 단시간내에 흡수될 수 없는 특성을 갖고 있을 뿐 아니라 비교적 오랜 기간에 걸친 교육을 통해 차차 해소되는 성격을 갖고 있기 때문에 가장 부담없이 접할 수 있는 교육이 더욱 필요하다. 한 예로 남한 젊은이들의 자유분방한 옷차림에 대한 북한주민들의 거부감은 옷감의 재질이나 수준을 떠나 수십년간 분리되었던 두 문화의 충돌현상까지 우려될 정도라는 것이 북한을 방문한 이들의 공통된 관측이다. 더구나 이같은 옷차림은 문화적 차이의 단면을 나타내는 것일 뿐 남북한간의 문화적 이질정도는 단시간내에 극복하기 힘든 지경에 이른 만큼 교육을 담당하는 기관들간의 유기적 협조를 통해 자연스럽게 극복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또하나 중요한 것은 북한주민들이 비판적인 시각으로 올바른 정보선별을 할 수 있는 능력을 갖도록 하는 것이다. 일상의 정보들은 주로 언론매체들을 통해서 접한다고 볼 때 이것은 올바른 언론관을 갖도록 하는 것과 관계가 있다. 북한의 언론기관들은 획일적 정보를 전달하는 당과 정부의 부속기관들에 지나지 않았던 반면, 남한의 언론들은 치열한 경쟁 끝에 각각 시청률과 구독률을 높이기 위한 보도경향이 정형화되어 있는 상반된 특성이 있다. 때문에 옛소련의 전례대로 북한의 당기관지인 「로동신문」과 정부기관지인 「민주조선」이 일반인에 의해 인수되는 등의 형태로 바뀔다해도 이들 기관들이 통일시대에 걸맞는 보도기관으로 빠른 시

일내에 전환되리라고 기대하기는 힘들 것으로 보인다. 뿐만 아니라 기존 남한언론들도 과열경쟁으로 인해 객관성있는 사실보도보다는 흥미위주의 기획기사나 가십거리 등에 치중할 가능성도 없지 않다. 이렇게 되면 남북한 주민들 모두 통일한국에 대한 객관적 보도를 접하는 문제가 생길 수 있다. 특히 획일적 보도방식에 길들여진 북한주민들에게 경쟁관계에 놓인 남한언론기관들의 보도를 선별적으로 수용할 수 있는 능력을 기대하는 것은 사실상 어렵다. 따라서 여러 교육경로를 통하여 주민들의 정보수용 능력 및 선별 능력을 기르고 보다 사실적인 정보에 접할 수 있도록 하는 것도 교육을 통해서 하여야 할 일이다.

통일 이후 북한주민들을 대상으로 하는 교육에서는 통일에 따르는 정신적인 혼란들을 최소화할 수 있는 정신교육도 반드시 포함되어야 한다고 본다. 가치판단 기준의 급격한 변화에 따른 심리적 부담감을 최소화하고 새로운 사회에서 자아정체성을 확립하는 데 필요한 교육은 건전한 가치관과 자아관 형성을 위해 필수적이다. 특히 이와 같은 교육은 전연령층을 대상으로 실시되어야 하는데, 모든 사람들에게 같은 내용과 방법으로 교육을 시키는 것이 아니라 각 연령층의 심리적 발달 단계에 알맞는 교육내용이 학습자들의 인지적 발달에 알맞는 적절한 형태로 제시되어야 어느 정도의 교육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이다.

한편 통일 이후의 북한 주민들에게 가장 중요한 교육 중의 하나로 정보화 교육을 들 수 있다. 컴퓨터를 비롯한 각종 정보통신 매체의 활용이 생활의 일부로서 보편화된 남한지역과는 달리 북한 지역은 상대적으로 이의 활용 여건이 열악하며 주민들의 정보화

수준도 매우 낮은 상황이라고 볼 수 있다. 그러나 통일시대는 정보매체 활용이 삶의 영위에 있어서 필수적인 능력이 될 것이므로 이에 대한 교육의 중요성을 간과할 수 없다. 정보화교육에는 일반적인 정보기기의 활용방법에서부터 정보인력 양성을 위한 전문적인 교육프로그램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교육내용들이 제공되어야 할 것이다.

그밖에 통일 이후 북한주민들을 위한 교육에는 외국어 사용 능력 향상을 위한 교육, 환경보호의 중요성과 환경 보호를 위한 교육 등이 필요하며, 기존의 북한사회에서 절대적으로 중요한 역할을 담당했던 군인력의 재교육을 위한 교육프로그램도 중요할 것이다. 군의 재교육문제는 남북한 모두에게 필요한 것으로 통일한국의 국방력 제고를 위하여 매우 중요한 것이다. 다시 말해 남북한 모두 상대방에 대한 군사적 대치를 전제로 군의 훈련을 실시 하였던 것에서 벗어나 군사적 대치상황을 주변국의 총체적 위협에 대한 방어로 전환시키기 위한 교육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특히 북한은 군이 통치하는 사회체제를 유지해 왔으며 이에 따라 군의 엘리트들이 사회의 지도층으로 행세해 왔던 점 등을 고려하여 과거 북한군에 소속돼 있던 인원들을 남한사회로 동화시키는 데 대한 저항감을 최소화시키는 역할도 역시 통일교육이 담당해야 할 업무로 판단된다.

마지막으로 통일에 대비한 교육에서 간과할 수 없는 사항은 중국의 연변 등 해외동포에 대한 교육이다. 통일이 진행될 경우 북한지역의 주민들보다 오히려 먼저 남한으로의 이주의사를 표현할 계층이 연변지역의 동포 등 제3국 국적의 해외동포인 점을 고려

한다면 이에 대한 총체적인 대비책 마련도 시급하다. 이에 따라 이들을 대상으로 한반도의 국내외적인 상황 변화에 대한 교육을 실시할 필요가 있으며, 한반도로의 이주를 원하는 제3국적 해외동포에 대한 사전 및 사후 적응 교육프로그램 기획도 아울러 필요하다고 하겠다.

이상에서 통일 전후 과정에서 요구되는 통일교육의 방향설정에 대하여 살펴보았다. 위에서 기술하였듯이 통일교육은 어느 한 분야에서만 필요한 것이라기 보다는 사회 전분야에 걸쳐서 총체적으로 필요한 것으로 매우 복잡하고 다양한 특성을 지닌다. 통일교육의 방향은 실제 생활과 밀접하게 연관되는 것으로 교육은 단편적인 사실 정보의 습득에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습득된 지식을 적절히 활용하고 다른 상황으로 전이하는 과정까지 포함되어야 한다. 또한 이러한 과정에서 필요한 지적 기능이나 인지적 기술의 습득과 활용도 중요하며 나아가 좀 더 창의적이고 비판적인 문제 해결 능력의 고양, 가치 및 태도 변화 등과 관련된 교육, 의사결정 능력 함양 등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또한 통일교육의 내용은 다양한 연령층과 사회계층의 사람들을 대상으로 기본교육, 심화교육, 전문교육 등이 대상학습자의 교육적 필요에 따라 제공되어야 한다는 점에서 난이도 면에서도 복합적인 양상을 띠고 있다고 볼 수 있다. 통일교육의 이러한 특성들을 고려할 때 효율적인 교육활동을 위해서는 대안적인 교육방식의 모색이 더욱 절실하다고 하겠다.

## 제Ⅳ장 맺음말

통일교육은 통일과정 전반에 걸쳐 영향을 끼친다는 측면에서 단순히 교육분야의 과제로 국한시킬 수 없는 과제이다. 남북한 정치체제나 경제체제의 실질적 융합과 사회통합 등과 같이 통일의 성패를 판가름할 수 있는 문제들이 통일교육을 통해서 보다 원활히 해결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통일문제 전문가들이 교육전문가일 수는 없으며, 교육전문가들 또한 통일문제에 대한 심도깊은 연구를 접할 기회가 많지 않은 것도 현실이다. 따라서 교육분야의 전문가들이 통일교육의 기본골격을 구상함에 있어서 본 연구에서 제시된 기본방향을 참조한다면 통일교육의 효율성을 배가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기존의 학교중심 교육에 대한 대안으로서 교육매체의 활용이 보편화되는 추세에 맞춰 통일교육도 교육의 개념이나 교육기관의 형태 등을 매우 다양하게 운용해야 할 것으로 예측된다. 통일을 전후한 시점에는 현재 논의중인 교육개혁이나 교육정보화 등이 어느 정도 현실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따라서 통일교육의 양상도 남한지역에서 이미 보편화된 새 교육환경의 영향을 크게 벗어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된다.<sup>22)</sup> 따라서 학교교육에 더하여 평생교육의 개념이 보편화되고 누구든지 언제 어디서나 원하는 교육활동을 할 수 있도록 교육환경이 구성될 것으로 가정해도 무방하다.

22) 독일의 경우도 구서독의 교육모습을 중심으로 현재 교육활동이 전개되고 있다. 자세한 사항은 교육개발원 (1993) 참조.



특히 통일교육의 경우 현재의 교육형태보다 융통성있는 교육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원격교육기관의 역할을 기대할 만하다.

통일교육이 효율적으로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교육과정에서 다양한 교육매체들을 보다 적극적으로 활용하여야 할 것으로 본다. 정보통신 기술의 발전으로 교육매체는 점차로 더욱 발전할 것이며 이에 따라 각종 교육활동에서 첨단매체의 활용은 더욱 확대될 것이다. 그러나 이것은 모든 통일관련 교육활동을 첨단매체를 이용해서만 실시해야 한다는 개념이 아니라 교육활동을 위해 활용할 수 있는 교육의 도구가 좀 더 다양화되었다는 측면을 강조하고자 할 따름이다. 특히 통일교육의 실시는 교육의 어느 한 분야를 개선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사회 모든 분야를 포함해 새롭게 구성되는 사회 모든 구성원들의 삶의 방식과 가치관을 재구조화하기 위한 포괄적인 시도라는 점을 고려하여 볼 때, 사회가 기존에 가지고 있는 모든 자원들을 활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따라서 인쇄매체, 대중매체, 첨단매체들을 교육의 목적과 여건에 따라 적절히 활용하는 것이 효율적인 교육활동을 위해 도움이 될 것이다.

통일을 전후하여 요구되는 교육은 단순히 새로운 형태의 교육만으로는 부족하다. 여기에는 수준높은 교육용 소프트웨어의 개발과 각종 교육활동에서 활용할 수 있는 교육정보들을 확보하는 일이 포함된다. 특히 통일교육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될 다양한 유형의 원격교육들은 교육매체의 활용에 기초하여 각종 교육활동이 이루어지는 것이므로 이를 바탕으로 이뤄질 통일교육의 효과와 효율성을 보장하기 위해서는 양질의 교육내용을 개발하는 일에 많은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 북한문학에 나타난 사회갈등 연구: 북한의 분단문학을 중심으로

---

김재용

- 제 I 장 북한의 분단문학과 사회갈등
- 제 II 장 치안대문제와 냉전적 적대감정
- 제 III 장 이산가족문제와 잊혀진 고통
- 제 IV 장 냉전적 적대의식과  
북한 분단문학의 역사적 의미

---

\* 연세대학교 국문학과 교수, 문학 박사

빈 면

## 제 I 장 북한의 분단문학과 사회갈등

북한에는 분단문학이라든가 혹은 분단현실 주제의 문학이라든가 하는 낱말을 찾아 볼 수 없다. 그 대신에 ‘조국통일 주제의 문학’이란 다소 낯설은 낱말을 찾아 볼 수 있다. 이 경향의 문학은 주로 분단된 남한의 현실을 그리는 것을 말하는데, 그 시각은 주로 ‘반미구국투쟁’에 입각하고 있다. 북한이 분단을 바라보는 기본적인 시각은 항상 민주기지론에 입각해 있는데, 이는 북한은 이미 해방된 구역이고 이제 나머지 남아 있는 과제는 해방되지 못한 남한을 해방시키는 것이며 이것을 해결하는 것이야말로 분단을 극복하고 조국통일을 성취하는 길이라고 믿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공식적인 입장이 해방 직후부터 지속되었기 때문에 ‘조국통일 주제의 문학’은 당연히 남한의 반미구국투쟁을 그리는 것이 최대 과제였고, 그 이외의 것은 분단 및 분단극복과 관련하여 제기되기 어려웠던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조국통일 주제의 문학’에서는 반미구국투쟁을 벌이고 있는 남한의 현실 이외에 분단으로 인해 빚어진 북한 내부의 차별이나 고통, 그리고 이로 인한 사회적 갈등 같은 것들은 들어올 수 없었다.

그러나 북한의 문학을 깊이 살펴보면 북한의 분단문학이 비단 ‘조국통일 주제의 문학’에만 국한되는 것이 아님을 알 수 있다. 북한의 분단문학 대부분이 남한을 다루고 있는 데 반해, 이런 현실 인식과는 현저한 차이를 보이고 있는 작품도 존재함을 알 수 있다. 과거 한국전쟁 시절에 미군과 남한군이 북쪽 지역에 들어갔을

때 만들어진 치안대에 가담했던 문제 때문에 내부에서 빚어진 갈등이라든가 한국전쟁을 전후하여 빚어진 이산가족이 현재에 미치고 있는 고통 등의 문제를 다룬 분단 현실의 작품이 존재함을 알 수 있다. 그런데 치안대문제라든가 이산가족문제라든가 하는 분단 현실에서 빚어진 문제들을 다룬 작품들은 단지 과거의 사건을 다루는 데 그치고 있는 것은 아니고, 그것이 현재 북한민중들의 삶에 어떤 영향을 미치고 있는가 하는 점을 다룬다는 점에서 결코 지나간 과거의 문제가 아니고 현재의 것이다. 치안대를 둘러싼 문제라든가 이산가족의 문제라든가 하는 것은 현재 북한사회에서 심각한 사회적 갈등의 하나로 남아 있기 때문에 이것을 제대로 해결할 수 없게 될 때, 그것은 북한사회 내부의 통합을 기대할 수 없는 것이다.

이 글에서는 북한의 분단문학중 남한의 현실을 다루는 조국통일 주제의 작품은 제외하고 치안대와 이산가족의 문제를 다룬 작품만을 대상으로 하여 북한사회 내부에 존재하고 있는 사회적 갈등을 살피도록 하겠다. 그렇게 하기 위하여 우선 치안대문제를 다룬 작품들중 북한사회 내부의 갈등을 파악하는 데 좋은 자료가 될 수 있는 의미있는 작품을 시기별로 선택하여 다루고, 다음으로는 1980년대 말을 전후하여 집중적으로 나오고 있는 이산가족의 문제를 다룬 작품들을 동시기 북한의 전반적인 상황과 더불어 다루고자 한다.

## 제II장 치안대문제와 냉전적 적대감정

치안대문제를 다룬 북한의 분단문학을 통해 북한사회 내부의 사회적 갈등을 본격적으로 탐구하기에 앞서 북한사회 내부 구성원 사이에서 냉전적 적대감정이 여전히 지속되고 있고 그 중에서 치안대가 매우 중요한 사안임을 보여주는 예를 먼저 소개하기로 하겠다.

요즈음에는 부쩍 많은 사람이 북한을 탈출하기에 예전처럼 모든 사람에 대해 깊은 관심을 갖기가 어려워진 것이 사실이지만 얼마 전에 북한을 탈출한 동용섭의 경우는 북한사회 내에서의 냉전적 적대감정, 특히 치안대와 관련하여 많은 흥미를 불러 일으킨다. 그의 아버지는 한국전쟁 때 자기 마을에서 치안대에 가담함으로써 이후 미군과 남한군이 후퇴하고 전선이 고착되었을 때 과거의 행적으로 말미암아 처형당했다. 이후 그의 집안은 북한에서 반동적인 가계로 낙인찍혔다. 그리하여 동용섭 역시 심한 사회적 차별 속에서 살 수밖에 없어 사회에 제대로 적응하지 못하다가 북한사회를 떠나 중국으로 갔고 거기에서 남한의 친척들의 도움을 받아 서울로 오게 되었다. 동용섭이란 한 개인의 운명을 이렇게 바꾸어 놓았던 결정적인 대목은 바로 그의 아버지가 치안대에 가담하여 처형당했다는 사실이다. 이것은 한국전쟁 때의 일이었던 치안대문제가 비단 과거에 그치는 것이 아니고 지금에 이르기까지 영향을 미치는 문제일 뿐만 아니라 남북한의 현실 전체에 영향을 끼치는 일임을 반증해 준다.

그러면 동용섭과 그의 가족은 물론이고 북한사회 내에서 냉전적 적대 감정의 씨앗이라 할 수 있는 치안대문제란 무엇인가? 남한의 북한연구중에서 치안대를 다룬 적이 없을 정도로 이것에 대한 인식이 전무한 것이 현실이기에 여기에 대해서 간략하게 밝혀 둘 필요가 있다. 치안대란 미군과 남한군이 삼팔선 이북으로 진격하면서 이북의 마을과 도시에 만들어 놓은 치안조직으로 여기에는 미군과 국방군, 그리고 과거 월남하였다가 다시 고향으로 돌아간 사람들과 해방 이후 계속하여 그 마을에 살고 있었던 사람들을 묶어 만든 조직이다. 이 조직은 그 마을에서 과거 토지개혁을 비롯하여 해방 이후 5년간 인민위원회 등에 참여하면서 열성적으로 북한의 정책을 옹호하였던 사람들을 색출하는 작업을 비롯하여 후퇴하는 북한군과 싸우는 일 등을 하였다. 그렇기 때문에 전쟁의 와중에 북한의 크고 작은 마을에서는 치안대에 가담한 사람과 가담하지 않은 사람들 사이에 직접적이고 간접적인 형태의 다양한 갈등과 싸움이 생기기 시작하였다. 그런데 정작 이 문제가 심각한 양상으로 발전한 것은 1.4후퇴 이후이다. 미군과 국방군이 후퇴할 때 과거 치안대에 가담하여 주도적으로 활동했던 사람들 중 대부분은 내려왔지만 그렇지 못한 사람들도 있었고, 또한 치안대가 조직되었을 때 피동적으로 가담하였던 사람들은 자신이 했던 일이 초래할 수 있는 결과에 대해 별로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았기에 그대로 눌러 살았다. 그런데 이들에 대한 처리문제가 그동안 내부적으로 논의되다가 1951년 1월 5일 공식적으로 결정되고 표면화되면서 심각한 양상을 띄었다.

1951년 1월 5일 내각 군사위원회에서는 이 시기에 치안대와 같

은 단체에 가담했던 사람들을 처벌하는 결정을 내린다. 군사위원회 19차 대회에서 김일성이 주도했다고 알려지고 있는 다음과 같은 결정은 이 시기 북한의 당국이 이 치안대문제에 대해 어떤 태도를 보여주고 있었는가를 아주 잘 보여준다.

반동단체 가담자들을 일률적으로 처리하지 말고 주동분자와 피동분자를 갈라 처리하여야 하겠습니다. 일부 지방들에서는 반동단체 가담자라고 하면 그들을 덮어 놓고 숙청해야 하는 것으로 인정하고 있는데 그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반동단체에 가담했던 자들이라고 하여도 그들이 반동단체에 가담한 동기와 목적, 저지른 죄행이 같지 않습니다. 이런 것을 구체적으로 조사해 보지 않고 그들을 일률적으로 처리하면 결국 우리의 혁명대오를 강화하는 데 지장을 주게 됩니다. 반동단체 가담자들 중에서 악질적인 주동분자는 극소수이며 절대다수는 적들의 위협과 모략에 의하여 피동적으로 반동단체에 가담한 사람들입니다. 피동적으로 반동단체에 가담한 사람들의 대부분은 기본계급출신들입니다.<sup>1)</sup>

이 결정에 따라 북한의 당국은 ‘피동분자’라고 불리워지는 빈농출신의 치안대 가담자들에 대해서는 자수하게 되면 사법적 책임을 묻지 않았던 반면, ‘주동분자’라고 불리워지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공개재판의 형태로 법적 처리를 하였다. 북한의 공식적인 재판 기록에 의하면, 이들에 대해서는 사형 등의 무거운 형벌이 내려졌고 이런 현상이 일어난 지역도 어느 한 지역이 아니라 북한의 전 영역에 걸친 것이었다.<sup>2)</sup>

1) 김일성, “반동단체 가담자들을 정확히 처리할 데 대하여”, 「김일성전집 13」 (평양: 조선로동당출판사, 1995), pp. 17-18.

2) 「해방후 10년 일지」 (평양: 조선중앙통신사, 1955), p. 124.



그런데 치안대 가담자에 대한 북한당국의 이러한 처리는 어디까지나 공식적인 영역에 국한된 것이고 실제 삶의 현실에서는 복잡한 양상을 빚어내었다. 특히 치안대로 인하여 도시와 농촌 내의 내부적 결속력이 깨어지게 되면서 사람들 사이에 반목과 질서가 심화되었으며, 이는 강한 불신의 벽을 형성하게 되었다. 심지어 한 가족 내에서도 어떤 사람은 전쟁터에 나가 싸우고 또다른 사람은 치안대에 가담함으로써 이런 형태의 갈등이 존재했 정도로 이는 차후 북한사회 내부에 심한 균열을 가져다 주었다. “본인은 이 영광스러운 혁명 투쟁에 참가한 혁명 전사임에도 불구하고 그의 애비나 형이 치안대를 한 탓으로 머리를 뺏뺏이 쳐들지 못하는 사람들이 적지 않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자기의 죄가 아닌 그 부형의 죄로 인하여 고통을 당하고 있습니다. 혁명투쟁에 참가한 사람이 그가 없는 사이에 부모나 친척이 저지른 죄에 대하여 어떻게 책임을 질 수 있겠습니까?”<sup>3)</sup>라는 김일성의 말은 당시 북한사회 내부의 복잡한 상황을 잘 말해주고 있다.

북한사회 내부의 냉전적 적대감정을 야기시켰고 이후 균열을 가져다 주었을 뿐만 아니라, 남북한 사이의 갈등을 누그리뜨리는 데 결정적 장애물 중의 하나로 작용하였던 치안대 문제에 대해서 북한의 작가들, 특히 냉전체제로 인한 분단을 극복하려고 하는 작가들이 이에 대해 무관심할 수 없었을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해 잘 알려져 있지 않은 것은 우선 북한 문학계내에서 이들 작품이 분단극복과 관련하여 갖는 의미에 대해서 별다른 주목

3) 김일성, “혁명적 문학예술을 창작할 데 대하여”, 「우리 혁명에서의 문학 예술의 임무」 (평양: 조선로동당출판사, 1965), p. 40.

을 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남한에서의 ‘반미구국투쟁’을 그린 작품이거나 혹은 전쟁시기의 전투를 다룬 작품만을 분단극복의 올바른 형상화 방법이라고 강조되어왔기에 이외의 다른 작품들이 갖는 의미를 제대로 평가하기 어려웠다.

북한사회 내부의 이러한 적대적 감정의 발현이 결코 과거지사가 아니라 지금도 여전히 지속되고 있으며 향후 북한사회의 변동에서 중요한 변수로 작용할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 문제를 다룬 작품들을 통하여 북한사회 내부의 서로 섞이지 못하고 대결하고 있는 갈등의 현상을 읽을 수 있는 것이다.

리정숙의 「산새들」(1961~1962)은 천리마작업반 운동이 북한사회 전반에 걸쳐 이루어지기 시작하던 1960년대 초의 한 방직공장을 배경으로 한 작품이다. 이 작품은 각이한 개인사와 사연, 굴곡을 가지고 있는 네 명의 여방직공들이 속해 있는 작업반이 새로 들어온 작업반장하에서 서서히 틀을 잡아나가기 시작하여 결국은 많은 생산력을 보장하는 모범적인 작업반으로 성장하는 과정을 그린 작품이다.

이 작품에 등장하는 네 명의 여직공들은 너무나 복잡한 과거의 개인사를 가지고 있으며, 이로 인해 자기 나름의 고민과 고통속에서 살고 있기에 현재의 생활에 안착하지 못하고 있다. 정애는 이 작업반에 반장으로 새로 들어와 이전에 흐트러져 있던 작업반을 정돈하고 일으켜 세우는 역할을 맡게 된다. 정애는 고압적이고 명령적인 어조와 태도로 반원들을 대했던 명자와는 다르게 강압적이지 않고 이해하는 태도로 반원들에게 접근하고 대한다. 그렇게 함으로써 차츰 서로간의 불신과 불필요한 오해를 없애고 서로

존중하는 마음이 생기게 되고 작업의 능률도 이전에 비해 훨씬 높아지게 된다. 특히 정애는 항상 우울해 있는 봉숙의 고민을 이해하려고 노력할 뿐만 아니라, 작업반의 모든 직공들의 고민을 이해하려고 함으로써 문제를 해결하게 된다. 그런 점에서 그는 '산새'와 같이 어디에도 안착하지 못하고 허둥거리던 여직공들을 제대로 이끌어 나가게 된다.

이전에 작업반의 반장이었던 명자는 아직 이 공장의 생활에 익숙해 있지 않은 다른 여직공들을 인도하여 정상적인 생활로 안착시키는 데 실패하여 결국 작업반장을 넘겨 주고 이제 평범한 방직공으로 열심히 일하게 된다. 명자는 동료중에서 특히 봉숙의 태도에 대해 항상 못마땅하게 생각하면서 그녀를 줄곧 주시하게 된다. 봉숙과의 불화로 인하여 작업반원들중 일부는 명자편이 되고 다른 일부는 봉숙의 편이 되어 서로 맞서기 때문에 기능면에 있어 타의 추종을 불허하는 명자이지만 반장으로서 이 반을 이끌어 나가는 데에는 실패하게 된다.

춘실은 남편과 아이를 둔 주부로서 이 공장에서 일하고 있는데, 항상 불안한 마음 상태로 일을 하게 된다. 집에서는 주부로서 가사노동을 전담하고 직장에서는 남과 마찬가지로 일을 하여야 하는 그녀로서는 이런 것들이 부담스러워 직장을 그만둘까하는 생각도 하게 된다. 이는 가사노동과 공장노동을 같이 해야 한다는 부담에도 기인하지만 남편의 무관심이 더 크게 기인한다. 인민위원회에서 일하고 있는 남편은 국가에서 권하는 일인만큼 아내가 직장일을 하는 것에 대해 불만을 터뜨리지는 못하지만 속으로는 내키지 않기 때문에 항상 어성버성하게 대하는 것이고 이것을 눈

치 채 아내로서는 마치 자기 때문에 집안이 이렇게 된다고 자책하면서 괴로와 하기 때문에 직장일이든 가정일이든 신이 나지 않고 항상 불안한 마음으로 일하고 마는 것이다.

이 작품에서 이 글의 주제와 관련하여 흥미를 끄는 인물은 금녀와 봉숙이다. 특히 봉숙은 치안대와 관련하여 매우 독특한 성격을 가진 인물이라 북한의 분단현실과 사회적 갈등과 관련하여 여러 가지 측면을 시사할 수 있는 인물이다. 금녀는 한국전쟁 때 폭격으로 부모를 잃었고 그를 데려다 키운 이웃집 사람마저 치안대에 의해서 처형되는 고통을 겪은 후 고아상태로 초등학교를 다녔고 이후 인민학교와 초등학교를 마치고 이 방직공장에 들어와 합숙소에서 기거하면서 일하는 처녀이다. 초등학교가 한국전쟁 때 부모를 잃은 고아들을 교육시켰던 곳인 만큼 여기서 자란 금녀는 항상 가족에 대한 그리움을 지닌 채 살아왔다. 외로움을 유독 많이 타던 금녀는 자기를 좋아하고 있는 용익이란 청년에게 강하게 이끌렸고, 특히 그 남자의 가족과 더불어 생활하고 공부할 수 있다는 기대감에 사로잡히기 한다. 고아 시절의 외로움과 고독이 그녀로 하여금 이런 것에 집착하게 만들었지만 현실에서는 용이하지 않은 것이다. 용익의 아버지가 넌지시 이를 반대하게 되자 그녀는 마침내 현실을 깨닫고 이전의 자기 직무에 충실하려고 결심하고서는 대학진학에 욕심을 내지 않고 스스로 남에게 기대지 않고 살아가려고 하는 인물로 변한다.

이 작품에 등장하는 인물 중에서 분단현실에 직접적으로 관련을 맺고 있을 뿐만 아니라 그것으로 인해 삶이 망가진 인물이 봉숙이다. 그녀의 아버지와 어머니는 일제 때 돌아가시고 그 이후 큰

아버지 집에 머무면서 온갖 잡일을 하면서 자기 또래의 아이들이 가는 학교에도 가지 못하고 집에서 아이를 보면서 겨우 생계를 유지하였다. 그나마 최저생활을 하면서 근근히 생활하던 그에게 시련이 닥친 것은 한국전쟁 때이다. 그녀의 큰 아버지가 치안대에 들어가 활동했기 때문에 이후 봉숙만을 버려두고 마을을 떠나 도망을 하였다. 전쟁 중에 혼자 남은 봉숙은 그만 정신을 잃고 쓰러져 버렸는데 주위 사람들이 발견하여 전쟁 고아로 취급하여 초등학교원으로 보냈다. 고아가 된 봉숙은 부모를 잃고 난 다음 처음으로 인간적인 대우를 받은 이 학교에서의 생활을 잃지 않기 위해서 자신의 과거를 감쪽같이 숨겨 버리고 전쟁 때 부모를 잃고 고아가 된 다른 사람들과 더불어 생활했던 것이다. 그때부터 그녀에게는 이중성이 생겨나기 시작하였다. 한편으로는 자기 큰아버지가 치안대에 가담했다는 사실 때문에 괴로워 하였다. 전쟁 때 자기 큰아버지가 치안대에 가담했다는 사실 때문에 자기 보다 나이 어린 아이들로부터 사람백정 혹은 도둑놈이란 딱지를 받아가면서 놀림을 받았을 뿐만 아니라 전쟁이 미군과 국방군이 물러간 후에 치안대 문제가 사회적으로 비난받기 시작하면서 이를 드러내지 못하고 항상 숨겨와야만 했던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남과 쉽게 어울리지 못하고 항상 무언가 외톨이가 된다는 느낌을 가지고 살아야만 했던 것이다. 그런데 다른 한편으로는 이런 것을 숨기면서 다른 여느 사람과 다름없이 생활하고 그 속에 어울려 생활하고 싶어하는 마음이 존재하는 것이다. 초등학교에서 다른 아이들과 더불어 생활하면서 비로소 인간다운 대접을 받아본 그녀로서는 자기가 속해 있는 공동체에서 떠나지 않고 그 속에서 살고 싶

어하는 염원이 항상 존재하는 것이다. 이런 두가지 마음 속에서 부대끼고 있었기 때문에 그는 거의 4년에 가까운 이 직장에서의 생활에 제대로 적응하지 못하고 그 일로 인하여 이전 작업반장이었던 명자와 항상 부딪히게 되었던 것이다. 경쟁에서 졌다는 소식을 듣고 자신 때문에 그렇게 되었다고 스스로 단정해버리고 나서 자신의 마음을 잡지 못하고 불안하던 끝에 천을 찢었던 자신의 잘못을 추궁하는 새 반장 정애에게 하는 다음과 같은 고백은 냉전으로 인해 빚어진 전쟁과 분단이 한 인간을 얼마나 황폐하게 만들었는가를 극명하게 보여주고 있다.

저는 헤어 나갈 수 없는 생각에 괴로워할 때가 있어요. '나는 왜 사람들과 떨어져 외따로 살고 있을까' '내 마음 속은 왜 이렇게 흐려 있을까'하고 말합니다. 동무들과 함께 영화관에 앉아 있을 때도 합숙에서 함께 웃고 떠들 때도 난데 없이 밀려 들군 하는 그런 생각 때문에 마음을 펴지 못하는 거예요.

동료들과 같이 어울리면서도 속으로는 흔쾌히 섞이지 못하는 이 내적 갈등을 생각할 때 북한 사회에서도 전쟁으로 인해 빚어진 냉전적 적대감이 어떻게 각 개인에게 작용하고 있었는가를 짐작할 수 있다. 특히 치안대와 직접 간접으로 관련이 있는 경우에는 더욱 그러한 것이다.

그런데 봉숙의 불행은 과거의 일에 그치는 것이 아니다. 큰아버지 일가가 총격으로 인해 월남하지 못하고 북한에서 자수하여 살았기 때문에 이 아픈 상처가 다시 돌아날 수밖에 없는 것이다. 일년 전에 봉숙의 앞에 나타난 큰어머니는 과거의 인연을 들먹이면

서 봉숙에게 끝없이 돈을 요구하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봉숙은 친척이라는 인연 등으로 하여 외면할 수 없기에 부족한 돈을 꾸어가면서까지 돈을 건네주기도 하지만 되살아난 치안대의 명령 때문에 안절부절하면서 불안하게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이다. 이제 이 악연을 끝장내리라고 결심하던 그 무렵에 공장 내에서 자신의 과거를 이야기해야 할 절실한 상황을 맞게되고 이를 계기로 벌을 받을 각오로 자신의 신상에 대해 털어 놓게된다. 봉숙의 이야기를 들었을 가장 놀랄 수밖에 없는 인물은 금녀다 그녀는 봉숙과 더불어 초등학교를 다녔고 이후 초중을 나와 이 공장에 같이 다니고 있는 것이다. 게다가 그녀는 전쟁때의 폭격으로 부모를 잃었고 겨우 그녀를 구해내어 보살펴 주었던 이웃사람 마저 치안대에 의해 처형당했던 사연을 갖고 있기에 치안대와 직접 간접으로 관련이 있을 뿐만 아니라 그동안 자신을 속였던 봉숙을 쉽게 용서하기 어렵다. 그런 처지에도 불구하고 주위 사람들과 더불어 차츰 그녀의 딱한 사정을 이해하고 마침내 화해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에서 전쟁과 분단으로 인해 빚어진 이 갈등을 종식시키려고 하는 작가의 태도를 엿볼 수 있다.

1988년에 나온 김삼복의 「향토」는 오늘날 북한 사회에서 벌어지고 있는 도시와 농촌 사이의 격차로 인해 농촌에 사는 젊은 사람들이 끝없이 도시로 올라가려고 하는 것에 대한 비판으로 나온 작품으로 읽을 수 있다. 이와 더불어 이 작품이 주고 있는 의미 중의 하나는 현재 북한의 농촌 사회에 뿌리 깊이 남아 있어 사람들을 괴롭히고 있는 치안대와 관련된 분단문제이다. 치안대를 둘러싼 북한 내부의 갈등이 비단 과거의 일에 그치는 것이 아니고

지금도 여전히 사람들의 마음 속에 응어리져 있는 상처로 남아 있음을 보여주는 것으로 이 분단문제가 북한 내부에서도 얼마나 심각하게 작용하고 있는가 하는 것을 잘 보여주는 대목이라 하겠다. 이 점을 중심으로 하여 이 작품을 살펴보자.

이 마을에서 오랫동안 리당위원장으로 일하면서 이 마을을 위해 자신의 삶을 불태웠던 오근풍 아저씨가 산성화된 토양을 개량하기 위하여 직접 산으로 석회석 매장을 파악하기 위하여 산으로 답사를 다니다가 실족하여 부상당하여 임종을 앞둔 시점에 이들의 보살핌 속에서 각각 자라났던 세 사람의 젊은이 도형, 명호, 영금이 이 아저씨와 관련되어 일어났던 옛날 일을 회상하는 방식으로 구성되어 있다. 전쟁 때 전사한 아버지를 두었던 도형은 외가의 도움으로 도시로 올라와 공부하고 지금은 전기연구소의 연구원으로 일하고 있고, 치안대에 가담한 적이 있는 형을 두고 있는 명호는 이 마을에서 성장하여 한 건실한 농사꾼으로 성장하여 현재는 기계화작업 반장이고, 영금은 공부를 잘하여 이 마을을 대표하여 대학을 진학하였고 마친 다음에서는 다른 곳으로 가지 않고 고향 마을로 돌아와 지금은 협동농장의 처녀 관리위원장으로 일하고 있다. 이들 세 사람이 오근풍 아저씨의 임종을 계기로 하여 다시 이 마을에 모이게 되고 이 과정에서 그들이 그동안 겪었던 삶의 이야기가 번갈아 가면서 서술되는 방식으로 이 작품은 짜여져 있다.

이 작품에서 치안대 문제를 중심으로 하여 벌어지는 분단문제가 가장 비중있게 드러나는 것은 이 마을의 리당위원장으로 오랫동안 복무하여 온 오근풍 아저씨와 이 마을에서 자라 우여곡절 끝



에 트랙터 운전수로 성장하여 한 근실한 농사꾼으로 성장한 명호의 경우이다. 이 중에서 가장 문제적인 인물은 바로 명호와 그의 가족이다

명호의 집은 빈농민으로 일제하부터 소작농민으로 근근히 생활을 해왔기에 해방후에 이루어진 토지개혁으로 자기 땅을 가지게 되었고 이후 착실히 생활하면서 생활을 이루어 나갔는데, 전쟁이라는 희오리 바람으로 인하여 집안이 새로운 곤경으로 빠지게 된다. 명호의 형 명식은 미군과 국방군이 점령하였을 때 이 마을에 치안대 대장으로 들어온 과거 이 마을의 지주였던 최씨의 아들의 강요로 하여 살기 위하여 치안대에 들어갔다. 밭을 절둑거린다는 핑계로 들어가지 않으려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당시의 분위기에 몰려 치안대에 가담하여 총을 어깨에 차게 되고 팔에는 완장을 끼고 마을을 다니었다. 그리하여 이 마을에서 이루어진 대규모의 학살에 직접 간접으로 관여되게 되었고 이로 인해 이후 심각한 상황에 직면하게 된다. 그가 선두에 서지 않았기 때문에 북한에서 기소되지는 않고 선처를 받아 그 마을에서 생활하게 되지만 피살자 및 전사자 가족들은 그러한 당의 정책과는 관계없이 이런 사람들이 자신의 마을에 같이 산다는 것에 대해 불만을 느끼고 기회가 있을 때마다 이들을 추방하거나 혹은 비판하려고 한다. 이 마을에 살면서도 명호네 일가족은 제대로 고개를 들고 살수가 없는 상태에서 이 마을 공동체에 어울리지 못하고 내들려진 상태에서 생활할 수밖에 없다. 그러던 차에 전후 농업협동화과정 이 진행되면서 산에서 양을 키워야 하는 과업이 제기되자 아무도 그 외딴 곳으로 가려고 하지 않을 때 명호의 가족은 그곳으로 간

다. 물론 과거의 죄를 씻을 수 있는 기회라고 생각하여 참회하는 심정으로 가는 측면도 있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이 마을의 사람들과 어울려 살 수 없는 환경을 피해서 도피하는 측면도 존재하는 것이다. 한 마을에 살면서 피살자 가족과 과거 치안대 가담했던 가족 사이의 이러한 섞일 수 없는 상태는 바로 분단으로 인한 고통이 북한 사회의 곳곳에서 격심하게 이루어져 왔음을 잘 말해주고 있다.

그런데 이런 정도에서 그쳤다면 치안대를 둘러싸고 벌어진 이 분단문제는 쉽게 치유될 수 있는 성격의 것이고 오늘날 우리가 목격하고 있는 것처럼 이렇게 냉전적 적대 감정이 심각하게 지속되지 않았을런지 모르겠다. 그런데 이 문제는 여기에 끝나는 것이 아니고 시간을 넘어 지속되는 것이다. 명호의 형 명식이 양을 죽였다는 누명을 쓰게된 것도 사실 이러한 불신에서 나온 것이다. 사실은 이 마을에서 건달꾼으로 지내고 있던 홍정표가 죽였지만 자신의 잘못을 평소 이 마을에서 치안대 문제로 항상 불신을 받아왔던 명식에게로 돌려버리자 평소 명식을 미워하던 마을 사람들은 아무런 의심없이 그말을 철썩같이 믿었다. 물론 나중에 홍정표의 소행임이 드러나지만 이런 일이 벌어질 수 있는 것도 이 마을 사람들 마음 깊이 드리워 있는 과거 치안대 일에 대한 깊은 불신의 벽에 기인하는 것이다.

이 마을에서 분단으로 인한 고통은 여기에 그치지 않는다. 명호가 학교를 마치고 농장에 들어오면서부터 벌어진다. 명호는 농장에 들어와 이 무렵에 농촌에 보급되기 시작한 트랙터에 관심을 기울이면서 시간이 나는대로 틈틈히 이 기술을 배우려고 한다. 그

러한 그의 노력이 트랙터 운전수로부터 인정을 받아 이 마을에서 트랙터 운전수 양성소로 추천하는 명단에 그가 제일번으로 올라가게되는 결과로 이어진다. 그런데 문제는 여기에서 시작된다. 그가 1번으로 되어 있던 추천 명단이 리당위원장의 손에 오기 전에 이미 그 명단에서 그의 이름이 빠져 버린 것이다. 이것은 이 마을의 피살자 가족들이 과거 치안대에 가담했던 사람을 형을 두고 있는 사람에게 이 중요한 일을 맡길 수 없다는 항의 때문에 중간에서 빠져버린 것이다. 이미 오랜 세월이 지난 후의 이야기이지만 이 마을의 사람들에게는 결코 지난 일이 아닌 것이고 생생한 현재의 이야기인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과거의 이 상처가 돌아나게 되었고 이로 인해 명호는 심한 타격을 받은 것이다. 평소에 그의 형이 그에게 하는 말 즉 더이상 무엇을 해보려고 하지 말아라라는 말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피부 깊숙이 느끼게 되었던 것이다. 과거 어릴 때만 해도 이 치안대가 무엇인지 몰랐고 컸어도 그 일이 얼마나 깊은 상처를 남겼고 현재에도 지속되고 있는가를 실감하지 못하여 형의 말을 그저 흘려 보냈던 그가 이 일을 당하면서 비로소 그 반목과 갈등의 심각함을 깨닫는 것이다. 이 일을 겪으면서 치안대에 가담하였던 일로 세상과 담을 쌓고 살아가는 명호의 형과 명호가 나누는 대화는 이 치안대 문제가 당사자들에게 얼마나 큰 고통이며 이것은 그들로 하여금 그 사회에서 제대로 살 수 없게 만드는가를 알 수 있다.

“그러기 내 말하지 않던...분수에 맞지 않게 헛꿈을 꾸지 말라고...  
사실 우리가 그런 걸 바랄 체면이 없지 않나?”

형이 이렇게 말했다를 때 나는 울분을 터치고야 말았다.

“차라리 난 이 운암을 뜨겠어요!” 나는 낮에 순간적으로나마 품었던 생각을 입밖에 냈다.

“뭐? 너 그게 진정이나?” 형이 놀래었다.

“진정이라면 그래 어찌겠어요? 형은...왜 치안대에 들어가지구...정말 형은”

나는 혈떡이며 더 말을 잇지 못했다. 마음어진 형의 죄스러움에 빛을 잃은 눈이 나를 쳐다보았기 때문이었다. 나는 형의 가장 아픈 곳을 칼로 찌른 것이나 같았다. 형은 고개를 꼭 떨구었다.

“그래, 나를 원망해라. 그래 싸지. 저주해라. 그 무슨 말을 들어도 난 할말이 없다...”

마을을 떠나 혼자 살고 있는 형에게 자기마저 마을을 떠나겠다고 이야기하는 명호의 이런 참담한 심정은 오늘날 북한의 현실에서 이 분단문제가 결코 과거의 일이 아님을 알 수 있는 것이다. 그 자신이 했던 일이 아니고 그의 형이 했던 일로 인하여 이렇게 고통을 받을 정도이니 북한의 사회에 뿌리박고 있는 전쟁때의 이 치안대 문제가 얼마나 분단시대의 냉전의식의 확장에 크게 기여하고 있으며, 이로 인해 사회 내부에 커다란 간격이 조성되고 있는가 하는 것을 쉽게 알 수 있다.

리당위원장은 그 자신의 일도 아닌 그의 형의 과거 일 때문에 명호가 받게되는 고통을 알았을 때 피살자 가족을 설득하는 것은 물론이고 그 자신의 지위를 십분 활용하여 사태를 바로 세우게 되고 마침내 명호는 트랙터 운전수 양성소로 가게 되고 이를 마친 후 이 마을에 돌아와 한 성실한 일꾼으로 되어 현재에 이르고

있는 것이다. 그런데 이 과정에서 우리가 눈여겨 볼 대목은 이 일을 해결하는 과정에서 핵심적 역할을 한 리당위원장의 과거이다. 그 역시 이 전쟁으로 인하여 심한 고통을 받은 사람 중의 하나이다. 그는 전쟁시 특히 미군과 국방군이 북한을 점령하였을 때 산으로 도망가 그곳에서 유격대 활동을 하면서 저항했던 사람이다. 그렇기 때문에 피신하지 못하고 이 마을에 남아 있었던 그의 부인 최정임은 치안대 사람들에 의해 비참하게 학살당했다. 남편이 해방직후부터 당원으로 일했다는 것과 지금 유격대 활동을 하고 있다는 이유 때문에 그녀는 치안대에 의해 비참하게 당했던 것이다. 그때 받은 고통으로 인하여 지금까지도 재혼을 하지 않고 혼자 사는 그는 이미 과거의 일을 더이상 되풀이하여 벗어나게 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는 명호에게 이런 식으로 대하는 마을 주민들에 대하여 한편으로는 강한 실망감을 갖기도 하고 다른 한편으로는 그들을 설득시키기도 하는 것이다. 왜 피살자 가족의 일원이기도 한 그가 왜 치안대에 가담했던 가족들을 끼고 도는가 하는 은근한 비판과 눈초리를 받아가면서도 그가 이 문제의 해결에 적극적으로 나서는 것은 바로 이 과거의 일은 빨리 해결되어야 하는 것이고 그럴 때만이 이 땅에 평화로운 삶이 가능할 것이라는 기대감이 있기 때문이다. 과거의 그 상흔으로부터 벗어나지 못하고 끝없이 싸우고 갈등하는 한 결코 평화로운 삶이 불가능할 것이라는 그의 판단 때문에 그는 그 자신의 개인적인 아픔을 넘어설 수 있었던 것이다. 그 역시 지금도 과거에 아내가 처형당했던 곳은 의식적으로 한번도 가지 않을 정도로 마음속 상처가 완전히 가시지는 않았지만 모든 사람들의 평화로움을 위해 이

렇게 나설 수 있었던 것이다. 마을 주민들 특히 피살자와 전사자 가족들의 이런 비판을 바라보면서 ‘언제 이것이 끝날 것인가’라고 혼자말을 하고 있는 오근풍의 태도에서 이러한 강한 바람과 그것과는 일치하지 않는 현실의 모습을 동시에 읽을 수 있다.

### 제Ⅲ장 이산가족의 문제와 잊혀진 고통

치안대와 더불어 북한의 분단문학이 중요하게 다루는 문제는 이산가족의 문제이다. 전후부터 이 문제를 다룬 작품이 간헐적으로 나오기도 하였지만 본격적으로 나오기 시작한 것은 1980년대 말부터이다. 이 무렵에 이르러 남한에서 북한을 방문하는 사람들이 생기기 시작하였으며, 특히 미국을 비롯한 해외에서 북한을 방문하는 사례가 부쩍 늘었기 때문에 북한의 민중들이 이것과 무연하게 살 수는 없는 것이고 따라서 이산가족과 같은 문제를 다룬 소설작품들이 나오기 시작하였던 것이다. 이산가족의 문제는 그동안 사람들의 마음 속에는 항상 도사리고 있던 것이지만 누구 하나 밖으로 끄집어내 공개적으로 말하기 어려웠던 주제이다. 그러나 새로운 상황이 전개되면서 그동안 접어두었던 이산가족의 고통이 새롭게 부각되기 시작하였던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산가족이 겪는 고통과 아픔을 그린 북한의 분단문학 작품을 분석함으로써 북한 사회 내부에 잠재해 있는 사회적 갈등의 심층적 차원을 헤아려 볼 수 있을 것이다.

1990년대에 들어 「조선문학」에 발표된 작품 중에서 새로운 경향을 분단문학으로서 1990년 3월 「조선문학」에 발표된 김명익의 「임진강」을 들 수 있다. 이 작품은 평양에서 교수일을 하는 남편을 두고 있는 중년의 부인이 휴전선 부근에서 혼자 살고 있는 친정 어머니를 평양으로 모시고 가서 같이 살자고 설득하러 가는 것으로 시작된다. 그런데 그 어머니는 병을 고치러 남쪽으로 내려갔다가 돌아올 수 없게된 남편과 아들을 기다리면서 조국이 통일되는 날 이들을 만날 수 있을 거라는 기대감으로 그리고 이들이 언제라도 옛날 이 집을 찾아올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이 낡고 생활하기 힘든 고향집을 떠나려고 하지 않는 것이다. 딸의 간청에도 불구하고 그 어머니는 결국 자신의 의지대로 이곳에 남기로 하고 딸은 그러한 어머니의 간절한 소망을 다시 확인하고는 홀로 평양으로 돌아간다.

이 작품은 필자가 아는 한 처음으로 분단으로 인해 북한 주민이 겪는 고통을 처음으로 다루었다. 과거에는 이러한 것이 거의 나타난 적이 없었던 것에 비해 이러한 인물이 나온다는 것은 참으로 충격적인 변화라고 할 수 있는 것이다. 그런데 이 작품에서 정작 우리의 관심을 끄는 어머니의 다음과 같은 발언이다.

너도 방송에서랑 들어 알겠지만 저 남쪽에서 문익환 목사랑 황석영 분이랑 우리 북반부를 다녀가지 않았니. 그리고 어린 처녀인 임수경이와 문규현 신부도 통일을 위해 평양에 왔다가 통일을 위해 돌아갔지. 장벽이라던 군사분계선을 걸어 지나서 말이다. 그들 모두 조국해방 선 뚫이 되는 해까지는 기어코 나라를 통일하고 분단민족의 슬픔을 끝장내자고 하였지. 민심은 천심이라구 통일의 날은 반드시 온다.

위의 인용된 부분은 친정 어머니가 딸의 간청을 거절하면서 자신의 현재 심경을 말하는 대목이다. 어머니는 과거 그 어느 때보다도 지금이 통일의 가능성이 많다고 생각하면서 앞으로 계속 이 집을 지키면서 남편과 아들이 돌아올 날을 기다리겠다고 하는 것이다. 그런데 이러한 새로운 가능성의 근거로 들고 있는 부분이 다름아닌 1989년에 있었던 남한 사람들의 방북 사건이다. 실제로 이들의 방북이 북한 주민들에게 어떤 영향을 주었는가를 부분적이지만 이 대목을 통하여 어느 정도 짐작할 수 있다. 즉 북한 사람들이 통일에 대해 그동안 북한의 국가 이데올로기에 의해 들어왔던 것, 즉 미국이란 제국주의를 물리치고 남한이 식민지로부터 해방될 때 비로소 조국통일이 될 수 있다는 정식화된 경로 이외의 다른 길을 어렵פות하게나마 느끼게 되었다는 점이다. 물론 그것은 막연한 것이고 어떤 구체적인 전망이 보이는 그런 것은 아니다. 아직도 다분히 과거에 교양 받아왔던 정식화된 길이 지배적인 사고를 점하는 그런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중요한 것은 전혀 예기치 못했던 남한 사람들의 방북을 보면서 그동안 자신 속에 억눌려 있던 소망이 튀어나왔다는 점이고 또한 그것은 국가 이데올로기에 의해 채색된 것이기 보다는 심정적이고 인도적인 것이기 때문이다. 북한의 위정자들은 원하지 않았겠지만 남한 인사들의 방북은 북한 주민들에게 이러한 영향을 미쳤던 것이다.

그런데 이러한 대목이 이 논의에서 주는 더 큰 의미는 1990년대 이르러 그 이전의 분단문학에서는 볼 수 없었던 접근법, 즉 분단 현실 하에서 북한 주민이 겪는 삶의 현실을 다루기 시작하는 소



설이 나온다는 점에 대한 근거의 일단을 시사해준다는 점이다. 필자의 생각으로는 이 시기에 이르러 과거에 볼 수 없었던 이러한 문제의 소설이 나오게 된 데에는 그동안 국가 이데올로기에 의해 일방적으로 전해내려오던 추상적인 길에서 벗어나 막연하기는 하지만 심정적으로 피부로 와닿을 수 있는 이산가족의 재회와 같은 문제들이 대두되기 시작하고, 그것이 일반 주민들의 마음 깊숙이 자리잡고 있었던 소망을 건드리기 시작했다는 점이다. 그리하여 과거와는 다른 방식으로 조국통일의 문제를 다루어야 할 필요성을 작가는 새롭게 변한 북한 사람들의 현실에서 민감하게 잡아낼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같은 호 「조선문학」에 실린 림종상의 「쇠찌르레기」도 이와 같은 경향을 띤 작품이다.

이처럼 1990년에 들어 발표되기 시작한 새로운 형태의 분단문학은 일시적 현상으로 그치지 않고 이후 계속 진행되었다. 위에서 언급한 작품이 나온 다음달인 1990년 4월에 「조선문학」에 발표된 류도희의 「열쇠」 역시 이러한 새로운 경향을 보여주는 작품이다. 이 작품은 공장 지배인으로 근무하고 있는 58세의 박성규 일가가 겪는 분단의 아픔을 그린 작품이다. 딸을 시집보내면서 박성규의 아내는 딸에게 집 열쇠를 준다. 언제든지 친정집에 오고 싶으면 집에 누가 없더라도 들어올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이다. 모녀간의 이러한 사정을 보고 듣고 있던 박성규는 이 장면을 계기로 옛날 자기가 이남의 고향집을 떠나 때의 상황을 머리 속에서 다시 회상하게 된다. 노모가 인민군을 따라 북으로 올라가는 아들에게 열쇠를 쥐어주면서 언제든지 기회만 되면 집으로 돌아오라고 당부 하였던 것이다. 지금은 생사조차 모르고 있는 어머니의 모습을 떠

올리면서 다시한번 분단의 슬픔을 느끼는 것으로 이 작품은 마무리된다.

이상의 개괄적인 줄거리를 통해서 잘 알 수 있듯이 「열쇠」 역시 과거의 분단문학과는 달리 새로운 접근법을 보여주고 있다. 앞서 언급했던 「림진강」이나 「쇠찌르레기」와 같은 새로운 흐름을 대변하는 작품인 것이다. 여기서도 과거의 작품에서 볼 수 있었던 미제국주의라든가 괴뢰정권이라든가 하는 구호는 전혀 나타나지 않고 있으며, 이산가족이 겪는 인간적 슬픔과 고통을 그냥 묘사할 그리고 그것의 연장선 위에서 자연스럽게 통일을 염원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다. 여기서 1990년에 들어 새롭게 제기된 조국통일 주제의 새로운 소설들은 결코 우연의 산물이 아니며, 오늘날 새롭게 전개되고 있는 북한의 현실의 일단과 관계되는 것임을 어렵지 않게 알 수 있는 것이다. 이러한 경향의 작품은 이후 계속하여 발표되었다.

여기서 우리가 중요하게 따져보아야 할 점은 앞서 간략하게 살펴해보았던 것처럼 이러한 새로운 경향의 접근법의 소설이 이전의 그것과 다른 점의 배경에는 미묘한 이데올로기적 차이가 존재함을 알 수 있다. 이전의 분단문학이 주로 남한을 다루고 또한 미제국주의에 의해 식민지화된 남한의 비참한 삶과 그 속에서 일어나는 투쟁을 그렸는데 이는 통일문제에 대한 북한의 정식화된 국가 이데올로기에 의해 강력하게 뒷받침되어 있던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경향을 띤 작품들은 항상 새로운 소재를 다루고 새로운 인물을 취급하면서도 기본적으로 그 구성이 동일하였다. 그 국가적 이데올로기를 벗어나서 쓴다는 것은 생각하기 어려운

일이었다. 그런데 1990년대 들어 이와는 다른 새로운 경향의 접근법으로 분단과 통일을 추구하는 소설이 나오고 그것이 그 이전과는 달리 남한이 아닌 북한의 주민들이 겪는 분단의 문제를 다룬다는 것은 작은 차이 같지만 국가 이데올로기에서 약간 벗어나기 시작함을 보여 주는 것이다. 그동안 무시하였던 문제들 예컨대 북한의 사람들이 분단으로 겪는 고통을 다루기 시작하였다는 것은 그런 점에서 이데올로기적 변화의 일단—물론 아주 어렵פות한 수준의 것이지만—이 나타나기 시작함을 의미한다. 이렇게 보는 것이 북한 현실의 총체적인 움직임과는 거리가 있는 필자의 인식 부족이 아님을 다음과 같은 비교적 위엄있는 북한의 공식적인 목소리에서 확인할 수 있다.

작품의 사상적 대를 똑바로 세우는 문제는 최근 일부 작품에서 사상적 지향성과 문제성이 명백하지 못한 현상들이 나타나고 있는 실태로부터 더욱 절박하게 나서는 창작실천적 요구이다.

최근에 발표된 일부 조국통일주제의 작품들에서는 우리 조국을 둘로 갈라놓고 우리 인민에게 분열의 고통을 강요하고 있는 근본원흉인 미제 침략자들에 대한 치솟는 민족적 분노와 증오심을 강하게 불러 일으키지 못하고 지엽적인 문제들에 형상의 주목을 돌리는 것과 같은 편향이 나타나고 있다. 일부 소설들에서는 남조선 현실을 반영하면서도 근 반세기동안이나 우리 조국 남반부를 강점하고 식민지 통치를 감행하면서 남조선을 핵전초기지로 전변시킨 미제침략자들의 만행을 폭로단죄하고 놈들을 몰아내기 위한 데로 사상적인 대를 튼튼히 세우고 형상조직을 하지 못하고 이런저런 생활을 보여주는 데 그치고 마는 경우들이 있다. 특히 미제와 그 앞잡이들의 군사파쇼통치를 반대하고 미국놈들을 남조선에서 내쫓기 위하여 항쟁의 거리에서 피흘리며 싸우고 있는 주인공들을 정면에 내세우지 못하고 분렬로 인한 인정적인 설움이나 고통을 보여주는 주인공들을 그

리는 현상이 많이 나타나고 있다. 물론 근반세기에 걸치는 분렬로 인하여 혈육들이 갈라져 생사여부조차 모르고 있는 비극적인 현상이 많은 것은 사실이다. 그렇다고 하여 분렬의 아픔과 고통만을 보여주는데 그치고 이러한 비극을 강요하고 있는 미제와 분렬주의자들의 책동을 짓부셔버리고 통일을 쟁취하기 위한 투쟁으로 사람들을 이끌어주지 못한다면 그러한 작품은 시대와 혁명 앞에 지닌 자기의 사명을 다할 수 없다.

이와 관련하여 창작에서 특별히 유의해야 할 문제는 조국통일주제의 작품들에서 혈육들이 갈라졌다가 해의를 거쳐 기구하게 상봉하는 것과 같은 식으로 통일의 절박함을 강조하는 작품들이 편향적으로 많이 나오고 있는 것이다. 물론 조국통일을 위한 범민족적인 여러가지 운동들이 활발해지고 여러가지 행사들이 진행되고 있는 현실적 조건에서 이러한 생활을 반영하는 작품들이 많이 나오는 것은 있을 수 있는 현상이다. 문제는 갈라졌던 부모처자 형제자매들이 기구한 운명의 길을 걸쳐 상봉하게되는 생활에 많이 치중하고 있는데 있는 것이 아니라 혈육들을 갈라놓은 원흉에 대한 분노와 적개심 증오심을 적을 강하게 짓부시고 조국통일위업을 기어이 이룩하기 위한 투쟁으로 사람들을 힘있게 불러 일으키지 못하는데 있는 것이다.<sup>4)</sup>

여기에 인용한 글은 「조선문학」 1991년 9월호에 발표된 것으로 이 잡지의 주필급 정도의 사람이 쓴 머리글이다. 「조선문학」에는 매달 이 머리글이 실리는데, 이는 이 잡지의 공식적인 목소리를 대변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 위의 글은 1990년 3월 이후 여러 지면을 통해 제기된 새로운 형태의 조국통일 주제의 소설에 대한 일종의 경계심을 그대로 드러낸 것이다. 이것은 이 시기에 나온 이 새로운 경향의 소설이 당대를 지배하고 있는 국가의 공식적 이데

4) “오직 우리 식대로 창작하자”, 「조선문학」 1991. 9, pp. 4-5.

올로기와 어떤 점에서 불일치하고 있는가를 잘 보여주고 있다.

이 글의 필자가 가장 우려하고 있는 것은 과거 몇 십년을 지배하고 있었던 공식적인 분단문학의 접근법이 무시되고 있다는 점이다. 이 점은 “미제와 그 앞잡이들의 군사파쇼통치를 반대하고 미국놈들을 남조선에서 내쫓기 위하여 항쟁의 거리에서 피흘리며 싸우고 있는 주인공들을 정면에 내세우지 못하고 분렬로 인한 인정적인 설음이나 고통을 보여주는 주인공들을 그리는 현상이 많이 나타나고 있다.”라는 대목에서 가장 분명하게 나타나고 있다. 미국의 식민지에서 살고 있는 남한 사람의 비참한 생활과 그것을 극복하기 위해 싸우는 사람들의 영웅적인 모습을 담는 것은 과거의 조국통일주제의 소설이 예외없이 가지고 있었던 틀이었다. 그런데 최근들어 그러한 틀이 점점 사라지고 이를 대신하여 북한 사람들이 겪는 이산가족의 아픔과 같은 문제들을 거론하기 시작하는 것은 매우 위험한 일처럼 느껴지는 것이다. 그래서 이 글의 필자는 이러한 문제를 다루는 것이 ‘지엽적인 문제’ 혹은 ‘이런 저런 생활’이라고 간주하였다. 그런데 공식적인 이데올로기에 젖어있는 사람들에게 한낱 지엽적이고 단순한 생활의 한 부분에 불과하던 것이 갑자기 많은 작가들에게 중요하고 절실한 문제로 제기되고 있는 것이다. 계속하여 공식적인 이데올로기 하에서 세상의 삶을 파악하려고 하는 이에게 이는 매우 위험한 일이지만, 생활의 묘사를 통해 사회적 인간의 모습을 추구하고자 하는 작가들에게 그리고 새로운 현실의 움직임을 관찰하고 그 의미를 파악하는 것이 작가의 임무라고 생각하는 이들에게 이러한 경향은 분명 의미있는 일로 다가올 수밖에 없는 것이다.

이러한 미묘한 차이는 오늘날 남한에 살고 있는 우리들에게는 별로 크게 다가오지 않을 수 있는 문제일 수 있지만, 이 북한 구성원 내에서는 결코 간과할 수 없는 중대한 사태임은 위에서 살펴본 바 북한의 가장 중요한 문학잡지인 「조선문학」의 머리말에서 이렇게 흥분하여 말하고 있는 대목에서 어렵지 않게 느낄 수 있는 것이다. 그런 점에서 앞서 필자가 누누히 지적했다시피 1990년에 들어와 새롭게 제기되고 있는 독특한 분단문학이 북한 내부의 국가 이데올로기와 실제적 생활현실과의 충돌을 일정하게 의미한다는 파악은 결코 피상적이거나 주관적인 것이 아니다.

위의 인용문에서 또하나 유심히 살펴보아야 할 대목은 이런 새로운 분단문학이 나올 수밖에 없었던 북한 내부의 현실적 근거에 대한 이 글 필자의 생각이다. 새로운 경향에 대해 극도로 부정적인 태도를 가지고 있는 「오직 우리 식대로 창작하자」의 필자도 이러한 경향이 나올 수밖에 없는 필연성을 전적으로 부정하지 못한다. 그는 그 근거로 다음 두가지를 들고 있다. 하나는 실제 분단된 현실에서 겪을 수밖에 없는 북한 사람들의 고통이며 다른 하나는 남한 사람들의 방북을 포함하여 새롭게 전개되는 통일운동의 양상이다. 전자에 대해 그는 “물론 근반세기에 걸치는 분별로 인하여 혈육들이 갈라져 생사여부조차 모르고 있는 비극적인 현상이 많은 것은 사실이다.”라고 말하면서 이러한 이산가족이 분단된 현실에서 겪는 고통의 현실성을 인정하는 발언을 한다. 후자에 대해서는 “물론 조국통일을 위한 범민족적인 여러가지 운동들이 활발해지고 여러가지 행사들이 진행되고 있는 현실적 조건에서 이러한 생활을 반영하는 작품들이 많이 나오는 것은 있을 수

있는 현상이다.”라고 말하면서 이 새로운 경향의 소설들의 출현에 방북과 같은 전혀 예기치 못했던 통일운동의 전개가 큰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보여준다. 이런 점을 고려할 때 앞에서 필자가 강조하였던 점, 즉 1990년에 이르러 그전과는 다른 새로운 접근법의 분단문학이 나오게 되는 이유로서 그 이전부터 북한 사람들 내부에 깊숙이 자리잡고 있었던 가족적 그리움 같은 것이 방북과 같은 사건을 계기로 표출되기 시작했다기 때문이라는 점을 또한 뒷받침해주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조선문학」의 머리글에서 이러한 식의 우려가 담긴 글이 발표될 정도로 이 새로운 경향의 작품은 큰 충격을 주었다. 이러한 도도한 흐름은 이 머리말에서 나타나는 경고성의 발언에도 불구하고 멈추지 않는다. 언뜻보면 이 정도의 주의가 내려졌다면 당연히 이러한 경향의 소설이 사라질듯도 한데 사정은 전혀 그렇지 않다. 이러한 경향의 소설은 잠시 주춤했지만 연이어 계속 발표되고 있다. 이는 그만큼 이 새로운 접근법이 북한 내부에서 중요한 현실 인식으로 자리잡고 있음을 반증하는 것이기도 하다. 이러한 연장선 위에서 나온 남대현의 「상봉」이란 작품을 살펴보자.

이 작품은 「오직 우리식대로 창작하자」라는 경고성이 섞인 머리글이 발표된 후인 1992년 7월에 「조선문학」에 발표된 작품이다. 월북하여 이산가족이 된 신문기자 재호는 신문에 나오는 남한 출신의 사람들의 이야기는 항상 빠뜨리지 않고 보는 버릇을 가지고 있다. 그러나 번번히 실패한다. 이름이 옛날 자기 마을의 사람인 것처럼 보일 때마다 직접 찾아가 만나보곤 했으나 동명이인인가 혹은 전혀 엉뚱한 사람이었다. 그런데 이번에는 바다에서 태풍

을 피해 동해안의 북한 항구로 피신한 남한의 어선에 탑승한 어부들의 명단에서 자기 어렸을 적 고향 친구의 이름과 똑같은 이름을 발견하고 이번에도 속는 셈치고 만나려고 노력한다. 명단에 있던 영태라는 인물을 직접 만나보았을 때 그는 진짜로 어렸을 때 고향 마을에서 같이 컸던 친구이었다. 서로 흥분하여 좋아했지만 그 친구 영태는 다시 내려가야만 했고 그래서 상봉도 잠깐이었다. 헤어질 때 서로 겪는 아픔은 만나기 전에 막연하게 그리워할 때의 고통보다 더 고통스럽다는 것을 느낄 뿐이다.

이 작품 역시 과거의 분단문학과는 다른 새로운 경향의 소설이다. 기본적으로 분단으로 인한 이산가족의 고통을 다룬 작품이다. 그렇기 때문에 과거의 소설에서 볼 수 있었던 요소들은 거의 빠져있다. 예컨대 남한에서 배가 올라오게 된 동기가 북을 동경하여 월북한 것이 아니라 태풍이라는 천재지변으로 어쩔 수 없이 북한으로 들어오게 되었다는 구성이 그러하다. 또한 그 친구와 만났을 때에도 남한의 비참한 사정에서 고통받고 있는 모습을 어떤 설정을 통해서라도 할 듯한데 그 역시 빠져있다. 단지 옛날 친구를 만났을 때 느끼는 회한이 주로 취급될 뿐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 작품의 궁극적 주제는 분단된 상태에서 잠깐 만나는 것과 같은 방식의 상봉은 만나지 못할 때의 고통에 비해 한층 더 견디기 힘든 것이라는 것이다. 그런 점에서 궁극적으로 남북한의 민족통일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을 환기시키고 있다. 이러한 것 역시 남한 독자들의 눈에는 너무나 소박한 것으로 비칠지 모르지만 실제로 이것이 북한 사회 내부에선 가지는 파장이란 앞서 보았던 것처럼 우리의 상상을 넘어서는 정도의 것이다.



이 작품에서 우리가 눈여겨 보아야 할 점은 이 작품이 앞서 언급했던 경고성 발언이 강한 머리글 「오직 우리식대로 창작하자」가 나온 후에 발표된 작품이라는 점이다. 머리글에서 상봉이라든가 이산가족의 고통 등을 그리는 것에 대해 일면 수궁하면서도 근본적으로 이러한 경향의 것이 오늘날의 엄연한 현실 즉 미국이 남한을 식민지로 삼고 있는 것을 무시할 수 있기 때문에 위험한 것이라는 지적을 「상봉」은 결코 무시할 수는 없었다. 물론 그 글이 나온 후에도 과거와 같은 작품으로 전적으로 돌아갈 수는 없었다. 그리하여 분단으로 인한 북한 사람들의 고통을 계속 다루기는 하지만 머리글에서 말했던 지적을 또한 전적으로 외면할 수는 없는 것이기에 작가 남대현은 이 작품의 말미에 이 작품의 전체적인 구성과는 별로 특별한 연관이 없지만 다소 구색 맞추기 식으로 이 점을 명시하는 방식을 택한다. 작가는 다음과 같은 ‘사족’들을 주인공 혹은 화자의 입을 통하여 다음과 같이 덧붙인다.

이렇게 되뇌이는 영태(남한의 어부로서 북한의 기자인 재호의 어릴적 친구-인용자)의 목소리는 한탄이라기 보다 차라리 그 어떤 부르짖음이었다. 아니 가슴을 끊어내리는 피타는 절규였다. 그것이 우리의 죄가 아니라는 것을, 바로 우리나라를 둘로 토막친 의세와 그 세력에 아부하는 분열주의자들 때문이라는 것을 말해주고 싶었으나 재호(북한의 기자로서 이산가족-인용자)는 가슴이 미어져 올라 나가지 않았다.<sup>5)</sup>

나 역시 오늘의 상봉이 괴로웠네, 그렇지만 난 바로 그 괴로움 속에서 내일에 대한 확신 뚜렷한 확신을 가지게 됐네. 상처의 고통은

5) 남대현, “상봉”, 『조선문학』 1992. 7, p. 78.

종치를 도려낼 때가 제일 심한 법이 아닌가! 새 생명의 탄생 역시 가장 모진 진통을 거치기 마련이고. 난 오늘의 상봉에서 우리가 바로 그러한 처지에 있다는 걸 똑똑히 깨달았네! 삼천리 강산이 하나로 되고 외세가 물러나고 분열의 장벽이 무너지고……그렇게 통일 이네<sup>6)</sup>

물론 이 글에도 ‘미제’라는 말보다 ‘외세’라는 말이 사용되고 있는 데서 분명하게 드러나듯이 매우 조심스러운 접근을 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렇지만 이러한 덧붙임도 머리글이 나오기 전의 소설에서는 보기 힘들었던 부분들이다. 그런 점에서 이 작품은 1990년 이후에 나온 새로운 경향의 분단문학이 당의 공식적 이데올로기의 영향을 받으면서도 계속 지속되고 있음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다고 말할 수 있다.

이상에서 보았던 새로운 경향의 분단문학이 앞으로 어떤 방향으로 진행될 것인가에 대해서 우리가 예측할 수 있는 것은 극히 적다. 하지만 이 시점에서 이러한 소설이 지니고 있는 일반적 양상, 특히 그것이 결하고 있는 점에 대해서 몇 가지 이야기할 수 있을 것이다.

첫째로 들 수 있는 것은 이 새로운 경향의 소설이 분명 그동안 무시되어오던 현실의 한 단면을 보여주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분단현실에 대한 거시적인 조망과는 거리가 멀다는 점이다. 이러한 점이 잘 나타나 있는 것은 이들 소설에 나타나는 월남한 인물들의 동기 설정 부분이다. 「쇠찌르레기」, 「기다리는 마음」, 그리고 「림진강」은 동일하게 월남한 가족을 두고 있는 집안의 이야기이

6) 남대현, “상봉”, 『조선문학』 1992. 7, p. 79.

다. 북한의 이산가족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누어진다. 하나는 월북한 가족의 이야기이다. 이것은 고향을 남쪽에 두고 있는 사람이 해방직후나 전쟁 기간에 월북하였기 때문에 지금도 남한에 가족을 두고 있는 형태이다. 류도희의 「열쇠」와 같은 작품이 여기에 속한다. 이와는 달리 월남한 가족의 이야기는 해방직후나 전쟁 기간에 가족의 일부가 남한으로 갔기 때문에 지금 가족의 일부가 북한에서 남한의 가족을 그리워하는 형식이다. 「쇠찌르레기」, 「기다리는 마음」, 그리고 「림진강」이 그러한 예에 속하는 작품이다. 그런데 이 월남한 가족의 이야기를 다루는 소설에서 보게되면 흥미있게도 월남한 사람들이 동기가 그 당시 사회의 전반적 사회적 정황과 다소 거리가 있게 설정되어 있다. 「쇠찌르레기」에서 아들이 월남한 동기는 원자탄이 떨어진다는 소문 때문인 것으로 나타나 있다.

할아버지께서는 전쟁이 끝나고 온 나라가 환희로 들끓던 날 돌연히 자리에 눕고 말았습니다. 비록 원자탄 바람에 겁을 먹고 따라갔다고는 하지만 그래도 자식들이 지성인인 것만큼 이런 날에는 새들이 둥지로 찾아들 듯 문전에 나타날 수 있으리라던 한오리의 기대마저 포기해야 했으니깐요. 마지막 지탱점을 잃자 할아버님은 끝내 쓰러졌던 것입니다.

이러한 양상은 같은 월남한 가족을 두고 있는 집안의 문제를 다룬 「기다리는 마음」도 마찬가지이다. 이 작품에서 남편과 아들이 월남한 동기도 역시 원자탄을 피해서이다.

이 가정이 그만 전쟁 때 박상금의 실책으로하여 풍지박산이 되

었다. 그가 미군의 원자탄 선전에 속아서 아들을 남쪽으로 떠밀어 보냈던 것이다. ‘폭탄 한개에 글썽 백리가 녹아난다지 않니, 백리 안에 있는 건 사람이건, 쇠붙이건, 바위드렁이건 모조리 거덜을 낸다누나. 그러니 너만이라도 원자탄이 떨어지지 않는 곳에 멀찌감치 가서 살아 남아야겠다.’ 박상금은 그날 홍경래의 말을 그대로 옮겨 놓은 이 설교로 아들을 달래었는데 이 설교가 그만 무엇으로써 씻을 수 없는 일생일대의 한을 만들어 놓은 것이다.

이처럼 월남의 동기가 원자탄의 공포 때문인 것으로 설정한 것은 그리고 많은 작품들이 엇비슷하게 이러한 것을 채용한 것은 분단이 이루어진 당대 사회적 역사적 현실에 대한 좀더 본질적인 천착과는 거리가 있는 것이다. 물론 월남한 데에는 위의 작품에 나오는 것처럼 원자탄의 공포가 크게 영향을 미쳤을 것이다. 그렇지만 당시 월남한 사람들의 동기에는 더 많은 사회적 역사적 원인이 개입되어 있다. 그러한 것들에 대해서는 고려하지 않고 이 원자탄 문제만을 이렇게 강조하고, 또한 여러 작가들이 우연 이상으로 이것을 중요하게 설정하는 것은 이 새로운 경향의 조국통일 주제의 소설을 쓰는 작가들이 알게 모르게 아직도 일정한 제약을 벗어나 분단의 문제를 보고 있지 못함을 반증하는 것이다. 이러한 양상은 「립진강」에도 드러난다.

「립진강」에서 주인공의 남편과 아들이 월남한 동기는 단순한 병으로 설정되어 있다. 강건너 의사집에 열병이 난 애를 뵈기 위하여 남편이 건너갔다가 그 강을 경계로 군사분계선이 그어짐으로써 남편과 아들이 다시는 돌아올 수 없게 되었다는 것이다.

그때 너희 아버지가 다섯살 난 네 오빠를 등에 업고 저 나무를 건널 때에는 한 밤 자고는 오는 줄 알아더니 하긴 전쟁이었지. 전선이 몇 차례나 저 임진강을 사이에 두고 밀려왔다 밀려갔다 할 때이니 무슨 일인들 없었겠니. 허지만 그 때 나와 너희 아버지도 그런 걸 가려볼 경황이 없었다. 열병에 걸린 네 오빠가 불덩이처럼 열이 나고 금시 넘어가는 듯 할딱거렸으니 아무리 불비 속이라 해도 강 건너 삼거리 마을의 명의네 집을 찾아 떠나지 않을 수 없었구나. 그렇게 떠나간 너희 아버지가 닷새가 지나고 열흘이 넘었는데도 돌아오지 않고 아무런 기별조차 없었구나 무사히 가 닿기나 했는지 아들의 병은 어떠한지... 나는 뜬 눈으로 날을 밝히며 기다리지 않았겠니. 그 사이 나루길도 막혀 버리고 말았다는 것도 모르고 말이다. 또 열흘을 지났는데 그렇게도 날마다 밤마다 설 사이없이 울부짖던 포성이 췌든듯이 똑 멎는 것이었다. 글썽 전쟁이 끝났구나. 아평화가 왔다. 헤어졌던 사람들과 행방을 모르던 혈육들이 돌아오고 소식이 전해 왔다. 나도 기다렸다. 강 건너 간 아버지와 오빠가 언제면 돌아오려나. 군사분계선이 임진강을 따라 그으졌다는 말이 나에게 귀등으로 들려오지 않았다.

이 소설은 실제로 일어난 일을 원형으로 삼아 썼을 것이다. 그런데 문제는 이런 일이 실제로 일어났는가 아닌가의 문제가 아니라 그것이 얼마나 당대 사회의 역사적 흐름과의 연관 속에서 그려졌나의 문제이다. 그렇게 볼 때 월남한 동기의 설정은 전형적인 환경이 되지 못하고 한낱 우연성에 떨어질 뿐이다. 이처럼 월남한 사람을 두고 있는 북한에 이산 가족 이야기를 다루는 작품에서 월남한 동기가 그 역사성을 갖추지 못하고만 것은 이 새로운 경향의 작품이 가진 근본적 한계로 지적되어야 할 것이다.

둘째는 이 새로운 접근법의 소설이 주로 단편소설이라는 점이

다. 조국통일주제의 전통적 소설은 단편으로도 많이 발표되었지만 동시에 중장편 소설형식으로도 선보였다. 1990년대 들어서서도 전통적인 접근법을 고수하는 작품들 예컨대 최승철의 「사슬과 심장」과 같은 작품은 과거의 방식을 그대로 따르는 중편소설이다. 그런 것에 반해 이 새로운 경향을 띠고 있는 작품들은 하나같이 단편소설들이다. 이는 결코 우연한 일이 아니다. 이 새로운 경향의 작품은 과거의 전통적이고 공식적인 이데올로기의 틀에서 약간 벗어나 새로운 삶의 현실을 설명하기 위해 나타난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새로운 조짐은 아직 모색하는 단계이며 삶의 어느 한 지점에서 터져나온 것이지 전체를 아우를 수 있는 그런 종류의 것이 아니다. 위에서 보았던 것처럼 아직 분단의 현실을 냉전의 논리에서 벗어나 전체적으로 볼 수 있는 단계에까지 이 새로운 경향이 나아간 것이 아님은 분명하다. 이러한 제약은 작가들로 하여금 중 장편소설과 같은 것은 선택하지 못하게 만들고 오히려 단편소설을 통하여 모색하게끔 하는 것이다. 즉 과거의 방식은 더이상 아니지만 그렇다고 새로운 현실의 총체적 접근이 눈앞에 선하게 떠오르는 것은 아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과도기에서 작가들이 선택할 수 있는 것은 중장편이 아니라 바로 단편소설인 것이다.

1990년대 들어 나오기 시작한 이산가족의 문제를 다룬 새로운 경향의 분단문학을 집중적으로 분석해보았다. 위에서 지적한 바대로 이러한 작품들은 아직 냉전의 틀을 깨지 못하고 여전히 과거의 잔재를 많이 담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한계에도 불구하고 최근 이들 작품들에서 나타난 새로운 경향과 흐름이 주는 의미는

결코 과소평가할 수 없을 것으로 생각한다. 이러한 미묘한 변화가 북한 사회, 좁게는 북한문학 내부에서 가지는 의미는 우리의 상상 이상으로 매우 중요한 문제가 될 수 있으며 향후 북한 사회의 냉전 논리의 해체에 일정하게 영향을 미칠 수도 있는 매우 중차대한 것이다. 이는 오늘날 북한의 사회적 갈등 중에 이러한 이산가족의 문제가 결코 간과할 수 없는 중요성을 가지며 나아가 통일 과정에서 이것이 한층 더 중요한 의미를 가질 것이라는 점을 우리는 최근에 남한으로 내려온 김경호씨 일가족의 탈출 드라마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 제IV장 냉전적 적대의식과 북한 분단문학의 역사적 의미

북한의 분단문학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누어 볼 수 있는데, 하나는 전통적인 의미의 분단문학으로 민주기지론에 입각하여 남한의 반미구국투쟁을 그리고 있는 이른바 조국통일 주제의 문학으로서의 분단문학이 존재하고 있는 것이고, 다른 한편으로는 이런 공식적인 분단문학과는 거리가 있는 작품으로 냉전체제로 인해 빚어진 분단과 전쟁으로 인해 야기된 불필요한 고통과 차별 같은 것을 극복하고 공존할 수 있는 평화로운 삶을 갈구하는 것으로서의 분단문학이 존재하는 것이다. 후자는 치안대 문제를 다루고 있는 일련의 작품과 이산가족의 아픔과 희망을 다룬 작품에서 그 극적

인 자기표현을 얻은 것으로서 이러한 경향의 문학은 우리가 간과하기 쉬운 북한 내부의 갈등을 새롭게 보여준다는 점에서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갖는 것이다. 사회과학적 접근에서 간과하기 쉬운 북한 사회 내부의 갈등을 북한의 분단문학은 훨씬 잘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를 통해 북한 사회내의 갈등이 안고 있는 문제점의 심층을 파악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빈 면

## ◎ 發刊資料目錄 案內 ◎

### 〈세미나시리즈〉

- 91-01 轉換期の 東北亞 秩序와 南北韓 關係
- 91-02 岐路에 선 北韓의 經濟社會: 實相과 展望
- 91-03 北韓體制的 變化: 現況과 展望
- 92-01 南北和解·協力時代, 우리의 座標와 課題
- 92-02 북한의 權力構造와 金日成 이후 政策方向 전망
- 92-03 北韓의 核問題와 南北韓 關係
- 92-04 韓半島 周邊4國의 對北韓政策
- 92-05 轉換期の 南北韓關係: 現況과 展望
- 93-01 統一理念으로서의 民族主義
- 93-02 北韓 核問題: 展望과 課題
- 93-03 中國의 改革·開放
- 93-04 北韓開放에 대한 周邊4強의 立場
- 93-05 南北韓 關係 現況 및 94年 情勢 展望
- 94-01 北韓 核問題와 南北韓 關係 展望
- 94-02 南北韓關係와 美國
- 94-03 예멘 統一의 問題點
- 94-04 金日成사후 北韓의 政策展望과 우리의 統一方案
- 94-05 統一文化와 民族共同體 建設
- 94-06 南北韓關係 現況 및 95年 情勢展望
- 95-01 韓半島 平和體制 構築方案 摸索
- 95-02 남북화해·협력의 실천지표: 「민족발전공동계획」
- 95-03 金正日 政權의 向方
- 95-04 南北韓關係 現況 및 '96年 政勢 展望
- 96-01 북한정세 변화와 주변4국의 대한반도정책

- 96-02 脫冷戰期 韓半島의 戰爭과 平和問題
- 96-03 북한경제제도의 문제점과 개혁 전망
- 96-04 북한의 대외관계 변화와 남북관계 전망

〈研究報告書〉

- 91-01 第2次大戰後 新生國家의 聯邦制度 運營事例
- 91-02 北韓聯邦制案의 分析 및 評價
- 91-03 美國聯邦制 研究: 歷史的 發展過程을 中心으로
- 91-08 韓半島 非核地帶化 主張에 對한 對應方向
- 91-09 東西獨 事例를 통해 본 南北韓關係 改善方案: 정상회담과 기본조약체결 사례 중심
- 91-10 國際的 平和保障 事例研究
- 91-11 在野統一案 研究
- 91-12 蘇聯의 東北亞政策 變化와 東北亞秩序 改編: 1990年代 東北亞秩序 豫測(I)
- 91-13 北韓體制的 實相과 變化展望
- 91-14 「한민족공동체」具體化方案 研究: 社會·文化·經濟 交流·協力 中心
- 92-01 統一獨逸의 分野別 實態 研究
- 92-02 中國의 改革·開放 現況과 展望: 北韓의 中國式 改革·開放모델 受容 可能性과 關聯
- 92-03 美國의 對韓半島政策: 韓國安保와 南北韓 統一問題를 中心으로
- 92-04 日本의 國際的 役割增大와 東北亞秩序: 1990年代 東北亞秩序 豫測(II)
- 92-05 1992年度 統一問題 國民輿論調查 結果
- 92-06 軍備統制 檢證 研究: 理論 및 歷史와 事例를 中心으로
- 92-07 北韓住民의 人性研究
- 92-08 國際社會에서의 南北韓間 協力方案 研究

- 92-09 日本의 對韓半島政策
- 92-10 러시아聯邦의 對韓半島政策
- 92-11 東北亞 經濟協力の 發展方向
- 92-12 統一獨逸의 財政運用 實態研究: 統一關聯 財政政策 中心
- 92-13 南北韓 國力趨勢 比較研究
- 92-14 南北韓 社會·文化共同體 形成方案: 社會·文化的 同質性 增大 方案 中心
- 92-15 北韓의 權力엘리트 研究
- 92-16 東北亞 新國際秩序下에서의 韓半島 統一基盤 造成方案
- 92-17 南北韓 經濟共同體 形成方案
- 93-01 1993年度 統一問題 國民輿論調查 結果
- 93-02 金日成著作 解題
- 93-03 日本의 對北韓政策
- 93-04 中國의 改革·開放 加速化와 東北亞秩序: 1990年代 東北亞秩序 豫測(IV)
- 93-05 中·臺灣關係의 現況과 發展方向
- 93-06 美國 클린턴 行政府의 東北亞政策과 東北亞秩序 變化: 1990年代 東北亞秩序 豫測(III)
- 93-07 東北亞 地域에서의 多者間 安保協力體 形成展望과 對應策
- 93-08 獨逸統一後 東獨地域에서의 私有化政策 研究
- 93-09 對北 投資保護 및 紛爭解決方案 研究
- 93-10 脫冷戰期 北韓의 對中國·러시아 關係
- 93-11 北韓 軍事政策의 展開樣相과 核政策 展望
- 93-12 北韓의 人權實態 研究
- 93-14 베트남 統合事例 研究
- 93-15 金正日著作 解題
- 93-16 韓半島 軍費統制方案 研究: 유럽 軍費統制條約의 示唆點과 관련하여
- 93-17 北韓 家族政策의 變化
- 93-18 主體思想의 理論的 變化

- 93-19 예멘 統合事例 研究
- 93-20 北韓 政治社會化에서 傳統文化의 役割: 北韓映畫分을 中心으로
- 93-21 북한 的 에너지 供給실태 연구
- 93-22 北韓 國營企業所의 管理運營體系
- 93-23 社會主義體制 改革·開放 事例 比較研究
- 93-24 南北韓 國力趨勢 比較研究(改訂版)
- 93-25 「한민족 공동체」 形成過程에서의 僑胞政策
- 93-26 日本의 核政策
- 93-27 東北亞의 新經濟秩序
- 93-28 러시아聯邦의 對北韓政策
- 93-29 南北韓 政治共同體 形成方案 研究
- 93-30 統一論議의 變遷過程 1945~1993
- 94-01 북한 關료부패 연구
- 94-02 美國과 日本의 對北韓 關係改善과 南北韓關係
- 94-03 韓國의 對러 經濟協力 推進方向
- 94-04 中·臺灣의 統一政策 比較研究
- 94-05 北韓의 社會間接資本 實態分析
- 94-06 主體思想의 內面化 實態
- 94-07 金正日 리더쉽 研究
- 94-08 北韓 民族主義 研究
- 94-09 金正日의 軍事權力基盤
- 94-10 韓國의 對中 經濟協力 推進方向
- 94-11 中國과 日本의 軍事力 增強이 韓半島安保에 미칠 影響
- 94-12 統一韓國의 政黨制度와 選舉制度
- 94-13 南北聯合 形成 및 運營 方案研究
- 94-14 金正日體制의 對南政策 展望
- 94-15 北韓과 中國의 經濟關係 分析
- 94-16 北韓 指導部의 情勢認識 變化와 政策展望
- 94-17 북한의 대외경제 개방정책 현황과 전망

- 94-18 統一韓國의 對外經濟協力 方向: 亞·太地域 多者間協力關聯
- 94-20 「조선전사」 解題
- 94-21 1995年 NPT延長會議와 韓國의 對策
- 94-23 北韓 住民들의 價値意識 變化: 蘇聯 및 東歐와의 비교 연구
- 94-24 韓國 民族主義 研究
- 94-26 中國과 北韓의 政治體制 比較研究: 黨·軍關係의 變化와 關聯
- 94-27 統一韓國의 登場에 따른 東北亞地域 安保構造 變化 對應策
- 94-28 南北韓 文化政策 比較 研究
- 94-29 南北韓 協商行態 比較研究
- 94-30 南北韓 特殊關係의 法的 性格과 運營方案
- 94-31 統一韓國의 權力構造
- 94-32 統一韓國의 社會福祉政策
- 94-33 統一韓國의 政治理念
- 94-34 統一以後 國民統合 方案 研究
- 94-35 統一韓國의 經濟體制
- 94-36 國際機構를 통한 南北韓 交流·協力增大 方案 研究
- 95-01 리·北關係 變化展望과 韓國의 對應方案
- 95-02 金正日 政權의 人權政策 變化展望
- 95-03 北韓 知識人政策의 變化
- 95-04 韓半島 平和體制 構築方案
- 95-05 金正日 政權의 權力엘리트 研究
- 95-07 서독의 분단질서관리 외교정책 연구-한국 통일외교에 대한 시사점 모색-
- 95-08 北韓의 對美國政策 變化 研究
- 95-09 韓·日關係 變化展望과 韓國의 對應方案
- 95-10 金正日 體制下的 軍部役割: 持續과 變化
- 95-11 남북한 군비통제의 포괄적 이행방안: 미·북관계 및 남북관계 개선 관련
- 95-12 독일의 정치교육 연구-한반도 통일대비 정치교육에의 시사점 분석-

- 95-13 북한의 협상전술 특성 연구-남북대화 사례를 중심으로  
 95-14 남북한 양자간 및 동북아 다자간 원자력협력에 관한 연구  
 95-15 북한의 경제특구 투자환경 연구: 중국·베트남과의 비교  
 95-17 鄧小平 死後 中國의 國內情勢와 韓半島政策 展望  
 95-18 北·美關係와 韓·美關係 變化展望  
 95-19 북한 주요 기초문헌 해제집(III): 「근로자」 해제  
 95-21 탈냉전기 중북한관계 변화 연구  
 95-22 북한의 경제개혁과 남북경협  
 95-23 통일문제에 대한 세대간 갈등 해소 방안  
 95-24 지역갈등 해소방안 연구: 국내적 통일기반 조성방안  
 95-25 金正日 政權의 對外政策 變化 展望  
 95-26 1995年度 統一問題 國民輿論調查 結果  
 96-01 김정일의 당권장악과정 연구  
 96-02 통일과정에서 매스미디어의 역할  
 96-03 동·서독 인적교류 실태 연구  
 96-04 동서독간 정치통합 연구  
 96-05 남북한 환경분야 교류·협력 방안 연구: 다자적·양자적 접근  
 96-06 북한의 대 주변4국 군사관계  
 96-07 韓·美 安保協力 增進方案 研究  
 96-08 東北亞 平和體制 造成方案  
 96-09 北韓 經濟改革의 最適方向 研究  
 96-10 통일과정에서 민간단체의 역할  
 96-12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과정에서의 한국의 안보정책 방향  
 96-13 남북교류협력 활성화를 위한 법제도 개선방안  
 96-14 북한 사회의 계급갈등 연구  
 96-15 통일과정에서의 정당역할 연구  
 96-16 KEDO 체제하에서 남북한 협력증진에 관한 연구-협력이론을 중심으로-  
 96-17 남북한 에너지분야 협력방안 연구  
 96-18 북한 이탈주민의 사회적응에 관한 연구

- 96-19 북한의 대외경제정책 변화와 남북경협 활성화 방안
- 96-20 미국의 대북한 경제제재 완화와 남북한관계
- 96-21 북한의 노동정책과 노동력 평가
- 96-22 한·러 안보협력 방안 연구

### 〈統一情勢分析〉

- 91-01 韓·蘇, 日·蘇 頂上會談 結果 分析: 韓半島周邊情勢 및 南北韓關係에 미칠 影響을 중심으로
- 91-02 고르바초프 權力的 現況과 展望
- 91-03 李鵬 中國總理의 訪北 結果 分析: 韓半島 周邊情勢 및 南北韓關係에 미칠 影響을 중심으로
- 91-04 第85次 國際議會聯盟(IPU) 平壤總會 結果分析
- 91-05 中·蘇 頂上會談 結果 分析
- 91-06 北·日, 北·美關係 變化展望과 對策
- 91-07 北韓의 유엔加入宣言의 影響과 政策變化展望
- 91-08 美國의 東北亞 安保政策 基調와 最近動向
- 91-09 유고슬라비아의 民族葛藤과 聯邦解體 危機
- 91-10 中國의 對韓政策 展望
- 91-11 엘친의 러시아大統領 當選이 蘇聯國內情勢에 미칠 影響 分析
- 91-12 美·蘇의 對 東北亞政策과 東北亞 軍事秩序 再編 可能性
- 91-13 美·蘇 頂上會談의 結果 分析
- 91-14 戰術核 관련 부시 美大統領 宣言이 東北亞 및 韓半島安保에 미치는 影響
- 92-01 부시 美國大統領의 아시아4個國 巡訪結果 分析: 南·北韓關係와 관련하여
- 92-02 豆滿江地域開發計劃 發展方向
- 92-03 中國의 改革·開放 深化가 北韓에 미치는 影響
- 92-04 러시아聯邦의 改革과 韓·러關係 展望



- 92-05 東北亞情勢와 統一環境: 1992年 上半期
- 92-06 북방정책 이후 동북아정세와 한반도 통일환경
- 92-07 豆滿江地域開發計劃의 現況과 展望: 開發代案 및 法制度 中心
- 93-01 最近 러시아聯邦의 政局推移: 國民投票 結果를 中心으로
- 93-02 北韓 核問題의 展開過程 分析 및 展望
- 93-03 北韓의 對南動向 分析(1993.1~6)
- 93-04 <조국통일을 위한 전민족대단결 10대강령>과 北韓의 對南政策
- 93-05 東北亞 多者間 安保協力體 構成展望과 南北韓關係
- 93-06 北韓의 對南動向 分析(1993. 7~9)
- 93-07 中國의 核實驗이 國際 및 東北亞情勢에 미칠 影響
- 93-08 第5次 亞·太經濟協力體(APEC)會議를 계기로 본 亞·太地域 協力の 發展方向
- 93-09 1993年 12月 黨 中央委 全員會議 및 最高人民會議 結果 分析
- 94-01 美國의 對韓半島 政策: 北韓 核問題와 美北關係改善을 中心으로
- 94-02 中國의 對北韓政策: 現況과 展望
- 94-03 북한외의 대외개방 현황과 전망: 외자유치 관련법 제정을 중심으로
- 94-04 러시아의 權力構造 改編에 따른 對內·外政策 展望
- 94-05 北韓核問題에 대한 中國의 立場과 우리의 對中政策 方向
- 94-06 核關聯 北韓의 協商戰略戰術 分析
- 94-07 韓·日, 韓·中 頂上會談 結果分析
- 94-08 北韓의 對南動向 分析(1994.1~3)
- 94-09 北韓 最高人民會議 第 9期 7次會議 結果分析
- 94-10 韓·러關係 定立方案: 1994年 6月 頂上會談을 契機로
- 94-11 탈북자 발생 배경 분석
- 94-12 北韓의 南北頂上會談 提議 意圖 및 會談의 展望
- 94-13 무라야마(村山) 內閣의 對內外政策 展望
- 94-14 北韓의 對南動向 分析(1994.4~6)
- 94-15 金正日 政權의 登場과 政策 展望
- 94-16 北韓의 對南動向 分析(1994.7~9)
- 94-17 李鵬 總理의 訪韓結果 分析과 對中政策 方向

- 94-18 美國의 中間選舉 以後 對韓半島政策 變化展望  
 94-19 北韓의 變化와 金正日 政權의 將來  
 94-20 核·經協連繫 緩和措置와 北韓의 對應政策 展望  
 95-01 鄧小平 死後 中國의 國內政勢 및 韓半島政策 展望  
 95-02 北韓의 對南動向 分析(1995. 1~3)  
 95-03 中國의 政局展望: 第8期 全人大 3次大會 結果를 中心으로  
 95-04 金正日 承繼體制 鞏固化 動向  
 95-05 北韓의 食糧支援 要請背景과 對北韓 食糧支援 方案  
 95-06 金日成 死後 1年: 북한정세의 동향과 전망  
 95-07 「조·소 우호협조 및 상호원조조약」 廢棄의 意味와 評價  
 95-08 江澤民 中國 國家主席 訪韓 結果分析  
 96-01 北韓의 承繼政治 動向: 2·16 生日行事를 中心으로  
 96-02 中國의 對內政策과 對臺灣政策 展望: 제8기 全人大 4차회의 結果分析을 中心으로  
 96-03 北韓의 對美·中政策 懸案과 展望  
 96-04 周邊4國 頂上會談과 韓半島 安保環境  
 96-05 러시아 大選結果 分析  
 96-06 金日成 死後2年: 北韓政勢의 動向 및 展望  
 96-07 나진-선봉지대 개발계획과 남북한 경제관계 전망  
 96-08 日本總選 結果分析  
 96-09 美國 大統領 및 議會 選舉 結果分析

### 〈世界主要事件日誌〉

- 91-01 世界主要事件日誌(1991. 4. 1 ~ 1991. 6. 30)  
 91-02 世界主要事件日誌(1991. 7. 1 ~ 1991. 9. 30)  
 91-03 世界主要事件日誌(1991. 10. 1 ~ 1991. 12. 31)  
 92-01 世界主要事件日誌(1992. 1. 1 ~ 1992. 3. 31)  
 92-02 世界主要事件日誌(1992. 4. 1 ~ 1992. 6. 30)

- 92-03 世界主要事件日誌(1992. 7. 1 ~ 1992. 9. 30)  
 92-04 世界主要事件日誌(1992. 10. 1 ~ 1992. 12. 31)  
 93-01 世界主要事件日誌(1993. 1. 1 ~ 1993. 3. 31)  
 93-02 世界主要事件日誌(1993. 4. 1 ~ 1993. 6. 30)  
 93-03 世界主要事件日誌(1993. 7. 1 ~ 1993. 9. 30)  
 93-04 世界主要事件日誌(1993. 10. 1 ~ 1993. 12. 31)  
 94-01 世界主要事件日誌(1994. 1. 1 ~ 1994. 3. 31)  
 94-02 世界主要事件日誌(1994. 4. 1 ~ 1994. 6. 30)  
 94-03 世界主要事件日誌(1994. 7. 1 ~ 1994. 9. 30)  
 94-04 世界主要事件日誌(1994. 10. 1 ~ 1994. 12. 31)  
 95-01 世界主要事件日誌(1995. 1. 1 ~ 1995. 3. 31)  
 95-02 世界主要事件日誌(1995. 4. 1 ~ 1995. 6. 30)  
 95-03 世界主要事件日誌(1995. 7. 1 ~ 1995. 9. 30)  
 95-04 世界主要事件日誌(1995. 10. 1 ~ 1995. 12. 31)  
 96-01 世界主要事件日誌(1996. 1. 1 ~ 1996. 3. 31)  
 96-02 世界主要事件日誌(1996. 4. 1 ~ 1996. 6. 30)  
 96-03 世界主要事件日誌(1996. 7. 1 ~ 1996. 9. 30)

〈年例情勢報告書〉

- 91 統一環境斗 南北韓 關係: 1991~1992  
 92 統一環境斗 南北韓 關係: 1992~1993  
 93 統一環境斗 南北韓 關係: 1993~1994  
 94-01 北韓 核問題斗 南北關係  
 94-02 統一環境斗 南北韓 關係: 1994~1995  
 95-01 統一環境斗 南北韓 關係: 1995~1996

〈論叢〉

統一研究論叢 創刊號(1992. 6)

統一研究論叢 第1卷 2號(1992. 12)

統一研究論叢 第2卷 1號(1993. 7)

統一研究論叢 第2卷 2號(1993. 12)

統一研究論叢 第3卷 1號(1994. 8)

統一研究論叢 第3卷 2號(1994. 12)

統一研究論叢 第4卷 1號(1995. 8)

統一研究論叢 第4卷 2號(1995. 12)

統一研究論叢 第5卷 1號(1996. 7)

THE KOREAN JOURNAL OF NATIONAL UNIFICATION vol. 1(1992)

THE KOREAN JOURNAL OF NATIONAL UNIFICATION vol. 2(1993)

THE KOREAN JOURNAL OF NATIONAL UNIFICATION special  
edition(1993)

THE KOREAN JOURNAL OF NATIONAL UNIFICATION vol. 3(1994)

THE KOREAN JOURNAL OF NATIONAL UNIFICATION special  
edition(1994)

THE KOREAN JOURNAL OF NATIONAL UNIFICATION vol. 4(1995)

THE KOREAN JOURNAL OF NATIONAL UNIFICATION vol. 5(1996)

한독 WORKSHOP : ECONOMIC PROBLEMS OF NATIONAL  
UNIFICATION(1993)

한미 WORKSHOP : US-Korean Relations at Time of Change(1994)

### 〈資料〉

92-01 統一 및北韓關聯 研究文獻目錄(國文篇)

92-02 統一 및北韓關聯 研究文獻目錄(外國語篇)

93-01 藏書目錄: 單行本·研究報告書

93-02 藏書目錄: 特殊資料

93-03 獨逸 統一條約 批准法律

94-01 貨幣·經濟·社會統合에 관한 條約(上)

- 94-02 貨幣·經濟·社會統合에 관한 條約(中)
- 94-03 貨幣·經濟·社會統合에 관한 條約(下)
- 95-01 藏書目錄: 單行本·研究報告書(追錄I)
- 95-02 藏書目錄: 特殊資料(追錄I)

〈통일문화시리즈〉

- 94-01 統一文化研究(上)
- 94-02 統一文化研究(下)
- 95-01 統一과 北韓社會文化(上)
- 95-02 統一과 北韓社會文化(下)
- 96-01 統一과 北韓社會文化(上)
- 96-02 統一과 北韓社會文化(下)

---

---

統一과 北韓 社會文化(上)

統一文化시리즈 96-01

---

發行處 民族統一研究院

編輯人 民族統一研究院 北韓人權情報센터

서울 중구 장충동2가 산5-19

전화: 232-4725, FAX: 232-5341

印刷處 陽東文化社 전화: 266-0892

印刷日 1996년 12월 일

發行日 1996년 12월 일

---

---